

2025년 정책연구보고서

한국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세대와 생애단계별 분석을 중심으로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정책 대안 연구”에 관한 용역의 세 번째 연구주제인 ‘한국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세대와 생애단계별 분석을 중심으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제 출 일 자	2025. 12. 5
제 출 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	6
제3절 연구 기대효과 .....	9
제2장 자녀세대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성과 .....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3
제2절 이론적 논의 .....	16
제3절 자녀세대 교육불평등 현황 .....	27
제4절 소결 .....	53
제3장 금융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	59
제1절 서론 .....	59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71
제3절 금융 불평등 현황 .....	85
제4절 소결 .....	151
제4장 디지털 정보 불평등 .....	173
제1절 서론 .....	173
제2절 이론적 논의 .....	177
제3절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정보 불평등 실태 .....	183
제4절 주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	223
제5절 소결 .....	227

ii 제목 차례

제5장 건강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	231
제1절 서론 .....	231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	236
제3절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특징 .....	24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262
제6장 한국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의 특징과 정책과제 .....	268
제1절 불평등 문제의 사회적 위험 .....	268
제2절 정책적 방안 모색 .....	290
참고문헌 .....	311

## 표 차례

<표 2-1> 2007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최종 교육수준	31
<표 2-2> 2007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그 당시 경제활동상태	31
<표 2-3> 2007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그 당시 직업	33
<표 2-4> 2007년 기준 부모 최종 교육수준별 가구 월평균 소득	34
<표 2-5> 부모 계층별 연평균 가구 근로소득	36
<표 2-6> 부모 계층별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현황	37
<표 2-7> 부모 계층별 고등학생 자녀의 최종 희망 학력수준	38
<표 2-8> 전반적 고등학교 성적 부모 계층별 구성	39
<표 2-9> 부모 계층별 고등학생 자녀 졸업 후 첫 지위	40
<표 2-10> 부모 계층별 대학교 유형별 진학 현황	41
<표 2-11> 4년제 대학 전공계열별 부모 계층분포	43
<표 2-12> 부모 계층별 대학교 소재지	44
<표 2-13> 대학교 등록금 부담자	46
<표 2-14>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대학교 졸업 후 진로	47
<표 2-15>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희망연봉	48
<표 2-16>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현재 일자리 종사상지위	49
<표 2-17>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현재 일하는 회사 유형	50
<표 2-18>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현재 일하는 회사 규모	51
<표 2-19>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임금 단위별 평균 임금 수준	52
<표 3-1> 금융 불평등 측정지표	66
<표 3-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비교	67
<표 3-3> 금융 불평등 측정을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항목	68
<표 3-4> 주요 연령집단별 1인 가구 비율	70
<표 3-5> 금융 접근성과 금융포용 개념	75

<표 3-6> 전체 1인 가구의 특성	86
<표 3-7> 총자산과 순자산 및 금융자산 성별 지니계수(2017-24년)	88
<표 3-8> 총자산/순자산/금융자산 보유액 (2017-24년)	90
<표 3-9> 금융자산 소득 5분위별 보유액 및 점유율(2017-24년)	92
<표 3-10> 세대별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95
<표 3-11>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지니계수(2017-24년)	99
<표 3-12> 소득 5분위별 부채 평균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101
<표 3-13>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103
<표 3-14> 세대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105
<표 3-15>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2017-24년)	111
<표 3-16>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소득 5분위별 점유율(2017-24년)	114
<표 3-17> 2017년 대비 24년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소득 5분위별 점유율 변화	116
<표 3-18>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 5분위 내 점유율(2017-24년)	118
<표 3-19>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 5분위 내 변화	120
<표 3-20> 금융기관 유형별 보유액의 성별 지니계수(2017-24년)	123
<표 3-21> 소득 5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보유액(2017-14년)	126
<표 3-22> 금융기관 유형별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2017년과 24년 비교)	128
<표 3-23> 소득 5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점유율(2017~24년)	130
<표 3-24> 2017~24년 금융기관 유형별 소득 5분위별 보유액 점유율의 최고-최저 차이	132
<표 3-25> 금융부채 유형 및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 구성	134
<표 3-26>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2017~24년)	137
<표 3-27> 2017년 대비 24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규모 분석 (세대별/성별 분석)	138
<표 3-28> 2017년 대비 24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40
<표 3-29> 1년 후 금융부채 규모 전망	141

<표 3-30>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증가 원인	143
<표 3-31> 세대 및 성별 금융부채의 증가 원인	145
<표 3-3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 여부	147
<표 3-3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 이유	148
<표 3-34> 원리금 상환의 생계부담 정도	149
<표 3-35> 보유 부채 상환 시기 및 가능성	150
<표 4-1> 연령대별 스마트기기 보유 개수 추이 분석 (2019~2024)	185
<표 4-2> 교육수준별 스마트기기 보유 개수 추이 분석 (2019~2024)	187
<표 4-3> 소득수준별 스마트기기 보유 개수 추이 분석 (2019~2024)	188
<표 4-4> 연령대별 정보접근 역량: 2019-2024년	190
<표 4-5> 교육수준별 정보접근 역량: 2019-2024년	191
<표 4-6> 소득수준별 정보접근 역량: 2019-2024년	192
<표 4-7> 연령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2019-2024년	194
<표 4-8> 연령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추이: 2019-2024년	195
<표 4-9> 교육수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2019-2024년	197
<표 4-10> 교육수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추이: 2019-2024년	198
<표 4-11> 소득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2019-2024년	199
<표 4-12> 교육수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추이: 2019-2024년	200
<표 4-13>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2019-2024년	202
<표 4-14>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추이	203
<표 4-15>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2019-2024년	204
<표 4-16>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추이	205
<표 4-17>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2019-2024년	206
<표 4-18>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추이	207
<표 4-19>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 추이	208
<표 4-20>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 추이	209
<표 4-21>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 추이	209

<표 4-22> 연령대와 가구소득에 따른 디지털 역량 비교 (2024년 기준) .....	211
<표 4-23> 연령대와 교육수준에 따른 디지털 역량 비교 (2024년 기준) .....	213
<표 4-24>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	215
<표 4-25> 삶의 소(小)영역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2024년 기준) .....	217
<표 4-26>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	219
<표 4-27> 정보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	220
<표 4-28> 정보조정·관리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	222
<표 5-1> 건강 결차와 불평등 측정과 지표 .....	249
<표 5-2>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표준화율) .....	261
<표 6-1> 세대, 생애주기, 그리고 다양한 불평등 .....	274
<표 6-2> 영역별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종합) ..	308

## 그림 차례

[그림 2-1] 가구소득의 중위값과 소득 상하위 25% 간 격차	35
[그림 5-1] 연구의 구성과 내용	234
[그림 5-2] 건강불평등과 건강비형평성의 정의	238
[그림 5-3]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의료 격차, 건강 격차의 상호 관계 모형	244
[그림 5-4] 건강과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8
[그림 5-5]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격차(연령 표준화)(%p)	250
[그림 5-6]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격차(연령 표준화)(%p)	251
[그림 5-7]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p)	251
[그림 5-8] 소득 1-5분위 포화지방산 적정수준 섭취 인구 비율 격차(만3세 이상)(%p)	252
[그림 5-9] 소득 1-5분위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 분율 격차 (만75세 이상)(%p)	253
[그림 5-10] 소득 1-5분위 가임기여성의 빈혈 유병률 격차(%p)	253
[그림 5-11]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p)	254
[그림 5-12]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p)	255
[그림 5-13]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손상 입원율 격차(인구 10만명당)(명)	255
[그림 5-14]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세)와 소득 1-5분위 건강수명 격차(세)	256
[그림 5-15]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명 당)(명)	257
[그림 5-16]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p)	257

[그림 5-17] 성인(20-74세) 지역 상-하위 20%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명) .....	258
[그림 5-18] 심정지 생존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p) .....	259
[그림 5-19]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망률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명) .....	259
[그림 5-20]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세) .....	260
[그림 6-1] 사회불평등 간의 관계 설정 .....	272
[그림 6-2] 세대, 생애주기별 주요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	276
[그림 6-3] HiAP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 .....	307

제 1 장

##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 기대효과



## 제1장 |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통한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 및 정책대안, 개선책을 세대와 생애단계를 고려해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다수 연구에서 밝혀진 교육과 건강, 금융과 디지털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사회문제)을 주요하게 분석할 것이다. 교육과 건강 영역의 불평등은 전통적으로 주목받아왔던 영역이며 금융과 디지털은 금융의 일상화와 디지털 전환이란 사회 변화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불평등 초래 영역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개인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 형성의 기회, 특히 경제적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김문길 외, 2013)으로 교육 영역의 불평등은 직업적 성취 즉 고용 기회나 고용 안정성, 소득수준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교육수준이 낮으면 직업적인 성취를 통한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건강 영역의 불평등은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제대로 오랫동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제한받고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금융 영역에서의 불

#### 4 한국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세대와 생애단계별 분석을 중심으로

평등은 경제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재정적인 안정성이 나 자산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금융 불평등은 교육, 주거, 고용 등 중요한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 차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백웅기·유경원, 2013: 46). 디지털 불평등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디지털 환경에의 접근성 등에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업무상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은 고소득 일자리를 확보할 기회가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 4개 영역의 불평등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개인들의 경제적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이들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간 불평등을 유지,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적 가치, 사회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높을수록 경제는 불안정하며 성장률은 낮아진다 (Berg and Ostry, 2011; Ostry et al., 2014; Stiglitz, 2015, 최제민·김성현·박상연, 2018: 116 재인용).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특히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관심 등으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병희 외, 2015; 신현중, 2018; 정해식 외, 2020). 최근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상승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면서 금융위기로 연결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손종칠, 2025).<sup>1)</sup>

최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사회 구성원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지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증가하고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이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황선재(2015)는 한 집단 혹은 한 사회 내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각

1) 해당 논의(Kumhof et al., 2015; Rannenberg, 2019, 2023; Mian et al., 2021(a))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부자의 자산 축적과 소득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저축 과잉을 낳게 된다. 저축 과잉은 자금시장에서 자금의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 균형 이자율인 자연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의미하며 금융증권 기관을 통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신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과도한 부채 누증은 결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높이게 된다(손종칠, 2025: 2).

종 사회문제와 병리현상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건강, 사회문제 지수에 기초하여 증가하는 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간에 존재하는 관계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건강, 사회문제 지수로 측정된 사회적 위험 수준 역시 높음을 보였다(황선재, 2015: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특히 경제적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혹은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 교육, 디지털, 건강 영역의 불평등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 문제가 세대 및 생애단계와 관련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할 한국 사회의 교육, 금융, 디지털, 건강영역에서의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자녀세대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성과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성취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측정할 수 있고, 자녀의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 노동시장 현황까지 포함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outh Panel; YP)을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생애에 걸친 직업 경로를 추적·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종단조사로, 본 분석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패널 중 2007년 당시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을 새로운 표본으로 구축하여 2020년까지 장기 추적을 완료한 청년패널 2007(YP2007)을 활용하였다. 물론, 기존 패널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2021년부터는 청년패널 2021(YP2021)이 구축되어 조사되고 있으나, 고등학생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기에 시계열이 짧은 한계로 본 분석에서는 청년패널 2007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세대의 교육, 일자리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3장 금융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에서는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산과 부채,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가구특성별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이다(통계청, 2017.3.29. 보도자료). 이 자료는 다양한 가계의 금융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본 연구는 공공용 마이

크로데이터보다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상세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원격접속서비스(R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는 개인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1인가구=개인). 금융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문항인 개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금융 불평등의 실질적인 주체는 개인이며 정책대상자(예: 청년층, 노년층, 여성 등)도 가구 단위보다 개인 단위에 초점을 둔다는 점,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 정책의 필요성 등도 반영하였다. 분석 시기는 2017~2024년으로 8년이다. 금융 불평등의 측정은 금융 접근성 개념을 이용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각각의 접근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금융 접근성 자체는 직접 측정에 한계가 있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접근성 격차를 반영하는 지니계수와 보유액 및 점유율을 대리지표로 삼아 분석하였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보유액 및 점유율 분석을 통한 금융 불평등 현황 분석은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분포,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 영역의 사회적 위험(문제)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202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관련 문항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제4장 디지털 정보 불평등 연구의 수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방법과 접근은 통계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매년 수행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Raw Data의 심층 분석이다. 이 조사는 한국 내 디지털 사용 현황과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대표적 조사이다. 조사 주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며, 통계청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이 조사 결과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다루는 보고서에서 매우 중요한 실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접근 → 활용 → 역량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격차의 단계적 구조를 분석하기에 유리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또한 계층별 격차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보고서에서 ‘세대간’, ‘계층간’ 디지털 불평등을 논할 때 이 조사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Raw Data는 그 어떤

---

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협조안내문 중.

다른 자료보다 더 유용하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제5장 건강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망원인통계’ 등 건강불평등과 건강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와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경로,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위험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의 HP2030 격차 DB를 활용하여 인구학적(소득, 지역 등) 특성에 따른 건강격차와 건강불평등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위의 네 가지 연구주제들에 모두 적용, 활용된 연구방법과 접근으로서 정성조사 좌담회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성조사 좌담회 인터뷰는 우선 심층성(Depth) 측면에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 감정, 맥락 등을 구체적 언어로 직접 파악할 수 있어, 양적 조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심층적 의미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인터뷰와 달리, 다수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와 인식이 확장되며, 사회적 공통의 맥락을 드러내는 데 유리한 ‘상호작용 중심’의 방법이다. 또한 맥락 기반의 이해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참여자의 삶의 맥락, 디지털 이용의 조건, 구조적 제약 요인 등을 함께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적용, 활용된 또 하나의 다른 접근으로서 인구구성비를 반영한 일반 국민 대상의 온라인 서베이(Survey)를 통한 불평등 인식조사이다. 온라인 서베이는 대규모 표본조사가 가능하여 전국적 규모에서 다양한 연령, 지역,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등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량적 인식 파악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 경험 기반의 응답, 정책 수요 및 우선순위 등을 수치로 정량화가 가능하다. 또한 분석 확장성 측면에서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디지털 이용형태별 교차분석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축적할 경우 향후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 비교도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 제3절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통합적 이해 제공’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 영역(교육, 금융, 건강, 디지털 정보)별로 분절적으로 논의되던 불평등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한국 사회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와 그 상호 인과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 가능하다.

둘째, ‘세대 간·계층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실증적 진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 정보·자산·교육 기회 격차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세대 간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기반 마련’이다. 각 영역별 불평등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단일 정책이 아닌 교차 영역적(multisectoral) 정책 설계와 통합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사회통합 및 공정성 담론의 실질적 강화’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은 불평등 담론을 정쟁이나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단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담론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자와 시민사회 간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사회 모델 설계에의 기여’이다. 특히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다른 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디지털 사회(Inclusive Digital Society) 구축에 필요한 기본 설계도 및 철학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섯째, 교육을 매개로 한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 고리를 차단하는 실질적 정책 대안 제시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고교 유형, 대학 셔열 및 전공 선택, 그리고 임금 및 고용 형태 등 최종적인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생애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 교육 기회의 확대를 넘어, 교육 과정 내의 공정성 회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입증함으로써,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금융불평등 문제 해소와 관련, 세대나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한 기여’이다. 1인 가구의 증가나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1인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금융 불평등의 ‘정확한 개인별 규모나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각 대상에 맞는 정책과제를 제안할 수 있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집단 전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세대별 남성 간 혹은 여성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덟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을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연구 결과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소득, 지역, 성별,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 건강증진 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제2장

# 자녀세대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성과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자녀세대 교육불평등 현황

제4절 소결



## 제2장 | 자녀세대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성과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해방 후 계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1970년대까지 급속한 경제발전을 겪으면서 전근대적인 신분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층사회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직업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교육을 통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계층상승의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향적 사회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높은 상위 학력을 성취하려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교육은 부존자원이 결여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의 기초이자 주동력이었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시민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개인에게는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계층의 상향이동 통로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교육이 오히려 자본주의적 계급형성과 지속에 일조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의 경우, 교육의 상향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거나 기꺼이 희생하려는 전통 하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종국에는 자녀의 노동시장 성

취와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류방란, 2006). 즉, 부모세대에서의 사회적 양극화가 자녀세대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된 가운데 오늘날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명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반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각종 조사와 연구에 거듭 확인되었다(Coleman, 1990; De Graaf et al., 2000; Jencks & Tach, 2006; 주동범, 1998; 김현주·이병훈, 2005; 신명호, 2010).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을 부담하기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단순 자녀의 교육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노동시장 성취에 연결됨에 따라 부모의 빈곤은 자녀의 빈곤으로, 부모의 부유함은 자녀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부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육은 자녀세대의 사회이동 가능성 결정짓는 핵심 경로로, 이 경로는 고용의 질과 임금수준, 고용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지원 하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자녀는 고소득·안정적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저임금·고용불안정 일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부모세대의 양극화가 교육을 매개로 세습되는 구조는 단순 교육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

그러나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자녀세대의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라는 경로를 추적하며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직업유형과 고용형태 및 고용안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계층 재생산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양질의 교육 접근성이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 접근성의 불균형이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교육정책 및 고용정책의 협평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분석의 핵심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생애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청년패널2007(YP2007)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최종학력,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등 다차원적 지표를 종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5분위로 계층화하였다. 이후, 이 계층 변수를 핵심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아, 2007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청년세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 성취 및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적인 경로를 경험하는지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추적·분석하였다. 특히, 분석의 목적이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현실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으므로, 단계별 결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더불어 기술통계분석 및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성조사 좌담회 인터뷰와 인구구성비를 반영한 온라인 서베이 방법을 통해 연구내용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 제2절 이론적 논의

### 1.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념 및 교육불평등 구조와 기제

#### 1)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의 개념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라는 개념은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학문적 시도가 더 정교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초기 산업 사회의 불평등을 분석했던 고전적 계급론,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단일한 경제적 기준을 통해 사회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자본주의 초기 사회의 핵심적인 갈등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었지만,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현상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높지만, 사회적 위신이 낮은 직업군이나, 교육수준은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지식인 계층의 존재는 단차원적 계급론의 설명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 SES 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였는데, 베버는 사회계층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세 가지 독립적인 차원, 즉 계급(Class), 지위(Status), 권력(Power)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계급은 재산 소유와 시장에서의 기회 등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이다. 반면, 지위는 혈연, 학연, 생활양식 등에 기반한 사회적 명예(social honor)와 위신에 의해 규정되는 집단으로, 동일한 경제 수준을 가졌더라도 사회적 평가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베버의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사회적 위치가 경제력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명예가 때로는 불일치하는 지위 불일치(status inconsistency) 현상이 존재함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현대의 SES 개념은 바로 이 베버의 통찰을 실제 사회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막스 베버의 다차원적 아이디어를 실증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자들은 20세기 중반부터 교육, 직업(Occupation), 소득/자산 (Income/Wealth)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SES의 핵심 구성 요소로 채택하였다. 이 세 가지 지표는 각각 베버가 제시한 계층의 다른 차원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갖는다. 먼저, 교육은 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의 수준, 즉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나타내며 더 나은 직업 기회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이다. 직업은 소득 획득의 주된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위신, 전문성, 자율성 등 비물질적 자원을 반영한다. 특히 Duncan(1961)의 사회경제적 지수(SEI) 연구는 직업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직업을 SES 측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은 가구가 동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질적 자원을 의미하며, 현재의 생활 수준과 미래의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는 고전적 SES 모델은 현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강력한 분석 틀로 자리 잡았다.

교육, 직업, 소득/자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 모델이 SES를 효과적으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으로는 세대 간 불평등이 어떻게 미묘하고 정교하게 대물림되는지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의 사회학자 Pierre Bourdieu와 미국의 사회학자 James Coleman의 논의를 통해 SES 개념은 한 층 더 확장되었다. Bourdieu(1986)는 상속되는 경제적 자본 외에도, 가정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 교육 성취 격차의 핵심 기제임을 주장했다. 그는 문화자본을 언어, 태도 등 개인에게 내재된 ‘체화된 상태’, 서적, 예술품 등 물질적 형태인 ‘객관화된 상태’, 졸업장 등 사회적으로 공인된 ‘제도화된 상태’로 구분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이 실제로는 지배 계급의 문화자본을 정통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류층 자녀들은 학교 시스템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Coleman(1988)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부모가 가진 풍부한 사회자본 네

트워크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이후에도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돋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다. Bourdieu와 Coleman의 논의는 SES가 단순한 경제력이나 학력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사회적 자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현대의 SES 측정은 여러 구성 요소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는 합성 지수(composite index)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특정 지표에 편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줄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지표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weighting)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고민이 요구된다. 모든 지표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보는 ‘동일가중’ 방식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차등가중’ 방식이 존재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이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과 같은 질적 변수들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관측가능한 교육, 직업, 소득을 중심으로 SES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2) 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교육불평등의 개념

### (1) 노동시장 내 교육의 효과

교육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고용 가능성, 임금수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연령-소득곡선(age-earning profile)이나 임금-교육수준 곡선(wage-schooling locus)는 생애주기에 걸친 임금 궤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건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오래전 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에서 교육수준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됐다. 자녀는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간주하며 고소득 및 고자산의 가정은 더

많은 경제적·시간적 자원을 교육에 투입할 수 있고, 결국 부모의 자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교육 기회, 사교육, 학습환경 등 양과 질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Becker, 1993). 유사한 맥락에서 신용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자녀의 교육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산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제약을 우회할 수 있다(Huang et al., 2010). 결국, 높은 흑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자녀는 인적자본이 풍부해지고 더 높은 생산성(productivity)을 갖게 되어 고임금·고용안정을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효과 중 다른 하나는 생산성과 별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췄음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선별이론(screening hypothesis)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할 수 없지만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증서가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갖춘 자격을 표시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육을 통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교육수준이 생산성을 높였기보다 노동자가 똑똑히 일할 수 있다고 보증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signal)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사용자가 노동자의 능력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능력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제도가 평등하게 설계되며 사회이동의 수단이 되지만, 교육 접근성과 성취도가 부모세대 계층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를 경우,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Gouvea et al., 2024).

## (2) 교육불평등의 구조와 작동 기제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은 단순히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넘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질적 차이와 그로 인해 누적된 교육 성취의 격차를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현상이다. 이는 사회적 희소가치인 교육 기회와 자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귀속적 요인에 의해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김경근, 2004), 교육사회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교육불평등의 작동 기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교육 기회,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결과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 ①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접근의 격차와 자원의 배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교육 체계로의 진입과 상급 학교로의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접근성의 구조적 격차를 의미한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학교 간 시설, 교사 수, 교육 재정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Coleman 외(1966)의 「교육 기회의 평등(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이후, 학계의 관심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보다 가정 배경의 중요성으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의 질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 배경과 그와 상호작용하는 친구 집단의 특성임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육불평등 논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부모의 경제적 자본, 즉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수준이 달라지는 현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사회의 경우, 대학 입시라는 강력한 목표 지향적 교육열은 막대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양질의 교육 기회를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김희삼, 2012). 이는 공교육 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 경쟁을 촉발하며, 일반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영재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같은 중요한 교육 경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미 1981년 Mare의 연구에서 지적했듯, 교육 단계 이행 과정,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각 단계마다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작용하며,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단순히 특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 어떤 질의 교육을, 어떤 경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심화된다.

### ② 교육 과정의 불평등: 학교 내 경험의 질적 문화

교육 과정의 불평등은 모든 학생이 일단 학교라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진입한 이후, 학교 내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 이면에 존재하는 소위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통해 작동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또래 문화, 학교의 조직 문화 등 비공식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으로 Bowles & Gintis(1976)의 대응원리(correspondence principle)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학교 내 존재하는 권위 구조, 학생의 통제 수준, 학습 동기 등의 사회적 관계가 자본주의 생산 체계의 사회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동자 계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규칙의 순응과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교육을, 엘리트 계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각 계층에 필요한 인성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기준의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임을 시사한다.

또한, Pierre Bourdieu(1986)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은 과정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미시적 기제를 정교하게 설명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 취향, 사고방식 등 지배 계급의 문화를 정통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중·상류층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자본을 체화한 학생들은 학교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학업 성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반면,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가 학교의 그것과 상이함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학업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학교는 문화적으로 불공정한 공간이 되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준의 계층 구조를 영속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 ③ 교육 결과의 불평등: 성취 격차의 누적과 사회적 귀결

교육 결과의 불평등은 앞서 논의한 기회 및 과정의 불평등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가시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성취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는 학업성취도 점수, 상급학

교 진학률, 최종 학력 수준, 그리고 대학 서열 및 전공 선택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OECD, 2019).

한국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부모의 소득 수준 간의 비례 관계가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지능이나 노력의 차이가 아닌, 유아기부터 축적된 교육 투자와 문화적 경험의 총체가 학업 능력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시사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육 성취의 격차가 단지 교육 체계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시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신호로 작동하여, 생애에 걸친 소득과 직업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결국, 교육 결과의 불평등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제이며,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순환 고리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 2. 교육 불평등의 재생산과 사회이동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 기회, 과정, 결과의 다층적 불평등은 교육 체계 내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에 교육불평등이 노동시장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과정과, 이러한 미시적 과정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이동성 약화 추세를 선행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 1)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성과 전이

교육 성취의 격차가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히 교

육 수준의 차이를 넘어,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수준의 질적 서열이 노동시장의 위계 구조와 직접적으로 조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80%에 달하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고학력 사회로 진입하였고, 동일한 학력 수준 내에서도 출신 대학의 서열, 전공 등 미세한 학력 차분의 차이를 통해 노동자를 선별하고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정교화된 학력주의가 팽배하다.

한국의 경우, 대학 서열이 졸업생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특히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다. 최영섭·이정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칭하는, 소위 ‘SKY’로 불리는 최상위권 대학 졸업자는 다른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대학 프리미엄(university premium)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지원자의 생산성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신 대학의 명성을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생산성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 결과의 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보상을 정당화하는 객관적 지표로 작동하며, 교육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직접 전환되는 핵심 통로가 된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격차가 인지적 능력(cognitive skills), 즉 학업성취도 점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형성되는 비인지적 역량(non-cognitive skills)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Heckman & Rubinstein(2001)은 끈기, 성실성,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이 학업 성취는 물론 노동시장 성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인지적 역량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Duncan & Magnuson, 2011). 부유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안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내면화할 기회가 많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선호되는 인재상과 부합하여 또 다른 형태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결국, 교육 격차는 지식의 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태도와 성향의 차이까지 포괄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전이 과정을 더욱 복잡하고 공고하게 만든다.

## 2) 세대 간 사회이동성 약화 추세

교육을 매개로 한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과 공정성의 척도인 세대 간 사회이동성(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은 점차 약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이동성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측정되며, 그 영향이 적을수록 이동성이 높은 개방적인 사회로 평가된다. 경제학에서는 주로 부모 소득이 자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y; IGE)을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데,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계층 대물림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사회이동성을 연구한 Corak(2013)은 국가별 IGE를 비교한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높아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수행된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사회이동성이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주병기, 2017). 이처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약화되는 현실은 어떠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지를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 표현하는 ‘수저계급론’이라는 사회적 담론으로 표출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집단적 좌절감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교육이 더 이상 공정한 기회의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3. 선행연구 검토의 결론 및 연구 필요성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면, 현대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과 사회계층의 재생산은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여러 요인이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정교하고 견고한 순환 고리(a solid circular chain)를 형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

원 격차를 넘어 Bourdieu가 지적한 문화자본의 불균등한 상속과 Lareau가 보여준 계급화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를 통해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비대칭적인 경쟁을 구조화한다. 이렇게 형성된 초기 격차는 영어유치원과 같은 유아기 교육부터 사교육 시장과 고교 서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거치며 증폭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대학 서열과 전공 선택이라는 가시적인 교육 성취의 격차로 귀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인적자본이론과 선별이론이 설명하듯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여 대학 프리미엄과 같은 차별적 보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 전체의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거시적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많은 연구는 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 대물림의 존재와 그 과정에 개입하는 주요 이론적 변수들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 분석의 추상성이다. 다수의 연구가 세대 간 소득 탄력성(IGE)과 같은 거시 지표를 통해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변수 간의 통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불평등의 존재와 원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정작 현실의 청년들이 부모의 배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사회적 위치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궤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불평등의 평균적인 효과는 대체로 잘 드러나지만, 그 효과가 발현되는 현실 경로의 분포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둘째, A→B→C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에 대한 가정은 풍부하지만, 각 단계별 이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기술(description)이 부족하다. 가령, 부모의 지위가 명문대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거치는 것이 주요 경로인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공 선택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각 이행 단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실증적 그림은 여전히 과편적으로만 존재한다. 복잡한 인과 모델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처럼 불평등이 실현되는 각 단계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초적인 현황 분석이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잡한 인과관계 추정에 앞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현실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2007~2021) 자료를 활용하여, 고교 재학 시점의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이들이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어떤 서열의 대학과 전공으로 진학하고, 졸업 후 최종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등 어떤 종류의 일자리로 진입하는지 그 구체적인 분포와 핵심 경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교한 통계 모델을 통해 새로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추상적인 불평등 논의를 구체적인 삶의 궤적으로 현실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이 불평등을 매개하고, 계층 대물림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 제3절 자녀세대 교육불평등 현황

### 1. 분석자료 및 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성취 및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 조사(Youth Panel; YP)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은 청년문제가 구조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과 생애에 걸친 직업 경로(career path)를 추적·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청년패널은 2001년에 시작되었고, 본 분석은 2007년 당시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을 새로운 표본으로 구축하여 2020년까지 장기 추적을 완료한 청년패널 2007(YP2007)을 활용하였다. 이후 기존 패널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2021년부터는 청년패널2021(YP2021)이 구축되어 조사되고 있으나, 고등학생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기에 시계열이 짧은 한계로 청년패널 2007을 고려하였다.

청년패널 2007의 표본은 전국의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중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는데, 이는 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1단계와 2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에서는 OES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7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 내에 조사 대상 연령(만 15~29세)의 청년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고 청년이 거주하는 32,335가구 내 47,282명의 청년 명단을 확보 후 이를 2단계 표본추출을 위한 표본추출틀로 구축하였다. 2단계에서는 이 표본추출틀을 모집단으로 하여 충화 및 계통추출법을 적용, 9,000가구(청년 약 12,000명)를 목표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차 연도(2007년) 본조사에서 최종적으로 10,206명이 응답하여 원패널이 구축되었다. 1차 연도에 구축된 원패널은 고등학생(24.6%), 대학생(28.8%) 등 재학생 집단과 취업자(20.9%), 미취업자(16.0%)를 포함

하여 청년층의 다양한 하위 집단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었다. 그중 교육불평등에서는 2007년 조사 당시 고등학생인 2,509명을 2021년까지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 2)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 방식

청년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석의 핵심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SES는 단일 지표만으로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청년패널 2007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 인적 자본, 사회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성 지수를 구성하여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수 구성 과정은 원자료를 가공하고, 가구 대표값 선정한 후 표준화 및 통합, 그리고 최종 범주화의 체계적인 단계를 거쳤다. 가장 먼저, 구성 지표를 선정하여 자료를 가공하였다. SES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계층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는 가구소득, 부모 학력, 부모 직업을 고려하였다. 다만, 부모 직업은 어떠한 직업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여 안정성을 의미하는 종사상지위를 선정하였다. 이처럼 여러 요인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특정 차원에 편중되지 않고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지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사상지위 변수를 사용하였다.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발생하는 연도별 결측치는, 각 개인의 전체 관측 기간 내 유효한 응답 값을 활용하는 종단적 보정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원시자료의 직업 범주를 연구 목적에 맞게 5점 척도의 서열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이 척도는 안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하여 임금노동자는 5점,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4점, 1인 자영자 3점, 무급가족종사자 2점, 비경제활동인구 1점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특정 연도에만 조사되어 연도별 결측치가 다수 존재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각 개인을 기준으로 전체 관측 기간 내 유효한 응답 값은 활용하는 종단적 보정 (longitudinal imputation)을 수행하였다. 즉, 특정 연도에 값이 없을 경우 해당 개인의 다른 연도 응답 값으로 논리적으로 대체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석 표본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또한, 또한, 부모 두 명의 정보를 가구 단위의 단일 변수로 통합하기 위해 사회계층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배적 지위 방식(dominance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는 가구의 지위가 부모 중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구성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가정에 근거하며, 부모의 최종 학력과 서열화된 종사상지위 척도에서 각각 더 높은 값을 해당 가구의 대표 학력과 대표 직업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인적 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 역시 종단면 상에서 발생하는 결측치를 앞서 설명한 종단적 보정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데이터의 안정성과 완결성을 높였다. 청년패널 2007에서 부모의 최종 학력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값을 갖는 서열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 역시 대학원 졸업 이상은 5점부터 대학교 졸업 4점, 전문대학 졸업 3점, 고등학교 졸업 2점, 중학교 졸업 이하는 1점을 갖도록 하였다. 가구의 대표 학력 수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직업 변수와 마찬가지로 지배적 지위 방식을 적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해당 가구의 대표 학력으로 확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총체적인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기 위해, 청년패널 2007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유형의 소득 정보를 모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 내에서 발생한 ①근로소득, ②금융소득, ③부동산소득, ④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가구 총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중 응답자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은 제외하였다. 이 방식은 특정 소득원에 편중되지 않고 가구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정제 및 가공한 세 가지 핵심 지표 통합하여 최종 SES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각 지표는 소득은 만원, 학력과 종사상지위는 서열 척도로, 각기 다른 단위와 척도를 가진 세 지표를 의미 있는 단일 지수로 결합하기 위해 표준화

(standardization) 과정을 수행하였다. 각 지표를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Z-score로 변환하여 모든 변수가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 및 통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화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가정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의 SES 지수를 고려하였다. 첫째는 세 차원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가정하여 각 Z-score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동일가중 SES 지수이고, 둘째는 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소득에 0.5, 학력과 직업에 각각 0.25의 가중치를 부여한 차등가중 SES 지수이다. 최종적으로 청년의 이행 경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집단 간 차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 중 동일가중 SES 지수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5분위(quintiles)로 구분하여 ses\_quintile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 변수는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의 5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 2.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 1) 부모 특성 현황

2007년 기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6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년제 대학교 17.0%, 2-3년제 전문대학 3.9%, 중학교 9.2%, 초등학교 2.3%, 석사 0.7%, 무학 0.4%, 박사 0.3%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3.1%, 4년제 대학 28.4%, 석사 2.9%, 박사 1.2% 등을 보이며 어머니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lt;표 2-1&gt; 2007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최종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무학	4,478 (0.2)	7,073 (0.4)
초등학교	38,809 (2.1)	42,730 (2.3)
중학교	125,135 (6.8)	167,155 (9.1)
고등학교	977,518 (53.1)	1,220,219 (66.3)
2-3년제(전문대)	95,756 (5.2)	71,551 (3.9)
4년제 대학	523,113 (28.4)	313,260 (17.0)
석사과정	53,152 (2.9)	12,747 (0.7)
박사과정	21,850 (1.2)	5,076 (0.3)
모름	1,135 (0.1)	1,135 (0.1)
총 계	1,840,947 (100.0)	1,840,946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아버지의 2007년 당시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5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즉 1인 자영자가 35.7%,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7.0%, 비경제활동 2.8%의 순이었다. 반면,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이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임금노동자 34.0%, 1인 자영자 12.0%, 무급가족종사자 9.0% 등의 순으로, 아버지보다 비경제활동과 1인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lt;표 2-2&gt; 2007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그 당시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비경제활동	51,296 2.8	772,042 41.9
임금노동자	946,537 51.4	626,443 34.0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128,794 7.0	25,062 1.4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1인 자영자)	656,863 35.7	220,040 12.0
무급가족 종사자	3,214 0.2	165,053 9.0
사망	53,754 2.9	32,307 1.8
응답거절	488 0.0	0 0
총 계	1,840,947 100	1,840,947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아버지의 직업분포를 보면 ‘경영/사무직’(13.5%), ‘건설 관련직’(13.4%), ‘영업/판매직’(12.0%), ‘기계 관련직’(10.2%) 등 특정 직군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부모 세대의 고용이 전통적인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부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분포는 아버지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경제활동인구, 즉 ‘무직(은퇴/주부)’ 응답이 41.9%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경우, ‘영업/판매직’(14.2%)과 ‘음식 서비스직’(10.1%) 등 특정 서비스 직군에 고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동시장 내에서 뚜렷한 성별 분업 구조와 직업 분리현상이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높은 비경제활동 비율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기능이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위계층 가구에서는 가계 소득이 부친 소득만으로 충분히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 성취 극대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교육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입시 정보 수집, 학습 스케줄 관리, 학부모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자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비물질적 투자로 기능한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해 “멘탈도 강하고 여유롭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고 구김살이 없다”고 묘사하며,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 사회 생활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FGI 참여자 C, 50대 여성). 반면, 하위계층 가구에서 어머니의 비경제활동은 노동시장 진입장벽이나 낮은 기회비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맞벌이를 통한 가계 소득 증대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제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교육 정보 접근성이나 자녀 학업 지원에 필요한 문화자본 부족이 동반될 경우,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대 간 불리를 재생산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lt;표 2-3&gt; 2007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그 당시 직업

(단위: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관리직	61,798	3.4	7,823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248,737	13.5	68,208
금융, 보험 관련직	31,486	1.7	31,353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67,178	3.7	71,687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26,268	1.4	2,603
보건, 의료 관련직	18,027	1.0	31,992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1,438	0.6	23,46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736	0.9	8,585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60,597	8.7	8,605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21,255	12.0	261,44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73	0.6	15,426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930	1.1	52,106
음식 서비스 관련직	67,591	3.7	186,257
건설 관련직	245,770	13.4	19,812
기계 관련직	187,230	10.2	20,754
재료 관련직	33,954	1.8	14,618
화학 관련직	8,388	0.5	2,694
섬유 및 의복 관련직	58,101	3.2	71,686
전기, 전자 관련직	58,982	3.2	23,411
정보통신 관련직	29,299	1.6	5,052
식품가공 관련직	19,079	1.0	14,521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	43,429	2.4	40,092
농림어업 관련직	79,764	4.3	52,202
군인	8,687	0.5	2,203
무직(은퇴, 주부)	51,296	2.8	772,042
안 계심(사망)	53,754	2.9	32,3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부모의 교육수준별 가구소득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석사 535.2만원, 박사 523.3만원이었으나, 초등학교 졸업은 278.0만원에 그치며 박사졸업의 53.1%에 불과했다. 어머니 역시 석사졸업인 경우 557.9만원, 4년제 대학 460.8만원, 2-3년 전문대 435.2만원을 보였고, 무학의 경우 254.1만원, 초등학교 졸업 281.6만원을 보이며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55.1%에 그쳤다. 이는 고학력·고소득 부모가 자녀의 진로 계획이나 높은 수준의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자녀가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부모의 사회적인 시야가 자녀의 교육 경로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때로는 학업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상위 경로로 이끌기도 한다”는 내용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FGI 참여자 C, 50대 여성).

&lt;표 2-4&gt; 2007년 기준 부모 최종 교육수준별 가구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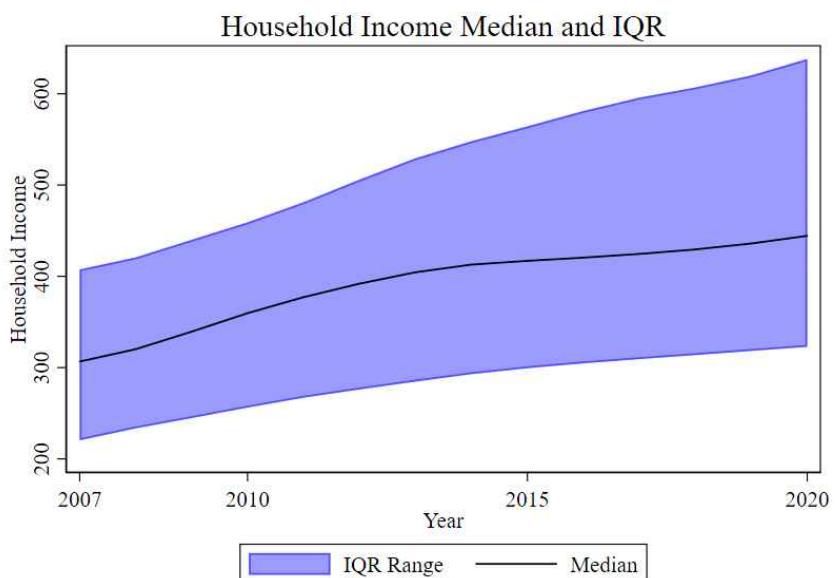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부(父)	모(母)
무학	319.0	254.1
초등학교	278.0	281.6
중학교	299.9	303.8
고등학교	338.2	353.9
2-3년제(전문대)	343.8	435.2
4년제 대학	424.2	460.8
석사	535.2	557.9
박사	523.3	395.6
모름	276.3	276.3

부모세대 가구소득의 중위값(median)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 상위 25%와 하위 25% 간의 격차(IQR)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득 증가의 과실이 불균등

하게 배분되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모 세대의 소득 불평등 심화는 자녀 세대의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상위 계층은 빠르게 증가한 소득을 바탕으로 고비용 사교육 등 교육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커지는 반면, 하위계층은 급등하는 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교육 투자의 격차가 확대된다. 인터뷰에서도 “애는 하고 싶어 하는데 비용 때문에 교육을 놓치는 게 아쉽다”, “욕심 많은 애를 키우는 부모는 (지원해주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언급이 나와, 경제적 제약이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주었다(FGI 참여자 B, 30대 여성). 또한 상위계층의 교육 투자는 전체 교육 시장의 비용 상승을 견인하여 교육 기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

[그림 2-1] 가구소득의 중위값과 소득 상하위 25% 간 격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 2) 부모 계층별 자녀 고등학교 재학 특성

2007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가구 근로소득을 보면 하

위계층의 가구 연평균 근로소득은 2,706만원이었으며 계층이 올라갈수록 가구 근로 소득은 증가하여 상위계층은 하위계층보다 약 1.9배 높은 5,285만원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부모의 소득격차가 지닌 가장 핵심적 의미는 자녀들이 경쟁해야 하는 교육의 출발선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자녀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에 막대한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상위계층은 고액 과제, 입시 컨설팅 등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에 투자할 여력이 훨씬 크고, 하위계층 자녀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은 학군으로 이동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다양한 활동 등 질적으로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사교육 투자와 교육 환경, 기회의 불평등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표 2-5> 부모 계층별 연평균 가구 근로소득

구분	연평균 가구소득
하위계층	2,706
중하위계층	3,614
중간계층	3,611
중상위계층	4,499
상위계층	5,28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2007년 고등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고등학생 분포를 보면 부모가 하위 계층일수록 상업계·공업계·농업계·예체능계 등의 비중이 높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일반계/인문계와 특목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위계층 자녀 중 일반계/인문계에 재학 중인 비중은 57.6%였고, 계층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은 높아져 상위계 층에서는 88.0%에 달했다. 특히, 과학고와 외고, 자립형 사립고를 포함한 특목고에 있어서 하위계층은 2.1%, 상위계층은 3.3%였다.

&lt;표 2-6&gt; 부모 계층별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문계/일반계	특목고/자사고 등	상 · 공고 등	총계
하위계층	152,523	5,502	106,675	264,701
	57.6	2.1	40.3	100.0
중하위계층	203,626	8,400	67,064	279,089
	73.0	3.0	24.0	100.0
중간계층	390,831	6,592	133,094	530,516
	73.7	1.2	25.1	100.0
중상위계층	242,236	7,127	53,999	303,362
	79.9	2.3	17.8	100.0
상위계층	411,586	15,571	40,665	467,821
	88.0	3.3	8.7	100.0
전체	1,400,801	43,192	401,496	1,845,489
	75.9	2.3	21.8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부모 계층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가 희망하는 최종학력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하위계층 부모의 고등학생 자녀 중 11.7%는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했지만, 상위계층 자녀는 1.3%에 불과했다. 특히, 계층이 올라갈수록 대학원 이상 학력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하위계층 자녀 중 석사학위를 희망하는 비중은 5.8%, 박사학위는 3.1%에 그쳤다. 그러나 상위계층은 석사학위 15.3%, 박사학위는 13.5%를 보였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역시 고학력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희망 학력의 격차는 단순한 개인의 선호를 넘어,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미래를 규정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 불평등이 단지 사교육비와 같은 물질적 자원의 격차를 넘어, 심리적이고 내재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공고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계층 자녀들은 현실적인 경제적 제약이나 주변 환경의 기대를 스스로 내면화하여 자신의 학업적 포부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 이 확인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유리천장이 작동된 결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

력 포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과도 같은데, 상위계층 자녀의 높은 학력 목표는 더 높은 성취를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지만, 하위계층 자녀의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는 현재의 학업 수준에 안주하게 만들며 결국 실제 학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이 관찰된다. 결국, 희망 학력의 계층 간 격차는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요인으로, 이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장학금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하위계층 자녀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진로 정보 제공 등 심리적·정보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lt;표 2-7&gt; 부모 계층별 고등학생 자녀의 최종 희망 학력수준

(단위: 명, %)

구분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미결정	총계
하위계층	30,995	58,540	150,112	15,314	8,178	1,563	264,701
	11.7	22.1	56.7	5.8	3.1	0.6	100.0
중하위계층	26,536	44,925	161,832	26,262	18,434	1,100	279,089
	9.5	16.1	58.0	9.4	6.6	0.4	100.0
중간계층	34,272	79,701	357,511	34,962	22,337	1,734	530,516
	6.5	15.0	67.4	6.6	4.2	0.3	100.0
중상위계층	17,639	31,352	192,729	34,134	26,884	625	303,362
	5.8	10.3	63.5	11.3	8.9	0.2	100.0
상위계층	6,214	38,677	288,251	71,503	63,177	-	467,821
	1.3	8.3	61.6	15.3	13.5	0.0	100.0
전체	115,654	253,195	1,150,435	182,175	139,009	5,022	1,845,489
	6.3	13.7	62.3	9.9	7.5	0.3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 역시 부모 계층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적을 ‘상위권(~1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위계층 자녀(31.5%)가 하위계층 자녀(9.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하위권(91~10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하위계층(25.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성적 차이의 배경으로 조기 사교육의 영향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특히 영어 유치원 경험 여부가 이

후 학업 격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영어유치원을 나왔냐 안 나왔냐 (차이가 크다)”, “유치원부터 애들이 영어 차이가 크게 나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언급은 사교육을 통한 조기 격차 형성이 학업성취 불평등의 중요한 기제임을 보여준다 (FGI 참여자 A, 30대 여성). 이는 학교 교육이 능력주의의 장으로 기능하기보다, 부모의 SES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상당 부분 예견하는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8> 전반적 고등학교 성적 부모 계층별 구성

(단위: 명, %)

구분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총 계
상위권	22,993	36,044	56,656	50,558	76,491	242,743
	9.5	14.8	23.3	20.8	31.5	100.0
중상위권	82,441	81,113	175,329	99,997	162,796	601,674
	13.7	13.5	29.1	16.6	27.1	100.0
중위권	122,630	118,689	213,274	112,089	175,314	741,997
	16.5	16.0	28.7	15.1	23.6	100.0
중하위권	20,636	34,428	67,361	33,687	44,975	201,088
	10.3	17.1	33.5	16.8	22.4	100.0
하위권	13,615	8,816	17,896	5,288	7,110	52,725
	25.8	16.7	33.9	10.0	13.5	100.0
전체	262,315	279,089	530,516	301,620	466,685	1,840,226
	14.3	15.2	28.8	16.4	25.4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 3) 부모 계층별 대학생 자녀 현황

부모의 계층에 따라 자녀의 고등학교 유형이나 성적 등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대학 진학에서는 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첫 상태 변화를 추적한 결과, 하위계층 자녀의 78.8%가 대학에 진학했고, 취업 9.1%, 미 취업 12.1%였다. 대학 진학 비중이 가장 높은 부모 계층은 중간계층과 중상위계층으로 각각 80.9%와 81.1%였다. 반면, 상위계층 자녀 중 대학 진학은 76.9%로, 오

히려 하위계층 자녀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았다. 그러나 상위계층 자녀는 대학 진학률은 낮았지만, 취업 비중 역시 2.7%로 가장 낮았고, 미취업이 20.4%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상태 변화이므로 미취업에는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계층 자녀의 최종학력 희망 등을 고려해볼 때, 재수생의 비율이 상당 포함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대학교 진학률은 대학교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lt;표 2-9&gt; 부모 계층별 고등학생 자녀 졸업 후 첫 지위

(단위: 명, %)

구분	대학 진학	취업	미취업	총계
하위계층	172,213	19,923	26,546	218,682
	78.8	9.1	12.1	100
중하위계층	182,794	20,389	37,991	241,174
	75.8	8.5	15.8	100
중간계층	370,576	30,189	57,365	458,131
	80.9	6.6	12.5	100
중상위계층	209,366	10,880	37,844	258,090
	81.1	4.2	14.7	100
상위계층	301,066	10,507	79,844	391,417
	76.9	2.7	20.4	100
전체	1,236,016	91,887	239,590	1,567,493
	78.9	5.9	15.3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진학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한 비중이 높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2-3년제 대학의 진학 비중이 높은 뚜렷한 교육 경로의 분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하위계층 자녀의 경우, 대학 진학자 중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53.8%였고, 2-3년제는 43.2%, 기타 대학은 3.1%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계층 자녀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중이 77.4%로 가장

높았으며, 2-3년제 대학 진학 비중은 20.3%에 그쳤다.

자녀세대의 이러한 격차는 계층 간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상위계층의 4년제 대학 진학률(77.4%)은 하위계층(53.8%)보다 약 1.44배 높았으며, 반대로 2-3년제 대학 진학률은 하위계층(43.2%)이 상위계층(20.3%)보다 약 2.13배나 높게 나타나 계층에 따른 진학 유형 선택이 뚜렷하게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은 하위계층(53.8%)부터 중간계층(59.3%)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중상위계층(72.1%)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중상위계층 이상으로의 진입이 4년제 대학 기회 확보에 결정적인 분기점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단순히 대학 진학 여부를 넘어, 어떤 질(Quality)의 고등교육을 경험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노동시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불평등의 중요한 단면이며, 고등교육 내 수직적 서열화(vertical stratification)가 발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2-10> 부모 계층별 대학교 유형별 진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4년제	2-3년제	기타	총계
하위계층	91,659	73,576	5,242	170,477
	53.8	43.2	3.1	100
중하위계층	103,539	71,105	7,389	182,032
	56.9	39.1	4.1	100
중간계층	219,544	145,356	5,078	369,977
	59.3	39.3	1.4	100
중상위계층	149,892	55,270	2,842	208,003
	72.1	26.6	1.4	100
상위계층	233,169	61,016	6,882	301,066
	77.4	20.3	2.3	100
전체	797,804	406,322	27,431	1,231,556
	64.8	33	2.2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4년제 대학교 진학자의 전공계열 분포를 부모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특정 전공에서 계층 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계열에서 하위계층 자녀의 비중은 9.9%였으나, 상위계층은 29.5%로 나타나 약 3배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차이가 비교적 적은 전공계열은 공학계열로, 하위계층은 17.8%, 상위계층은 22.5%로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의/약학계열 역시 하위계층 12.0%, 상위계층은 23.5%로 약 2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사관학교 및 경찰대는 하위계층 출신이 전무(0%)한 반면, 상위계층 출신은 5.6%를 차지하여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전공 선택, 즉 고등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와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의/약학계열과 사관학교/경찰대 등 소위 ‘엘리트 경로’에서 상위계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해당 경로 진입에 필요한 경제적·문화적 자본을 상위계층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학계열은 다른 전공에 비해 계층별 분포가 가장 고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학계열이 비교적 명확한 취업 경로와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층과 무관하게 많은 학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보편적인 실용적 경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에서는 모두 상위계층의 비중이 하위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해당 학문 분야가 요구하는 추상적 사고능력이나 문화적 소양이 부모의 문화자본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부모가 아는 직업의 한”(FGI 참여자 J, 40대 남성)가 자녀의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특정 계층이 특정 분야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lt;표 2-11&gt; 4년제 대학 전공계열별 부모 계층분포

(단위: 명, %)

구분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총계
인문계열	4,976	11,346	32,477	22,243	29,684	100,725
	4.9	11.3	32.2	22.1	29.5	100
(상경계열 포함)	31,432	48,005	84,155	34,827	80,873	279,291
	11.3	17.2	30.1	12.5	29	100
자연계열	14,979	18,148	26,928	10,291	21,457	91,803
	16.3	19.8	29.3	11.2	23.4	100
공학계열	67,173	47,784	108,113	69,153	84,936	377,159
	17.8	12.7	28.7	18.3	22.5	100
의/약학계열	14,167	18,341	34,423	23,059	27,588	117,579
	12	15.6	29.3	19.6	23.5	100
교육계열	5,971	7,882	18,068	10,499	17,737	60,157
	9.9	13.1	30	17.5	29.5	100
예체능계열	27,472	25,290	57,080	31,128	35,412	176,381
	15.6	14.3	32.4	17.6	20.1	100
사관학교, 경찰대	-	2,985	3,724	2,661	551	9,921
	0	30.1	37.5	26.8	5.6	100
전체	166,170	179,781	364,968	203,860	298,237	1,213,016
	13.7	14.8	30.1	16.8	24.6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의 소재지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층 자녀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의 진학 비중이 높은 반면, 하위계층 자녀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양질의 교육 인프라와 기회가 집중된 수도권으로의 진학 기회가 상위 계층에게 더 많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와도 연결된다. 면접조사 참여자는 경기도 거주자임에도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주변에 없다”,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하며 거주 지역 자체가 교육 기회를 제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상위계층 자녀의 11.3%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여, 하위계층(7.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서울에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지역적 분포의 차이를 넘어 고등교육의 질적 격차를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서울 지역 대학 진학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수반하므로, 부모

의 경제적 지원 능력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비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북 지역 대학 진학률은 하위계층이 13.6%에 달했으나 상위계층은 8.1%에 그쳤으며, 충남 지역 역시 하위 계층의 진학률(12.5%)이 상위계층(1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 소재지의 계층별 분포 차이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분리 현상을 보여 준다. 상위계층 자녀가 양질의 교육 인프라와 졸업 후 일자리 기회가 집중된 서울로 진학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하위계층 자녀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한적인 지역 대학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 단계에서의 지리적 위치 선정이 향후 사회적 이동성과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핵심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t;표 2-12&gt; 부모 계층별 대학교 소재지

(단위: 명, %)

구분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전체	
서울	13,210	7.7	18,154	9.9	16,518	4.5	12,935	6.2	33,872	11.3	94,689	7.7
부산	8,558	5	12,098	6.6	33,271	9	9,756	4.7	19,493	6.5	83,176	6.7
대구	9,484	5.5	6,359	3.5	12,084	3.3	4,392	2.1	8,838	2.9	41,157	3.3
인천	4,100	2.4	1,695	0.9	9,922	2.7	6,999	3.3	8,133	2.7	30,848	2.5
광주	4,565	2.7	5,063	2.8	10,846	2.9	5,759	2.8	6,338	2.1	32,571	2.6
대전	6,056	3.5	5,562	3	13,447	3.6	6,375	3	17,453	5.8	48,892	4
울산	2,033	1.2	3,658	2	6,282	1.7	5,909	2.8	3,810	1.3	21,691	1.8
경기	27,637	16	47,306	25.7	86,338	23.3	57,912	27.7	66,169	22	285,362	23.1
강원	8,137	4.7	4,254	2.3	13,341	3.6	15,937	7.6	13,481	4.5	55,150	4.5
충북	6,569	3.8	13,751	7.5	9,604	2.6	9,250	4.4	17,033	5.7	56,209	4.5
충남	21,583	12.5	24,542	13.3	30,686	8.3	19,872	9.5	32,155	10.7	128,837	10.4
전북	6,593	3.8	9,367	5.1	17,710	4.8	6,662	3.2	10,249	3.4	50,581	4.1
전남	11,520	6.7	7,871	4.3	21,572	5.8	7,741	3.7	14,072	4.7	62,775	5.1
경북	23,388	13.6	12,752	6.9	51,153	13.8	23,583	11.3	24,274	8.1	135,150	10.9
경남	13,023	7.6	10,863	5.9	35,026	9.5	15,304	7.3	20,228	6.7	94,443	7.6
제주	5,761	3.3	744	0.4	2,779	0.7	980	0.5	5,468	1.8	15,731	1.3
총계	172,213	100	184,038	100	370,576	100	209,366	100	301,066	100	1,237,260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대학교 등록금의 주된 부담자는 모든 계층에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계층에 따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비중은 중간계층(73.6%)에서 가장 높았으며, 오히려 하위계층(65.4%)과 상위계층(67.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였다. 기준의 통념과 달리,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비중은 부모 계층이 상승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위계층에서는 본인 부담 비중이 3.1%였으나, 상위계층에서는 이보다 높은 5.8%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가 하위계층에서는 생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위계층에서는 높은 보수를 받는 과외나 인턴십 등 특권적인 근로 기회에 접근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층별 재원 조달 전략의 차이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항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장학금 수혜율은 하위계층(14.2%)과 상위계층(14.2%)에서 가장 높고 중간 계층(7.8%)에서 가장 낮은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이는 하위계층이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의 주된 수혜 대상이고, 상위계층은 우수한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반면,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중상위계층(1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 기준상 국가장학금 혜택은 받기 어려우나, 자력으로 등록금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낸 세대가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대학 입학 이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식, 즉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돈을 내는가의 문제를 넘어, 각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장학금), 시장 자원(대출), 개인적 자원(근로 기회)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학업 지속성과 인적자본 축적 과정에 또 다른 불평등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t;표 2-13&gt; 대학교 등록금 부담자

(단위: 명, %)

구분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장학금	본인	배우자	조부모	학자금	대출	총계
하위계층	112,601	4,711	-	24,519	5,293	1,408	2,987	20,694	172,213	
	65.4	2.7	0.0	14.2	3.1	0.8	1.7	12.0	100.0	
중하위계층	131,918	1,300	1,355	16,092	9,111	-	2,413	21,848	184,038	
	71.7	0.7	0.7	8.7	5.0	0.0	1.3	11.9	100.0	
중간계층	272,701	3,083	3,036	28,790	19,129	-	3,037	40,801	370,576	
	73.6	0.8	0.8	7.8	5.2	0.0	0.8	11.0	100.0	
중상위계층	139,433	1,882	2,516	25,584	8,561	403	-	30,988	209,366	
	66.6	0.9	1.2	12.2	4.1	0.2	0.0	14.8	100.0	
상위계층	202,700	-	6,482	42,697	17,387	-	876	30,925	301,066	
	67.3	0.0	2.2	14.2	5.8	0.0	0.3	10.3	100.0	
전체	859,354	10,976	13,388	137,682	59,482	1,810	9,312	145,256	1,237,260	
	69.5	0.9	1.1	11.1	4.8	0.1	0.8	11.7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한편, 대학원은 단순히 학업의 연장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고 격차를 심화하는 핵심적 기능을 갖는다. 학사 학위만으로는 진입이 어려운 전문직의 필수 자격 역할을 하거나,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신을 차별화하는 경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은 최소 2년 이상의 기회비용과 상당한 비용을 수반 하므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녀가 대학원 진학 등 추가적인 인적자본 축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비를) 보내주는”(FGI 참여자 B, 30대 여성; FGI 참여자 H, 30대 남성) 등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통계 역시도 대학 졸업 이후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부모 계층에 따라 대학원 진학률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하위계층 출신 대졸자 중 대학원에 진학한 비중은 2.8%에 그쳤으나, 중상위계층은 이보다 약 1.5배 높은 4.3%, 상위계층은 약 3.3배 높은 9.2%에 달했다. 반대로,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비중은 상위계층이 74.9%로 모든 계층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중간계

층(85.2%)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상위계층이 노동시장으로의 즉각적인 진입 대신 인적자본을 추가로 축적하는 경로를 선택할 여유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중간계층은 대학 교육을 통해 획득한 인적자본을 가장 활발하게 노동시장에서 실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졸업이라는 동일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와 노동시장 진입 전략이 상이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4>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대학교 졸업 후 진로

(단위: 명, %)

구분	대학원 진학	취업	미취업	총계
하위계층	4,870	140,905	26,438	172,213
	2.8	81.8	15.4	100
중하위계층	3,747	146,896	33,395	184,038
	2	79.8	18.1	100
중간계층	10,602	315,838	44,137	370,576
	2.9	85.2	11.9	100
중상위계층	8,997	172,201	28,168	209,366
	4.3	82.2	13.5	100
상위계층	27,816	225,500	47,751	301,066
	9.2	74.9	15.9	100
전체	56,032	1,001,339	179,889	1,237,260
	4.5	80.9	14.5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부모 계층에 따라 자녀세대가 희망하는 연봉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대상은 고등학교 시점에, 대학에 진학 후 취업한 대상자는 대학교 시점에, 대학원 진학 후 취업한 대상은 대학원 시점에 희망하는 연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위계층 자녀가 취업 전 희망하는 연봉은 2,641만원이었으며, 중하위계층 2,919만원, 중간계층 3,073만원, 중상위계층 3,274만원, 상위계층 3,505만원이었다. 이러한 희망연봉의 격차는 부모 세대의 계층이 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출발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대물림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희망연봉은 자녀세대 개

인이 축적해온 교육, 경험,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위계층 자녀일수록 더 좋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연봉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결과이다. 즉,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격차가 최종적으로 경제적 기대치의 격차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t;표 2-15&gt;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희망연봉

구분	희망연봉(만원)
전체	3,162.1
하위계층	2,640.7
중하위계층	2,919.3
중간계층	3,072.9
중상위계층	3,274.2
상위계층	3,505.1

주: 취업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희망연봉을 산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 4)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일자리 현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과정에서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차이로 발현된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모든 계층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하위계층 자녀 중 상용직은 82.1%로 가장 낮았고, 상위계층 자녀는 88.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등을 포함하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자는 하위계층이 7.8%로 가장 높았다. 즉, 하위계층 자녀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다수 위치하는 1인 자영자 비중이 가장 높아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lt;표 2-16&gt;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현재 일자리 종사상지위

(단위: 명, %)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원 있는 자영자	1인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총계
하위계층	157,619	12,386	4,961	14,993	1,919	191,878
	82.1	6.5	2.6	7.8	1.0	100.0
중하위계층	195,364	17,779	2,191	13,958	-	229,292
	85.2	7.8	1.0	6.1	0.0	100.0
중간계층	408,476	35,998	4,110	11,064	1,278	460,926
	88.6	7.8	0.9	2.4	0.3	100.0
중상위계층	223,618	18,927	3,288	8,134	2,091	256,058
	87.3	7.4	1.3	3.2	0.8	100.0
상위계층	342,918	20,242	5,126	19,323	-	387,610
	88.5	5.2	1.3	5.0	0.0	100.0
전체	1,327,994	105,332	19,676	67,472	5,288	1,525,763
	87.0	6.9	1.3	4.4	0.3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의 회사 유형을 보면 모든 계층에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하위계층 자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위계층 자녀 중 현재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81.3%였고, 상위계층 자녀는 71.8%로 가장 낮았다. 또한, 하위계층 자녀 중 외국인 회사에 종사하는 비중은 0.0%였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7.6%로 가장 낮았다. 반면, 상위계층 자녀는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에 다니는 비중은 6.2%로 가장 높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비중은 11.8%였다.

민간회사는 대기업부터 영세사업장까지 범위가 매우 넓지만,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높은 고용 안정성을 갖는다. 이는 상위계층 자녀는 정부·공공부문과 같이 안정적인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지만, 하위계층 자녀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2차 노동시장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의 1차-2차 분절 구조가 부모 계층에 따

라 자녀의 진입 경로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에서도 “일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및 성과급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FGI 참여자 H, 30대 남성).

특히, 정부·공공기관이나 외국계 회사는 높은 수준의 학력, 어학 능력, 그리고 긴 시험 준비기간을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다. 이는 상위계층 자녀가 이러한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사회적 자본을 제공해줄 여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과정에서 축적된 모든 격차는 최종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부모 계층이 자녀의 직업적 성취를 통해 계층이 대물림되는 것이 확인된다.

<표 2-17>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현재 일하는 회사 유형

(단위: 명, %)

구분	민간	외국	공공	재단	정부부처	무소속	총계
하위계층	138,145	-	5,914	12,965	12,982	-	170,004
	81.3	0	3.5	7.6	7.6	0	100
중하위계층	160,078	1,228	7,262	11,704	28,456	2,342	211,070
	75.8	0.6	3.4	5.5	13.5	1.1	100
중간계층	343,449	12,057	22,980	18,381	47,060	547	444,474
	77.3	2.7	5.2	4.1	10.6	0.1	100
중상위계층	189,082	6,714	4,513	13,693	25,494	3,050	242,545
	78	2.8	1.9	5.6	10.5	1.3	100
상위계층	259,490	7,074	22,486	25,635	42,799	3,925	361,410
	71.8	2	6.2	7.1	11.8	1.1	100
전체	1,090,244	27,072	63,155	82,377	156,791	9,863	1,429,503
	76.3	1.9	4.4	5.8	11.0	0.7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사업체 규모를 보면 중상위계층 이상에서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하위계층 자녀 중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4.2%였다. 반면, 중상위계층 자녀 중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16.1%였으며, 상위계층 자녀는 13.5%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높을 가능성 있는 사

업체에 하위계층보다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등 더 높은 계층의 자녀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대기업을 다녀도 (부모 배경이 없으면) 불안해해서 오히려 재테크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현 직장의 규모나 소득 수준을 넘어 자산 및 배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FGI 참여자 B, 30대 여성).

<표 2-18>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현재 일하는 회사 규모

(단위: 명, %)

구분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총계
하위계층	18,252 10.7	22,503 13.2	41,231 24.3	17,462 10.3	19,613 11.5	23,465 13.8	14,241 8.4	6,175 3.6	7,065 4.2	170,004 100
중하위계층	24,509 11.5	27,990 13.1	57,941 27.2	19,316 9.1	17,558 8.2	30,992 14.5	7,941 3.7	12,635 5.9	14,262 6.7	213,143 100
중간계층	45,558 10.2	64,056 14.4	97,887 22	44,798 10.1	42,961 9.7	58,715 13.2	31,066 7	15,928 3.6	43,505 9.8	444,474 100
중상위계층	27,606 11.4	26,745 11	43,349 17.9	31,456 13	23,220 9.6	22,339 9.2	16,519 6.8	12,255 5.1	39,057 16.1	242,545 100
상위계층	31,344 8.6	37,191 10.2	66,193 18.2	33,100 9.1	52,082 14.3	36,777 10.1	32,267 8.9	25,030 6.9	49,177 13.5	363,161 100
전체	147,269 10.3	178,484 12.5	306,600 21.4	146,131 10.2	155,433 10.8	172,287 12	102,033 7.1	72,023 5	153,066 10.7	1,433,326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이상의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일자리 특성은 최종적으로 임금수준의 차이로 확인된다. 임금노동자 중 하위계층의 현재 일자리 연평균 연봉은 3,935만원이었으며, 중하위계층은 4,119만원, 중간계층 3,996만원, 중상위계층 4,670만원, 상위계층 4,754만원이었다. 임금단위가 월급인 임금노동자로 보더라도 하위계층 자녀의 현재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246.6만원, 이었고, 상위계층 자녀의 현재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309.7만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당제, 시간급제에서 월급제는 12개월, 주급제는 52주, 일당제는 260일, 시급제는 2,080시간을 곱하여 하나의 통일된 연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하위계층 자녀의 연평균 임금은 3,243만원,

중하위계층은 3,381만원, 중간계층 3,496만원, 중상위계층 3,867만원, 상위계층 4,111만원으로, 부모 계층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임금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9> 부모 계층별 자녀세대 임금 단위별 평균 임금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연봉	월평균	주당	일당	시간당	통일된	연평균	임금
하위계층	3,935	246.6	.	8.0	0.8		3,243	
중하위계층	4,119	263.7	.	.	1.3		3,381	
중간계층	3,996	272.7	55	12.7	1.3		3,496	
중상위계층	4,670	278.7	.	.	1		3,867	
상위계층	4,754	309.7	90	16.8	1.3		4,11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각 연도

##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2007년 고등학생 코호트를 10년 이상 추적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생애 경로 전반에 걸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 기존의 사회계층을 공고히 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사회학자 Pierre Bourdieu가 제시한 자본 이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해석된다. 첫째, 분석의 첫 단계인 자녀의 고등학교 현황에서 확인된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는 경제적 자본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사교육비와 같이 학업 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자원에 대한 투자 능력 격차로 이어진다.

실제로 상위계층 자녀의 일반계/특목고 진학률과 상위권 성적 비율이 높은 결과는 부모의 경제적 자본이 양질의 교육 기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아가 부모 계층에 따른 자녀의 희망 최종학력의 격차는 문화적 자본의 영향을 시사한다. 상위계층 부모는 높은 학력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높은 교육적 기대와 포부를 심어줄 수 있고, 이는 자녀에게 내재화되어 더 높은 학업 목표를 설정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김희삼(202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문화적 자본이 자녀의 교육과정 참여와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고등학교에서부터 경제적·문화적 자본의 차이는 교육적 성취와 목표의 차이를 만들며 불평등의 출발선을 다르게 설정한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진로에서 계층 간 대학 진학률 자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불평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학의 질적 특성을 통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상위계층 자녀는 4년제 대학, 특히 의약학·교육계열 등 특정 전문직으로의 진입이 용이한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학이 계층을 섞는 역할이 아닌, 기존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생들을 서로 다른 경로로 분류하는 정교한 분류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부담 주체에서 나타난 차이는 대

학 내 불평등의 존재를 시사한다. 하위계층 자녀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상위계층 자녀가 취업 준비 및 스펙 쌓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대학 졸업 후 상위계층 자녀의 높은 대학원 진학률은, 대졸 학력이 보편화된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신을 차별화하고 추가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결국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계층 간 격차가 해소되기보다 더욱 벌어지는 현실을 입증하는 결과이다(이병훈·하상웅, 2020).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 누적된 격차는 자녀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불평등으로 발현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자녀세대의 불평등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자녀세대의 취업 직전 희망 연봉에서 확인된다. 부모 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의 희망 연봉이 체계적으로 높은 결과는 교육과정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에 기반한 합리적 기대치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Becker, 1964). 이는 상위계층 자녀는 양질의 교육 기회와 높은 보상이 기대되는 전공 선택 등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합리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Spence, 1973), 이러한 기대치의 격차는 실제 첫 일자리의 질적 분질에서 현실화된다.

한국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성과 보상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2차 노동시장으로 분질되어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입 위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상위계층 자녀는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정부·공공기관,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높은 수준의 학력 자본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험 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과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을 동시에 요구한다(김영미, 2022). 반면, 하위계층 자녀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민간 부문,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같은 2차 노동시장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졸업 후 즉시 생계에 나서야 하는 경제적 압박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번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상향 이동이 어려운 낙인 효과(scarring effect)'를 겪을 가능성을 높인다(최성수, 2022).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는 실제 임금 격차로 귀결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세대의 연평균 임금이 뚜렷한 격차를 보인 것은,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평등이 최종적인 경제적 성과로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교육이 사회이동 혹은 계층이동의 공정한 기제로 기능하기보다, 부모의 지위를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사회 재생산의 핵심 통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교육 불평등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생애 경로 전반에 걸쳐 누적되고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종속된 자녀세대의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고등학교 이전부터 발생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과정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하위계층 자녀가 집중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장

## 금융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금융 불평등 현황

제4절 소결



## 제3장 금융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 제1절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장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심각한 금융 영역에서의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금융 영역에서의 불평등 실태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어 가계금융의 불평등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 불평등 현황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가계금융 영역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촉진한다고 보고 되는(박정희, 2013; 신팽영·김상봉·정준호, 2023; 박은엽, 2024) 금융 불평등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세대(연령) 및 생애단계, 성별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신팽영·김상봉·정준호, 2023: 2)를 세대별, 생애단계별, 성별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개인들은 전 생애과정(삶)을 거쳐 세대나 생애주기,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물론 사회에서 매우 다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청년기에는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비교적 소득이 적고 중장년으로 접어들면 소득이 상승하고 다

시 노년기에 소득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청년기에 는 소득보다 높은 소비를 영위하기 위해 주로 차입을 하고 중장년기에는 대출을 상환하며 노년기의 소비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노년기에는 그간 축적된 자산을 이용하여 소비를 유지한다(김미루, 2023: 9). 또한 여성의 경우는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시기, 특히 청년기에 결혼과 출산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소득 불안정 나아가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 처하기 쉽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여성 고유의 생애사적 사건에 의해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과다한 부채 문제도 세대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영끌’(내집 마련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나듯이 “부채 덩에 걸린 청년세대”의 빚 문제는 취업난, 저출산 이슈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KBS뉴스, 2022.09.11.). 20대는 주로 전월세, 30~40대는 내집 마련이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세대 간 부채의 이유가 다른 만큼 세대 간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신광영·김상봉·정준호, 2023: 77). 그런 점에서 세대나 세대 간, 생애단계를 고려한 금융정책이나 관련 제도 등을 설계해 가야 한다.

특히 오늘날 모든 일상생활의 토대가 된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일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신광영·김상봉·정준호, 2023: 2). 그러나 현행 금융제도가 금융자산의 원활한 유통과 시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역으로 또 다른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신광영·김상봉·정준호, 2023: iii)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 불평등은 금융기본권과 연결해 이해해 볼 수 있다. 금융기본권은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여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하고 신용을 제공받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김을식·임수강 외 2021: 57). 금융 불평등은 금융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접근성, 즉 금융부채 이용 기회나 금융 이용 조건(이자율)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고소득자/고신용자에게는 저금리, 저소득자/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금융 불평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분할(김을식·임수강 외, 2021; 이건범, 2014)로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제1금융권에서는 고소득자/고신용자를 고객으로 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제2, 제3의 금융권이나 사금융은 저소득자/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불리한 조건 등을 제공하는 영업도 금융 불평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금리를 이용하는 저소득자는 부채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자산 축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부채상환이 어려워진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불법사금융 등 위험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현재 금융시장에서 금융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광영·김상봉·정준호(2023)는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불평등이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이 금융 불평등을 촉진시켜 경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상호 강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신광영·김상봉·정준호, 2023: 61).

금융 불평등 해소와 가계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금융 영역에서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이 외형적,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인 차원에서의 성장은 매우 미흡하다는 연구들(한재명, 2015; 이순호, 2012)에 공감한다. 그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금융포용정책의 확대,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제고, 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 1) 분석자료 및 시기, 대상

금융 불평등 현황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구특성별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이다. 조사결과는 금융 및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고 있다(통계청, 2017.3.29. 보도자료). 이 자료는 다양한 가계의 금융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금융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다.<sup>3)</sup> 본 연구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보다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상세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원격접속서비스(R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는 개인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1인 가구=개인). 금융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문항인 개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가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면서 1인 가구만 분석에 포함시킨 이유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특성과 관련된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중심의 조사자료라는 점이다. 조사는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산은 세대주 중심으로 동거하는 가구원들의 자산이 포함되어 합계된 자료이다. 따라서 자산을 소유했지만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자산이 합산되어 가구주의 자산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sup>4)</sup>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가구주가 대표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시점에 가구주와 해당 가구원 모두가 조사에 응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자산 조사 과정에서 가구주가 문자나 전화 등으로 가구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등 자산 관련 문항을 확인해 대표로 작성하기도 한다. 해당 가구원 모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다른 가구 포함 시 개인의 자산 관련 문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특성 이외에도 금융 불평등이 사실상 개인과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금융서비스 이용 조건 등에 차이를 가져오는 금융 불평등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신용점수, 소득, 직업 안

3)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협조안내문 중.

4) 반대로 경제적 자립도가 없어 독립이 불가능한 자녀 세대나 노인이 가구원으로 속해 있다는 점도 해석 시 인지 할 필요가 있다(서울연구원, 2021).

정성 그리고 금융 이력과 함께 가구라 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자산 등 경제적 상황과 깊이 관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 단위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표본만을 사용하였다. 1인 가구는 곧 한 개인이 가구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소유하므로 가구 단위로 수집된 자산과 부채 정보는 해당 개인의 금융정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결과는 1인 가구 분석이므로 전체 가구 또는 다인 가구로의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분석 시기는 2017~2024년으로 8년이다. 이는 자료의 상황과 관련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표는 2017년에 변화가 있었다. 2017년 이전과 조사 방법 및 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지표는 고·저소득층의 소득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의 표본 대표성이 높고 연간 행정자료(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소득 관련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다(통계청, 2017.12.21. 보도자료).<sup>5)</sup>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 차원에서의 금융 불평등 실태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가계금융의 불평등 실태이다. 후자는 202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영역의 사회적 위험(문제)과 관련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세대/성별 분석 혹은 소득분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첫 번째 금융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첫 번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금융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지표의 지니계수와 보유액 및 점유율 분석을 시도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니계수는 0부터

5) 2017년부터는 민감한 조사항목에 대한 가구의 응답 거부나 과소·과대 응답 등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이수진, 2022).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된다.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네이버 지식백과: 지니계수).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김상봉·김시언·홍종혁, 2023: 53). 본 연구에서는 이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것이다.

금융자산 불평등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자산 및 금융자산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자산 분포와 금융자산의 불평등 심화 여부를 파악할 것이다. 자산 지니계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불평등을, 금융자산 지니계수는 금융상품(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측정한다. 금융부채 불평등은 누가 어떤 조건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부채와 금융부채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부채 및 금융부채의 분포, 즉 어떤 집단에 부채 및 금융부채가 집중되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자산 집중도가 높은지, 특정 계층이 더 많은 금융자산 혹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니계수 분석은 금융자산 혹은 금융부채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는 접근성 격차의 결과를 반영하는 간접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지니계수 격차가 심하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가진 집단 간에 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한 집단은 접근성이 높은 것이고 또 다른 집단은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보유액 및 점유율 분석을 통한 금융 불평등 현황 분석은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분포,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각 계층이나 집단별로 얼마나 많은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추이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2017년과 2024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보유액과 점유율을 비교함으로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불평등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보유액 및 점유율의 산출을 통해서는 지니계수가 보여주지 못하는 각 집단의 자산과 부채의 세부적인 분포나 구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금융 불평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니계수 분석과 같이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접근성의 결과를 반영하는 대리 지표로서의 의미

를 갖는다. 만약 보유액과 점유율이 높다면 접근성이 높았을 것으로, 낮다면 접근성이 낮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5분위별에 따른 금융 불평등을 분석할 때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을 5분위로 나눈 뒤 분석한다. 이는 1인 가구 집단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자산/부채의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는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분석을 함으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금융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제언이나 현실 진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영역의 사회적 위험(문제)에 대해서는 202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관련 문항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 3) 금융 불평등 측정 지표

본 연구는 금융 불평등을 금융 접근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금융 접근성은 크게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금융부채 접근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성의 차이는 금융 불평등을 낳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접근성은 제도·정책·금융기관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에 직접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보유액과 점유율을 접근성의 대리 지표로 활용한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보유 현황은 개인·가계가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리고 자산 축적 혹은 부채 이용 기회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금융 자산과 금융부채 규모나 구성 등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 불평등의 현황을 규명하고, 나아가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lt;표 3-1&gt; 금융 불평등 측정지표

구분		세부내용	
금융 자산 불평등	금융자산 접근성	총자산과 순자산 및 금융자산 성별 지니계수	
		소득 5분위별 금융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세대 및 성별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	
금융 부채 불평등	금융 부채 접근성	금융 이용 기회 불평등	부채 및 금융부채 성별 지니계수
			소득 5분위별 부채/금융부채 보유액 및 점유율
			세대 및 성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금융 이용 조건(이자율) 불평등	금융 이용 조건(이자율) 불평등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 및 점유율
			금융기관 유형별 성별 금융부채 지니계수
			소득 5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금융자산 접근성은 가계나 개인이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해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금융자산은 예금, 투자상품, 보험 및 연금, 주식, 채권, 부동산을 활용한 금융상품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포함한다.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재정적 독립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개인이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자산 접근성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 규모 분석에 한정하되, 금융자산 보유 수준은 실제 금융시장 참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인이 어느 정도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여기서는 소득수준, 성별, 세대 등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 정도가 어떤지 그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에 포함된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의 합계이다.

금융부채 접근성은 가계나 개인이 금융기관의 부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부채는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확대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과다한 부채는 재정부담으로 가계를 경제적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금융부채 접근성은 다양한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출심사 기준(예: 신용점수나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나 상품의 이자율 수준, 대출 상환 조건 등이 어떤지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금융부채 접근성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대신 금융부채 접근성의 대리 지표로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부채 보유 수준은 실제 금융시장 참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인이 어느 정도 금융부채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성별, 세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금융부채 보유 규모와 구성 및 점유율을 분석함으로써 금융부채 접근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금융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에 포함된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기타 부채 등이다.

&lt;표 3-2&gt;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비교

구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종류*	현금, 예금, 투자상품, 펀드,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냠 겟돈 등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겟돈을 탄 후 낼 금액, 빌린 돈 등
접근성	금융자산을 확보, 관리,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도 (금융자산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대출, 신용카드, 기타 부채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도(금융부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가능성을 의미함)
목표	자산의 형성, 관리, 축적 등을 통한 재정(경제) 안정	소비나 투자 등을 위한 자금조달(확보)
불평등	금융자산의 구성과 분포가 얼마나 불균등한지	금융부채의 구성과 분포가 얼마나 불균등한지

\*가계금융복지조사 참조

## 4) 변수 정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모두 <표 3-3>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표 3-3> 금융 불평등 측정을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항목

구분		세부내용
자산	금융자산	저축액(적립·예치식 저축 <sup>6)</sup> , 기타 저축 <sup>7)</sup> , 전·월세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합산함.
	실물자산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을 합산함.
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외상 및 할부/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기타 부채 <sup>8)</sup> 를 합산함.
	임대보증금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거주주택 이외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대 보증금을 합산함.

소득 5분위별 분석 시 가구소득은 가처분소득으로 한다. 가처분소득은 어느 일정 기간에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 중에서 개인이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개인소득에서 세금과 세외부담(이자 등), 이전소득(사회 보장금, 연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sup>9)</sup> 경상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이자·배당 등) 및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경상소득은 경제적 활동 수준이나 총소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세금이나 이전 소득,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반영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

6)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당좌수표 포함),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저축성 보험 또는 만기에 일정 금액을 받는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7)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계돈

8) 계돈을 탄 후 낼 금액, 개인/직장으로부터 빌린 돈

9) <https://eiec.kdi.re.kr/material/ecoQueView.do?idx=1602> (2025.10.14. 검색)

세대는 통계청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구분을 참조하였다.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생애단계별 정책수립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이다. 이에 따르면 청년층은 15~39세, 중장년층은 40~64세, 노년층은 65세 이상이다(통계청, 2024.12.23. 보도자료).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과 자산 축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나 초기 주택 구매나 임대 등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중장년 세대(40~64세)는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로 소득과 자산 축적이 생애단계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자녀 교육비나 주택대출 상환 등으로 지출이 많을 수 있다. 노년 세대(65세 이상)는 은퇴 후 소득원이 제한적이며, 축적된 자산을 활용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 3. 본 연구의 차별점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개인에 둔 만큼 1인 가구만을 분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금융 불평등 연구는 보통 가구 단위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융 불평등의 실질적 주체는 개인이며 정책 대상자(예: 청년층, 노년층, 여성 등)도 가구 단위보다 개인 단위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다인 가구 포함 시 개인의 금융 불평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 불평등의 ‘정확한 개인별 규모나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세대, 성별로 금융 불평등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각 대상에 맞는 정책과제를 제안할 수 있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집단 전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세대별 남성 간 혹은 여성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불평등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 정책의 필요성 등도 반영하였다. 1인 가구는 2023년 현재 35.5%로 200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1인 가구가 2022년 739만 가구에서 2052

년 962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42년에는 40.8%, 2052년에는 41.3%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4.09.12.) 2023년 전체 일반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0~30대의 경우 12.5%, 60~70대는 10.0%이다. 1인 가구에는 특히 청년층, 비혼, 노년층 여성 등 금융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기존 가구 단위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금융 불평등 문제를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층, 이혼이나 별거, 사별, 가족 가치 관 변화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정책 수요자의 조건과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주요 연령집단별 1인 가구 비율

구분	2000년	200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5.5	20.0	30.2	31.7	33.4	34.5	35.5
20-30대	6.5	8.2	10.6	11.4	12.1	12.3	12.5
60-70대	4.4	5.3	8.0	8.5	9.1	9.5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 2025.05.06.검색).

주석: 1) 1인가구비율 = (해당 연령집단 1인가구수 ÷ 일반가구수) × 100.

2) 전수부문은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되며, 2016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금융 불평등에 대한 이해

#### 1) 금융의 역할과 기능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이 사회 불평등,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다. 금융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다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기주·신동호(2023)는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금융이 존재하고 발전함에 따라 불완전한 실물경제가 이전보다 덜 불완전해지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시장경제의 영역이 확장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러 연구들이 금융의 역할 혹은 기능과 관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동걸(2012)은 우리 경제가 처한 핵심 문제 중 하나로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문제는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또는 독과점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금융 부문이 기여할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도 금융 부문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을식·임수강 외(2021)는 금융회사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민간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자본이 필요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 개인과 기업의 위험을 덜어주는 기능, 소비자의 부를 관리해 주는 기능 등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전성을 유지해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강국(2023)도 현대 경제에서 금융은 여유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순환시키는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이어 금융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라 지적하며 여러 연구는 금융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업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 주장하며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진행된 점포와 ATM의 축소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책무는 다했는지 물었다. (한국금융, 2024.11.26.).

종합하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역할, 기능은 우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금융소외계층이 없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위험을 덜어주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과 사회 양극화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경제에서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 2) 금융 불평등의 개념

금융 불평등이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금융자원(예: 자본, 신용)이나 금융서비스(예: 대출, 보험, 투자상품 등)에 접근 혹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금융정보나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 금융시장 참여 및 자산증식 기회 등에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이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 또는 접근성이나 기회 등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격차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금융시장의 참여 기회와 자산 형성 가능성에 장기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든다면, 금융 불평등은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2금융권 등 고금리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람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증식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에 개인이나 집단 간의 자산 및 소득 축적의 기회를 불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금융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의 고착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안정을 저해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예: 금융교육 확대,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금융자산이나 금융의 이용 기회, 금융부채에 대한 접근성이나 자산 불평등의 차원에서 금융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신흥영·김상봉·정준호(2023: 61)는 금융 불평등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불평등’과 금융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의 불평등’이란 두 가지 불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에 금융 불평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금융자산의 불평등,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 차원에서 금융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신흥영·김상봉·정준호, 2023: 3). 김을식·임수강 외(2021)는 금융 불평등을 금융의 이용 기회와 이용 조건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은 금융부채 보유액 및 점유율, 보유 비율을 통해서, 금융 이용 조건의 불평등은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등을 통해 금융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한재명(2015)은 금융 불평등을 금융접근도의 불평등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금융 접근도를 가구 총소득 대비 금융기관부채의 비중(부채/소득 비율)으로 정의하고 있다.

### 3) 금융 접근성과 금융포용의 개념

금융 접근성과 금융포용은 금융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중요 개념이다.

#### (1) 금융 접근성

금융 접근성은 금융포용을 정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주요 구성요소이자 전제조건이다. 금융포용이 금융 접근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이순호(2012: 4)는 금

융 접근성이 경제주체가 정당한 가격에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김용범(2018)의 경우 금융 접근성으로 금융포용을 측정하는데, 금융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예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한다(김용범, 2018). 주목할 것은 이들 설명에서도 금융 접근성은 단순히 금융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말하는 금융 접근성은 실제 금융포용의 핵심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이용의 가능성 및 활용 정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2018)은 금융 접근성을 외형적·물리적 접근성과 실질적 접근성으로 구분한다. 외형적 접근성은 경제주체가 얼마나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실질적 접근성은 경제주체가 정당한 가격에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란 모두에게 단순히 금융서비스 접근의 기회가 주어지는 물리적·외형적 접근성 + 서민에 대한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접근성의 확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다(김용범, 2018: 32). 이순호(2012)는 금융 접근성을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며 크게 물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 or outreach), 거래편의성(ease of transaction),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물리적 접근성은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용이함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인구수 대비 금융회사 지점 및 ATM의 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거래편의성은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비가격적 비용으로서 예금의 최소잔고요구액, 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서류의 개수, 대출 신청 후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거래비용은 거래에 수반되는 금전적 비용으로 대출이자 및 관련 수수료, ATM 이용 수수료, 이체 비용, 예금잔고 유지 수수료 등이다(이순호, 2012: 4-5; 노형식·이순호, 2014). 이들 연구에서 의미하는 금융 접근성은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으로서<sup>10)</sup> 금융 접근성의 확대, 강화 등 실제 금융포용의 핵심이기도 하다. 단순히 예

10) 접근성이 없으면 이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컨대 물리적, 제도적으로 금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포용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개념인데 관련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금융 접근성과 금융포용 개념

연구물		내용
금융 접근성	김용범(2018)	금융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예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 외형적·물리적 접근성과 실질적 접근성으로 구분
	이순호(2012)	금융 접근성은 경제주체가 정당한 가격에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 물리적 접근성, 거래편의성, 거래비용으로 구분
금융 포용	김용범(2018)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여의도연구원(2021)	취약그룹과 저소득그룹 등이 필요할 때 알맞은 (affordable)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의 접근과 시의적절 (timely)하고 적절한(adequate) 신용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정의
	이순호(2012); 노형식·이순호(2014); 오수현·임한나·이경선(2017)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송금,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

## (2) 금융포용

금융포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김용범, 2018). 쉽게 말하면 금융포용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계층이 비용 등 측면에서 큰 부담 없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 또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사정상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을 해결해 손쉽게 돈을 저축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경남도민일보, 2013.07.16.). 금융포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

명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여의도연구원(2021)은 Rangarajan Committee(2008)의 금융포용 정의를 빌어 금융포용 개념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포용은 취약그룹과 저소득그룹 등이 필요할 때 알맞은(affordable)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의 접근과 시의적절(timely)하고 적절한(adequate) 신용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경우 금융포용은 다섯 단계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장 기초적인 물리적 접근성으로 도·소농 지역의 금융회사의 지점 설치, ATM기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초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단순한 지리적 접근 외에 거래의 편의성과 거래비용의 축소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즉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정보가 부족하거나 비대칭적이지 않아야 한다. 넷째,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적기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다(여의도연구원, 2021: 5).

일부 연구에서 금융포용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넘어 금융 접근성의 확대 결과가 제도권의 금융시스템에 경제주체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이순호, 2012; 노형식·이순호, 2014: 3; 오수현·임한나·이경선, 2017: 6). 이를 연구에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송금,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CGAP, 2011; Worldbank, 2013). 여기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접근(effective access)이란 거래가격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자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노형식·이순호, 2014: 3). 오수현·임한나·이경선(2017)은 금융포용은 기존의 금융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제도권 외에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금융포용의 핵심은 제도권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 접근을 위한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격차, 지위, 성별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오수현·임한나·이경선, 2017: 6-7). 본 연구에서 금융 불평등 측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산 접근성과 금융부채 접근성의 제고는 금융 포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소라 할 것이다.

## 2. 금융 불평등 선행연구 검토-자산과 부채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자산과 부채의 불평등은, 가계나 개인이 금융서비스나 금융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불평등, 즉 금융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심화되고 재생산된다.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고, 불리한 조건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 불평등이 자산 및 부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금융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금융 불평등과 부채 불평등이 상호작용하며 구조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자산 불평등과 부채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자산이나 부채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사실 금융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접근성에 차이를 낸는 또는 이들 접근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자산 불평등과 금융 불평등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산 불평등의 영향요인은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재무적 특성, 가구특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인구 및 사회적 특성에는 교육수준, 성별, 연령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수준이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다수 연구에서 밝혔다. 남상호·권순현(2008)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빈곤 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했고 김경아(2015)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숙재·정순희·여운경(2002)은 가구주 교육수준은 순자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소인 반면 부채 소유는 가계 순자산 규모를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김옥연(2011)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과 학력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에는 학력이 부의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다른 자산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경제연구원(2004)과 정운영(2008)은 교육수준이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운영(2008)은 총 금융자산에 대한 각 금융자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는데 금융자산 대비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가구주 교육수준이라 분석했다. 이 중 총 금융자산 대비 은행예금 비중과 저축성 보험 비중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진 반면, 총 금융자산 대비 주식/채권/신탁 비중은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졌다. 교육수준과 금융자산과의 관계는 금융경제연구원(200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금융경제연구원(2004)에 따르면 가구주 및 가구 구성원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주식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 이는 안전 금융자산과는 달리 주식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 및 정보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11)</sup>

연령과 자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옥연(2011)이 연령이 자가소유 확률이나 부동산 자산 비중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경아(2015)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을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금융경제연구원(2004)은 금융자산을 안전 금융자산과 위험 금융자산으로 구분해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안전 금융자산이 30대 이후 가구주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생애주기 패

11) 주식과 채권이 매우 정보에 민감한 자산이므로 가구주 교육수준이 이러한 자산을 구성하는 데 정보력이나 금융지식에의 접근 용이성 측면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금융경제연구원, 2004: 98)

던을 보임을 밝혔다. 정운영(2008)에서는 총금융자산 중 저축성 보험 비중의 결정 요인인 가구주 연령이 양의 값을, 가구주 연령의 제곱은 음의 값을 나타났다. 이 와 관련 정운영(2008)은 가구주 연령에 대한 자산비율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인 생 애주기 가설에 적합한 역 U자형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감소하는 낙타 등(hump)의 모습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성별도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남상호·권순현(2008)은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한 반면 김경아(2015)는 남성이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정운영(2008)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제시했다.

## (2) 가구특성

가구특성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가구형태 등 가구 구성, 주택점유유형, 거주지역과 같은 주거 관련 요인, 종사상 지위와 같은 경제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구 구성과 관련해 김옥연(2011)은 1인 가구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은 감소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증가한다고 확인하였다. 김경아(2015)는 단독가구일수록 자산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남상호·권순현(2008)은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산빈곤 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제시하였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김경아(2015)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사업주와 같은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된 경우일수록 자산수준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구특성 중 주거와 관련해서 남상호·권순현(2008)은 자가 보유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김옥연(2011)은 부동산자산 비중에는 자가 소유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문숙재·정순희·여운경(2002)은 가구주의 주택 소유권은 가계의 순자산 규모 증가에 강력한 요인임을 주장했다. 금융경제연

구원(2004)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계일수록 위험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고 했다. 거주지역도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다. 김옥연(2011)은 자가 소유 확률에는 서울·수도권지역 거주가 부(-)의 영향을 주는 반면 부동산자산 비중은 서울·수도권 지역 거주나 자가 소유 등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서울·수도권 거주는 집 소유 확률은 낮추지만, 집을 가지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다는 것이다. 김경아(2015)는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산 수준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숙재·정순희·여운경(2002)은 대도시 거주 가계가 순자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3) 재무적 특성

재무적 특성으로 총소득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옥연(2011)은 자가 소유 확률이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둘 다 총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운영(2008)은 총 연소득이 많을수록 총 금융자산 대비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비중이 높다고 한 반면 총 연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가구주의 총 연소득이 적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연소득이 많은 가계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닌 자산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가계도 금융기관의 부채를 이용하여 부동산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숙재·정순희·여운경(2002)도 고소득 가계가 순자산을 많이 보유한다고 보고했다. 남상호·권순현(2008)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자산 관련 요인을 보면, 김옥연(2011)은 자가 소유 확률에는 총자산이 정(+)의 영향을 주고 부동산 자산 비중에도 총자산이 정의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문숙재·정순희·여운경(2002)은 금융자산, 즉 은행권 저축이나 보험권 저축, 투자자산과 같은 자산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 순자산을 많이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부채와 자산 불평등 관련 연구로 김옥연(2011)에 따르면 총부채가 부동산 자산 비중에는 정(+)의 영향을 준 반면 자가소유 확률에는 부(-)의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총부채는 부동산 비중을 높이지만, 자가 소유 확률은 낮춘다는 것이다. 정운영(2008)도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준 요인은 총부채액이라 하였다. 정운영(2008)은 총부채액이 적을수록 총금융자산 대비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재무안정성과 관련된 소득위험의 경우 김옥연(2011)은 소득위험이 클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은 줄어든다고 했다. 금융경제연구원(2004)에서는 안전 금융자산 보유는 소득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비중이 높은 반면 위험 금융자산인 주식의 보유 비중은 동일한 소득수준하에서 소득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상 자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중 교육 수준은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주된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어 재무적 특성의 하나인 연간 총소득과 가구 특성의 하나인 주택점유 유형이 자산의 불균등한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거주지역도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이나 가구특성 중 주거 관련 요인이, 재무적 특성 중 연간 총소득이 자산 불평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 2) 부채 불평등과 금융 불평등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가계부채 불평등의 영향요인은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재무적 특성, 가구특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연령, 소득, 가구구성 및 거주지역의 영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크다.

### (1)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가계부채 결정요인으로 지적된다. 김경아(2011)는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과 부채 보유액이 커진다고 밝혔다. 연령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능성과 보유액이 높아졌다(김경아, 2011; 김선형, 2018; 박세리·김기승, 2023). 김우영·김현정

(2009)은 가구주 연령이 44세 이하에서 부채보유 확률이 가장 큰 반면, 45세 이상 가구에서는 부채보유 확률이 감소하고 부채규모는 가구주 나이 55세 이후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도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김우영·김현정, 2009).

### (2) 재무적 특성

재무적 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보유하는데(김선형, 2018),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보유 가능성과 보유액이 커졌다(김경아, 2011; 박세리·김기승, 2023). 차은영·김지민(2018)은 주택가치가 높을수록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가구소득도 많을수록 부채 보유 가능성과 보유액이 높아진다(김경아, 2011; 박세리·김기승, 2023; 차은영·김지민, 2018). 재무안정성 관련, 차은영·김지민(2018)은 채무상환능력이 고위험일수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3) 가구특성

가구특성이 가계부채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구규모(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채보유 가능성과 보유액이 크다(김경아, 2011; 김우영·김현정, 2009; 김선형, 2018; 박세리·김기승, 2023). 또한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 부채보유 확률이 높고 부채 규모도 크고 혼인한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김우영·김현정, 2009; 김선형, 2018). 주거 관련해서는 주택점유 유형, 거주지역, 이사 경험 등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준다. 김경아(2011)는 자가 주택보유 가구일수록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과 보유 부채액도 커졌다고 밝혔다. 김우영·김현정(2009)은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도 부채 규모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김선형(2018)과 박세리·김기승(2023)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의 보유 가능성과 보유액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다. 김우영·김현정(2009)은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의 부채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박세리·김기승(2023)은 자영업자일수록 부채보유 가능성과 보유액이 높아지고 김우영·김현정(2009)도 자영업 가구의 경우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부채보유확률이 훨씬 높았고 부채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일수록, 취업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채 보유 확률이나 부채 규모가 커진다(김우영·김현정, 2009; 김선흥, 2018).

### 3. 본 연구의 초점

앞서 자산과 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자산과 부채의 규모나 보유액 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교육,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채와 자산의 결정요인은 불평등 요인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수준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소득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자산과 부채의 규모나 구성 등에서 격차나 불균등한 분포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다.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산을 확보하고 축적하는 능력과 부채를 이용하고 부채에 의존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접근성에서의 차이 즉 금융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금융 접근성이 좋은 고소득층/고신용자의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저신용자는 이를 충분히 이용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 불평등의 현실화된 지표로 볼 수 있는 금융 접근성 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경로로 작동한다. 금융 접근성이 높은 계층의 경우 유리한 대출 조건으로 부채를 이용해 자산을 축적하기 용이한 반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경우 고금리나 한도 제한 등과 같이 대출 조건이 불리해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1절에서 금융 불평등 현상을 금융 접근성 차원에서 분석함을 밝힌

바 있다. 금융 접근성 차이가 금융 불평등 그 자체이거나 금융 불평등을 측정하거나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채와 자산의 결정요인 중 소득에 주목해 소득분위에 따른 금융자산 접근성과 금융부채의 접근성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부채와 자산의 보유나 규모에 영향을 미친 연령 요인은 생애단계를 고려한 세대 요인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 직업 등의 차이로 금융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예상되는 성별 요인에도 주목해 금융 자산과 금융부채 접근성을 분석할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금융포용의 질적 측면(예: 거래비용)에서 취약하다(이순호, 2012: 7)<sup>12)</sup> 논의에 동의하면서 금융 접근성 문제를 외형적,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성 차원을 염두에 두고 분석할 것이다.

12) 이순호(2012)는 Arora(2010)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포용(또는 금융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 거래편의성 등 외형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거래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Arora(2010)는 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전세계 98개국의 금융 접근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리적 접근성과 거래편의성이 98개국 중 각각 8위와 9위에 해당되며 종합적 금융 접근성은 5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거래비용 측면에서는 98개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를 통한 금융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 즉 금융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순호, 2012: 5). 김용범(2018: 46)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의 외형적 접근성은 세계적 수준이다. 특히 예금취급기관 지점, ATM, 신용규모 등 민간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 접근성은 크게 성장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우체국에서도 예금, 보험, 지급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도 손쉽게 가능하여 외형적 금융 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 제3절 금융 불평등 현황

### 1. 기초분석

전체 1인 가구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5.5%로 가장 많고 20대가 9.0%로 가장 적다. 이외 30대(19.1%), 60대(18.3%), 50대(15.1%), 40대(13.0%) 순으로 1인 가구가 많다. 성별로 보면 청·중년층은 남성 1인 가구가 많고, 고령층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1인 가구 중 여성 비중이 남성 비중보다 많은 연령대는 60대와 70대인데 특히 70대의 경우 여성(39.5%)이 남성(10.9%)보다 28.6%p(3.6배) 많다. 20~5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데, 30대의 경우 남성(26.0%)이 여성(12.4%)보다 13.6%p(2배) 많다.

세대<sup>13)</sup>의 경우 1인 가구는 중장년(40-64세/37.5%)-노년(65세 이상/34.5%)-청년(~39세/28.1%) 순으로 많다. 중장년(37.5%)과 노년(34.5%)을 합칠 경우 70%가 넘는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년층이 50.0%로 절반에 이르고 이어 중장년(29.5%), 청년(20.5%) 순으로 많다. 반면 남성은 중장년이 45.8%로 가장 많고 이어 청년(36.0%)-노년(18.2%) 순으로 1인 가구가 많다. 1인 가구 여성 노년층(50%)이 남성 노년층(18.2%)보다 2.8배 정도 많다.

교육수준은 대졸(2년제 포함) 이상이 전체의 37.8%로 가장 많고 이외 고졸(29.4%), 초졸 이하(22.7%), 중졸(1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가 1인 가구의 1/3에 이른다. 성별로 보면 고졸 이상은 남성(81.8%)이 여성(53.3%)보다 많은 반면 중졸 이하는 여성(46.7%)이 남성(18.2%)보다 많다. .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37.7%로 가장 많고 무직/기타가 34.2%로 뒤를 잇는다. 성별로 보면 무직/기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고, 상용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13) 통계청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생애단계별 정책수립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이다. 이에 따르면 청년층은 15~39세, 중장년층은 40~64세, 노년층은 65세 이상이다(통계청, 2024.12.23. 보도자료).

정도 많다.

<표 3-6> 전체 1인 가구의 특성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 차이	
	%	명	%	명	%	명	%p	명
나이	20대 이하	9.0	537	10.0	292	8.1	245	2.0
	30대	19.1	1132	26.0	756	12.4	376	13.6
	40대	13.0	774	17.5	507	8.8	266	8.7
	50대	15.1	897	18.3	532	12.1	366	6.2
	60대	18.3	1089	17.4	505	19.2	584	-1.9
	70대 이상	25.5	1513	10.9	316	39.5	1197	-28.6
세대	청년(-39세)이하	28.1	1669	36.0	1048	20.5	622	15.6
	중장년(40-64세)	37.5	2226	45.8	1331	29.5	896	16.3
	노년(65세 이상)	34.5	2047	18.2	530	50.0	1518	-31.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22.7	1350	9.0	263	35.8	1087	-26.8
	중졸	10.0	596	9.2	267	10.9	330	-1.7
	고졸	29.4	1750	36.3	1056	22.8	693	13.5
	대학(2년제포함)	33.6	1996	41.1	1196	26.4	800	14.8
	대학원 이상	4.2	251	4.3	126	4.1	125	0.2
종사 상지 위	상용직	37.7	2240	47.9	1392	27.9	848	19.9
	임시.일용직	15.2	903	13.9	404	16.5	499	-2.6
	자영업자	12.9	765	14.8	429	11.1	336	3.7
	무직/기타	34.2	2035	23.5	683	44.5	1352	-21.1
주거	아파트 거주	34.6	2056	30.9	900	38.1	1156	-7.2
	자가 거주	32.5	1931	25.0	726	39.7	1205	-14.8
가처 분소 득	소득1분위	20.1	1195	14.6	425	25.4	769	-10.7
	소득2분위	19.9	1183	15.4	447	24.3	736	-8.9
	소득3분위	20.0	1190	17.5	508	22.5	681	-5.0
	소득4분위	20.0	1189	23.7	690	16.5	499	7.3
	소득5분위	20.0	1187	28.8	838	11.5	349	17.3
경상 소득	소득1분위	20	1189	14.1	410	25.7	779	-11.6
	소득2분위	20		14.4	420	25.3	769	-10.9
	소득3분위	20.0		18.7	545	21.3	645	-2.5
	소득4분위	20.0		24.0	697	16.2	493	7.7
	소득5분위	20.0		28.8	837	11.5	349	17.3
표본 수		100.0	5943	48.9	2908	51.1	3035	-2.2
								-127

가처분소득이나 경상소득은 모두 소득 5분위로 구분했는데 성별로 보면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 모두 소득 1, 2, 3분위에는 여성이 많은 반면 소득 4, 5분위에는 남성이 많다. 남성의 경우 70% 이상이 가처분소득/경상소득 3, 4, 5분위에 있는 반

면 여성은 70% 이상이 1, 2, 3분위에 있다. 여성의 경우 하층인 1, 2분위에 50%가 있다.

이상에서 주목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핵심적인 특징은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이 60% 정도인데 70대 이상의 1인 가구도 25.5%에 이른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50대 이상이 70%가 넘는데 70대 이상의 여성 1인 가구는 39.5%에 이른다. 세대별로 보면 노년층(65세 이상)은 여성이 많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남성이 많다. 남성 노년층은 18.2%로 여성 노년층에 비해 31.8%p가 적고 남성 중장년층은 45.8%로 여성 중장년층(29.5%)보다 16.3%p 더 많다. 청년층은 남성이 36.0%로 여성(20.5%)보다 15.6%p 많다. 이러한 1인 가구 인구구조의 특징은 이후에 살펴볼 세대나 성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규모나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 2. 금융자산 불평등 실태-금융자산 접근성 문제

### 1) 총자산, 순자산 및 금융자산 지니계수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자산, 순자산(총자산-부채),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를 알아보았다.<sup>14)</sup> <표 3-7>은 최근 8년간(2017년~2024년) 총자산과 순자산 및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지니계수가 대부분 0.6 이상을 훌쩍 넘어 각 자산의 불평등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총자산과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총자산과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총자산과 순자산의 지니계수가 2019년~2022년까지 남성의 지니계수가 여성보다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총자산이나 순자산 불평등도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 집단 내에서보다 컸다. 금융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 최고치 기록 후 2019년 이후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금융자산 불평등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성의 지니계수가

14)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것으로 총자산 지니계수는 전체 자산의 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 준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어느 정도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부채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 즉 남성 내 격차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금융자산 지니계수는 2021년(0.691)보다 2022년(0.698)에 커졌을 뿐 아니라 2022~2024년 여성의 금융자산 지니계수(0.686~0.698)는 남성 지니계수(0.62~0.65)보다 크다.

2017년 대비 2024년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의 총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0.033이 감소했고 총자산 성별 지니계수도 남성은 0.044, 여성은 0.025만큼 낮아져 총자산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되었다. 전체 집단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0.027이 감소했고 남성 지니계수는 0.041, 여성 지니계수는 0.018이 감소해 순자산 불평등도도 다소 완화되었다. 전체 집단의 금융자산 지니계수도 0.039가 감소했는데 남성이 0.057 감소하고 여성은 0.014가 감소해 남성집단 내 금융자산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 총자산과 순자산 그리고 금융자산의 지니계수에 대한 성별 분석결과 남녀 모두 세 가지 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집단 내에서 세 가지 자산의 분포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르게 완화되면서 남성은 전체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여성에 비해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남녀 모두 세 가지 자산의 지니계수 감소로 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성집단의 자산 불평등이 2017년에 절대적인 수준에서 높았고 2024년 개선 폭도 남성에 비해 작다는 점이다.

<표 3-7> 총자산과 순자산 및 금융자산 성별 지니계수(2017~24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격차
총자산	2017년	0.689	0.678	0.696 -0.018
	2018년	0.692	0.684	0.696 -0.012
	2019년	0.695	0.705	0.69 0.015
	2020년	0.697	0.71	0.689 0.021
	2021년	0.698	0.706	0.693 0.013
	2022년	0.682	0.687	0.677 0.01
	2023년	0.661	0.653	0.666 -0.013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격차
순자산	2024년	0.656	0.634	0.037
	*차이	-0.033	-0.044	-0.019
	2017년	0.68	0.674	-0.01
	2018년	0.684	0.675	-0.015
	2019년	0.688	0.698	0.016
	2020년	0.691	0.708	0.027
	2021년	0.695	0.699	0.008
	2022년	0.68	0.685	0.01
	2023년	0.661	0.653	-0.012
	2024년	0.653	0.633	-0.033
금융자산	*차이	-0.027	-0.041	-0.023
	2017년	0.694	0.677	-0.024
	2018년	0.702	0.685	-0.026
	2019년	0.699	0.701	0.01
	2020년	0.698	0.699	0.004
	2021년	0.686	0.678	-0.013
	2022년	0.678	0.65	-0.048
	2023년	0.657	0.62	-0.066
	2024년	0.655	0.62	-0.067
	*차이	-0.039	-0.057	-0.043

주: \*차이-2024년 지니계수에서 2017년 지니계수를 뺀 값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2017년 대비 2024년 총자산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25, 남성 0.044), 순자산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18, 남성 0.041), 금융자산 지니계수 감소폭(여성 0.014, 남성 0.057)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남성집단 내부의 금융자산 불평등이 여성집단 내부에서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금융자산 지니계수의 성별 격차는 2017년 0.024(남성 0.677, 여성 0.701)에서 2024년 0.067(남성 0.62, 여성 0.687)로 더 커졌으며 총자산이나 순자산 지니계수의 성별 격차보다 크다. 성별 자산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가운데 남성집단 내부에서보다 여성집단 내부에서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을 시사한다. 이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격차가 상대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 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 (1) 총자산과 순자산 및 금융자산 보유액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총자산이나 순자산, 금융자산 규모 모두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2021년 자산보유 증가액이 이전보다 커졌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9년(87.0%)으로 최근 8년 동안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총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이 감소하여 2024년 81.1%까지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 부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금융자산 비중도 202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 자산 구성의 금융화와 함께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8>총자산/순자산/금융자산 보유액 (2017-24년)

(단위: 만 원, %)

구분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총자산 대비 순자산 비중	총자산 대비 금융자 산 비중	총자산 대비 실물자 산 비중	실물자 산 대비 금융자 산 비중
2017년	14443.73	12520.9	4135.691	10308.04	86.69	28.63	71.37	40.12
2018년	15689.07	13500.57	4479.724	11209.35	86.05	28.55	71.45	39.96
2019년	16055.43	13966.62	4641.702	11413.73	86.99	28.91	71.09	40.67
2020년	17550.77	15030.05	4918.093	12632.68	85.64	28.02	71.98	38.93
2021년	20410.79	17236.76	5644.709	14766.08	84.45	27.66	72.34	38.23
2022년	21104.73	17522.52	6237.532	14867.20	83.03	29.56	70.44	41.95
2023년	20949.37	17298.69	6828.275	14121.10	82.57	32.59	67.41	48.36
2024년	21216.39	17204.84	6930.520	14285.87	81.09	32.67	67.33	48.51
①	6772.66	4683.94	2794.829	3977.83	-5.6	4.04	-4.04	8.39
②	46.9	37.4	67.6	38.6	-6.5	14.1	-5.7	20.9

주1: 총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금액의 총합)-부채 포함/순자산(자산-부채)

2: ①2017년 대비 2024 증가액 ②2017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2017년 대비 2024년의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의 평균 보유액은 모두 증가했다. 2017년 대비 2024년에 총자산은 6천773만 원, 순자산은 4천684만 원, 금융자산은 2천795만 원이 늘어났다. 자산 종류별로 증가 현황을 보면, 2024년 금융자산이 2017년 대비 약 67.6% 증가해 가장 높다. 이어 총자산(46.9%), 실물자산(38.6%), 순자산(37.4%) 순으로 2024년에 2017년에 비해 늘어났다. 2024년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017년 대비 14.1%,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0.9%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총자산 대비 순자산 비중은 2017년 대비 6.5%,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도 5.7% 감소했다.

2017년에 비해 2024년 금융자산은 절대 금액과 비중이 모두 크게 증가한 반면 순자산과 실물자산의 경우 절대 금액은 증가했지만 비중이 하락하였다. 즉, 전체 자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자산의 상대적 위상이 커지고, 실물자산에 대한 의존 비중은 줄고 있다. 최근 금융자산 축적의 확대와 함께 가계 자산 구조가 점차 금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순자산(자산-부채) 비중의 감소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증가로 금융자산의 상대적인 위상이 커지는 만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는 유동성 지표는 긴급사태에 대처해야 하거나 노년 가계와 같이 자산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자산 증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기자금의 역할도 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최현자 외, 2003: 109).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2) 금융자산 소득 5분위별 보유액 및 점유율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금융자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의 평균 보유액은 모두 증가했는데 소득 4, 5분위의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액이 커지는데, 소득 2

분위는 2021년까지 소득 1분위보다 보유액과 점유율이 낮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 2분위가 1분위를 다소 앞서고 있다.

<표 3-9> 금융자산 소득 5분위별 보유액 및 점유율(2017-24년)

(단위: 만원, %, %p)

구분	금융자산 전체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 보증금)					5분위 - 1분위	5분위 - 2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유액	2017년	4135.69	2202.62	1762.14	2914.88	4317.57	9489.38	7286.77
	2018년	4479.72	2305.31	1887.61	3247.88	5107.48	9858.32	7553.01
	2019년	4641.70	2496.40	1982.75	3111.56	4825.27	10798.29	8301.89
	2020년	4918.09	2556.16	1984.94	3352.43	5031.53	11681.44	9125.29
	2021년	5644.71	3478.43	2558.16	4072.55	6096.94	12040.96	8562.53
	2022년	6237.53	2857.94	2995.52	5143.21	7249.02	12955.13	10097.19
	2023년	6828.28	3395.35	3396.35	5531.00	7626.07	14194.20	10798.85
	2024년	6930.52	3174.07	3543.67	5460.14	8364.11	14123.12	10949.05
점유율	2017년	100.00	11.62	9.22	14.4	21.2	43.56	31.94
	2018년	100.00	11.02	9.34	14.66	23.23	41.75	30.73
	2019년	100.00	11.07	9.26	14.01	21.79	43.87	32.8
	2020년	100.00	10.45	9.28	14.41	21.18	44.68	34.23
	2021년	100.00	12.26	10.97	15.59	21.65	39.54	27.28
	2022년	100.00	11.12	11.71	17.16	22.4	37.61	26.49
	2023년	100.00	11.46	12.89	17	21.78	36.87	25.41
	2024년	100.00	11.73	12.48	17.09	22.24	36.45	24.72
		①	2794.8	971.5	1781.5	2545.3	4046.5	4633.7
		②	67.6	44.1	101.1	87.3	93.7	48.8
		③	0.1	3.3	2.7	1.0	-7.1	-7.2
		④	1.00	1.83	2.62	4.17	4.77	-10.4

주1: 점유율은 전체 대비 특정 집단의 비율로, 소득 1분위 금융자산 점유율은 전체 금융자산 중 소득 1분위 금융자산의 비율임

2: ①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액 ②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감률 ③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의 점유율 차이 ④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액 대비 각 소득분위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도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액이 커 소득 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불평등이 잘 드러났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 증가액의 경우 소득 5분위는 4천634만 원, 4분위는 4천47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의 증가액은 소득 3분위는 2천545만 원, 2분위는 1천781만 원, 소득 1분위는 972만 원 정도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보유 증가액은 소득 4, 5 분위의 경우 1분위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증가액 규모가 저소득 분위에 비해 상당히 크다. 2024년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의 증가율은 보유액이 가장 낮았던 소득 2분위에서 2017년 대비 101.1%로 가장 크다. 이어 4분위(93.7%), 3분위(87.3%), 5분위(48.8%), 1분위(44.1%) 순으로 2024년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의 증가율이 컸다. 따라서 2024년 현재 금융자산의 소득수준에 따른 불평등, 특히 소득 5분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2017년과 비교할 때 금융자산에 대한 양적인 접근성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자산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 간 격차는 7.2%p, 소득 2분위와의 격차는 10.4%p가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자산 점유율 측면에서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 격차가 축소되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2024년 금융자산 점유율이 2017년에 비해 감소한 소득분위는 소득 5분위 (-7.1%p)이다. 반면 소득 2분위(3.3%p), 3분위(2.7%p), 4분위(1.0%p), 1분위(0.1%p) 순으로 금융자산 점유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과 비교해 금융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2017년 1, 2, 3분위 금융자산 점유율의 합계(35.2%)는 5분위 점유율(43.6%)보다 작았던 반면, 2024년에는 1, 2, 3분위 부채 점유율의 합계(41.3%)는 5분위 점유율(36.5%)보다 크다. 이는 주로 소득 5분위 금융자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점유율이 저하된 반면, 소득 2, 3분위의 보유액 증가율이 높은 것과 관련 있다. 다만, 소득 1분위의 금융자산 점유율 변화는 매우 미미(0.1%p)하여 최하위층의 금융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3) 금융자산 세대별 보유액과 점유율

#### ① 2017년 대비 2024년 남녀 전체의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표 3-10>은 최근 8년간의 세대별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 집단에서 금융자산 보유액은 남성이 높았지만 금융자산 점유율은 여성이 더 높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여성의 금융자산 점유율은 남성보다 적지만 중장년, 노년의 경우 여성 점유율이 더 높다.

전체 여성과 남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특히 2022년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 비중이 2019년 68.6%였으나 2022년 99.9%로 최고에 달했다. 금융자산 점유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데 2020~22년에 성별 차이가 가장 커졌고 2023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의 전체 남성과 여성의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을 비교해 보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자산 보유액에서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커 성별 간 금융자산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증가액이 남성은 2천236만 원, 여성은 3천46만 원으로 남성의 증가율(44.5%)보다 여성의 증가율(85.3%)이 40.8%p 더 커져 여성의 금융자산 증가액이 남성보다 많았다(810만 원).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도 2017년 대비 2024년에 20.0%p 증가하였다 (71.2%→91.2%). 금융자산의 보유액 기준으로 보면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금융자산 점유율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는데,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점유율에서는 그 차이가 2.8%p 더 커졌다(6.9%p→9.7%p). 이처럼 금융자산 보유액의 점유율 차원에서 남녀 차이가 증가한 것은 금융자산의 보유액 증가율에서 여성(85.3%)이 남성(44.5%)보다 커지면서 전체 금융자산 총량에서 여성의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세대별로 분석할 때 2017년 대비 2024

년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데 청년여성(85.3%p)-노년(80.7%p)-중장년여성(64.8%p) 순으로 높다. 주목되는 것은 청년여성의 금융자산 규모가 2019년 이후 중장년여성의 금융자산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lt;표 3-10&gt; 세대별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단위: 만 원, %, %p)

구분	금융자산 보유액			금융자산 점유율			
	남성	여성	남성 대비 여성 보유액	남성	여성	남녀 차이	
전체	2017년	5020.26	3571.78	71.15	46.55	53.45	-6.9
	2018년	5324.64	3943.38	74.06	45.61	54.39	-8.78
	2019년	5749.4	3943.06	68.58	46.86	53.14	-6.28
	2020년	5779.63	4402.04	76.16	42.2	57.8	-15.6
	2021년	6227.81	5253.83	84.36	42.85	57.15	-14.3
	2022년	6240.79	6235.16	99.91	42.23	57.77	-15.54
	2023년	7103.14	6601.27	92.93	44.15	55.85	-11.7
	2024년	7256.52	6618.2	91.2	45.13	54.87	-9.74
	①증가	2236.26	3046.42	20.05	-1.42	1.42	-2.84
청년	②증가율	44.5	85.3				
	2017년	5604.54	5079.33	90.63	15.13	9.86	5.27
	2018년	6400.46	5697.23	89.01	13.01	8.72	4.29
	2019년	6980.9	6818.3	97.67	13.2	8.89	4.31
	2020년	7330.37	7705.13	105.11	12.59	10.2	2.39
	2021년	7691.84	9248.3	120.24	14.71	12.22	2.49
	2022년	8416.52	10551.16	125.36	15.14	11.85	3.29
	2023년	9815.1	10746.06	109.48	17.2	12.75	4.45
	2024년	10057.61	9412.35	93.58	18.14	11.4	6.74
중장년	①증가	4453.07	4333.02	2.95	3.01	1.54	1.47
	②증가율	79.5	85.3				
	2017년	5236.83	5588.2	106.71	22.82	22.57	0.25
	2018년	5335.18	6119.76	114.71	23.25	23.33	-0.08
	2019년	5255.61	6012.62	114.4	21.91	22.41	-0.5

구분	금융자산 보유액			금융자산 점유율		
	남성	여성	남성 대비 여성 보유액	남성	여성	남녀 차이
2020년	5180.95	6238.5	120.41	19.82	22.59	-2.77
2021년	5498.09	6948.9	126.39	18.32	21.17	-2.85
2022년	6077.88	8448.75	139.01	20.13	23.11	-2.98
2023년	6476.02	8581.45	132.51	18.99	21.16	-2.17
2024년	6263.61	9210.69	147.05	18.01	21.42	-3.41
①증가	1026.78	3622.49	40.34	-4.81	-1.15	-3.66
②증가율	19.6	64.8				
2017년	3747.41	2182.25	58.23	8.6	21.02	-12.42
2018년	4168.02	2441.78	58.58	9.35	22.34	-12.99
2019년	5561.11	2335.85	42	11.76	21.83	-10.07
2020년	5557.46	2857.48	51.42	9.79	25.01	-15.22
2021년	6245.16	3195.04	51.16	9.82	23.77	-13.95
2022년	3472.71	3336.66	96.08	6.95	22.81	-15.86
2023년	3915.2	3674.92	93.86	7.97	21.93	-13.96
2024년	4207.3	3944.29	93.75	8.98	22.04	-13.06
①증가	459.89	1762.04	35.52	0.38	1.02	-0.64
②증가율	12.3	80.7				

주) ① 증가: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액과 금융자산 점유율 증가

② 증가율: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 ② 2017년 대비 2024년 청년층 남녀의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2017년 대비 2024년에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금융자산 보유액의 남성 증가액이 여성보다 커(120만 원).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남성은 4천453만 원, 여성은 4천333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율은 남성(79.5%)보다 여성(85.3%)이 다소 높았다. 이에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2017년 90.6%에서 2024년 93.6%로 3.0%p 정도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의 보유액 기준으로 보면 성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이 앞섰던 금융자산 점유율의 성별 차이는 1.47%p 더 커졌다(2017년 5.3%p→2024년 6.7%p). 이는 2024년 전체 금융자산 총량에서 청년층 남성의 평균 보유액이 청년여성보다 크고 금융자산을 보유한 청년층 남성(1,048명)이 여성(622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③ 2017년 대비 2024년 중장년층 남녀의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2017년 대비 2024년에 중장년남성과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2017년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남성보다 많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대비 2024년에 금융자산은 중장년남성이 1천27만 원(19.6%), 여성은 3천623만 원(64.8%)이 증가해 금융자산 보유액이나 증가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컸다. 이에 따라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도 40.3%p(106.7%→147.1%)나 증가해 보유액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 간 금융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금융자산 점유율의 경우 2017년에는 남성이 0.3%p 많았지만(남성 22.8%, 여성 22.6%) 2024년에는 남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2024년에는 남성의 금융자산 점유율(18.0%)이 여성의 금융자산 점유율(21.4%)보다 3.4%p 정도 낮았다. 따라서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이나 점유율의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에서 금융자산의 보유액 기준이나 점유율 차원에서는 성별 간 금융자산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 남성(1331명)이 여성(896명)의 1.5배 이상임에도 금융자산 점유율에서 여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④ 2017년 대비 2024년 노년층 남녀의 금융자산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2017년 대비 2024년에 노년층 남성(530명)과 여성(1518명)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남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여성보다 많다. 2017년 대비 2024년 노년층 남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460만 원(12.3%), 여성은 1천762만 원(80.7%)이 증가해 여성의 금융자산 증가액이 남성보다 컸다(1천302만 원). 이에 따라 2017년 대비 2024년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35.5%p(58.2→93.8%) 상승해 보

유액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보유액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2017년 남성과 여성의 금융자산 점유율에서는 여성이 12.4%p 많았는데(남성 8.6%, 여성 21.0%). 2024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금융자산 점유율이 13.1%p 더 많다. 남녀 금융자산 보유액의 점유율 격차는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노년층 여성 비중은 80.4%로 2024년(74.1%)보다 6.3%p 많았다. 이에 남성 대비 여성보유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남성의 보유액이 여전히 여성 보다 많고 노년남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금융자산 총량에서의 점유율 변화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노년층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여전히 남성 보다 적지만 점유율에서는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년층 여성 표본이 남성 표본의 2.9배에 이르는 만큼 인구 규모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자산 보유액 격차가 크게 줄어든 만큼 양적으로 보는 금융자산 접근성 차원에서 노년층 금융자산의 성별 격차는 2017년에 비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금융자산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금융자산도 자산운용 전략(주식투자, 저축/예적금 등) 등 그 활용 방식에 따라 자산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 금융부채 불평등 실태(1) -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 1)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지니계수

부채의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채와 금융부채의 지니계수를 알아보았다. <표 3-11>은 최근 8년간(2017년~2024년) 부채와 금융부채의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8년 내내 부채와 금융부채 지니계수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지니계수가 크다. 부채와 금융부채의 불평등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 집단 내에서 더 큼을 알 수 있다.

2017년에서 2024년까지 부채와 금융부채 지니계수는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2023년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되다가 2024년에 증가했다. 전체 집단의 부채 지니계수는

0.6~0.7 이상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데,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0.06 감소해 부채의 불평등 수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2017년과 2024년의 성별 부채 지니계수를 보면 남성은 0.029, 여성은 0.076으로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다. 전체 집단의 금융 부채 지니계수도 2017년 대비 2024년에 0.036이 감소해 금융부채의 불평등 수준도 완화되었다. 2017년과 2024년의 금융부채 성별 지니계수의 경우 남성은 0.029, 여성은 0.04로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다.

<표 3-11>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지니계수(2017~24년)

구분	부채				금융부채			
	전체	남성	여성	남녀 차이	전체	남성	여성	남녀 차이
2017년	0.702	0.649	0.736	-0.087	0.65	0.638	0.658	-0.02
2018년	0.684	0.645	0.71	-0.065	0.647	0.62	0.671	-0.051
2019년	0.678	0.644	0.701	-0.057	0.64	0.621	0.656	-0.035
2020년	0.689	0.648	0.714	-0.066	0.653	0.638	0.665	-0.027
2021년	0.677	0.653	0.696	-0.043	0.637	0.627	0.645	-0.018
2022년	0.656	0.631	0.676	-0.045	0.616	0.605	0.625	-0.02
2023년	0.638	0.614	0.661	-0.047	0.607	0.602	0.613	-0.011
2024년	0.642	0.62	0.66	-0.04	0.614	0.609	0.618	-0.009
*차이	-0.06	-0.029	-0.076	0.047	-0.036	-0.029	-0.04	0.011

주: 차이는 2024년 지니계수에서 2017년 지니계수를 뺀 값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최근 8년간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지니계수는 남녀 모두 부채와 금융부채의 지니계수가 0.6 이상으로 불평등이 심각하지만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상대적으로 지니계수가 감소해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집단 내에서 부채와 금융부채의 분포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76, 남성 0.029)과 금융부채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4, 남성 0.02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나 금융부채 모두 여성집단 내에서의 불평등 정도가 남성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보다 심각하다.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불평등 문제는 물론 여성집단 내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2) 부채의 보유액 및 점유율

최근 8년간 부채 규모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의 평균 보유액도 모두 늘어났는데 소득 5분위의 부채 평균 보유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평균 보유액도 소득이 높을수록 커져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 불평등이 잘 드러났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평균 보유액의 증가액은 소득 5분위가 4천336만 원으로 소득 1분위 증가액(1천199만 원) 보다 3.6배 많았다. 이외 소득 4분위(1천981만 원), 소득 3분위(1천697만 원), 소득 2분위(1천232만 원) 순으로 부채가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늘어났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평균 보유액의 증가율은 소득 2분위(210.5%)에서 가장 크다. 이어 1분위(139.9%), 5분위(115.5%), 3분위(88.1%), 4분위(79.4%) 순으로 2017년 대비 2024년에 부채 평균 보유액의 증가율이 커졌다. 2024년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의 불평등, 특히 소득 5분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2017년과 비교할 때 양적 차원에서 부채 접근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채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 간 격차는 7.0%p, 소득 2분위와의 격차는 6.7%p가 감소하였다. 이는 부채 점유율 측면에서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 격차가 축소되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2024년 부채 점유율이 2017년에 비해 감소한 소득분위는 소득 5분위(-3.5%p)와 소득 4분위(-4.4%p)이다. 반면 소득 1분위(3.5%p), 2분위(3.3%p), 3분위(1.1%p) 순으로 부채 점유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17년과 비교할 때 부채 불평등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주로 소득 5분

위와 특히 소득 4분위의 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점유율이 줄어든 반면 소득 1, 2분위의 부채 증가율 및 점유율의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2> 소득 5분위별 부채 평균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단위: 만원, %, %p)

구분	부채 전체	부채					5분위 - 1분위	5분위 - 2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유액	2017년	1922.83	857.33	585.40	1926.05	2494.11	3754.11	2896.79
	2018년	2188.50	1151.92	914.22	1679.98	2664.39	4535.91	3383.99
	2019년	2088.81	1667.81	1130.14	1382.93	2101.60	4163.23	2495.42
	2020년	2520.71	1496.63	1158.82	2227.07	2544.81	5183.68	3687.05
	2021년	3174.03	2232.44	1225.82	2502.41	3701.46	6220.30	3987.86
	2022년	3582.21	1625.88	1518.29	3192.47	4212.30	7368.92	5743.03
	2023년	3650.68	2114.45	1827.33	3578.97	3717.20	7014.92	4900.47
	2024년	4011.55	2056.76	1817.84	3622.75	4475.36	8089.66	6032.89
점유율	2017년	100.00	9.8	7.17	18.58	25.13	39.31	29.51
	2018년	100.00	11.53	8.64	15.05	23.42	41.35	29.82
	2019년	100.00	15.75	10.1	13.99	20.82	39.34	23.59
	2020년	100.00	11.74	8.96	17.8	21.07	40.44	28.7
	2021년	100.00	13.41	7.51	16.51	23.02	39.54	26.13
	2022년	100.00	13.27	10.63	18.03	22.19	35.88	22.61
	2023년	100.00	11.52	12.48	18.55	19.87	37.59	26.07
	2024년	100.00	13.33	10.43	19.66	20.74	35.83	22.5
① 증가액	2088.7	1199.4	1232.4	1696.7	1981.3	4335.6	3136.1	3103.1
② 증가율	108.6	139.9	210.5	88.1	79.4	115.5	108.3	97.9
③ 점유율 차이		3.5	3.3	1.1	-4.4	-3.5	-7.0	-6.7
④ 배수		1.00	1.03	1.41	1.65	3.61		

주1: 점유율은 전체 대비 특정 집단의 비율로, 소득 1분위 부채 점유율은 전체 부채 중 소득 1분위 부채 비율임.

2: ①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 ②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율 ③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점유율 차이 ④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보유액 증가액 대비 각 소득분위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예컨대 2017년 1, 2, 3분위 부채 점유율의 합계(35.6%)는 5분위 점유율(39.3%)보

다 작았던 반면, 2024년 1, 2, 3분위 부채 점유율의 합계(43.4%)는 5분위 점유율(35.8%)보다 크다. 이처럼 하위층인 소득 1, 2분위의 부채 증가와 점유율 증대로 양적 차원에서는 금융부채 불평등이 완화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부채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는지는 부채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부채가 생계형 부채와 자산증식형 부채로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다르게 작용하면서 단순한 수치 변화만으로 부채 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3) 금융부채 보유액 및 점유율

#### (1)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최근 8년간 금융부채 규모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17년 이후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도 소득이 높을수록 커져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부채 불평등이 잘 드러났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 규모가 커지지만 1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소득 2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금융부채 보유액이 적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의 증가액은 소득 5분위가 3천759만 원으로 소득 1분위 증가액(938만 원)보다 4배 많았다. 이외 소득 4분위(1천906만 원), 소득 3분위(1천442만 원), 소득 2분위(949만 원) 순으로 금융부채가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늘어났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평균 보유액의 증가율은 소득 2분위(197.7%)에서 가장 크다. 이어 5분위(161.5%), 1분위(149.0%), 3분위(128.6%), 4분위(109.4%) 순으로 2017년 대비 2024년에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의 증가율이 컼다. 2024년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부채의 불평등, 특히 소득 5분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2017년과 비교할 때 양적 차원에서 금융부채 접근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부채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단위: 만 원, %, %p)

구분	금융 부채 전체	금융부채					5분위 - 1분위	5분위 - 2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 유 액	2017년	1259.56	629.55	480.27	1120.83	1741.55	2327.78	1698.23	1847.51
	2018년	1485.19	644.02	521.12	1156.84	1927.46	3179.62	2535.60	2658.50
	2019년	1433.13	875.40	704.10	1014.81	1482.52	3090.32	2214.92	2386.23
	2020년	1773.62	1069.40	814.02	1279.21	1738.91	3971.53	2902.13	3157.51
	2021년	2325.73	1309.95	1018.42	1820.55	2573.56	4915.69	3605.74	3897.27
	2022년	2729.89	1255.50	1145.48	2472.94	3113.20	5667.44	4411.94	4521.96
	2023년	2847.38	1718.24	1214.92	2573.78	3150.45	5578.49	3860.25	4363.57
	2024년	3057.97	1567.34	1429.59	2562.62	3647.38	6086.70	4519.36	4657.11
점 유 율	2017년	100.00	10.80	8.49	16.79	27.19	36.73	25.93	28.24
	2018년	100.00	10.34	7.66	14.51	25.05	42.44	32.10	34.78
	2019년	100.00	13.30	10.37	14.64	21.19	40.49	27.19	30.12
	2020년	100.00	12.09	9.86	15.77	20.18	42.11	30.02	32.25
	2021년	100.00	11.17	8.36	16.06	22.27	42.15	30.98	33.79
	2022년	100.00	12.92	10.36	18.69	21.66	36.37	23.45	26.01
	2023년	100.00	11.49	11.09	17.72	21.43	38.27	26.78	27.18
	2024년	100.00	13.26	9.69	18.73	22.24	36.08	22.82	26.39
①증가액		1798.4	937.8	949.3	1441.8	1905.8	3758.9	2821.1	2809.6
②증가율		142.8	149.0	197.7	128.6	109.4	161.5	166.1	152.1
③점유율 차이			2.46	1.2	1.94	-4.95	-0.65	-3.11	-1.85
④배수			1.00	1.01	1.54	2.03	4.01		

주1: 점유율은 전체 대비 특정 집단의 비율로, 소득 1분위 금융부채 점유율은 전체 금융부채 중 소득 1분위 금융부채 비율임.

주2: ①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 ②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감률 ③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점유율 차이 ④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 대비 각 소득분위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2017년 이후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점유율을 보면, 특히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점유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점유율 변화도 소득 5분위가 가장 적은데,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 간 격차는 3.1%p, 소득 2분위와의 격차는 1.9%p가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부채 점유율 측면에서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 격차가 다소 축소되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2024년 금융부채 점유율이 2017년에 비해 감소한 소득분위는 소득 5분위(-0.7%p)와 소득 4분위(-5.0%p)인데 4분위의 금융부채 점유율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반면 소득 1분위(2.5%p), 3분위(2.0%p), 2분위(1.2%p) 순으로 금융부채 점유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과 비교해 금융부채 불평등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소득 4분위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점유율이 낮아진 반면 소득 1, 2, 3 분위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커 점유율이 확대된 데 따른다.

예컨대 2017년 소득 1, 2, 3분위의 합계 점유율(36.1%)은 소득 5분위(36.7%)보다 작았지만 2024년에는 소득 5분위(36.1%)보다 소득 1, 2, 3분위의 합계(41.7%)가 더 커졌다. 중하위층인 소득 1, 2, 3분위의 금융부채 증가와 점유율 증대로 양적 차원에서 소득분위 간 금융부채 불평등이 다소 완화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만으로 금융부채 규모와 점유율 증대가 금융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서 부채 규모와 점유율 분석에서와 같이 금융부채가 생계형이나 자산증식형이나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 2017년 대비 2024년 세대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 ① 전체 남녀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지난 8년간 남녀 모두 금융부채 보유액은 증가하였는데, 남성의 보유액이 여성의 보유액보다 크며 그 차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여성의 금융부채

규모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0년 이후 청년여성의 금융부채 규모는 중장년여성의 금융부채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에도 전체 남성과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 증가액은 남성 1천776만 원, 여성 1천663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컸다(113만 원). 그러나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 증가율에서 여성(175.6%)이 남성(101.5%)보다 74.1%p 컸다. 이에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2017년 54.1%에서 2024년 74.0%로 19.9%p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보유액 기준으로 보면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8년간 남녀 금융부채 점유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년씩 앞섰다. 그런데 2017년에 비해 2024년 여성의 금융부채 점유율이 4.89%p 더 높아진 반면 남성은 4.89%p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7년에 남성이 8.0%p 앞섰던 금융부채 점유율이 2024년에는 1.76%p 여성의 금융부채 점유율이 더 많다. 이에 금융부채 점유율에서 남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표 3-14> 세대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2017-24년)

(단위: 만 원, %, %p)

구분	금융부채 보유액			금융부채 점유율			
	남성	여성	남성대비 여성보유액	남성	여성	남녀 차이	
전체	2017년	1749.92	946.95	54.11	54.01	45.99	8.02
	2018년	1921.18	1208.42	62.9	50.09	49.91	0.18
	2019년	1850.58	1169.83	63.21	48.63	51.37	-2.74
	2020년	2250.03	1488.24	66.14	46.98	53.02	-6.04
	2021년	3029.78	1853.78	61.19	49.86	50.14	-0.28
	2022년	3223.04	2371.89	73.59	46.61	53.39	-6.78
	2023년	3522.74	2289.64	65	51.56	48.44	3.12
	2024년	3525.80	2609.78	74.02	49.12	50.88	-1.76
	증가액	1775.88	1662.82	19.91	-4.89	4.89	-9.78
	증가율	101.5	175.6				

구분	금융부채 보유액			금융부채 점유율			
	남성	여성	남성대비 여성보유액	남성	여성	남녀 차이	
청년	2017년	2186.19	1063.73	48.66	18.65	6.01	12.64
	2018년	2614.84	1514.39	57.92	17.06	7.49	9.57
	2019년	2471.18	1642.86	66.48	15.03	6.75	8.28
	2020년	2781.73	2799.23	100.63	13.54	9.87	3.67
	2021년	4012.60	3269.78	81.49	18.75	10.83	7.92
	2022년	4824.31	4753.91	98.54	19.72	12.26	7.46
	2023년	4258.32	4012.93	94.24	18.38	12.3	6.08
	2024년	4714.30	4451.09	94.42	19.27	12.32	6.95
	증가액	2528.11	3387.36	45.76	0.62	6.31	-5.69
	증가율	115.6	318.4				
중장년	2017년	1828.32	1884.64	103.08	28.55	26.34	2.21
	2018년	1923.60	2640.40	137.26	25.98	30.38	-4.4
	2019년	2073.34	2360.75	113.86	26.61	30.44	-3.83
	2020년	2877.75	2701.45	93.87	28.64	26.85	1.79
	2021년	3409.85	3126.01	91.68	25.81	25.24	0.57
	2022년	3047.23	3532.06	115.91	21.21	27.49	-6.28
	2023년	3712.21	3533.09	95.17	24.89	23.89	1
	2024년	3436.64	4116.27	119.78	22.94	24.4	-1.46
	증가액	1608.32	2231.63	16.7	-5.61	-1.94	-3.67
	증가율	88	118.4				
노년	2017년	983.10	447.14	45.48	6.81	13.65	-6.84
	2018년	1184.31	405.06	34.2	7.04	12.04	-5
	2019년	892.37	474.49	53.17	6.99	14.17	-7.18
	2020년	785.38	638.32	81.28	4.8	16.31	-11.51
	2021년	1285.32	750.15	58.36	5.3	14.07	-8.77
	2022년	1320.04	808.42	61.24	5.67	13.65	-7.98
	2023년	1680.15	811.93	48.33	8.28	12.25	-3.97
	2024년	1397.33	966.82	69.19	6.91	14.16	-7.25
	증가액	414.23	519.68	23.71	0.1	0.51	-0.41
	증가율	42.1	116.2				

주: ①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 ②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다만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여성

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2017년에 남성 대비 54%에 불과해 개선되었다 해도 2024년에 남성 보유액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금융부채 접근성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여성들이 금융부채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인지, 금융부채가 필요하지만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등에서 불안정한 만큼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의 1인 가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년 기간 내내 금융부채를 보유한 남성의 비율은 여성보다 많았다.<sup>15)</sup>

### ② 2017년 대비 2024년 청년층 남녀의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지난 8년간 청년층 금융부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2020년 제외).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금융부채 보유액이 남성은 2천528만 원, 여성은 3천387만 원이 증가해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커졌다(859만 원).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보유액 증가율에서도 여성(318.4%)이 남성(115.6%)보다 202.8%p 더 높았다. 이에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도 94.4%로 2017년 (48.7%)에 비해 2024년에 45.8%p나 증가하였다. 금융부채의 보유액 기준에서 보면 2017년에 비해 2024년 성별 차이가 크게 감소했다.

금융부채 점유율의 남녀 차이도 2017년(12.6%p) 대비 2024년(6.95%p)에 감소되어 청년층 금융부채의 점유율 차원에서도 성별 차이가 줄어들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이 남성의 94.4%에 이른에도 점유율에서 남녀 차이가 6.95%p에 이르는 것은 부채를 가진 청년층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기 때문이다.<sup>16)</sup>

### ③ 2017년 대비 2024년 중장년층 남녀의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2017년 대비 2024년에 중장년남성과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이 2017년이나 2024년에 남성보다 많다. 2017년 대비 2024년 중장년남성은 1천608만 원, 여성은 2천232만 원이 증가해 금융부채 보유액

15) 2017~24년까지 남성의 금융부채 점유율은 43.0~51.8%, 여성은 33.1~39.3%였다.

16) 2024년 금융부채 보유율: 청년층 여성 319명(51.3%), 남성 581명(55.4%)

의 절대 규모나 그 증가액에서 여성의 남성보다 컸다(623만 원). 증가율도 남성(88.0%)보다 여성(118.4%)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도 2024년에 119.8%로 2017년(103.1%)에 비해 16.7%p 증가하여 보유액 기준으로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더 커졌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점유율은 중장년층 남녀 모두 감소하였는데 점유율의 남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2017년 금융부채 점유율의 남녀 차이는 2.2%p로 남성이 많았다. 남성의 금융부채 보유액 평균이 여성보다 낮지만 전체 금융부채 합산액은 중년남성이 중년여성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남성이 초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자산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다. 그러나 남성의 금융부채 점유율은 2017년(28.6%)과 비교해 2024년(22.9%)에 5.6%p 감소한 반면 여성은 1.9%p(26.3%→24.4%)가 줄었다. 이로써 여성 금융부채 보유액의 총량은 남성보다 많이 증가한 반면, 점유율은 남성보다 적게 줄어들었다. 중장년층에서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이 2017년에 이어 2024년에 더 큰 금액으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면서 금융부채 점유율에서도 남녀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 ④ 2017년 대비 2024년 노년층 남녀의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

지난 8년간 노년층 여성의 금융부채는 남성 대비 보유액이 계속 증가해 왔지만 남성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 2017년 대비 2024년에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남성의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이 여성보다 많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의 보유 증가액(증가율)은 노년남성이 414만 원(42.1%), 여성은 520만 원(116.2%)이다. 여성의 금융부채 증가액이 106만 원, 증가율은 74.1%p로 남성보다 컸다. 이에 따라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23.7%p(45.5%→69.2%) 증가하였다. 노년층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이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의 금융부채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4년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967만 원)은 2017년 남성의 금융부채 보유액(98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의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이 2017년 대비 2024년에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이 늘어

났지만 구조적으로 금융부채 접근과 이용에서 여성들이 제약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부채 보유액과 달리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금융부채 점유율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더 많았다. 2017년에는 6.8%p(남성 6.8%, 여성 13.7%), 2024년에는 7.3%p(남성 6.9%, 여성 14.2%) 정도 여성의 금융부채 점유율이 더 높았다. 2017년에 비해 2024년 금융부채 점유율의 남녀 차이는 여성 우위로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노년층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반면, 점유율에서는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년남성은 금융부채 평균 보유액이 많고 금융부채 보유비율도 노년여성보다 높다.<sup>17)</sup> 하지만 금융부채 점유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노년여성 인구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커 소액이라도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노년층 여성의 남성보다 많기 때문이다. 양적인 차원에서 노년여성의 금융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 차원에서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노년층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금융부채 불평등(2) - 금융 이용 조건의 불평등

##### 1)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 및 점유율 현황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의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기타<sup>18)</sup>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 대출 유형은 이자율 및 상환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반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대출로 갈수록 대출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안정적인 상환 조건(예: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신용카드대출 및 기타는 초기 이자율이 높은 데다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부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의 유형별 보유액과 두 가지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점유율 1은 전

17) 2017~2024년 8년간 금융부채 보유비율은 노년남성 21.8~25.3%, 노년여성 14.1~15.3%이다.

18) 기타\_외상, 할부상환, 계 탄 후 불입금액, 기타 부채(개인/직장으로부터 빌린 돈 등)

체 집단 내 각 소득분위 금융부채의 유형별 점유율로서 전체 가구에서 해당 부채 유형 총액 대비 각 소득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정 부채가 어느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전체 사회에서 소득별 부채의 불평등한 구조, 즉 금융 불평등 상황을 보여준다. 점유율 2는 동일 소득분위 내 금융부채의 유형별 점유율로서 각 소득층이 어떤 유형의 부채를 주로 이용하는지 보여준다. 소득수준별 금융 부채 유형의 내부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소득수준이 부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할 수 있다.

#### (1)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2017~2024년)

<표 3-15>는 2017년부터 2024년(8년)까지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의 추이와 2017년 대비 2024년 보유액의 증가액과 증가율 등을 보여준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금융부채 규모는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부채 유형 중 담보대출 보유액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담보대출 보유액과는 차이가 크지만 신용대출이 금융부채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기타-신용카드대출 순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금융부채 보유액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8년간 담보대출의 보유액은 소득 1, 2분위 제외 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 보유액은 소득 5분위에서 소득 1, 2분위는 물론 4분위와의 격차도 적지 않다. 신용대출 보유액도 소득 5, 4, 3분위 순으로 많은데, 소득 5분위와 타 분위와의 격차가 크다.

2017년과 2024년의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 증가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금융부채는 증가했는데, 4가지 금융부채 유형 중 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소득 3, 4, 5분위에서는 담보대출 증가액보다는 작지만 신용대출을 통한 금융부채 증가액이 신용카드대출이나 기타에 비해 크다. 반면 소득 1, 2 분위의 경우 담보대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금융부채는 기타이다. 소득 1, 2, 3 분위에서 신용카드대출이 증가한 반면 소득 4, 5분위에서는 신용카드대출액이 감

소하였다. 특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액에서 타 분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소득 5분위에서 고금리인 신용카드대출은 14만1천 원이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규모가 적은 소득 1분위(37만5천 원), 2분위(12만6천 원)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이 증가하였다.

&lt;표 3-15&gt;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2017-24년)

(단위: 만원, %)

구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기타
1분위	2017년 476.14	68.16	21.68	63.56
	2018년 479.26	82.19	27.67	54.89
	2019년 676.64	90.05	16.06	92.65
	2020년 757.34	155.94	64.74	91.38
	2021년 1001.99	143.40	54.46	110.10
	2022년 843.21	153.72	40.04	218.53
	2023년 1156.71	213.10	171.57	176.86
	2024년 1009.27	231.09	59.21	267.76
평균 보유액	2017년 320.28	71.39	22.31	66.28
	2018년 302.10	86.17	55.71	77.14
	2019년 468.54	92.39	72.80	70.37
	2020년 445.85	111.70	86.11	170.36
	2021년 602.37	159.87	73.67	182.51
	2022년 678.94	308.22	66.05	92.28
	2023년 846.14	171.88	40.56	156.35
	2024년 1007.41	151.22	34.92	236.04
3분위	2017년 813.49	184.27	13.75	109.31
	2018년 846.84	180.05	49.76	80.19
	2019년 663.73	173.32	63.78	113.98
	2020년 853.96	206.44	70.88	147.94
	2021년 1266.54	244.00	108.80	201.20
	2022년 1759.91	384.34	154.54	174.15
	2023년 1893.74	421.12	61.56	197.36
	2024년 1826.05	447.51	66.35	222.71
4분위	2017년 1313.18	202.18	58.50	167.68
	2018년 1246.58	255.18	76.12	349.58

구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기타
5분위	2019년	1032.74	222.27	89.07
	2020년	1234.31	268.57	84.02
	2021년	1876.81	438.59	67.94
	2022년	2199.59	644.27	35.63
	2023년	2322.79	565.94	35.60
	2024년	2685.47	662.84	53.95
	2017년	1607.27	483.27	35.13
	2018년	2240.31	730.84	50.44
	2019년	2130.08	634.22	80.78
	2020년	2692.08	741.98	87.68
1분위	2021년	3538.85	1032.20	26.07
	2022년	4106.66	1171.73	38.36
	2023년	3841.45	1220.50	48.20
	2024년	4402.94	1251.49	21.01
	증가액	533.13	162.93	37.53
2017년 대비 2024년 증가액/증가율	증가율	112	239	204.20
	2분위	증가액	687.13	173.1
	증가율	214.5	79.83	321.3
	3분위	증가액	211.8	12.61
	증가율	1012.56	56.5	169.75
4분위	증가액	124.5	256.1	
	증가율	1372.28	52.60	
	증가액	104.5	113.40	
	증가율	460.67	382.6	
	증가액	-4.55	103.7	
5분위	증가율	2795.67	77.44	
	증가액	173.9	209.16	
	증가율	159	46.2	
	증가액	-40.2	103.5	

주: 증가액은 2017년 대비 2024년 보유액 증가액 증가율: 2017년 대비 2024년 보유액 증가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소득분위별로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의 변화를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담보대출 보유액의 증가가 가장 큰데 특히 소득 5분위의 담보대출 보유액 증가가 압도적이다. 2017년 대비 2024년 담보대출 평균 보유액은 소득 5분위의 경우 2천796만 원이 증가하여 소득 1분위 증가액(533만 원)의 5.2배에 달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담보대출 보유액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소득에 따른 담보대출의 불평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 신용대출 평균 보유액은

모두 증가했는데 소득 5분위의 신용대출 보유액 증가가 절대적으로 크다. 2017년 대비 2024년 신용대출 평균 보유액 증가도 소득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높아져 소득 수준에 따른 신용대출에서도 불평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관련 대출 평균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지만 저소득층인 소득 1, 2분위에서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는 감소하였다. 2017년 대비 2024년 기타 부채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득분위는 소득 5분위(209만 원)인데 소득 1분위(204만 원)도 5분위와 유사하게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유형별 보유액의 증가율을 2017년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는 기타-신용대출-신용카드대출-담보대출 순으로, 소득 2분위는 기타-담보대출-신용대출-신용카드대출 순으로 금융부채 증가율이 커졌다. 소득 1분위의 경우 담보대출 증가율(112.0%)이 가장 낮고 기타 증가율(321.3%)은 담보대출 증가율의 3배에 달한다. 소득 2분위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214.5%)이 크게 늘었지만 기타 증가율(256.1%)이 담보대출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소득 3분위는 신용카드대출-신용대출-담보대출-기타 순으로 금융부채 증가율이 커졌다. 소득 3분위는 고금리인 신용카드대출 증가율(382.6%)이 다른 유형의 금융부채 증가율에 비해서는 물론 타 분위의 증가율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고소득층(소득 4, 5분위)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 순으로 전체 금융부채 증가율이 높은데 신용카드 대출은 다른 분위와 달리 감소하였다. 특히 5분위에서는 신용카드대출 증가액이 40.2% 감소하였다.

소득수준별로 금융부채 유형을 보면, 고소득층(소득 4, 5분위)의 금융부채는 주요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이며 대출 규모에서 저소득층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금이 필요할 때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즉 금융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담보대출과 기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저소득층에서는 자산이 있어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주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즉 금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수준에 따

라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유형의 선택에 구조적인 차이, 즉 불평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한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은행의 이용이 제약되고 금리 등에서 불리한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대부업, 또는 비전형적 방법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건범, 2014).

## (2) 금융부채 유형별 소득분위별 점유율

### ①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소득분위별 점유율

<표 3-16>은 2017년부터 2024년(8년)까지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소득분위별 점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특정 부채가 어느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고소득분위에 신용대출과 특히 담보대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분위에 고금리인 신용카드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소득 5분위별 점유율(2017-24년)

(단위: %, 배)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분 위	담보대출	8.1	7.84	10.36	8.71	8.05	9.28	7.79	8.92
	신용대출	1.15	1.34	1.43	1.82	1.56	1.38	1.56	1.56
	신용카드대출	0.35	0.34	0.22	0.63	0.61	0.3	0.66	0.53
	기타	1.2	0.82	1.29	0.93	0.95	1.97	1.47	2.26
2 분 위	담보대출	5.42	4.45	6.86	5.12	5.41	6.96	8.07	6.55
	신용대출	1.29	1.35	1.24	1.29	1.26	2.05	1.42	1.45
	신용카드대출	0.48	0.83	1	1.01	0.57	0.55	0.38	0.27
	기타	1.31	1.03	1.27	2.45	1.12	0.79	1.22	1.42
3 분 위	담보대출	11.89	10.36	9.18	11.3	11.02	12.95	12.34	13.5
	신용대출	2.73	2.29	2.63	2.13	2.39	3.18	3.38	3.23
	신용카드대출	0.3	0.67	0.95	0.75	0.86	0.92	0.41	0.53
	기타	1.87	1.19	1.88	1.58	1.78	1.64	1.58	1.46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 분 위	담보대출	20.29	17.08	15.02	14.39	16.54	15.11	15.26	15.83
	신용대출	3.61	3.56	2.92	3.07	3.52	4.56	4.09	4.53
	신용카드대출	1.1	1.03	1.14	0.94	0.49	0.33	0.25	0.28
	기타	2.19	3.39	2.11	1.77	1.72	1.66	1.83	1.6
5 분 위	담보대출	25.65	30.03	27.78	29.45	30.31	25.43	27.2	26.44
	신용대출	7.37	9.44	8.24	7.52	8.8	7.96	7.84	7.22
	신용카드대출	0.56	0.67	1.09	0.93	0.23	0.31	0.36	0.14
	기타	3.15	2.3	3.37	4.2	2.81	2.68	2.88	2.28
전 체	담보대출	71.35	69.76	69.2	68.97	71.33	69.73	70.66	71.24
	신용대출	16.15	17.98	16.46	15.83	17.53	19.13	18.29	17.99
	신용카드대출	2.79	3.54	4.4	4.26	2.76	2.41	2.06	1.75
	기타	9.72	8.73	9.92	10.93	8.38	8.74	8.98	9.02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배 수 *	담보대출	3.2	3.8	2.7	3.4	3.8	2.7	3.5	3.0
	신용대출	6.4	7.0	5.8	4.1	5.6	5.8	5.0	4.6
	신용카드대출	1.6	2.0	5.0	1.5	0.4	1.0	0.5	0.3
	기타	2.6	2.8	2.6	4.5	3.0	1.4	2.0	1.0

주: \* 배수 =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비중은 68.9~71.4%인데 이 중 담보대출 점유율이 소득 5분위는 25.4~30.0%인 반면 소득 1분위는 7.79~10.4%에 불과하다. 소득 5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2.7~3.8배에 달하는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이 가장 낮은 소득 2분위의 담보대출 점유율(4.45~8.07%)과 소득 5분위 격차는 20%p에 달한다. 이러한 담보대출 점유율을 100으로 환산할 때 소득 5분위의 담보대출 점유율은 35.9~42.7%인 반면 소득 1분위의 담보대출 점유율은 11.2~15.0%에 불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소득 5분위 점유율이 7.22~9.44%에 이르는 반면 소득 1분위는 1.15~1.82%에 불과하다. 소득 5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4.6~7.0배 많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대출 점유율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 5분위의 신용대출은 40.1~52.5%인 반면 소득 1분위의 신용대출 점유율은 7.1~11.5%로 담보대출 점유율보다 격차가 더 크다.

신용카드대출 점유율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한 자릿수에도 미치지 않는다. 기타는 신용카드대출 점유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소득 5분위에서 다른 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분위에서 신용대출 접근성이 담보대출 접근성보다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용대출은 '신용'이 전제가 되는데, 소득 1분위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한도가 매우 낮게 책정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신용대출의 문턱이 높고, 실제 이용 격차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 ②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점유율 변화

<표 3-17> 2017년 대비 24년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소득 5분위별 점유율 변화  
(단위: %p)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7년 대비 2024년 전체집단 내 점유율 변화	담보대출	0.82	1.13	1.61	-4.46	0.79
	신용대출	0.41	0.16	0.50	0.92	-0.15
	신용카드대출	0.18	-0.21	0.23	-0.82	-0.42
	기타	1.06	0.11	-0.41	-0.59	-0.87

소득 1분위는 모든 금융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기타 점유율의 변화폭 (1.06%p)이 가장 크다.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양적 차원에서 금융 접근성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타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 2분위의 경우 고금리 단기대출인 신용카드대출(-0.21%p)이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변화폭(1.13%p)이 가장 커지고 신용대출, 기타도 증가해 부채 규모가 1분위처럼 확대되었다. 소득 3분위는 담보대출 변화폭(1.61%p)이 가장 커지고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도 증가한 반면 기타 (-0.41%p)가 감소했다. 소득 2, 3분위의 경우 담보대출 증가는 양적 차원에서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 4분위는 신용대출 점유율만 증가했고 다른 대출이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담보대출이 타 분위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했다. 소득 5분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담보대출만 증가했고 (0.79%p)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기타 모두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특히 중하위층의 부채 증가가 주목되는데, 소득 5분위의 경우 가장 안정적인 부채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③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분위 내 점유율

<표 3-18>은 2017년부터 2024년(8년)까지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분위 내의 점유율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별 금융부채 유형의 내부구조를 파악 할 수 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8년간 담보대출 점유율(67.2~77.9%)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9년으로 77.9%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 67.2%로 하향 추세가 이어졌다. 이외 신용대출 점유율은 10.7~15.0%,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1.66~5.74%, 기타는 7.7~17.0% 사이에서 등락을 보여왔다. 신용카드대출 점유율의 경우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5.0%까지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11.8%까지 하락했다. 신용카드대출은 2019년 최저(1.66%)였으나 2020년(5.22%), 2021년(5.18%), 2023년(5.74%)에 크게 올랐고 2024년 3.98%로 다소 감소하였다. 기타 부채는 2020년 최저(7.7%)였으나 변동이 크며 2022년(15.2%)에 이어 담보대출이 가장 낮은 2024년에 17.0%까지 급증했다. 금융부채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신용대출과 함께 고금리 상품인 기타와 신용카드 관련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소득 2분위의 8년간 담보대출 점유율(51.9~72.8%)은 2017년 63.8%에서 2020년 51.9%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72.8%까지 증가했고 2024년에는 67.6%로 다소 감소했다. 신용대출 점유율은 12.0~19.8%,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2.82~10.9%, 기타는 7.62~24.8%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 2분위는 신용대출의 경우 2019년 12.0%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고 2022년 19.8%로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대출 점유율의 경우 코로나 시기인 2020년(10.2%) 최고치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2024년 2.82%까지 신용카드대출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기타 점유율의 경우 2019년 12.3%에서 2020년 24.8%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14.7%로 줄어들었다. 코로나 시기 이후 담

보대출과 신용대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용카드대출이 한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기타 점유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3-18>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 5분위 내 점유율(2017-24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분 위	담보대출	74.98	75.85	77.9	72.04	72.08	71.8	67.84	67.21
	신용대출	10.66	12.95	10.76	15.04	13.97	10.65	13.61	11.79
	신용카드대출	3.25	3.3	1.66	5.22	5.48	2.31	5.74	3.98
	기타	11.11	7.89	9.69	7.7	8.48	15.24	12.81	17.01
2 분 위	담보대출	63.77	58.09	66.14	51.88	64.75	67.21	72.76	67.57
	신용대출	15.21	17.62	11.98	13.04	15.11	19.82	12.8	14.95
	신용카드대출	5.66	10.89	9.62	10.24	6.79	5.35	3.45	2.82
	기타	15.37	13.4	12.25	24.84	13.35	7.62	10.99	14.66
3 분 위	담보대출	70.81	71.4	62.67	71.7	68.65	69.27	69.67	72.11
	신용대출	16.26	15.79	17.98	13.49	14.86	17.04	19.1	17.23
	신용카드대출	1.8	4.6	6.49	4.78	5.39	4.9	2.32	2.86
	기타	11.12	8.21	12.86	10.03	11.11	8.79	8.92	7.8
4 분 위	담보대출	74.63	68.18	70.87	71.33	74.29	69.77	71.2	71.17
	신용대출	13.26	14.2	13.76	15.21	15.8	21.04	19.07	20.36
	신용카드대출	4.05	4.1	5.4	4.67	2.18	1.53	1.17	1.27
	기타	8.06	13.52	9.97	8.78	7.72	7.65	8.56	7.2
5 분 위	담보대출	69.81	70.76	68.61	69.93	71.91	69.92	71.07	73.28
	신용대출	20.07	22.25	20.36	17.87	20.88	21.89	20.47	20.01
	신용카드대출	1.54	1.58	2.7	2.22	0.54	0.84	0.94	0.39
	기타	8.58	5.41	8.33	9.98	6.67	7.36	7.51	6.3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소득 3분위의 8년간 담보대출 점유율(62.7~72.1%)은 2019년 62.7%로 가장 낮았으나 2020년 71.7%로 증가 이후 감소했다가(2~3%) 2024년 최고치인 72.1%로 상승하였다. 3분위는 신용대출 점유율(13.5~19.1%)의 경우 2020년 13.5%로 가장 낮았고 2023년에 19.1%까지 올라갔다가 2024년에 17.2%를 기록했다. 신용카드대출

점유율(1.8~6.49%)의 경우 2019년(6.49%) 후 하락 추세를 보여 2023년 2.32%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2.86%로 소폭 올랐다. 기타의 경우 2019년 12.9%였지만 2020년 이후 하향 추세로 2024년에 7.8%로 줄어들었다. 2020년 이후 담보대출, 2021년 이후 신용대출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기타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소득 3분위 부채의 질이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소득 4분위의 8년간 담보대출 점유율(68.2~74.6%)은 2018년 68.2%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 74.6%로 가장 높았다. 2019년 이후 2021년 74.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2024년 71.2%까지 다소 하락하였다. 신용대출 점유율(13.3~21.0%)은 2017년 13.3%로 가장 낮았으나 2022년 21.0%로 증가한 이후 2024년 20.4%로 안정적이다. 신용카드대출 점유율의 경우 2020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여 2024년 1.27%까지 줄어들었다. 기타의 경우 2018년 13.5%로 최고치였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2024년에 7.2%로 줄어들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안정적이며 신용카드대출은 202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3분위와 같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5분위의 8년간 담보대출 점유율(68.6~73.3%)은 2019년 68.6%로 가장 낮았고 2024년에 73.3%로 가장 높았다. 2020년 이후 안정세(69.9~71.9%)를 유지하다 2024년 73.3%까지 상승하였다. 신용대출 점유율(17.9~22.3%)은 2018년 22.3%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17.9%까지 하락한 뒤 2021년 20.9%까지 회복하였다. 이후 신용대출 점유율은 2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대출 점유율의 경우 2020년(2.2%) 이후 2021년부터 1% 미만을 유지하는데 2024년 0.4%까지 줄어들었다. 기타의 경우 2020년 9.9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는데 이후 6~7%의 점유율을 보였고 2024년에 6.32%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의 부채구조를 갖고 있다.

요약하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부채는 담보대출이며 이어 신용대출-기타-신용카드대출 순으로 금융부채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담보대출과 특히 신용대출이 소득이 낮은 분위에 비해 비중이 크다. 반면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신용카드대출과 기타의 비중이 고소득 분

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저소득 분위에서 담보대출이 낮아진 시기에 기타 부채가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소득수준이 금융부채 유형의 내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④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분위 내 점유율 변화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의 유형별 점유율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는 담보대출이 줄고(-7.77%p) 기타가 5.9%p 증가했다. 이율 등이 양호한 담보대출이 줄어 금융부채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 2분위는 담보대출이 늘고(3.8%p) 신용대출(-0.26%p), 신용카드대출(-2.84%p), 기타 (-0.71%p)가 감소했다. 소득 1분위와 달리 금융부채의 질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기타만 감소했고(-3.32%p) 담보대출(1.3%p), 신용대출(0.97%p), 신용카드대출(1.06%p)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양적으로 보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율이 높은 단기부채인 신용카드대출이 소폭이라도 증가한 것은 금융부채 구성의 질 차원에서 궁정적이지 않다. 소득 4분위는 신용대출이 7.1%p 증가한 반면 담보대출(-3.5%p), 신용카드대출(-2.8%p), 기타 부채(-0.9%p)가 감소했다. 이자나 상환 기간 등에서 조건이 더 좋은 담보대출이 줄고 신용대출이 증가했는데 신용카드대출이나 기타가 감소하였다. 5분위는 담보대출(3.47%p)만 증가했고 신용대출(-0.06%p), 신용카드대출 (-1.15%p), 기타(-2.26%p)는 감소했다. 금융부채 구성의 질 차원에서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가 가장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9>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 5분위 내 변화

(단위: %p)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7년 대비 2024년 동일소득 분위 내 점유율	담보대출	-7.77	3.8	1.3	-3.46
	신용대출	1.13	-0.26	0.97	7.1
	신용카드대출	0.73	-2.84	1.06	-2.78
	기타	5.9	-0.71	-3.32	-0.86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요약하면, 동일 소득분위 내 담보대출 점유율은 특히 소득 1분위에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소득 1분위에서 기타-신용대출-신용카드대출 순으로 증가함으로써 조건이 좋은 담보대출 이외 부담이 더 큰 대출 비중이 커졌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낮았던 소득 2분위에서 그 비중(3.8%p)이 증가한 반면 다른 대출이 감소해 부채 구조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담보대출 보유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소득 5분위의 경우 담보대출 점유율(3.47%p)이 증가한 반면 다른 대출이 모두 감소했다. 이로써 5분위의 담보대출 보유액의 절대적인 규모 확대와 소득 1분위의 담보대출 점유율 저하는 금융부채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2) 금융기관 유형별 보유액 지니계수 (성별)

금융기관은 은행, 제2금융권, 기타 기관 등으로 구분하는데, 대출 금리 등 이용조건이 다르다.<sup>19)</sup> 대출 금리 면에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승인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소득수준, 직업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출한도도 엄격하게 산정한다. 이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직업이 불안정하고 자산이 없는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고 신용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신용, 자산이 부족하거나 직업이 불안정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금융기관, 예컨대 제2금융권이나 기타 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 있는데, 대출 심사 기준이 은행보다는 완화된 만큼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조건 등에서도 불리하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기타는 대부업체, 여신 전문기관(캐피탈 등), 각종 공제회

19) 금융 이용 조건의 차이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이자율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가계대출 이자율 수준은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은행이 가장 낮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그다음이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대출 금리 수준은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매우 높아서 금리 구조에서 단층을 보여준다(김을식. 임수강 외. 2023).

(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등) 등이 있는데 대출 심사 조건이 은행이나 2금융권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에 비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 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을 은행, 제2금융권, 기타로 구분해 먼저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보유액의 성별 지니계수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소득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보유액과 점유율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 성별에 따른 대출 금융기관 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1)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성별 지니계수 분석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성별 지니계수 분석은 성별 간 대출 금융기관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는 같은 금융기관 유형 내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등을 보여준다.

<표 3-20>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 보유액의 성별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지니계수(0.611~0.707)가 은행(0.515~0.592)이나 기타 기관(0.526~0.623)의 지니계수보다 전체, 남성, 여성 모두에서 가장 높다.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보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2금융권 이용자들 사이에서 금융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 저신용자나 은행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고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제2금융권의 금융부채 지니계수(0.549~0.717)가 남성(0.569~0.690)보다 범위도 더 넓고 최고치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여성 집단 내에서 금융부채의 분포가 남성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더 불균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의 대출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은행-기타 기관 대출 순으로 상대적으로 지니계수가 낮다.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금융부채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3-20> 금융기관 유형별 보유액의 성별 지니계수(2017-24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은행	제2금융권	기타	은행	제2금융권	기타	은행	제2금융권	기타
2017년	0.592	0.633	0.560	0.596	0.688	0.575	0.587	0.549	0.523
2018년	0.591	0.626	0.526	0.588	0.616	0.562	0.594	0.627	0.462
2019년	0.563	0.651	0.560	0.564	0.624	0.588	0.562	0.667	0.449
2020년	0.585	0.644	0.549	0.571	0.594	0.546	0.594	0.678	0.498
2021년	0.582	0.612	0.527	0.582	0.578	0.527	0.581	0.640	0.511
2022년	0.551	0.611	0.594	0.538	0.569	0.555	0.562	0.647	0.647
2023년	0.515	0.671	0.623	0.516	0.657	0.604	0.513	0.683	0.630
2024년	0.532	0.707	0.611	0.541	0.690	0.536	0.518	0.717	0.655
*차이	-0.06	0.074	0.051	-0.05 5	0.002	-0.039	-0.069	0.168	0.132

주1: 1. 은행(NH농협은행과 수협은행 포함) 2. 제2금융권: 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보험 회사를 의미 3. 기타: 대부업체, 여신 전문기관(캐피탈 등), 각종 공제회(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등), 기타

주2: \*차이 = 2024년 지니계수-2017년 지니계수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 보유액의 성별 지니계수를 2017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금융부채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2017년 대비 2024년 제2금융권에서 이용자 간 금융부채 보유액 지니계수는 0.633에서 0.707로 확대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기타 기관에서 이용자 간 금융부채 보유액의 불평등도 2017년(0.560)에 비해 2024년(0.611)에 더 커졌다. 반면 은행 이용자의 경우 2017년(0.592)에 비해 2024년(0.532)에 지니계수가 낮아져 금융부채 보유액의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여성 모두 제2금융권 이용자의 금융부채 보유액 지니계수가 높다.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제2금융권 이용자의 금융부채 보유액 지니계수는 남성(0.002)보다 여성(0.168)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24년 제2금융권 이용자 간 금융부채 보유액 지니계수는 0.549에서 0.717로 크게 증가했다. 제2금융권 이용자 중 특히 여성 이용자 간의 금융부채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은행과 기타 기관에서 남성의 금융부채 지니계수는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함(은행 0.596→0.541, 기타 0.575→0.536)에 따라 이용자 간 금융부채 보유액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여성 집단의 경우는 은행 이용자 간 금융부채 보유액 지니계수가 0.069(0.587→0.518)만큼 감소해 이들 간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반면 여성의 기타 기관 부채 보유액 지니계수는 2017년(0.523)에 비해 2024년(0.655)에 0.132만큼 높아져 이용자들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요약하면, 은행 이용자인 남성과 여성 모두 2017년에 비해 2024년 금융부채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제2금융권 이용자의 경우 남녀 모두 금융부채 보유액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더 심각해 남성집단 내에서보다 여성집단 내에서 불평등이 더 크다. 또한 기타 기관 이용자도 남성 지니계수보다 여성 지니계수가 커 남성집단 내에서보다 여성집단 내에서 불평등이 더 컸다. 이에 더해 2017년에 비해 2024년 여성의 기타 기관 이용자 간 보유액 지니계수가 더 커져 여성집단 내부의 부채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은행 이용 혹은 접근성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과 기타 기관에서 이용자 간 금융부채 보유의 불평등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은행에 비해 이들 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의 금융부채 이용자들은 은행 이용자들보다 더 큰 금융 부담을 지고 있다. 남성보다는 특히 제2금융권 및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산 축적에서도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 (2) 소득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보유액(2017~2024년)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득 5분위별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8년 간의 보유액 현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양상인지 분석할 수 있다.

금융기관 유형별 평균 보유액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은행-제2금융권-기타 기관 순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은행 대출의 보유액 증가가 제2금융권과 기타 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고 소득분위 간 보유액 격차도 크다. 반면 은행보다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2금융권이나 기타 기관 대출액의 소득분위 간 보유액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소득분위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부채 보유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소득 분위에서 특히 은행권을 통한 자금확보가 저소득 분위에 비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 유형별로 대출 보유액의 증가는 은행 대출 보유액이 압도적이며 기타 기관 보유액이 가장 적다. 은행의 대출은 고소득층일수록 그 증가액이 크다. 2017년과 2024년 은행 대출 평균 보유액의 각 소득분위별 배수를 분석해 보면,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와의 격차는 더 커졌다(5배→5.24배).

제2금융권의 대출도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5분위의 증가액은 다른 소득분위의 평균 보유액보다 절대적으로 커 1분위보다 3.35배 많았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제2금융권 대출 보유액 격차는 1.62배에서 2.5배로 더 커져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대출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2금융권에서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분위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434.3%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액이 74.5%로 감소하였다. 주목 할 점은 소득분위별 은행 대출 규모와 달리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5분위 평균 대출액이 크긴 하지만 4분위, 3분위, 1분위와의 대출 규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24년 5분위의 은행 대출 증가액은 1분위에 비해 5.4배 많았던 반면 제2금융권 대출 증가액은 1분위보다 3.4배 정도 많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 모두 평균 보유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져 소득수준에 따른 은행, 제2금융권 대출의 불평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기타 기관 대출은 72만 원이 증가했는데 소득 5분위의 증가액은 1분위보다 19.2배 많아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차이가 가장 컸다. 증가율의 경우 저소득분위에 비해 3~5분위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데, 특히 4분위 증가율이 291.4%로 가장 높다.

&lt;표 3-21&gt; 소득 5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보유액(2017-14년)

(단위: 만원, %, 배수)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은행	2017년	875.04	351.1	189.74	791.94	1287.71
	2018년	994.04	314.94	242.79	696.73	1257.09
	2019년	904.72	446.09	349.17	581.21	915.55
	2020년	1149.19	695.23	345.11	684.45	1141.18
	2021년	1679.7	860.87	595.01	1204.12	1917.28
	2022년	1970.8	776.63	810.85	1651.02	2298.4
	2023년	2066.84	1035.23	892.57	1887.97	2456.54
	2024년	2251.05	881.79	1013.78	1798.96	2944.54
평균 보유액	2017년	183.06	149.02	156.1	178.96	189.95
	2018년	224.23	167.64	106.16	261.47	187.58
	2019년	240.32	249.69	152.59	201.86	229.43
	제2금융 권	256.95	166.21	184.7	211.48	313.94
	2021년	287.13	226.99	86.92	256.02	279.18
	2022년	370.81	149.62	119.86	403.93	431.21
	2023년	320.91	255.59	83.65	322.42	294.34
	2024년	361.38	305.16	81.59	399.56	256.2
기타	2017년	49.46	44.18	45.83	26.87	37.71
	2018년	71.11	78.87	39.32	68.69	57.09
	2019년	91.49	70.91	59.17	53.98	110.02
	2020년	86.68	51.84	27.74	164.47	47.76
	2021년	92.21	57.52	80.31	50.41	118.94
	2022년	107.46	70.68	56.45	89.3	114.25
	2023년	143.05	78.99	41.8	104.47	137.84
	2024년	121.86	53.41	63.26	75.05	147.58
비교	은행 ①	1376.01	530.69	824.04	1007.02	1656.83
	②	157.25	151.15	434.3	127.16	128.67
	③		1.00	1.55	1.90	3.12
	④		1.00	0.54	2.26	3.67
	⑤		1.00	1.15	2.04	3.34
	제2금융 권 ①	178.32	156.14	-74.51	220.6	66.25
	②	97.41	104.78	-47.73	123.27	34.88
	③		1.00	-0.48	1.41	0.42
기타	④		1.00	1.05	1.20	1.27
	⑤		1.00	0.27	1.31	0.84
	①	72.4	9.23	17.43	48.18	109.87
	②	146.38	20.89	38.03	179.31	291.36
	③		1.00	1.89	5.22	11.90
	④		1.00	1.04	0.61	0.85
	⑤		1.00	1.18	1.41	2.76
						5.06

주) ① 2017년 대비 2024년 대출 증가액, ② 2017년 대비 2024년 대출 증가율, ③ 2024년 대출 보유액 증가액 대비 각 소득분위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④ 2017년 소득 1분위 대비 각 소득분위별 배수, ⑤ 2024년 소득 1분위 대비 각 소득분위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종합적으로 보면,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모든 금융기관과 소득분위에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 대출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크게 증가했다.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보유액은 은행, 제2금융권, 기타 모두에서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2분위에서 은행 대출 증가율이 커지고 제2금융권 대출은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기타 기관에서도 고소득층의 대출 증가가 매우 두드러지며, 저소득층과의 차이도 가장 커졌다. 소득 2분위의 부채의 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가장 큰 은행 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더 크게 확대되고 있어 소득에 따른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 불평등이 완화되었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 ① 소득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 구성과 점유율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의 구성비를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은행 대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제2금융권, 기타 순으로 이어진다(<표 3-22>). 다만 고소득분위의 대출은 저소득분위에 비해 은행 대출 점유율이 큰 반면 2금융권 대출 점유율은 작다.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소득분위별 대출 구성은 소득 5분위를 제외할 경우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 대출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소득 1, 2분위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과 기타 기관(예: 대부업체, 캐피탈, 각종 공제회 등)의 대출이 감소해 하위층에서 금융부채 구성의 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 2분위의 대출 구성에서 은행 대출 비율이 39.1%p 크게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의 대출이 32.8%p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1, 2분위 대출 구성에서 기타 비중이 감소한 반면 3분위 이상에서는 기타 비중이 다소 증가했는데 그 비중은 1분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채의 차입기관은 이자율과 함께 부채의 질을 1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구성에서 은행의 대출 보유액 점유율이 적은 반면 제2금융권과 기타의 점유율이 크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분위에서 은행의 대출 점유율이 크고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과 기타의 비중은 작다.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보유액의 점유율에는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즉 불평등함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자금을 확보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표 3-22> 금융기관 유형별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2017년과 24년 비교)

(단위: 만 원, %, %p)

구분	평균 보유액			점유율*		
	은행	제2금융권	기타	은행	제2금융권	기타
전체	2017년	875.04	183.06	49.46	79.01	16.53
	2024년	2251.05	361.38	121.86	82.33	13.22
1분위	2017년	351.1	149.02	44.18	64.50	27.38
	2024년	881.79	305.16	53.41	71.09	24.60
2분위	2017년	189.74	156.1	45.83	48.44	39.85
	2024년	1013.78	81.59	63.26	87.50	7.04
3분위	2017년	791.94	178.96	26.87	71.50	16.16
	2024년	1798.96	399.56	75.05	79.12	17.57
4분위	2017년	1287.71	189.95	37.71	84.98	12.53
	2024년	2944.54	256.2	147.58	87.94	7.65
5분위	2017년	1756.36	241.38	92.8	84.01	11.55
	2024년	4620.27	763.85	270.31	81.71	13.51
17년 대비 24년 변화	1분위	2024년	530.69	156.14	9.23	6.59
	2분위	2024년	824.04	-74.51	17.43	39.05
	3분위	2024년	1007.02	220.6	48.18	7.62
	4분위	2024년	1656.83	66.25	109.87	2.96
	5분위	2024년	2863.91	522.47	177.51	-2.30
						1.96
						0.34

주: 점유율 = 평균 보유액의 합(은행대출+제2금융권대출+기타)에서 각 금융기관 유형별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 ② 소득 5분위별 은행 대출 평균 점유율(2017~2024년)

은행 대출 평균 점유율을 2017년과 2024년을 비교할 때에 소득 2분위(3.77%p)와 소득 3분위(2.24%p)는 증가한 반면 소득 4분위(-3.26%p), 소득 5분위(-2.59%p), 소득 1분위(-0.04%p) 순으로 감소하였다(<표 3-23>). 은행 대출 불평등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은행 대출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대출 점유율은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소득 5분위(31.0%→28.4%)와 소득 4분위(22.6%→19.3%)에서 줄어든 반면 소득 2, 3분위에서 다소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7년 고소득인 4, 5분위의 은행 대출 점유율(53.6%)은 중저소득 1, 2, 3분위의 은행 대출 점유율의 합(23.0%)보다 30.6%p 많았다. 그러나 2024년 소득 4, 5분위의 은행 대출 점유율(47.7%)과 소득 1, 2, 3분위 은행 대출 점유율 합(28.9%)과의 차이는 18.8%p로 줄어들었다.

요약하면, 2017년 대비 2024년에 은행의 대출 점유율이 증가한 소득분위는 2분위와 3분위이다. 반면 2017년 대비 2024년 은행의 대출 점유율이 4분위, 5분위에서 감소했고 1분위도 미미하지만 낮아졌다(-0.04%p). 이에 따라 1, 2, 3분위와 4, 5분위 간 은행의 대출 점유율 격차는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4년 소득 1, 2분위 대비 소득 5분위의 은행 대출 규모가 4배 이상에 달해 저소득 분위와 고소득 분위 간 자산 형성의 기회는 여전히 심하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lt;표 3-23&gt; 소득 5분위별 금융기관 유형별 대출 점유율(2017~24년)

(단위: %, %p, 배수)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은행	2017년	76.55	7.07	3.55	12.35	22.56
	2018년	73.96	5.89	4.2	8.92	19.56
	2019년	69.44	8.62	5.62	8.78	14.71
	2020년	72.88	8.94	4.66	9.97	14.27
	2021년	79.66	8.39	5.41	11.35	18.67
	2022년	78.57	9.46	8.45	12.79	18
	2023년	76.47	6.72	9.32	14.2	16.95
	2024년	76.66	7.03	7.32	14.59	19.3
점유율	2017년	18.71	2.72	3.43	3.77	4.06
	2018년	20.62	3.4	1.81	4.55	2.93
	2019년	23.62	3.95	2.97	4.03	4.87
	2020년	21.6	2.73	2.56	4.06	5.77
	2021년	16.25	1.77	1.42	3.28	2.89
	2022년	17.15	1.87	1.32	4.38	3.32
	2023년	18.15	3.09	0.95	2.46	3.78
	2024년	18.95	4.23	1.01	3.57	2.51
제2금융권	2017년	4.74	0.78	0.68	0.59	0.7
	2018년	5.42	1.17	0.6	0.95	1.02
	2019년	6.94	1.19	0.87	0.97	1.36
	2020년	5.51	0.74	0.32	1.81	0.56
	2021년	4.09	0.66	0.68	0.45	1.02
	2022년	4.27	0.66	0.37	0.98	0.82
	2023년	5.38	0.71	0.39	1.03	1.01
	2024년	4.39	0.49	0.63	0.6	1.01
기타	2017년	0.11	-0.04	3.77	2.24	-3.26
	2018년	1.00	0.50	1.75	3.19	4.39
	2019년	1.00	1.04	2.08	2.75	4.04
	2020년	0.24	1.51	-2.42	-0.2	-1.55
	2021년	1.00	1.26	1.39	1.49	1.74
	2022년	1.00	0.24	0.84	0.59	1.80
	2023년	-0.35	-0.29	-0.05	0.01	0.31
	2024년	1.00	0.87	0.76	0.90	2.54
비교	①	1.00	1.29	1.22	2.06	3.41
	②	1.00	0.50	1.75	3.19	4.39
	③	1.00	1.04	2.08	2.75	4.04
	①	0.24	1.51	-2.42	-0.2	-1.55
	②	1.00	1.26	1.39	1.49	1.74
	③	1.00	0.24	0.84	0.59	1.80
	①	-0.35	-0.29	-0.05	0.01	0.31
	②	1.00	0.87	0.76	0.90	2.54

주: ① 2017년 대비 2024년 점유율 차이, ② 2017년 각 소득분위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③ 2024년 각 소득분위별 배수(기준 소득 1분위=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 ③ 소득 5분위별 제2금융권 대출 평균 점유율(2017~2024년)

앞서 은행권 대출이 줄었던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였다. 최저 소득분위인 1분위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은행 대출 점유율이 0.04%p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1.51%p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2024년 은행 대출이 2.59%p 줄어든 소득 5분위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이 2.89%p 늘었다. 반면, 소득 2, 3, 4분위에서는 제2금융권 대출이 감소하였다 (-0.2~2.4%p).

요약하면, 제2금융권 대출 점유율의 경우 2017년에는 1, 2, 3분위의 합(9.92%)보다 고소득 4, 5분위의 합(8.8%)이 작았지만, 2024년에는 소득 1, 2, 3분위의 합(8.81%)보다 4, 5분위의 합(10.1%)이 더 커졌다. 이는 소득 4분위(-1.55%p)의 제2금융권 대출은 줄고 소득 2, 3분위에서도 감소하였지만 소득 5분위(2.89%p)의 대출액 평균 보유액이 다른 소득분위 중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 5분위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의 자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함을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부채의 질을 보면,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한, 특히 은행 대출이 감소한 소득 1분위에서 부채의 질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반면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제2금융권 대출이 감소한 소득 2, 3분위의 부채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소득 5분위별 기타 대출 점유율(2017~2024년)

소득 1, 2분위의 기타 대출 점유율의 합은 2017년(1.46%)이나 2024년(1.12%)에 5분위 점유율(2017년 1.98%/2024년 1.67%)보다 낮았다. 2017년 대비 2024년, 기타 기관의 대출 점유율이 증가한 소득분위는 4분위(0.31%p), 현상유지인 소득분위는 소득 3분위(0.01%p)이다. 반면 소득 5분위와 소득 1, 2분위에서는 다소 감소했다.

### (3) 금융기관 유형별 보유액 점유율의 최고-최저 차이

금융기관 유형별 보유액의 최고-최저 점유율 차이 분석은 소득계층 간 금융 접근성 차이와 구조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소득분위 간 점유율 차이는 대출기관이 은행인 경우 3.57~8.3%p로 가장 크고 이어 제2금융권(2.09~3.26%p), 기타 기관(0.55~1.36%p)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점유율을 보면, 은행의 경우 소득 5분위의 최고 점유율이 35.8%인 반면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9.46%, 9.32%에 불과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행대출의 보유액이 커져 은행 접근성이 소득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짐을 보여준다.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점유율에서는 고소득이나 저소득 구분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24> 2017~24년 금융기관 유형별 소득 5분위별 보유액 점유율의 최고-최저 차이  
(단위: %, %p)

대출기관	소득분위	최저 점유율	최고 점유율	최고-최저 점유율 차이	비고
은행	1분위	5.89	9.46	3.57	소득분위 간 점유율 차이 즉(3.57~8.3%p)
	2분위	3.55	9.32	5.77	
	3분위	8.78	14.6	5.82	
	4분위	14.3	22.6	8.3	
	5분위	28.4	35.8	7.4	
제2금융권	1분위	1.77	4.23	2.46	소득분위 간 점유율 차이 즉(2.09~3.26%p)
	2분위	0.95	3.43	2.48	
	3분위	2.46	4.55	2.09	
	4분위	2.51	5.77	3.26	
	5분위	4.74	7.93	3.19	
기타	1분위	0.49	1.19	0.7	소득분위 간 점유율 차이 가장 적음(0.55~1.36%p)
	2분위	0.32	0.87	0.55	
	3분위	0.45	1.81	1.36	
	4분위	0.56	1.36	0.8	
	5분위	1.27	2.54	1.27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요컨대 은행 중심으로 대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은행 대출의 최저-최고 점유율의 변동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은행 대출의 변동폭이 작다. 제2금융권이나 기타 기관의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 낮아 점유율 변동폭도 전반적으로 은행보다 적다. 또한 고소득 분위와 저소득 분위 간 은행 대출 점유율에 비해 제2금융권이나 기타 기관 점유율의 변동폭 수준은 1%p 내외 수준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은행 대출 이용 비중과 변동이 커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제2금융권·기타 금융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 유형별 소득분위별 점유율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소득 분위와 저소득 분위 간 은행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3) 금융부채 유형 및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 구성

금융부채 유형과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세대와 성별에 따라 부채유형과 이용 금융기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은행의 담보대출 비중은 세대를 불문하고 제일 높다. 이외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의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한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비중이나 신용카드 관련 대출 비중은 낮다. 다만 중장년남성(11.0%)과 특히 노년남성(20.5%)의 기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눈에 띈다.

금융기관별 부채 구성을 보면 은행 대출(담보+신용) 비중이 압도적인데 전체 남성보다 전체 여성의 은행 부채 특히 담보대출 비중(60.3%)이 남성(48.9%)보다 높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은행 중심의 부채를 갖고 있다. 반면 남성은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16.5%)이 여성(11.0%)보다 높다. 세대/성별로 보면 은행권 대출 비중은 청년층에서 제일 높은데, 청년남성(84.4%)이 가장 높고 노년남성(44.3%)이 가장 낮다. 이외 청년여성(79.0%)-노년여성(73.2%)-중장년 여성(66.4%)-중장년남성(55.8%)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경우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노년남성(28.1%), 중장년남성(24.9%), 중장년여성(2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금융부채 유형 및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 구성

(단위: %)

부채 유형	금융기관 유형	전체		청년층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담보 대출	은행	48.9	60.3	66.8	64.6	38.5	60.4	33.2	56.4
	제2금융권	14.8	14.5	4.7	6.0	19.7	19.8	26.6	12.6
	기타*	1.7	2.2	1.1	4.2	2.4	2.2	1.2	0.2
신용 대출	은행	16.5	11.0	17.6	14.4	17.3	6.0	11.1	16.8
	제2금융권	3.2	1.4	1.4	1.5	5.2	1.6	1.5	1.1
	기타*	2.5	1.5	1.9	1.1	3.1	1.5	1.8	1.7
신용카드 관련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2.1	1.4	0.6	0.2	2.9	1.8	4.1	1.7
	기타**	10.3	7.8	5.8	8.5	11.0	6.7	20.5	9.5
	전체	100.0	100.0	100.0	100.5	100.0	100.0	100.0	100.0

\*기타: 대부업체, 여신 전문기관(캐피탈 등), 각종 공제회(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등), 기타

\*\*기타: 외상, 할부상환, 계 탄 후 불입금액, 기타 부채(개인/직장으로부터 빌린 돈 등)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은행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은행의 신용대출은 남성(16.5%)이 여성(11.0%)보다 높다.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은 노년층(12.6~26.6%)과 중장년층(19.7~19.8%)에서 청년층(4.7~6.0%)보다 크게 높다. 주목 해야 할 것은 노년남성의 기타 비중이 20%가 넘는다는 점이다. 노년남성이 공식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부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남성(66.8%)과 여성(64.6%) 모두 은행 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 제2금융권 비중이 낮고 기타 비중도 크지 않다. 중장년여성은 담보대출 비중(60.4%)이 높지만 제2금융권 비중(19.8%)도 전체 평균(14.8%)보다 높다. 담보대출 비중은 중장년남성(38.5%)이 여성(60.4%)에 비해 21.9%p나 낮은데 제2금융

권 비중(19.7%)이 여성과 비슷하고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17.3%), 기타 비중(11.0%)이 여성보다 높다. 여성은 주로 담보대출에, 남성은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과 기타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노년층 여성의 경우 은행 담보대출(56.4%)과 제2금융권 담보대출(12.6%), 은행 신용대출(16.8%)로 부채가 구성되어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은행 담보대출(33.2%)이 여성보다 23.2%p나 낮고 제2금융권 담보대출(26.6%)은 14%p, 기타 비중(20.5%)도 11%p 높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도 여성(1.7%)에 비해 남성(4.1%)이 높은데 이는 전체 남성 평균(2.1%)보다도 높은 것이다. 노년층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채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가계금융의 불평등 실태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 여기서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 1인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 1)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 실태

#### (1)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

전체 남성과 여성의 부채 보유율과 금융부채 보유율은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8년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부채 점유율의 최저-최고 범위의 경우 남성은 43.0~51.8%, 여성은 33.1~39.3%로 남성이 더 높았다. 금융부채의 최저-최고 범위도 남성 40.1~49.8%, 여성 27.6~34.2%로 남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부채 보유율과

금융부채 보유율을 성별, 세대별로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에서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비율은 2017년 이후 2024년까지(2023년 제외) 여성이 더 높았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 여성의 부채와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8년 내내 남성보다 낮았고 그 차이도 크다.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 부채 보유비율이 낮은데, 노년여성의 경우 금융부채 보유비율이 15% 내외에 불과해 금융 접근성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청년층 남성의 부채와 금융부채 보유율은 코로나 시기인 2019년~2020년을 제외하고 여성의 부채, 금융부채 보유율보다 높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보유 비율 변화를 보면, 청년여성(11.2%p), 중장년남성(9.1%p) 순으로 많이 증가한 반면, 노년남성의 경우 0.6%p가 감소했다. 금융부채 보유 비율의 변화를 보면, 청년여성(11.3%p), 중장년남성(10.3%p)이 많이, 노년여성(1.1%p)은 가장 적게 증가했다.

부채 비율이 금융부채 비율보다 큰데 노년층-중장년층-청년층 순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2024년을 기준으로 세대와 성별로 보면 부채와 금융부채 보유 비율 차이가 중장년여성(5.6%p)과 노년여성(6.3%p)이 중장년남성(2%p)이나 노년남성(3.9%p)보다 크다. 청년층은 여성보다 남성이 그 차이가 크다. 이에 중장년여성과 노년여성이 남성보다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들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lt;표 3-26&gt;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2017~24년)

(단위: %, %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이1
부채	전체	남성	43.5	44.6	43	45.4	48.2	50.5	51.8	51.6
		여성	33.1	35.7	36	36.6	38.4	39.3	37.6	5.4
		차이2	10.4	8.9	7	8.8	9.8	11.2	14.2	8.1
	청년	남성	51.6	52.8	49.1	52.5	59.3	62.4	62	8.4
		여성	40.1	49.4	52.6	59.9	56.1	56.5	50.7	11.2
		차이2	11.4	3.4	-3.5	-7.4	3.1	5.9	11.3	8.6
	중장년	남성	44.8	46	47.2	53	53.3	52.3	54.2	53.9
		여성	54.9	56.6	56.2	55.2	58.3	58.3	53.2	3.4
		차이2	-10.1	-10.6	-9	-2.3	-5	-6	0.9	-4.4
	노년	남성	29.5	33.1	30	27.1	26.9	28.9	26.9	28.9
		여성	20.4	21.9	22.6	23	22.5	21.8	22.5	21.6
		차이2	9.1	11.2	7.4	4.1	4.4	7.1	4.4	7.3
금융부채	전체	남성	40.3	41.3	40.1	42.9	46	48.4	49.4	49.8
		여성	27.6	29.6	30	30.8	32.5	34.2	32.6	33.7
		차이2	12.7	11.7	10.1	12.1	13.5	14.2	16.8	16.1
	청년	남성	50.8	52.6	47.8	51.2	59.1	61.6	60.9	59.6
		여성	39.8	49.4	50.7	58.9	54.4	55.4	50.5	51.1
		차이2	11	3.2	-2.9	-7.7	4.6	6.2	10.5	8.4
	중장년	남성	41.6	43.4	45.2	51.6	51.5	50	51.3	51.9
		여성	48.2	50.8	51.4	51.8	53.7	54.3	48.9	52.7
		차이2	-6.6	-7.3	-6.2	-0.2	-2.3	-4.3	2.4	-0.8
	노년	남성	23.1	25.1	23.8	21.8	21.8	25.3	23.2	25
		여성	14.1	14.4	15.2	15.1	14.6	14.5	15.3	15.3
		차이2	9	10.7	8.6	6.8	7.3	10.8	7.9	9.7
부채/금융부채비율차이	청년	남성	0.8	0.2	1.3	1.3	0.2	0.8	1.1	0.4
		여성	0.3	0	1.9	1	1.7	1.1	0.2	0.2
	중장년	남성	3.2	2.6	2	1.4	1.8	2.3	2.9	-1.2
		여성	6.7	5.8	4.8	3.4	4.6	4	4.3	5.6
	노년	남성	6.4	8	6.2	5.3	5.1	3.6	3.7	3.9
		여성	6.3	7.5	7.4	7.9	7.9	7.3	7.2	6.3
										0.1

주) 차이1: 2024년 보유 비율 - 2017년 보유 비율 / 차이2: 각 연도 남녀격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연도)

(2)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규모 분석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절대적인 보유액이 가장 크고 노년층에서 가장 작다. 청년층의 금융자산이나 부채는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크게 증가해 중장년이나 노년층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와의 규모 격차가 더 커졌다. 남성 청년층 금융자산은 2017년에 비해 79.5% 늘어난 반면 중장년층은 19.6%, 노년층 12.3%가 증가해 세대 간 금융자산 증가율 차이가 크다.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났는데, 역시 청년층 남성의 금융부채가 115.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장년 88.0%, 노년 42.1% 순으로 금융부채가 늘어났다. 주목할 것은 청년남성, 노년남성 모두 금융자산 증가액이 금융부채 증가액보다 크지만 중장년남성의 경우 금융부채 증가액(1608.3만 원)이 금융자산 증가액(1026.8만 원)보다 크다는 점이다.

&lt;표 3-27&gt; 2017년 대비 24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규모 분석(세대별/성별 분석)

(단위: 만 원, %, %p)

구분	a. 금융자산				b. 금융부채				b증가율-a증 가율 차이	
	보유액		2017 대비 2024 증가액(증가율)		보유액		2017 대비 2024 증가액(증가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청년	2017년	5604.5	5079.3	4453.1	4333.0	2186.2	1063.7	2528.1	3387.4	36.1 233.2
	2024년	10057.6	9412.3	(79.5)	(85.3)	4714.3	4451.1	(115.6)	(318.4)	
중장년	2017년	5236.8	5588.2	1026.8	3622.5	1828.3	1884.6	1608.3	2231.6	68.4 53.2
	2024년	6263.6	9210.7	(19.6)	(64.8)	3436.6	4116.3	(88.0)	(118.4)	
노년	2017년	3747.4	2182.2	459.9	1762.0	983.1	447.1	414.2	519.7	29.8 35.5
	2024년	4207.3	3944.3	(12.3)	(80.7)	1397.3	966.8	(42.1)	(116.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여성의 경우는 세대별로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중장년층에서 청년층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보유액이 더 컼고 노년층이 가장 적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청년층 여성의 중장년층 여성보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이 더 커졌다. 여성 청년층의 금융자산은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85.3%가 증가한 반면 중장년은 64.8%가 늘어나 금융자산 보유액에서 여성 청년층이 중장년층을 앞섰다. 여성 노년층의 금융자산 증가율도 80.7%로 중장년층 증가율을 앞섰으나 금융자산 규모가 적어 중장년층 여성의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다(2.34배). 여성의 금융부채는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에 비해 2024년에 크게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여성의 경우 금융부채가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318.4% 증가하면서 중장년층 여성의 금융부채 규모를 넘어섰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여성의 금융부채도 116~118% 정도 증가했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증가율을 보면 금융자산 증가율보다 금융부채의 증가율이 모든 세대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층을 제외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여성의 금융부채 증가율과 금융자산 증가율 차이가 남성보다 더 크다. 특히 청년여성의 금융부채 증가율과 금융자산 증가율 차이는 233.2%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 세대에서 남녀 모두 청년층의 금융자산과 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여성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다. 양적인 차원에서 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세대 간 차이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청년여성의 자산·부채 수준이 중장년층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 중장년남성의 금융부채 증가액이 금융자산 증가액보다 더 많았다(581.5만 원) 점 등이다. 또한 노년층 여성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규모는 가장 적은데 노년층 남성과 비교해도 적다. 여성 노년층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 세대에서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재무적 압박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재무구조가 부채의존형으로 바뀌고 있음도 보여준다. 가계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3)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금융자산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부담 정도를 나타내 높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부채 부담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대비 2024년에는 모든 집단에서 금융자산보다 금융 부채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해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 정도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여성과 중장년남성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청년층 여성은 26.4%p(20.9%→47.3%), 중장년남성은 20.0%p(34.9%→54.9%) 정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청년남성도 상승했으나 여성에 비해 증가폭이 작다(39.0%→46.9%). 이어 중장년층 여성(11.0%p), 청년남성(7.9%p), 노년남성(7.0%p), 노년여성(4.0%p) 순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증가했다. 청년남성이나 노년층 남녀의 경우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lt;표 3-28&gt; 2017년 대비 24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단위: %, %p)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년		
	2017년	2024년	2017년	2024년	2017년	2024년	2017년	2024년	
금융자산 대비	남성	34.9	48.6	39	46.9	34.9	54.9	26.2	33.2
금융부채 비율	여성	26.5	39.4	20.9	47.3	33.7	44.7	20.5	24.5
차이(24년-17년)	남성		13.7		7.9		20	7	
	여성		12.9		26.4		11	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 2) 금융부채 규모 전망 및 증가 원인

### (1) 1년 후 금융부채 규모 전망

2024년 조사에서 1년 후 금융부채의 규모를 물어본 결과 1인 가구(5943명) 중 5.1%(303.7명)가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나 성

별 모두 금융부채 규모가 ‘변화없음’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변화없음’이 80~90% 수준으로 높고 증가 전망도 2% 수준이다. 세대별로 ‘증가한다’는 응답은 청년층-중년층-노년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청년남성(8.3%)이 가장 높고 노년여성(2.2%)이 가장 적다. 이외 청년여성(7.6%)-중년여성(6.2%)-중년남성(5.1%)-노년남성(2.4%) 순으로 1년 후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부채가 ‘감소한다’는 응답은 청년층-중년층-노년층으로 나타났는데, 각 세대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금융부채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lt;표 3-29&gt; 1년 후 금융부채 규모 전망

(단위: %)

구분		세대 및 성별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감소		37.7	31.2	36.6	33.1	15	7.2	33.1	19.9	26.3	
변화없음		53.9	60.4	58.3	60.7	82.6	90.6	61.2	75.6	68.6	
증가		8.3	7.6	5.1	6.2	2.4	2.2	5.8	4.5	5.1	
남녀 차이	감소	6.5		3.5		7.8		13.2			
	변화없음	-6.5		-2.4		-8		-14.4			
	증가	0.7		-1.1		0.2		1.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2024년)

주목할 부분은 중장년층의 부채 규모 감소 비율이 1/3 정도이고 부채 규모의 ‘변화없음’도 60% 이상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장년여성의 경우 생애단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인데도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 중장년여성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큼을 예상하게 한다. 이는 중장년여성의 부채가 생계형 부채 성격이 강한 것과도 관련있다. 중장년층의 부채 증가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생활비였는데 중장년 여성의 경우 생활비 비중이 38.9%로 남성(28.4%)보

다 높았다. 전·월세보증금은 남녀 각각 16.0%, 16.3%로 비슷했는데 여성의 경우 전·월세보증금과 생활비를 합치면 생계형 부채가 55.2%에 이른다.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을 넘긴 집단 중 중장년여성-중장년남성 순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 특히 중장년여성의 경우 원리금의 생계부담 정도가 노년층에 이어 가장 높았다는 점, 중장년남성보다 부채규모의 ‘감소’비율이 낮고 ‘변화없음’과 ‘증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은 중장년층 특히 중장년여성의 가계부채 문제에도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2)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증가 원인

2024년 소득 1분위의 부채의 주된 원인은 생활비(51.5%) 비중이 가장 높다. 자산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부채는 2.7%(거주주택 구입 0.9%, 주택이외 부동산 구입 1.8%)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 5분위의 경우 생활비 비중은 4.9%에 불과하며 부동산 관련 부채는 40.6%(거주주택 구입 23.5%,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 구입 14.4%, 주택이외 부동산 구입 2.7%)에 이른다. 부동산 관련 부채의 경우 소득 5분위가 소득 1분위에 비해 14.8배나 많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자산증식형 부동산 관련 부채는 상당한 격차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자산투자를 위한 대출수요는 사실상 5분위(11.2%)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최고소득분위인 5분위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50% 이상이 자산증식형이라 할 수 있다.

금융부채 증가 원인에서 주목할 사항은 전세·월세 보증금이다. 주거는 생존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비용이다. 따라서 전세·월세보증금 대출은 저소득층에게는 생계형부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전세·월세 보증금을 이유로 하는 대출이 4, 5분위인 고소득층(25.1~31.1%)에서 1, 2분위 저소득층(10.3~14.8%)보다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반면 부채 증가 원인이 생활비인 비중은 저소득층(44.1~51.5%)이 고소득층(4.9~8.4%)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보증금 대출이 생계비 마련이란 목적을 넘어 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규모가 더 크다는 점과도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충분히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간 저금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자기자본은 다른 고수익 금융상품(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부채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과는 질적으로 다른 투자/자산증식형 대출로서 자산증식을 위한 고소득층의 자산운용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부채의 ‘규모’와 ‘성격’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부채 상환을 이유로 하는 대출의 경우 소득 1분위가 13.2%인데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큰 소득 5분위는 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에서 부채상환 부담이 적지 않음을 추론케 한다. 자산증식과 관련된 금융자산 투자를 이유로 하는 부채증가의 경우도 소득 5분위에서 11.2%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의 부채 증가 원인은 상당부분 자산증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3-30&gt; 소득 5분위별 금융부채 증가 원인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거주주택 구입	0.9	5.4	12.9	25.0	23.5	15.4
거주주택이외 주택 구입	0.0	1.0	5.0	2.6	14.4	5.6
주택이외 부동산 구입	1.8	2.8	1.2	6.2	2.7	3.1
전세·월세 보증금	14.8	10.3	13.4	31.1	25.1	20.3
금융자산 투자	0.0	1.1	0.0	0.0	11.2	3.2
부채상환	13.2	12.8	7.4	12.6	2.3	8.9
사업자금*	3.8	4.2	27.6	8.7	9.3	11.1
교육비	4.0	0.0	0.0	0.0	0.0	0.6
생활비	51.5	44.1	29.4	8.4	4.9	23.8
기타	10.1	18.5	3.2	5.4	6.7	8.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2024년)

위 분석을 통해 부채 증가의 주 원인이 소득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 증가의 주된 목적이 저소득층에서는 주로 생활비와 부채상환인 반면, 고소득 분위에서는 주택 및 부동산 구입 등 자산 증식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와 부채상환 부채의 비중이 높다.

### (3) 세대 및 성별 금융부채 증가 원인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의 부채증가 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비-전월세보증금-거주주택 구입 등이 많다. 그러나 성별, 세대별로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은 생활비(30.7%)와 전세·월세 보증금(20.1%) 부채, 즉 생계형 부채 비중이 50.8%에 이른다. 반면 남성은 생계형 부채, 즉 전세·월세 보증금(20.1%)과 생활비(18.1%) 부채 비중이 38.2%로 여성의 13.1%p 더 높다.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되는 부동산 관련 부채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11.5%p 많다(남성 29.3%, 여성 17.8%). 이외 주목되는 것은 부채 증가 이유로 금융자산 투자 비중은 남성이 높고 부채상환을 이유로 하는 부채 비중은 여성의 높다는 점이다. 금융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부채를 증가시켰다면 이는 자산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채상환을 이유로 부채가 증가했다면, 이는 ‘돌려막기용’ 대출로 상대적으로 고금리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다중채무자가 되면서 부채 규모를 줄이지도 못한다. 따라서 부채상환을 이유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이용자들은 부채 규모를 더욱 키우면서 원리금 상환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부채의 악순환이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채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 증가 원인이 부동산 관련(거주주택구입, 거주주택이외 주택구입, 주택이외 부동산 구입)인 경우는 전체 남성(29.3%)이 여성(17.8%)보다 높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중년층-노년층으로 나타난다. 세대 및 성별로 보면, 청년남성(44.8%)이 청년남성(21.1%)보다 높다. 이외 중년 여성-중년남성-노년여성-노년남성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중장

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생계형 부채 중 전세·월세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다. 청년 층 남성과 여성은 또 부동산 구입 부채 비중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크다.

<표 3-31> 세대 및 성별 금융부채의 증가 원인

(단위: %)

구분	전체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거주주택 구입	15.4	16.5	14.2	23.8	19.2	9.4	11.8	3.5	11.1
거주주택이외 주택 구입	5.6	8.2	2.4	14.6	1.9	1.6	2.5	0.0	2.8
주택이외 부동산 구입	3.1	4.6	1.2	6.4	0.0	3.2	1.3	0.0	2.6
전세·월세 보증금	20.3	20.1	20.6	26.2	38.7	16.0	16.3	0.0	2.2
금융자산 투자	3.2	5.5	0.4	5.7	1.1	6.4	0.0	0.0	0.0
부채상환	8.9	7.1	11.1	1.3	14.9	13.8	9.1	11.2	9.0
사업자금*	11.1	10.9	11.3	12.1	6.3	10.1	19.5	6.3	4.7
교육비	0.6	0.0	1.4	0.0	0.0	0.0	0.0	0.0	5.8
생활비	23.8	18.1	30.7	5.7	4.9	28.4	38.9	48.1	53.7
기타	8.1	9.1	6.8	4.3	13.0	11.2	0.6	30.9	8.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사업자금-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2024년)

생활비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경우는 노년층-중년층-청년층 순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비가 부채 증가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중년층과 노년 층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생활비로 이들은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 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부채상환을 위해 부채가 증가했다는 비중이 청년여성에게서 14.9%로 제일 높은 반면 청년남성의 경우 1.3%로 가장 낮다는 점이다. 이외에 중장년남성(13.8%), 노년남성(11.2%)도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와 생활비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인데 주거의 경우는 청년층-중년층-노년층

순으로, 생활비가 주된 원인인 경우는 여성들이 더 많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부채 증가 원인이 ‘기타’인 비중이 노년여성(8.2%)은 전체평균(8.1%) 수준인데 노년남성은 30.9%에 이른다는 점이다. 기타에 포함될 수 있는 부채 증가 원인으로 보건의료비나 요양비, 교통비, 경조사비, 손자녀 등 가족에 대한 지원, 세금 등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문화비, 동호회나 종교단체, 동창회 등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연구는 노년에 보건의료비가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윤정·김순미(2004)는 남성노인의 보건의료비가 여성보다 높았다고 보고한다. 이외 일부 연구에서도 노인가구의 의료비 비용이 높다고 지적한다(김경자, 2016; 심영, 2019).<sup>20)</sup>

### 3) 원리금 상환과 생계부담

#### (1) 원리금 연체 여부와 연체 사유

##### 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 여부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9.7%는 지난 1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낼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중장년층-노년층-청년층 순으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을 넘겼다. 성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 낼 날짜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 분위에서 고소득 분위보다 원리금 연체 비율이 2~3배 높다.

주목할 것은 원금 상환이나 이자지급 납부기일을 넘긴 집단이 은퇴자가 많은 노년층보다 다수가 경제활동 중인 중장년층이라는 점이다. 원금 상환이나 이자지급 납부기일을 넘긴 집단 중 중장년여성(12.8%)이 가장 많고 청년남성(7.0%)이 가장 적다.

20) 이윤정·김순미(2004)는 남성노인의 보건의료비가 여성보다 높았다고 보고했다. 김경자(2016)는 소비품목별 소비구조를 보면 교육비와 통신비가 감소하고 대신 교통비, 주거수도광열비, 보건의료비가 상승하는 추세라 보고 한다. 이어 면접자료에서는 노인가계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의료비와 교통비, 경조사비 및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거론되었다(20-21쪽).

&lt;표 3-32&gt;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 여부

(단위: %)

구분	세대 및 성별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있음	7.0	7.9	11.2	12.8	9.3	9.6	9.71
없음	93.0	92.1	88.8	87.2	91.7	90.5	9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분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전체
있음	18.9	12.5	12.0	6.7	5.7	-	9.7
없음	81.2	87.5	88.0	93.3	94.3	-	9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2024년)

## ② 원리금 연체 사유 및 납부기일을 지나친 이유

전체 응답에서 원금 상환이나 이자납부일을 넘긴 이유로는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이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득감소’(26.3%), ‘자금융통 차질’(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감소’는 1, 2분위에서, ‘부담 상승’은 3, 4분위에서 원금 상환이나 이자납부일을 넘긴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금융통 차질’은 소득 5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이 원금 상환이나 이자납부일을 넘긴 이유인 경우는 노년층-중장년층-청년층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세대에서 남성의 응답이 여성보다 많았다. 그러나 세대 및 성별로 보면 원금 및 이자지급 납부 기일을 경과한 이유에 차이가 있다. 청년층 남성과 여성은 ‘자금융통 차질’-‘소득 감소’-‘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 상승’ 순으로 답한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납부 기일은 넘긴 사람들 중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특히 납부기일을 넘긴 노년층 남성 중 54.2%가 ‘부담 상승’을 이유로 답했다. ‘소득감소’를 이유로 납부기일을 넘긴 사람은 중장년남성(35.6%)-노년남성(27.8%)-중장년여성(23.2%)-청년남성(21.5%)-청년여성(19.5%)-노년여성(18.3%)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3-33&gt;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 이유

(단위: %)

구분	세대 및 성별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부담 상승*	16.3	11.6	37.2	32.7	54.2	35.2	30.2	
자금융통 차질	34.2	22.2	14.3	28.6	7.1	15.7	22.2	
소득 감소	21.5	19.5	35.6	23.2	27.8	18.3	26.3	
가계지출	0.0	0.0	4.9	9.0	0.0	19.9	5.4	
납부기일 착오	23.8	42.5	5.3	6.4	0.0	0.6	12.2	
기타	4.2	4.2	2.7	0.0	10.9	13.3	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부담 상승*	31.3	22.1	40.4	34.6	16.0	-	30.2
자금융통 차질	16.9	16.2	21.7	17.7	41.6	-	22.2
소득 감소	38.0	45.0	24.6	10.4	10.6	-	26.3
가계지출	7.1	3.2	4.7	8.7	2.9	-	5.4
납부기일 착오	3.3	0.3	6.9	28.7	27.2	-	12.2
기타	3.5	13.2	1.7	0.0	1.8	-	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주: \*부담 상승-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 상승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각 년도)

주목할 것은 납부기일을 넘긴 이유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서 특히 청년층에서 0%인 ‘가계지출’이 노년층 여성 중에서 19.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년층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지출의 주요 항목에는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세금 등 각종 공과금, 통신비/교통비/보험료 등 기타 필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의료비, 생활비 및 특히 주거비 상승 등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소득이 제한적인 노년층 여성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가계지출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원금 상환이나 납부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집단에서보다 노년층 여성에게서 불가피한 지출이 증가하고 소득 대비 지출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원리금 생계부담 정도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60%는 부채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세대별로 보면, 노년층-중장년층-청년층 순으로 부담을 갖고 있었다. 세대 및 성별로 보면,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노년여성(31.8%)-노년남성(28.5%)-중년여성(27.3%)-중년남성(24.2%)-청년여성(10.6%)-청년남성(9.3%)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청년남성(52.6%)-청년여성(46.3%)-중년남성(41.4%)-중년여성(28.7%)-노년남성(27.2%)-노년여성(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4> 원리금 상환의 생계부담 정도

(단위: %)

구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없음	52.6	46.3	41.4	28.7	27.2	22.2	39.9
약간 부담	38.2	43.1	34.4	44.0	44.4	46.0	40.0
매우 부담	9.3	10.6	24.2	27.3	28.5	31.8	2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0	100.0	100.0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없음	22.2	26.0	32.4	41.2	58.4		39.9
약간 부담	34.2	45.2	42.7	44.6	33.2		39.9
매우 부담	43.6	28.9	25.0	14.2	8.4		2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0	100.0	10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2024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원리금 상환의 생계부담 정도가 낮아

지는 반면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그 부담이 커졌다.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77.8%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 중 43.6%가 매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 4) 보유 부채에 대한 상환 가능성

금융부채를 보유한 사람들 중 전체의 76% 정도는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순으로 대출기한 내 상환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노년층 여성이 68.7%로 가장 낮다. 가계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체 응답은 6.2% 정도인데 노년층에서 15.0(남성)~17.1(여성)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비율은 저소득 1, 2분위에서 14.4~16.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고소득 4, 5분위에서도 2% 이상이 가계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표 3-35> 보유 부채 상환 시기 및 가능성

(단위: %)

구분	세대 및 성별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대출기한	81.2	80.2	73.6	74.9	70.9	68.7	76.0
~년	17.2	15.9	19.5	20.0	14.2	14.2	17.7
상환불가	1.6	4.0	6.9	5.1	15.0	17.1	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대출기한	64.0	68.8	73.8	82.7	80.0	-	76.0
~년	19.8	16.8	20.5	14.7	18.1	-	17.7
상환불가	16.2	14.4	5.7	2.6	2.0	-	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 분석(2024년)

## 제4절 소결

### 1. 요약

#### 1) 금융자산 불평등 실태

##### (1) 총자산, 순자산 및 금융자산 지니계수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지니계수가 대부분 0.6 이상을 훨씬 넘어 각 자산의 불평등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대비 2024년 총자산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25, 남성 0.044), 순자산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18, 남성 0.041), 금융자산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14, 남성 0.057)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남성집단 내부의 금융자산 불평등이 여성집단 내부에서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금융자산 지니계수의 성별 격차는 2017년 0.024(남성 0.677, 여성 0.701)에서 2024년 0.067(남성 0.62, 여성 0.687)로 더 커졌으며 총자산이나 순자산 지니계수의 성별 격차보다 크다. 성별 자산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가운데 남성집단 내부에서보다 여성집단 내부에서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을 시사한다. 이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격차가 상대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 총자산과 순자산 및 금융자산 보유액

2020년 이후 부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금융자산 비중도 202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 자산 구성의 금융화와 함께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총자산이나 순자산, 금융자산 규모 모두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2021년 자산보유 증가액이 이전보다 컸다. 2017년 대비 2024년의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의 평균 보유액은 모두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 증가 현황을 보면, 2024년 금융자산이 2017년 대비 67.6%가 증가해 가장 높다. 2017년에 비해 2024년 금융자산은 절대 금액과 비중이 모두 크게 증가한 반면 순자산과 실물자산의 경우 절대 금액은 증가했지만 비중이 하락하였다. 즉, 전체 자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자산의 상대적 위상이 커지고, 실물자산에 대한 의존 비중은 줄고 있다. 최근 금융자산 축적의 확대와 함께 가계 자산 구조가 점차 금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순자산(자산-부채) 비중의 감소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증가로 금융자산의 상대적인 위상이 커지는 만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3) 금융자산 불평등

금융자산 불평등은 금융자산 접근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금융자산 접근성은 가계나 개인이 각종 금융자산에 대해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금융자산 접근성 여부는 금융자산의 불평등 상황을 통해 핵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직접 측정이 어려워 그 대리 지표로서 금융자산의 보유액과 점유율을 소득분위별, 세대/성별로 분석하였다. 금융자산 규모는 2017년 이후 24년 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유 증가액이 커는데, 소득 5분위 평균 보유액과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다만 2017년에 비해 24년에 소득분위 간 보유 액과 점유율 차이는 완화되었다. 전체 남성과 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2017년 이후 남성이 계속 앞섰으나 세대별 분석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세대/성별 보유 액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 남녀의 보유액 격차는 크게 개선되었고 2020~23년까지는 여성 보유액이 남성 보유액을 앞섰다(105.1~125.4%). 중장년여성의 보유액은 2017년 이후 24년까지 남성보다 많았는데(106.7~147.1%), 2017년에는 남성이 앞섰던 점유율에서도 2018년 이후 성별 역전현상이 나타나 여성이 앞서기 시작하였다. 노년층의 경우 2017년 이후 보유액에서 남성이 계속 우위를 차지한 반면 남성보다

수가 많은 노년여성의 집단규모 효과로 점유율에서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앞섰다 (10.1~15.9%p). 남성 대비 여성 보유액은 2017년 대비 24년에 크게 증가함(58.2→93.8%)으로써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 2) 금융부채 불평등 실태

### (1)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지니계수

최근 8년간(2017년~2024년) 부채와 금융부채 지니계수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지니계수가 크다. 부채와 금융부채 불평등이 남성보다 여성집단 내에서 더 큼을 알 수 있다. 전체 집단의 부채와 금융부채 지니계수는 0.6~0.7 이상으로 불평등도가 심한데 2017년에 비해 2024년 둘 다 감소해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특히 남성 집단 내에서 부채와 금융부채의 분포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완화되었다. 다만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76, 남성 0.029)과 금융부채 지니계수 감소 폭(여성 0.04, 남성 0.02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나 금융부채 모두 여성집단 내에서의 불평등 정도가 남성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보다 심각하다.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부채와 금융부채의 성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2) 금융부채 불평등 실태

금융부채 불평등은 금융부채 접근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금융부채 접근성은 가계나 개인이 금융기관의 부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부채 접근성은 다양한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출 심사 기준(예: 신용점수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이나

상품의 이자율 수준, 대출 상환 조건 등이 어떤지 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금융부채 접근성 여부는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금융 이용조건(이자율 등)의 불평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만 금융부채 접근성은 직접 측정이 어려워 그 대리 지표로서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 분석을 통해 금융부채에 대한 접근 정도가 어떤지 알아보았다.

### ①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부채의 보유액과 점유율과 관련해 소득분위별 분석과 세대/성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소득분위별 분석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7년 이후 금융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 5분위 보유액과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유 증가액도 커졌다. 다만 보유액의 증가율은 2분위-5분위-1분위-3분위-4분위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과 저소득 분위 간 점유율 차이는 2017년과 비교해 24년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1, 2, 3분위에서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고소득분위인 4, 5분위의 점유율이 감소한 탓이다.

둘째, 금융부채의 세대/성별 보유액 분석 결과 지난 8년 간 남녀 모두 금융부채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보유액이 여성의 보유액보다 크지만 그 차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대비 24년 남녀 보유액 차이는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을 앞섰으므로 크게 감소되었고 성별 격차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전체 남성과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2017년 이후 남성이 계속 앞섰으나 세대/성별 분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노년층에서 여성의 보유액은 2017년 이후 남성 보유액보다 낮았다. 그러나 중장년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2017~19년, 22년, 24년에는 남성의 보유액보다 많았다. 청년층에서는 2017년 이후 남성이 여성을 줄곧 앞섰으나 2020년에 여성의 보유액이 남성을 다소 앞서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전 세대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 증가율이 남성보다 커 보유액에서 남녀 간 차이는 크게 줄었다. 다만 노년층 여성의 남성 대비 여성보유액 수준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노년여성의 남성 대비 여성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45.5%에 불과했다. 이에

2024년 여성 보유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 대비 70% 수준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남녀 차이가 큰 것이다.

## ② 금융 이용 조건의 불평등

금융 이용 조건의 불평등을 알아보기 위해 금융부채 유형, 금융기관 유형에 따른 소득분위별 보유액을 분석하고 금융부채 유형 및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 구성비를 알아보았다.

먼저 금융부채 유형에 따른 소득분위별 분석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금융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특히 금융부채 유형 중 담보대출 보유액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담보대출과 규모에서 차이가 크지만 3분위 이상에서는 신용대출이, 1, 2분위에서는 기타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기타-신용카드대출 순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했다. 그런데 두 유형 모두 5분위의 보유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증가액도 담보대출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2017년 대비 24년 증가액 및 증가율을 소득 1분위와 비교해보면, 5분위 증가액이 담보대출 5.2배, 신용대출 4.7배에 달한다. 고급리인 기타의 경우 1, 2분위에서 증가율이 큰데, 4, 5분위는 감소하고 있다. 고소득층에서 담보대출, 신용대출 중심으로 부채가 구성되어 있고 대출 규모도 저소득층과 차이가 크다. 저소득층은 담보대출, 기타 중심으로 부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규모도 작다.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유형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부채 유형별 전체 집단 내 소득분위별 점유율의 변화는 특정 부채가 어느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고소득 분위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특히 담보대출이 집중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비중은 68.9~71.4%인데 이 중 담보대출 점유율이 소득 5분위는 25.4~30.0% 반면 소득 1분위는 7.79~10.4%에 불과하다. 2017년 이후 24년까지 금융부채 유형별 동일 소득분위 내 점유율 분석을 통해 소득수준별 금융부채 유형의 내부구조도 살펴보았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담보대출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신용대출-기타-신용카드대출 순으로 금융부채가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담보대

출과 특히 신용대출 비중이 저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이 금융부채 유형의 내부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유형에 따른 소득분위별 대출 보유액과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은행권-제2금융권-기타 순으로 대출 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은행권 대출 비중이 가장 큰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은행권 대출 보유액이 커지고 5분위 대출액은 다른 분위를 크게 압도하였다. 다만 조건이 양호한 은행대출이 소득 5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소득 1, 2분위에서 2금융권과 기타 기관의 부채가 감소해 하위층 부채의 질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유형별 점유율에서도 확인된다. 2017년 대비 24년 1분위와 5분위 간 은행, 2금융권의 점유율 차이는 감소했다. 2분위도 은행대출 증가와 함께 2금융권 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주목할 것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제2금융권 대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수준이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의 규모 및 점유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금융부채 유형 및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의 구성을 알아보았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금융부채 유형과 이용 금융기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공통된 점은 은행의 담보대출 비중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제일 높았다. 이외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의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한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관련 대출 비중은 낮았다. 중장년남성(11.0%)과 특히 노년남성(20.5%)의 경우 기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은행 담보대출 중심의 부채를 갖고 있었고 남성들은 은행 중심이지만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 비중이나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커다. 청년층을 제외한 중장년남성이나 노년층 남성의 경우는 제2금융권 대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 구성 차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조건이 양호한 은행권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채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성별 지니계수를 분석하였다.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성별 지니계수 분석은 성별 간 대출 금융기관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는 같은 금융기관 유형 내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017년부터 2024

년까지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 보유액의 성별 지니계수를 보면, 제2금융권의 지니계수(0.611~0.707)가 은행(0.515~0.592)이나 기타 기관(0.526~0.623)의 지니계수보다 전체, 남성, 여성 모두에서 가장 높다.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보다 제2금융권 이용자들 사이에서 금융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의 부채 규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크고 불균등하게 펴져 있다. 여성의 경우 제2금융권 금융부채의 지니계수(0.549~0.690)가 더 넓은 범위로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치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여성 집단 내에서 금융부채의 분포가 남성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더 불균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가계금융의 불평등 실태

#### (1)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 실태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지만 세대/성별로 살펴본 결과 다르게 나타났다.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율은 청년층과 노년층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중장년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보유 비율은 청년여성(11.2%p), 중장년남성(9.1%p) 순으로 많이 증가했고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청년여성(11.3%p), 중장년남성(10.3%p) 순으로 증가했다. 부채 비율이 금융부채 비율보다 큰데 노년층-중장년층-청년층 순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중장년여성과 노년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와 금융부채 보유 비율 간 차이가 크다. 이들 여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불평등 실태

청년층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보유액이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크게 증가했다. 특히 청년여성의 경우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율(318.4%)이 눈에 띠는데, 2017년

이후 중장년여성보다 낮았던 금융부채 보유액은 2020년부터 중장년여성을 넘어섰다. 금융자산 보유액도 2019년부터 청년여성이 중장년여성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증가율을 보면 금융자산 증가율보다 금융부채의 증가율이 모든 세대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층을 제외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여성의 금융부채 증가율과 금융자산 증가율 차이가 남성보다 더 크다. 특히 청년여성의 금융부채 증가율과 금융자산 증가율 차이는 233.2%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 여성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규모는 가장 적어 여성 노년층이 재정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전 세대에서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세대에 재무적 압박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재무구조가 부채의존형으로 바뀌고 있어 가계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금융자산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부담 정도를 나타내 높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부채 부담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대비 2024년에는 모든 집단에서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해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여성과 중장년남성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해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3) 금융부채 규모 전망 및 증가 원인

2024년 조사에서 1년 후 금융부채의 규모를 물어본 결과 1인 가구(5943명) 중 5.1%(303.7명)가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금융부채 규모가 ‘변화없음’에 답했다. 세대별로 증가한다는 응답은 청년층-중년층-노년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청년남성(8.3%)이 가장 높았다. 금융부채가 감소한다는 응답은 청년층-중년층-노년층으로 나타났는데, 각 세대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금융부채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노년층을 제외할 경우 청년

여성의 부채 규모 감소 비율은 31.2%로 가장 낮다.

금융부채의 증가 원인은 소득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다. 소득 1분위에서는 생활비 비중(51.5%)이 가장 높았고 소득 5분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부채 비중(40.6%)이 높아 소득 1분위에 비해 14.8배나 많았다. 소득 1분위에서 생계형 대출 비중이 큰 반면 소득 5분위에서 자산증식형 대출 비중이 커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우려된다. 세대/성별로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에는 차이가 있다. 부채 증가 원인이 부동산 관련(거주주택구입, 거주주택이외 주택구입, 주택이외 부동산 구입)인 경우는 청년층-중년층-노년층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부동산 관련 부채 증가 원인은 전체 남성(29.3%)이 전체 여성(17.8%)보다 높다. 세대 및 성별로 보면, 청년남성(44.8%)이 청년여성(21.1%)보다 높다. 청년층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생계형 부채로도 볼 수 있는 전세·월세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다. 청년층 남성과 여성은 또 부동산 구입 부채 비중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크다. 생활비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경우는 노년층-중년층-청년층 순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비가 부채 증가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중년층과 노년층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생활비로 이들은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생계형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 (4) 원리금 상환과 생계부담 및 부채 상환 가능성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9.7%가 지난 1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연체하였다. 세대별로 보면 중장년층-노년층-청년층 순으로 성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 낼 날짜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서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연체 사유는 노년층과 중장년층은 부담상승과 소득감소를, 청년층은 자금융통 차질, 납부기일 착오, 소득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생계부담 정도는 노년층, 중장년층-청년층 순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 특히 노년층 남성과 여성, 중장년여성의 경우 70% 이상이 원리금 상

한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채 증가 원인은 생활비-전월세보증금-거주주택 구입 등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여성은 생활비(30.7%), 전월세보증금(20.1%) 부채, 즉 생계형 대출 비중(50.8%)이 전체 남성(38.2%)보다 높았다.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되는 부동산 관련 부채 비중은 전체 남성이 여성보다 11.5%p 많다(남성 29.3%, 여성 17.8%). 그러나 세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 남녀는 전월 세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중장년이나 노년층은 생활비 비중이 높았다.

보유 부채 상환 가능성의 경우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순으로 대출 기한 내 상환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노년층 여성이 68.7%로 가장 낮다. 가계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체 응답은 6.2% 정도인데 노년층에서 15.0(남성)~17.1%(여성)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1, 2분위에서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14.4~16.2%로 높게 나타났다.

## 2. 시사점

첫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지니계수 분석 결과 금융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금융부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즉 다수가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자산은 소수,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가진 소수는 추가적인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반면 금융부채를 가진 다수는 원리금 상환 등의 부담으로 소득과 자산 축적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자산 불평등 정도가 금융부채 불평등보다 심하다는 것은 부의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만으로는 소득 불평등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 불평등, 특히 금융자산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계의

자산구조가 점차 금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지니계수 분석 결과 모두 지난 8년 동안 0.6 이상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 금융자산의 경우 전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특히 금융자산의 상대적 위상도 커지고 있다. 2024년 금융자산 지니계수(0.655)는 총자산 지니계수(0.656)보다 작지만 순자산 지니계수(0.653)보다 크다. 특히 여성의 금융자산 지니계수(0.687)는 총자산(0.671), 순자산(0.666) 지니계수보다 크다.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자산의 불평등도 심각한데, 소득이 높을수록 그 증가폭도 커 소득 5분위의 금융자산 규모가 압도적이다. 다만 2017년 대비 2024년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불평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1분위에서 금융자산 점유율 변화가 0.1%에 불과해 최하위층의 금융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대 및 성별 분석 결과 중장년층 여성은 보유액이나 점유율에서 모두 남성을 앞서면서 금융자산의 성별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노년층 남녀 간 격차는 2017년에 비해 2024년에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금융자산 보유액의 성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성별 차원은 물론 소득이나 교육 등 계층 차원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이 금융 접근성의 차이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 세대,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부채 불평등 문제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하면서 전 세대의 재무구조가 부채의존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 세대 간 부채의 성격이나 목적, 증가 정도, 금융부채 유형과 이용 금융기관의 차이 등으로 이자율 부담 등이 상이하며 재정건전성이 다르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문제는 금융부채 보유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금융부채의 목적과 유형과 금융기관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대나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부채 보유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금융부채의 목적과 유형 및 이용 대출기관의 차이로 인한 금융 불평등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넷째, 금융부채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금융부채 구성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년 이후 금융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전 세대에서 금융자산 증가율보다 금융부채 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커지만 저소득분위에서 보유액의 증가율이 높았고 금융부채 점유율도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빨랐다. 이러한 변화는 양적으로 보면 금융부채 불평등이 201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듯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채 접근성을 대리지표인 보유액이나 점유율로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양적 지표의 변화만으로 금융부채 불평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금융부채가 갖는 이중적 효과는 물론 금융부채 유형, 이용 기관, 상환방식이나 기간, 부채의 성격이나 목적 등 금융부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은행에서 큰 규모의 부채를 저금리 담보대출로 받아 자산증식을 위해 투자하는 집단과 2금융권이나 기타 기관에서 고금리 부채를 빌려 생활비로 소비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 집단 간에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려 한다면 금융포용정책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알맞은 비용으로”(여의도연구원 2021), “정당한 가격에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이순호, 2012)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 집단 내부의 금융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로 성별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지니계수가 커다. 2017년에 비해 2024년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여성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남성집단 내에서보다 크다는 것이다. 대출 금융기관 유형별 금융부채 보유액의 지니계수에서도 여성은 제2금융권의 금융부채 지니계수(0.549~0.717)나 기타 기관 지니계수가 2017년 대비 2024년에 둘 다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남성보다 범위도 넓고 최고치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제2금융권과 기타기관을 이용하는 여성 집단 내에서 금융부채의 분포가 남성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더 불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섯째, 가계의 재무구조가 부채의존형으로 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자료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24년 전 세대에서 금융부채 증가율이 금융자산 증가율보다 높아 재무적 압박이 커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증가율이 높아지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대출자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래의 자산 축적이나 소득창출을 위한 투자형으로서 더 큰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해 부채 비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라면, 이를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자산 대비 부채비율 증가로 보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부채의 성격이나 목적, 소득수준이나 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자산 증가율보다 금융부채 증가율이 남성보다 빨랐던 여성들 중 부채 증가 원인을 ‘생활비’로 지적한 경우(30.7%)가 남성(18.1%)보다 12.6%p 많았다. 반면 주택관련 항목<sup>21)</sup>을 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은 사람은 남성(29.3%)이 여성(17.8%)보다 11.5%p 많았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생계형 대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갖는 양면성이 향후 남녀 간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3. 정책과제

첫째, 금융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실천이 시급하다. 최근 금융자산의 절대 금액과 비중이 모두 크게 증가한 반면 순자산과 실물자산의 경우 절대 금액은 증가했지만 비중이 하락하였다. 전체 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자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실물자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금융자산 축적의 확대와 함께 가계의 자산 구조가 점차 금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증가로 금융자산의 상대적인 위상이 커지는 만

21) 구체적으로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등의 항목임.

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모두 2017년 대비 2024년 고소득층에서 보유액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최하위층의 금융자산 점유율 변화는 매우 미미하였다. 세대별로 보면, 중장년여성의 금융자산 보유액이나 점유율이 남성보다 많고 절대 규모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커졌다. 중장년층에서 성별 간 금융자산 구조가 바뀌는 추세에 있다. 세대별 금융자산 불평등이 노년층 여성에서 매우 심각하다. 남성보다 금융자산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이것이 곧 여성의 금융자산 접근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성 수가 남성보다 절대적으로 많아 점유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의 성격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비 등 생계형을 위한 대출이냐 아니면 투자 등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야 여부는 자산 불평등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외형적/실질적인 차원에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금융포용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때 부채의 종류나 이용 금융기관의 종류 등도 금융 불평등을 낳는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보유액과 점유율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점유율 확대가 금융 접근성의 향상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이 적은 집단이라도 이를 갖고 있는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 점유율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신용도나 직업, 성별 등에 따라 금리나 이용한도, 대출기간은 물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달라진다면, 저신용,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은 사실상 고신용,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구조는 소득이나 자산 격차를 초래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접근성 문제를 양적인 차원(예: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을 넘어 질적인 차원(예: 이용 조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금융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나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부채 유형과

이용 대출기관의 차이로 나타나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리 등 이용조건에서 양호한 담보대출이나 은행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타, 신용카드대출 비중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부채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 부채를 어떠한 조건(예: 이자율, 상환조건 등)으로, 어디서 차입하느냐 하는 문제도 삶의 질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보대출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위에 따라 대출 규모, 금융부채 유형이나 금융기관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고소득층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조건이 양호한 은행에서 받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담보대출 외에 고금리로 부담이 큰 기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별로 보면 노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제2금융권 담보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년남성의 경우 은행 담보대출 비중(33.2%)과 2금융권 담보대출 비중(26.6%)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남성의 은행 담보대출 평균(48.9%)보다 작고 2금융권 담보대출 평균(14.8%)보다 큰 것이다. 특히 노년남성의 경우 기타 비중도 20.5%로 전체 남성 평균(10.3%)의 2배에 달한다. 게다가 노년남성의 72.9%가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된다고 답하고 있으며 상환불가 비중도 노년여성(1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15.0%).

넷째,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2017년 대비 2024년에 양적인 면에서 모든 소득분위, 성별, 세대에서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소득, 세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은 특히 소득분위에 따른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예: 소득 5분위 담보대출 보유액과 점유율). 1인 가구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소득 2분위의 금융자산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소득 1분위보다 작았고 금융부채는 2017년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소득 1분위보다 작았다. 이는 1분위 집단에 고연령대가 많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소득 1분위와 함께 소득 2분위 집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이 가장 적은 노년층 여성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동산 등 담보대출 중심의 대출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현행 금융 시스템은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층은 신용거래실적이 적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층에 해당한다거나 금리 등 이용 조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된다(김미루, 2023: 9; 김을식·임수강 외, 2021). 주택이나 전세금, 생활비 마련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할 때 실패했던 금융기관은 은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차은영·김지민, 2018)는 보고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은행의 담보/신용대출이 중심인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담보대출/기타 중심이지만 은행 외에도 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이나 소득수준 등이 금융부채 유형이나 금융기관 유형별 부채의 규모에 영향을 주면서 부채 구성의 질을 결정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행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근 국민 중 4명이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부족자’로서 대출받을 때 불리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금융이력부족자의 절반 이상은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이라 보고하면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경향신문, 2021.09.27.).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sup>22)</sup> 은행들은 금융권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비금융 정보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일부 은행에서 대체정보로 불리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고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안신용평가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금융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납세, 사회보험료 정도 등 비금융정보 활용의 활성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의 문제로 과세당국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도 적지 않다(이코노미스트, 2019.11.10.).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했다(SBS Biz, 2025.10.17.).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22) 금융이력부족자는 얇은 파일을 의미하는 ‘씬 파일러( Thin-filer)’라고도 불리는데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만큼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있는 만큼 향후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금융 불평등 해결 방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저신용자를 비롯한 저소득자들이 과도한 부채로 빙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 국민 대상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서베이에서도 제도권 금융기관의 장벽을 낮춰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채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69.3%가 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금융포용 차원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성 서민금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금융상품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일반 국민들은 64%가 동의하였다. 금융포용이 실질적 시민적 권리 보장이 아닌 오직 시장에 대한 접근권만 강조할 경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다(최철웅, 2019)는 지적 또한 경청해야 한다.

여덟째, 신용회복지원정책이나 신용회복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제윤경·이현욱, 2012; 조성목, 2005).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부채의존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대나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활비나 주거비 등이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었다. 소득이나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함에도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돌려막기용 대출이나 원리금 연체나 상환불가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신용불량과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제윤경·이현욱(2012)은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 회수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현행 신용회복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면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제윤경·이현욱, 2012: 171).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부 유관기관과 민간 자활지원기구 등이 상호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조성목, 2005)는 정책제안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홉째,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융포용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진시키는 일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2024년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가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 권리 보장이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 강조하며 향후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한국금융, 2024.11.26.)고 다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인 금융업계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자리가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 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과정에서 접근권 보장, 즉 외형적/물리적 접근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금융포용 정책은 외형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취약계층도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상품을 합당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업계와 금융공익재단, 금융노조가 주도가 되어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도 금융을 통해 불안정한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금융포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금융이 금융취약계층 없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열째, 금융 불평등 문제 해결은 금융과 소득 재분배를 염두에 둔 복지, 사회정책 등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주택 관련 대출로 과도한 부채를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 차원에서, 또는 공공주택공급 확대 등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이는 소득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금융 불평등 완화는 양적 차원의 금융 접근성 제고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복지로 해결해야 할 영역(생계유지, 질병 등)을 금융으로 해결하려 한다(제윤경·이현욱, 2012:54)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은 주거나 의료, 돌봄 등

23) 백웅기·유경원(2013: 45)은 생활고가 극심한 경우에는 돈을 갚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지적하고 있다.

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영역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적절히 해결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최근 주거비 등으로 인한 부채 급증, 부채의존형 재무구조로의 변화는 가계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백웅기·유경원(2013)은 서민금융정책에서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현재와 같은 대출 서비스 접근성 제고 위주의 정책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소득 흐름의 확보와 은퇴 및 위험 대비 보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 증대가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정 및 조세 관련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가계부채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해 재정이 수행할 일을 금융 부문이 대신하고 가계로 하여금 최종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백웅기·유경원, 2013: 44). 가계채무의 부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사회정책 등과의 연계선상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김영일, 2019: 70)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포용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해결책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앞서 금융포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란 쉽지 않은 과제로 논란이 있지만 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여 살려놨다는 점,<sup>24)</sup> 사실상 5대 은행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과점체제’ 구축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정부의 용인 아래 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비즈워치, 2023.02.22.). 은행 총자산의 약 92.8%가 부채이고 주주의 돈이라 할 수 있는 자본금은 불과 2.1%에 불과한 반면

24)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IMF라는 초유에 사태가 퍼지자 금융회사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리스크가 우리나라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은행 인수합병(M&A)을 주도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필요한 수혈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기업 등의 재기를 위해 투입한 자금 규모는 168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인 86조9000억원이 은행의 회생을 위해 투입됐다. 다만 은행권에 투입된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중 1.2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적자금이 상환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회수 과정에서 ‘이자’는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51.6%가 은행이라는 점(이한진, 2023: 66-67)과 현재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인데 은행 전체 수익의 40%가량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통해 나온다(헤럴드경제, 2025.06.28.)는 점 등도 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외 금융기관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공적 통제를 받는 조직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회사는 주주회사로서 주주들이 투자한 만큼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로서 사업이 잘될 때는 투자한 이상으로 무한대의 이익을 누리지만 망할 때는 투자자분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심지어 대형 금융기관은 사실상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어려워져도 주주가 책임질 일은 거의 없는 사업인데도 자기 책임의 원칙, 유한책임의 원칙 아래 주주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제윤경·이현욱, 2012: 74-76). 가계의 재무구조가 부채의존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금융의 위기는 사실상 사회 전체의 위기로 전 사회가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은행은 단순한 민간기업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사회 전체가 금융의 위기 극복에 나섰던 만큼,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금융은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제기되는 공적 통제에 대한 지적도 공론의 장에서 적극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금융업계와 금융공익재단, 금융노조가 주도가 되어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주요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 제4장

# 디지털 정보 불평등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한국 사회의 디지털 불평등  
상태

제4절 해외사례와 시사점

제5절 결론



## 제4장 디지털 정보 불평등

### 제1절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은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 상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디지털 격차는 노동시장 접근성과 생산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세대,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측되는 영역이다. 예컨대, 고령층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 경제활동 및 복지 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디지털 환경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젊은 세대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나 정보의 질과 선택 문제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과도하면서도 부정확한 정보와 SNS 등 디지털 중독 문제 등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을 고려하면 그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로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사회적 배제 위험으로서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기회에서 소외되는 개인과 집단을 만들어 냄으로써 구조적인 불평등 체제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보 격차의 경제적 영향으로서 디지털 경제에

서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정치적·문화적 영향으로서 정보 접근성과 활용 격차는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고려하면 디지털 정보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문제 자체로 국한시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대, 교육수준, 경제 수준 등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요인들과의 복합적 작동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정보통신 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질적·양적 격차로 인해 개인, 세대, 지역, 계층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기술적 접근의 문제를 넘어, 정보활용 능력과 정보의 효과적 활용 여부까지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차원은 세대간 격차, 계층간 격차(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아우르는 요소로서), 지역간 격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중 계층 간 격차가 한국 사회 내 전반적인 불평등 심화의 직접적 설명요인이라면 세대간 격차는 그 안에 공존하면서 불평등 구조의 심화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세대 간 갈등이 핵심이냐, 세대를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계급적/계층적 지위의 격차가 핵심이냐를 놓고 학술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현황을 측정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세대간 및 세대 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진화 과정에서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아울러서 계층구분을 한다면 계층간 격차 역시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젊고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정보 접근성을 비롯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유리할 것이고 노령이면서 하위계층일수록 디지털 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세대 및 계층을 둘러싼 디지털 격차와 기술 활용 능력에서의 격차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보 불평등은 고용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격차와 나아가 사회적 지위 자체의 차이를 불합리한 방식으로 더욱 확대시킨다는 예상이다. 한결음 더 나아가면 정보 불평등은

교육수준과 긴밀한 상호관계 하에서 결국은 경제적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노동시장 접근성과 생산성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단순히 사회적 인식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디지털 정보 불평등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세대 간,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형성하고 강화하는지를 규명하려는 실증적 접근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구조적 불안정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이 사회적 기회의 불균등, 나아가 전체 사회의 통합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가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완화, 나아가 사회경제정치적 차원의 불합리하고 구조적, 제도적인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접근은 통계청과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NIA)이 매년 수행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Raw Data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 내 디지털 사용 현황과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대표적 조사이다. 조사 주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며, 통계청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이 조사 결과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다루는 보고서에서 매우 중요한 실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접근 → 활용 → 역량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격차의 단계적 구조를 분석하기에 유리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또한 계층별 격차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보고서에서 ‘세대간’, ‘계층간’ 디지털 불평등을 논할 때 이 조사 데이터가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Raw Data는 그 어떤 다른 자료보다 더 유용하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성조사 좌담회 인터뷰와 인구구성비를 반영한 온라인 서베이 방법을 통해 연구내용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 제2절 이론적 논의

### 1.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학문적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디지털 정보 불평등(digital information inequality)은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 불평등 유형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인터넷 사용 여부나 스마트 기기의 보유 여부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개인과 집단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로부터 얻는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차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에 접근하고 활용하며 그 결과를 실현하는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격차를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정보사회 진입 이후 점차 구체화되었으며,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사회 구성원 간의 교육 기회, 고용 기회, 복지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배제와 계층 고착화를 심화시킨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후반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대중화 되었으며, 이후 보다 다층적인 구조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van Dijk(2005)는 디지털 격차를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닌, 네 가지 단계(기술 접근, 실제 접근, 활용 수준, 사회적 성과)로 설명하였다. 또한 Norris(2001)는 디지털 불평등을 글로벌 디지털 격차, 사회내 계층 격차, 민주적 참여 격차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Warschauer(2004)는 물리적 접근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맥락’과 ‘정보 활용 역량’을 강조하며, 정보화 과정 자체가 교육, 경제, 사회제도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학문적으로 디지털 불평등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접근성(accessibility)의 불평등이다. 이는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인프라 격차가 대표적인 요소다. 즉,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 환경, 정보 인프라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른 격차이다.

둘째는 활용 능력의 불평등이다. 정보검색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온라인 행정·금융서비스 이용 능력 등 개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차이가 이에 해당한다. 즉, 디지털 기기나 플랫폼을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탐색·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서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 차원에서는 교육 수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언어 능력, 정보 탐색 기술 등이 핵심 요소다.

셋째는 결과(outcome) 격차로 정보 활용의 효과에서의 불평등이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성과의 차이를 말한다. 디지털 정보의 이용 결과로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본이 얼마나 축적되는가에 따라 개인 간 격차가 확대된다. 이른바 ‘정보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다. 예컨대, 온라인 정보 이용 능력의 차이가 취업 성공률, 교육 성과, 정부서비스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23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7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정보화 교육 이수율에서도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기기 보급이나 인터넷 접속 문제를 넘어서, 정보 활용 능력과 결과에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의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서로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기술 접근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된다. Bourdieu(1986, 1992)의 자본 개념을 적용하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은 곧 문화자본과 직결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은 곧 문화자본·사회자본·경제자본의 불균형과 연결되며, 이는 계층 재생산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기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거나 재생산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한 양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교육,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차적 불평등을 유발하게 된다. 반면, 정보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계층은 점점 더 사회적 고립과 기회의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단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차원의 분배와 이용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불평등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술 보급의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적 역량 강화와 포용적 정책 설계를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의 1차(접근), 2차(활용), 3차(성과)의 구성요소와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며, 정보격차 이론, 디지털 격차 이론, 사회 자본론 등을 개념적으로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우선 디지털 정보 불평등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살펴보자.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Van Dijk(2005)은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기술적 접근성의 차이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과 그 활용을 통한 사회적 성과의 격차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리했다. 디지털 격차가 단순한 기술적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 부여,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실제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불평등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Norris(2001)는 정보 불평등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정의되며, 개인과 집단 간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의 불평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근성과 사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디지털 격차가 산업화된 사회와 개발도상국 간, 그리고 각 국가 내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존재함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시민 참여와 정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차이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핵심이며, 이는 개인이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한다는 주장도 있다(Hargittai, 2001). 디지털 격차가 단순한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온라인 기술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2차 디지털 격차'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온라인 정보 활용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기회와 자원 접근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Kuhn et. al(2023)은 디지털 불평등의 복잡한 차원 분석을 시도했다. 디지털 불평등이 매우 복잡하고 계층화되어 있으며 다의적으로 결정되는 사회 현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교차함으로써 한가지 시각에서 벗어나 디지털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관 (2021, 한국의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4~2019 분석)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들의 정보 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평균적인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연령, 성별, 학력, 가계소득 등에 따른 정보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여기서의 시사점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더 높은 수준의 활용 능력과 비용을 요구할 때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권순동, 장정주(2024, 디지털 격차의 장기 추세 분석: 일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 비교 연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디지털 접근 격차(1차 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디지털 역량 및 활용 격차(2차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가 존재한다. 특히 고령층의 전반적인 디지털 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였다.

디지털 시대의 초창기 연구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들이 설명하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대체로 접근성, 활용기술, 관련 콘텐츠성, 인프라 가용성 등 다양한 차원의 포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논하는 연구들은 개인의 역량과 시스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디지털 불평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다음장은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정의와 내용을 최적으로 반영하여 측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2. 디지털 정보 불평등 측정의 기준 수립 방안 및 구체적인 기준 항목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사회적 배제와 정보 접근 격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정책 수립과 개입의 첫걸음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지표와 기준 체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접근성만을 측정하던 초기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활용 능력, 정보 이용의 질, 결과적 효과성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미있는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다차원적 지표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 측정을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구성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접근성(accessibility) 측면이다. 이는 물리적 기기 보유 여부(예: 스마트폰, PC 등 스마트 기기 보유율),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인터넷 접속률),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등 인프라 수준(지역별 인프라 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정보접근 역량의 차이로 명명될 수 있는데 ICT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와 인터넷 연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차이를 핵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간,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계층적 지위, 지역 등에서 정보접근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 친숙성 혹은 사용기술skills 측면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정보기기 사용 역량의 차이로 명명될 수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 사용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정보기기 자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디지털 활용 역량(competency) 측면이다. 이는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검색 및 문제해결 능력, 정보선별 능력, 온라인 서비스 활용능력(온라인 행정 서비스 이용), SNS·이메일 활용 등 실질적 활용능력을 포함한다.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정보활용 역량의 차이로도 명명할 수 있는데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이점을 얻는 데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보 검색, 데이터 분석,

소셜미디어 활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 능력의 불평등을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고용 기회 창출, 온라인 학습,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까지 포괄하게 된다.

넷째, 정보의 질(Quality)에 대한 판단, 평가, 조정, 관리의 측면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달리 표현하자면 정보 조정 및 관리 역량의 차이이다. 일부 계층(대체로 상층)은 신뢰성 높은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계층(대체로 하층)은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데이터에 노출되기 쉽다. 정보 과부하와 가짜뉴스가 특정 세대나 집단, 계층 등에 미치는 영향도 질적 격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 불평등을 분석할 때, 디지털 정보 접근성(> 디지털 정보기기 보유 역량), 디지털 정보기기 작동 친숙성(> 디지털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정보의 질(> 디지털 정보에 대한 판단과 조정, 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적 틀을 사용하여 불평등 현황을 분석할 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정보불평등의 구조적 작동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정보 불평등 실태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ICT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디지털 정보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존재한다. 특히 소득, 연령, 지역,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는 통계상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통계청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94.6%에 달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은 70%대, 70대 이상은 40% 미만에 그친다. 또한, 중졸 이하 학력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률은 고졸 이상에 비해 크게 낮으며, 저소득층의 공공서비스 온라인 이용률 역시 절반 이하에 머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공공 와이파이 설치율 등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 보유율이나 디지털 역량 자가진단 결과에서도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자기 효능감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적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세대 추면에서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과 정보 검색 능력,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에서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은 기기 보유율은 상승했지만, 디지털 활용 교육과 실질적인 정보화 수준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다. 저학력층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이해도와 활용 능력에서 취약할 것이다. 이러한 계층별 격차는 단순한 기술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 체계와 연계된 구조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접근성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공공기관 중심의 일방향 정책 설계는 실제 수요자(고령층,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다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활용 능력 개선에는 제한적 효과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거나, 지역별·세대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 1. 통계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Raw Data 심층분석

이 장에서는 NIA 디지털 격차 실태조사의 원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특히 일반국민의 삶의 조건에 존재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상황, 특히 세대간 편차 및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디지털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 영역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1) 정보접근 역량의 차이: 디지털 접근성(accessibility) 측면에서의 정보기기 보유 양
- 2)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의 차이: 디지털 기기 사용 친숙성 및 사용 스킬(skill) 수준
- 3) 정보활용 역량의 차이: 디지털 리터러시 및 온라인 상의 서비스 활용능력
- 4)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의 차이: 정보의 질 측면에서 올바른 정보 스크리닝과 조정 역량

분석의 방식과 구성은 우선 디지털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세대간 차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역시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수준 및 월 가구소득(일종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간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세대간 외에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본 파트에서 다루는 네가지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각각 독립적이고 과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계층적 구분에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요인인데 그걸 합쳐서 종합적인 집단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계층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절하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계층적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좀 더 원인으로, 어떤 요인이 좀 더 결과로서 작동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1) 정보접근 역량의 차이: 디지털 접근성(accessibility) 측면에서의 정보기기 보유량

우선 첫 번째 영역으로서 정보접근 역량에서의 차이 혹은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스마트 정보기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개수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 정보기기를 가정 내에 몇 개나 보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다 -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주변기기 - 응답의 분포는 0개부터 5개 이상으로 나눠진다.

정보접근 역량에서의 편차 혹은 불평등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연령대별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표들은 2019년부터 연령대 별로 가정 내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정보기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0개는 스마트폰조차도 없다는 얘기이고, 5개(이상)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 패드, 스마트 주변기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표들을 평균 보유 개수로 압축해서 각 연도별 수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 연령대별 스마트기기 보유 개수 추이 분석 (2019~2024)

연령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년간 증가폭
전체	2.41	2.33	2.55	3.32	2.51	2.54	+0.13
10·20대	2.80	2.82	3.16	3.00	3.08	3.08	+0.28
30·40대	2.80	2.66	3.00	2.46	2.90	2.99	+0.19
50대	2.51	2.29	2.41	1.56	2.55	2.46	-0.05
60대 이상	1.31	1.40	1.48	2.60	1.56	1.65	+0.34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령대별 스마트 정보기기 보유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보유 개수가 증가하여 디지털 정보 생활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10·20대)에서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10·20대는 2019년부터 매우 높은 평균 보유 개수(2.80 개)를 보였고, 2023-24년에는 3.08개로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보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019년 1.31개에서 2023년 1.56개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4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효과 외에도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도 스마트 이용 환경에 대한 적응과 능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40대와 50대는 2019~2024년 사이 보유 개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더라도 안정된 상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관측된다.

변화 흐름을 핵심적으로 요약, 분석하면 우선 10~20대는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보유 수준 유지하면서 항상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 환경이 가장 잘 갖춰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30~40대는 가정과 직장의 교차 디지털 수요 층으로서 자녀 교육·업무 등에서 다양한 기기를 필요로 하는 세대이다. 50대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수용층으로서 점진적 진입 중으로 볼 수 있으나 다기기 이용보다는 실용적 사용 중심층이라고 볼만하다. 60대 이상은 정보 접근 역량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나 지속적 상승 경향을 보이면서 이후에도 변화의 양상을 지켜볼만한 세대이다. 여전히 정보격차·디지털 소외 측면에서 우려되는 연령대라는 점은 타당하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 능력 향상 및 공공 정책(디지털 배움터 등)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현황을 놓고 보면 연령대 간 디지털 정보기기 보유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한 상황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중장년층 이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 필요, 단순 보급이 아닌 유지관리 지원, 실용 중심의 디지털 활용 교육, 기기 종류의 다양화와 가격 접근성 제고도 함께 추진 필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지난 6년 간의 보유 기기 증가추세가 특히 2023년에서 2024년의 1년 사이에 더 두드려졌다는 점이다. AI, 챗gpt 등의 본격적 활용이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의 보유 증가폭이 단기간에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연령대/세대별 차이가 더 커지거나 혹은 반대로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면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 두 번째로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정보접근 역량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4-2> 교육수준별 스마트기기 보유 개수 추이 분석 (2019~2024)

교육수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년간 증가폭
전체	2.41	2.33	2.55	2.60	2.51	2.54	+0.13
중졸 이하	1.80	2.00	1.86	2.03	1.87	1.97	+0.18
고졸	2.44	2.16	2.42	2.35	2.36	2.28	-0.15
대졸 이상	2.88	2.73	3.11	3.19	3.06	3.10	+0.22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정보접근 역량 자체의 차이가 관측된다. 중졸 이하 집단은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보유가 지속되고 있어 디지털 정보 접근의 구조적 취약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졸 이하 집단은 현재 고등학생 등 10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질의 집단으로 취급하기 어렵고, 고졸 집단 역시 현재 대학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석 상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아무튼 고졸 집단의 경우에는 정체 혹은 경미한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대졸 이상 집단은 가장 높고 꾸준한 보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3개 이상) 보유자 비중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스마트기기 보유 개수는 교육수준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코로나19 이후(2020~2022)의 디지털 수요 증대 국면에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다. 고학력층은 지속적·적극적 디지털 기기 수용층이며, 저학력층은 접근뿐 아니라 활용 여건에서 구조적 불리함이 존재할 가능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23년에서 2024년의 1년 사이에 스마트 기기 보유가 특히 더 증가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전 사회적 욕구와 대응의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단순한 보급률 접근을 넘어서, 교육수준별 디지털 활용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능력 기반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중졸 이하 계층은 디지털 접근과 활용 모두에서 이중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기 지원 + 맞춤형 교육 + 지속적 케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 다음으로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정보접근 역량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4-3> 소득수준별 스마트기기 보유 개수 추이 분석 (2019~2024)

소득수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년간 증가폭
전체	2.41	2.34	2.55	2.60	2.51	2.54	+0.13
하위	1.53	1.50	1.49	1.58	1.55	1.52	-0.01
중하위	2.59	2.42	2.62	2.53	2.48	2.39	-0.20
중상위	2.85	2.61	3.01	3.01	2.90	2.92	+0.07
상위	-	-	3.26	3.40	3.36	3.26	+0.004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보유 기기 수가 많고 유지,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하위, 중하위 계층은 디지털 기기 보유량이 정체 상태에 있다. 중상위 이상 계층에서 특히 디지털 기기 구입에 증가 추세가 보인다.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에 따른 디지털 정보기기 보유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른바 양극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2020년은 디지털 기기 보유의 ‘정체기’로 보이며, 모든 계층에서 평균 보유 개수가 다소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충격이 정보 기기 구매 또는 보유에 일시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1~2024년은 디지털 기기 보유의 정체 및 구조적 양극화의 고착화 시기로 보인다. 고소득층은

디지털 역량을 확장한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적 방안으로 디지털 포용 전략의 차원에서 디지털 기기의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서 활용 능력 제고, 중산층의 유지 능력 강화 등도 함께 고려하고 병행 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소득층의 디지털 환경은 갈수록 나아지는 반면, 중하층 이하에서는 정체 양상이 지속되는 현실은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갈등과 균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lt;표 4-4&gt; 연령대별 정보접근 역량: 2019-2024년

2019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6.5%	11.0%	37.2%	29.0%	13.2%	3.1%	2.41
10+20대	0.0%	4.3%	36.9%	37.8%	16.4%	4.6%	2.80
30+40대	0.0%	5.0%	37.3%	35.0%	18.2%	4.5%	2.80
50대	1.3%	5.7%	49.3%	29.7%	12.4%	1.6%	2.51
60대 이상	27.3%	31.7%	28.1%	9.5%	3.0%	0.4%	1.31
2020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5.6%	12.2%	41.9%	26.4%	11.2%	2.7%	2.33
10+20대	0.0%	2.1%	39.6%	35.8%	18.6%	3.9%	2.82
30+40대	0.0%	5.3%	44.4%	32.6%	13.8%	3.9%	2.66
50대	0.2%	14.2%	52.5%	24.1%	7.7%	1.4%	2.29
60대 이상	22.9%	30.9%	33.3%	9.8%	2.4%	0.8%	1.40
2021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5.9%	15.9%	29.5%	23.7%	15.9%	9.1%	2.55
10+20대	1.0%	4.0%	25.0%	31.3%	25.9%	12.9%	3.16
30+40대	1.0%	7.8%	28.6%	28.4%	20.8%	13.4%	3.00
50대	3.7%	19.4%	35.6%	22.7%	11.2%	7.5%	2.41
60대 이상	18.4%	35.6%	31.0%	10.9%	3.0%	1.1%	1.48
2022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5.8%	15.4%	29.9%	21.9%	15.7%	11.4%	3.32
10+20대	.1%	4.4%	21.7%	29.6%	25.6%	18.5%	3.00
30+40대	.5%	11.9%	25.6%	26.0%	20.8%	15.2%	2.46
50대	1.1%	22.0%	36.0%	21.0%	10.8%	9.1%	1.56
60대 이상	20.2%	25.8%	38.5%	10.3%	3.6%	1.6%	2.60
2023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3.5%	24.5%	25.9%	20.9%	14.0%	11.2%	2.51
10+20대	0.6%	11.5%	22.5%	26.4%	22.2%	16.8%	3.08
30+40대	0.9%	17.1%	23.0%	25.3%	17.5%	16.2%	2.90
50대	0.7%	21.4%	31.9%	23.6%	12.7%	9.6%	2.55
60대 이상	10.5%	46.0%	28.4%	9.5%	3.7%	1.8%	1.56
2024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3%	26.9%	26.1%	22.8%	13.3%	10.6%	2.54
10+20대	.1%	9.5%	24.2%	31.1%	19.0%	16.1%	3.08
30+40대	.1%	13.8%	23.0%	28.6%	19.4%	15.1%	2.99
50대	0.0%	26.4%	30.1%	23.3%	11.3%	8.9%	2.46
60대 이상	.9%	55.9%	28.3%	9.2%	3.3%	2.4%	1.65

&lt;표 4-5&gt; 교육수준별 정보접근 역량: 2019-2024년

2019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6.5%	11.0%	37.2%	29.0%	13.2%	3.1%	2.41
중졸 이하	20.2%	20.2%	31.1%	18.5%	7.7%	2.2%	1.80
고졸	2.3%	10.9%	43.3%	30.1%	11.2%	2.2%	2.44
대졸 이상	0.3%	3.5%	34.4%	36.5%	20.4%	5.0%	2.88
2020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5.6%	12.2%	41.9%	26.4%	11.2%	2.7%	2.33
중졸 이하	14.1%	16.8%	36.5%	20.7%	10.8%	1.0%	2.00
고졸	5.8%	15.6%	46.8%	22.1%	8.0%	1.7%	2.16
대졸 이상	1.1%	5.4%	37.8%	35.1%	15.8%	4.8%	2.73
2021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5.9%	15.9%	29.5%	23.7%	15.9%	9.1%	2.55
중졸 이하	18.5%	27.4%	24.0%	14.6%	10.8%	4.7%	1.86
고졸	3.1%	18.9%	35.1%	24.1%	12.8%	5.9%	2.42
대졸 이상	1.2%	5.7%	26.9%	28.8%	22.2%	15.2%	3.11
2022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5.8%	15.4%	29.9%	21.9%	15.7%	11.3%	2.60
중졸 이하	18.7%	16.3%	32.2%	15.0%	11.6%	6.2%	2.03
고졸	4.1%	21.7%	35.0%	20.5%	11.1%	7.5%	2.35
대졸 이상	0.2%	8.3%	23.1%	27.2%	22.9%	18.3%	3.19
2023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3.4%	24.5%	25.9%	20.9%	14.0%	11.2%	2.51
중졸 이하	12.0%	38.6%	20.9%	13.4%	9.0%	6.1%	1.87
고졸	1.2%	28.6%	30.6%	19.8%	11.7%	8.0%	2.36
대졸 이상	0.4%	11.6%	24.4%	26.6%	19.4%	17.5%	3.06
2024년	0	1	2	3	4	5	보유 개수
전체	0.3%	26.9%	26.1%	22.8%	13.3%	10.6%	2.54
중졸 이하	0.9%	48.9%	21.5%	14.9%	8.6%	5.3%	3.08
고졸	0.2%	32.1%	30.5%	20.5%	10.1%	6.6%	2.99
대졸 이상	0.1%	9.9%	24.1%	29.3%	19.1%	17.5%	2.46

&lt;표 4-6&gt; 소득수준별 정보접근 역량: 2019-2024년

2019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6.5%	11.0%	37.2%	29.0%	13.2%	3.1%	2.41
300만원 미만	24.4%	26.0%	29.5%	13.7%	4.9%	1.4%	1.53
300-500만원 미만	0.9%	7.5%	43.1%	31.6%	13.8%	3.1%	2.59
500만원 이상	0.4%	4.1%	33.9%	37.9%	19.3%	4.5%	2.85

2020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5.6%	12.2%	41.8%	26.4%	11.2%	2.7%	2.34
300만원 미만	21.4%	30.2%	30.7%	12.7%	4.0%	1.0%	1.50
300-500만원 미만	2.9%	9.7%	46.2%	26.9%	12.3%	2.0%	2.42
500만원 이상	1.9%	7.3%	40.7%	32.3%	13.1%	4.6%	2.61

2021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5.9%	15.9%	29.5%	23.7%	15.9%	9.1%	2.55
300만원 미만	20.0%	36.3%	25.7%	12.7%	3.6%	1.7%	1.49
300-500만원 미만	2.0%	13.5%	35.0%	27.2%	14.7%	7.6%	2.62
500-700만원 미만	2.0%	7.7%	27.3%	26.4%	23.7%	12.9%	3.01
700만원 이상	1.1%	4.5%	24.4%	26.9%	23.8%	19.3%	3.26

2022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5.8%	15.4%	29.8%	21.9%	15.7%	11.4%	2.60
300만원 미만	20.5%	26.3%	35.8%	11.1%	4.8%	1.5%	1.58
300-500만원 미만	3.3%	17.1%	35.0%	21.5%	13.7%	9.4%	2.53
500-700만원 미만	.9%	10.5%	25.4%	28.0%	20.1%	15.1%	3.01
700만원 이상	.7%	6.0%	18.4%	24.9%	27.4%	22.6%	3.40

2023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3.4%	24.5%	25.9%	20.9%	14.0%	11.2%	2.51
300만원 미만	13.2%	46.5%	23.7%	8.4%	5.2%	3.0%	1.55
300-500만원 미만	1.2%	25.5%	29.6%	21.7%	12.0%	10.0%	2.48
500-700만원 미만	0.4%	14.5%	25.1%	27.8%	18.9%	13.3%	2.90
700만원 이상	.1%	8.0%	21.2%	22.6%	23.0%	25.0%	3.36

2024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보유 개수
전체	0.3%	26.9%	26.1%	22.8%	13.3%	10.6%	2.54
300만원 미만	1.1%	65.2%	21.0%	7.3%	4.3%	1.2%	1.52
300-500만원 미만	0.2%	27.6%	30.4%	24.0%	10.9%	7.0%	2.39
500-700만원 미만	0.1%	13.7%	26.9%	26.7%	18.3%	14.2%	2.92
700만원 이상	0.0%	8.1%	20.9%	30.3%	18.4%	22.4%	3.26

## 2) 정보기기 사용 역량의 차이: 디지털 기기 사용 친숙성 및 사용 skill 수준

두 번째로 2)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 측면의 격차와 불평등의 현황이다. 이 측면의 격차와 불평등 현황을 측정하는 것은 아래의 7가지 항목을 PC(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통해 얼마나 능숙한지와 모바일 기기 통해 얼마나 능숙한지를 물어서 총 14개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한다. 응답항목은 4점 척도 기준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이다. 본 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평균이 3점 이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 1) 나는 필요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설치/삭제/업데이트 할 수 있다.
- 2) 나는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스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 3) 나는 웹 브라우저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 4) 나는 다양한 외장기기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
- 5) 나는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 6) 나는 악성코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를 검사/치료할 수 있다.
- 7) 나는 문서(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정보기기 사용역량에서의 편차 혹은 불평등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연령대 별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lt;표 4-7&gt; 연령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2019-2024년

2019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10-20대	65.8%	74.8%	69.3%
30-40대	59.2%	70.8%	63.1%
50대	25.0%	43.4%	28.1%
60대 이상	6.9%	12.9%	6.1%
전체	43.0%	53.8%	45.6%

2020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10-20대	68.5%	79.1%	73.1%
30-40대	61.5%	75.3%	66.9%
50대	27.4%	46.9%	33.1%
60대 이상	5.3%	12.6%	6.2%
전체	43.7%	56.1%	47.9%

2021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10-20대	71.7%	81.9%	76.5%
30-40대	60.9%	72.8%	67.2%
50대	27.8%	46.7%	32.3%
60대 이상	8.8%	19.3%	9.4%
전체	44.7%	57.0%	48.8%

2022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10-20대	73.6%	83.7%	78.4%
30-40대	54.4%	67.1%	60.1%
50대	27.3%	48.2%	31.8%
60대 이상	10.3%	22.1%	11.0%
전체	42.9%	56.1%	46.8%

2023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10-20대	73.5%	81.4%	77.2%
30-40대	68.4%	76.9%	71.4%
50대	31.1%	52.3%	36.3%
60대 이상	8.1%	22.6%	9.7%
전체	46.4%	58.6%	49.6%

2024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10-20대	67.7%	77.5%	71.8%
30-40대	65.1%	74.2%	67.8%
50대	30.0%	49.1%	32.2%
60대 이상	7.6%	15.8%	7.6%
전체	43.2%	54.0%	45.4%

위 결과를 요약하여 2019-2024년까지의 연령대별 정보기기 스킬역량 변화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8> 연령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추이: 2019-2024년

연령대	PC 작동 능력	모바일 기기	작동 능력 종합	총평
10~20대	항상 높음	최고 수준	전구간 상위 유지	디지털 최상층
30~40대	높은 수준, 정체	높은 수준, 상승	상위 수준 유지	안정적 활용층
50대	중간수준 정체	보완적 향상	완만한 개선	보완 필요 실용층
60대 이상	취약, 상승 시도	기초 역량 향상	정체, 낮은 수준 지속	디지털 소외 우려

위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10~20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스킬 측면에서 항상 높은 디지털 작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복수 기기 간의 멀티태스킹 능력도 우수하다. 모든 항목에서 항상 상위 수준 유지 또는 지속 향상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 작동 능력은 매우 뛰어난 스킬역량을 보유하면서 디지털 학습/소통 환경에 완전히 적응된 세대로 자리매김 했다.

30~40대는 디지털 익숙 세대로 평균 능력은 높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 및 자녀 학습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특히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높은 역량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 활용과 자녀 교육 역할로 디지털 적응력이 특히 높아진 세대이다. 다만 향후 기기 전환/보안/생산성 영역에서 추가 역량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50대는 공공 교육, 디지털 배움터 등 영향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스킬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자기 주도적 작동 능력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PC 작동 역량은 정체, 모바일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종합 역량은 중간 이하 수준으로 활용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들 세대는 실용 중심의 반복 교육과 디지털 습관화가 필요해 보인다.

60대 이상은 디지털 기기 사용스킬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이 단일 기기 중심의 기초 활용 능력에 머물고 있다. 다만 코로나 이후 공공교육·비대면 일상 확산

에 따라 기초 작동 능력은 조금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타 연령대 대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가장 낮은 디지털 작동 능력의 연령대로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기초 역량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디지털 배움터, 맞춤형 실습 교육 등 집중 개입이 필요한 세대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보기기 작동 능력의 격차가 뚜렷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작동 역량에서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은 작동 능력에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강화가 핵심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교육수준별로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자.

&lt;표 4-9&gt; 교육수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2019-2024년

2019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중졸 이하	25.8%	34.8%	27.7%
고졸	34.6%	49.3%	37.4%
대졸 이상	68.4%	75.6%	71.0%
전체	43.0%	53.8%	45.5%

2020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중졸 이하	36.6%	46.7%	40.4%
고졸	31.4%	46.0%	36.0%
대졸 이상	63.9%	74.5%	67.8%
전체	43.7%	56.1%	47.9%

2021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중졸 이하	22.8%	32.4%	24.8%
고졸	33.1%	49.9%	37.7%
대졸 이상	70.3%	79.5%	74.9%
전체	44.7%	57.0%	48.7%

2022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중졸 이하	24.6%	37.3%	28.5%
고졸	31.8%	49.9%	36.4%
대졸 이상	65.0%	73.2%	68.0%
전체	42.9%	56.1%	46.8%

2023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중졸 이하	26.4%	35.0%	27.3%
고졸	35.6%	50.8%	38.1%
대졸 이상	69.5%	81.0%	74.9%
전체	46.4%	58.6%	49.6%

2024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중졸 이하	22.9%	30.9%	25.1%
고졸	28.5%	44.2%	30.9%
대졸 이상	69.0%	76.5%	71.0%
전체	43.2%	54.0%	45.4%

위 결과를 요약하여 2019-2024년까지의 교육수준별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의 변화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lt;표 4-10&gt; 교육수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추이: 2019-2024년

교육수준	PC 사용 스킬	모바일 스킬	사용스킬 역량 종합	총평
중졸 이하	불안정	변동 지속	정체·하락 반복	취약 지속
고졸	정체	완만한 상승	중간 수준의 유지	중간 정체
대졸 이상	항상 높음	지속 상승	상위 유지 및 상승	안정 상위

중졸 이하는 2020년에 일시적 상승이 있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보기기 작동 역량의 기초수준조차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으로 디지털 포용정책의 가장 핵심 타깃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고졸 집단은 모바일 작동 능력만 소폭 향상되었을 뿐 전반적인 역량은 최근 6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중간 허리층이지만 역량 향상이 둔화되어 있으므로 실용 기반 교육 필요해 보인다. 대졸 이상은 PC·모바일·종합 모두 높은 수준의 사용스킬 역량을 갖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작동 능력은 꾸준히 상승 중에 있다. 자기주도적 역량 학습과 디지털 친화도 우수한 계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수준 간 격차를 분석해 보면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스킬의 전반적 역량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의 차이는 2019년 +43.3%p에서 2023년: +45.9%p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모바일 작동 능력만 보면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격차는 무려 45.6%p이며 PC 능력 격차도 46.1%p로 매우 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보기기 '보유'와 '작동 능력' 간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고학력자 중심으로 다기기 활용 능력은 강화된 반면 저학력자는 기초 작동 능력조차 불안정한 상태이다. 기기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작동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실천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중졸 이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근과 반복적 학습 체계가 필요하며 공공서비스 접근, 온라인 행정, 금융 등 실제 작동 활용 사례 중심의 실용 교육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소득수준별로 정보기기 작동능력의 변화를 살펴보자.

&lt;표 4-11&gt; 소득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2019-2024년

2019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300만 원 미만	23.8	30.6	24.5
300~500만 원	45.5	57.9	48.3
500~700만 원	55.3	66.8	59.1
전체	43.0%	53.8%	45.6%

2020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300만 원 미만	20.3	28.4	22.1
300~500만 원	45.5	59.7	50.4
500~700만 원	52.5	64.2	56.8
전체	43.7%	56.1%	47.9%

2021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300만 원 미만	17.5	26.4	18.5
300~500만 원	45.2	60	50.4
500~700만 원	56.5	69.4	56.5
700만 원 이상	67.1	75.8	71.4
전체	44.7%	57.0%	48.7%

2022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300만 원 미만	17.9	28.3	22.8
300~500만 원	39.7	55.2	46.0
500~700만 원	53	65.6	61.2
700만 원 이상	66	78	71.4
전체	42.9%	56.1%	46.8%

2023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300만 원 미만	20.5	29	22.1
300~500만 원	45.1	60.3	48.7
500~700만 원	58.1	69.7	61.6
700만 원 이상	66.6	79	70.7
전체	46.4%	58.6%	49.6%

2024년	PC 사용스킬	모바일 사용스킬	사용스킬 종합
300만 원 미만	15.1%	20.7%	15.6%
300~500만 원	40.0%	52.9%	42.6%
500~700만 원	53.7%	65.1%	56.3%
700만 원 이상	61.7%	72.5%	64.4%
전체	43.3%	54.0%	45.5%

위 결과를 요약하여 2019-2024년까지의 소득수준별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의 변화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lt;표 4-12&gt; 교육수준별 디지털 기기 사용 스킬 역량 추이: 2019-2024년

소득수준	PC 작동 능력	모바일 기기 작동 능력	총평
300만원 미만	지속적인 낮은 수준	30% 미만 정체	디지털 취약 지속
300~500만원	정체 혹은 소폭 개선	소폭 향상	역량 보완 필요
500~700만원	꾸준한 향상	유지 및 개선	안정적 활용층 진입
700만원 이상	항상 높은 수준 유지	최고 수준 유지	디지털 최상위층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기기 작동 능력은 분명히 우수하다. 상위 소득층일수록 PC·모바일·종합 역량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월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의 상층은 종합 능력 70% 이상으로 안정적 유지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300만원 미만)은 6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특히 모바일 기기 작동 능력이 전체 평균에 비해 30% 이상 낮으며 디지털 기본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보 접근/활용 전반의 제약이 클 수 밖에 없다. 중간층(300~500만원)은 모바일 역량만 소폭 개선되었을 뿐, 활용의 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소득이 디지털 역량 격차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명확하다. 하위 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단순 보급이 아닌 ‘기초 작동 역량 훈련’, 생활 밀착형 교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중간계층은 역량이 정체되고 있어, 개인화된 지속 학습 프로그램 및 실무 활용 기반 교육이 필요하다. 고소득층은 디지털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있어 디지털 시민성 및 안전·책임 교육 병행이 필요하다.

### 3) 정보활용 역량

다음은 정보활용 측면에서의 역량 차이와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 측면의 격차와 불평등 현황을 측정하는 것은 아래의 4가지 영역별로 4가지 항목에 대해 PC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이다. 응답항목은 4점 척도 기준으로 1점 전혀 이용 안한다, 2점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

3점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4점 자주 이용한다 이다. 본 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평균이 3점 이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검색 및 컨텐츠	1) 정보 및 뉴스 검색 2) 이메일 3) 미디어콘텐츠 4) 교육콘텐츠
생활서비스	1) 생활정보서비스 ※ 날씨, 뉴스, 버스 및 지하철 도착정보, 정류장 및 역 정보, 길찾기 등 2) 전자상거래서비스 ※ 네이버쇼핑, 쿠팡, 배달의민족, 옥션 등 쇼핑, 예약·예매 3) 금융거래서비스 ※ 인터넷뱅킹, 계좌 확인·이체·송금, 증권거래 등 4) 공공서비스 ※ 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세금/공과금 조회 및 납부 등 ※ 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사회 참여	1)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다 (댓글 작성, 게시판 글 게시, 토론 등) 2)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등을 한 적이 있다 3) 나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금전/자원)나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4)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여론조사, 서명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경제활동	1) 나는 인터넷을 통해 취업이나 이직(승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2) 나는 인터넷을 통해 창업이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활동(홍보, 광고, 판촉, 프로모션 등)을 한 적이 있다 3) 나는 인터넷을 통해 소득증대(유지)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검색/습득, 재테크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부동산금융상품, 교육/학습, 커뮤니티(모임) 참여, 인맥형성/관리, 다양한 재테크 활동 등 포함 4) 나는 인터넷을 통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공동구매, 해외직접구매, 가격비교 등)을 한 적이 있다

우선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의 흐름을 2019-2024년에 걸쳐 살펴보자.

&lt;표 4-13&gt;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2019-2024년

2019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10-20대	29.2%	16.0%	4.5%	8.5%	14.5%
30-40대	21.8%	24.1%	3.9%	9.0%	14.7%
50대	8.3%	9.5%	2.2%	3.3%	5.8%
60대 이상	3.8%	5.1%	2.9%	3.0%	3.7%
전체	18.5%	15.8%	3.6%	6.8%	11.2%

2020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10-20대	36.1%	23.2%	7.3%	9.0%	18.9%
30-40대	22.5%	29.5%	8.2%	12.2%	18.1%
50대	7.0%	15.9%	2.4%	3.8%	7.3%
60대 이상	2.8%	2.2%	0.0%	0.0%	1.2%
전체	20.0%	20.2%	5.4%	7.5%	13.3%

2021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10-20대	30.5%	26.5%	3.6%	6.1%	16.7%
30-40대	28.1%	37.6%	11.5%	16.9%	23.5%
50대	12.9%	18.2%	12.3%	13.3%	14.2%
60대 이상	4.4%	5.7%	5.6%	5.5%	5.3%
전체	21.1%	24.3%	8.2%	10.8%	16.1%

2022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10-20대	28.1%	21.3%	5.4%	9.6%	16.1%
30-40대	17.6%	22.2%	5.0%	9.3%	13.6%
50대	7.2%	10.7%	4.9%	6.4%	7.3%
60대 이상	4.7%	6.1%	7.4%	8.1%	6.6%
전체	15.7%	16.2%	5.6%	8.6%	11.6%

2023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10-20대	28.4%	21.6%	7.8%	10.5%	17.0%
30-40대	18.9%	23.5%	7.0%	10.3%	15.0%
50대	9.8%	12.2%	5.0%	6.8%	8.5%
60대 이상	3.0%	4.0%	1.4%	1.9%	2.6%
전체	16.0%	16.3%	5.5%	7.7%	11.4%

2024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10-20대	25.6%	21.5%	8.1%	12.2%	16.9%
30-40대	17.9%	29.3%	7.4%	11.7%	16.6%
50대	8.1%	16.2%	5.3%	5.7%	8.8%
60대 이상	2.0%	5.3%	1.6%	2.0%	2.7%
전체	14.2%	19.0%	5.8%	8.3%	11.8%

위의 결과들을 요약표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4>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추이

연령대	정보활용 역량 수준	변화 흐름	시사점 요약
10~20대	높음	안정적 유지	디지털 활용이 일상화된 세대
30~40대	중간~상위	코로나 이후 완화	업무·생활서비스 활용 역량 우수
50대	중간	급등 후 하락	적응력은 있으나 지속 활용은 미흡
60대 이상	낮음	상승 후 다시 후퇴	디지털 소외 지속, 반복훈련 필요

연령대별 변화 흐름을 요약하면 우선 10-20대는 항상 가장 높은 활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검색과 생활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해서 디지털 생활화가 완전히 정착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30-40대는 재택근무, 온라인 생활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면서 정보활용 역량이 유동적이며 생활·업무 연계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50대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은 가능하나, 지속적 활용 역량은 불안정한 상태이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유동적 세대라고 볼만하다. 60대 이상은 기초 활용 역량은 확보되었으나 일상화는 미흡하므로 이를 고령층 대상의 지속적 반복 교육 및 실용 중심의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회성 교육보다 일상형 활용 루틴화 필요, 둘째, 청장년층은 기능 고도화(예: 정보 검색 전략 등), 고령층은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 중심의 재교육 강화에 좀 더 초점, 셋째 모바일 생활서비스에 대한 사용장벽 낮추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살펴보자. 아래 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네가지 주요 영역 -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 에서의 이용빈도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 + 매우 자주 이용에 응답한 비율이다.

&lt;표 4-15&gt;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2019-2024년

2019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중졸 이하	13.2%	3.8%	2.9%	2.7%	5.6%
고졸	12.3%	11.7%	2.5%	5.0%	7.9%
대졸 이상	29.8%	28.6%	5.4%	11.7%	18.9%
전체	18.5%	15.8%	3.6%	6.8%	11.2%
2020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중졸 이하	13.2%	3.8%	2.9%	2.7%	5.6%
고졸	12.3%	11.7%	2.5%	5.0%	7.9%
대졸 이상	29.8%	28.6%	5.4%	11.7%	18.9%
전체	18.5%	15.8%	3.6%	6.8%	11.2%
2021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중졸 이하	13.2%	3.8%	2.9%	2.7%	5.6%
고졸	12.3%	11.7%	2.5%	5.0%	7.9%
대졸 이상	29.8%	28.6%	5.4%	11.7%	18.9%
전체	18.5%	15.8%	3.6%	6.8%	11.2%
2022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중졸 이하	13.2%	3.8%	2.9%	2.7%	5.6%
고졸	12.3%	11.7%	2.5%	5.0%	7.9%
대졸 이상	29.8%	28.6%	5.4%	11.7%	18.9%
전체	18.5%	15.8%	3.6%	6.8%	11.2%
2023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중졸 이하	13.2%	3.8%	2.9%	2.7%	5.6%
고졸	12.3%	11.7%	2.5%	5.0%	7.9%
대졸 이상	29.8%	28.6%	5.4%	11.7%	18.9%
전체	18.5%	15.8%	3.6%	6.8%	11.2%
2024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중졸 이하	9.7%	5.0%	2.4%	2.9%	5.0%
고졸	8.6%	12.0%	3.7%	5.5%	7.5%
대졸 이상	21.6%	31.9%	9.4%	13.5%	19.1%
전체	14.2%	19.0%	5.8%	8.3%	11.8%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의 변화 흐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6>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추이

교육수준	정보활용 역량 수준	변화 흐름	시사점
중졸 이하	낮음	불안정한 출렁임	구조적 디지털 활용 제한, 생활밀착형 지원 필요
고졸	중간 수준	상승 후 정체	활용은 가능하나 고도화 필요, 실용역량 강화 필요
대졸 이상	높음	정점 후 안정적 유지	디지털 정보 활용의 중심 집단, 시민역량 교육 병행 필요

교육수준별 변화 흐름을 요약하면 우선 중졸 이하 집단은 디지털 활용 기반이 매우 낮고, 외부 환경에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생활서비스·경제활동 관련 역량이 일관되게 낮다. 즉 낮은 교육수준은 디지털 정보활용에 있어서 특히 자기이익과 편의를 확장시키는 능력의 발휘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고졸 집단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은 했으나 지속성이 부족하며 PC·모바일 기능적 활용 역시 정체되어 있다. 대졸 이상은 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정보활용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에서 안정적 상위 집단으로서 콘텐츠 검색과 생활서비스 이용 역량이 매우 뛰어난 특징을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기 보유 및 사용은 확산되었지만, 실질적 활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살펴보자. 아래 표는 동일한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이 소득수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 결과표이다.

&lt;표 4-17&gt;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2019-2024년

2019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300만원 미만	15.0%	12.9%	4.3%	6.5%	9.7%
3-500만원 미만	17.9%	14.7%	3.0%	6.3%	10.5%
5-700만원 미만	21.7%	19.4%	4.1%	7.7%	13.2%
700만원 이상	-	-	-	-	-
전체	18.5%	15.8%	3.6%	6.8%	11.2%

2020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300만원 미만	12.3%	10.6%	3.8%	4.2%	7.7%
3-500만원 미만	19.2%	18.6%	4.3%	6.6%	12.2%
5-700만원 미만	24.0%	26.2%	7.5%	10.0%	16.9%
700만원 이상	-	-	-	-	-
전체	20.0%	20.2%	5.4%	7.5%	13.3%

2021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300만원 미만	8.9%	9.7%	3.7%	5.5%	6.9%
3-500만원 미만	18.6%	23.5%	8.5%	10.2%	15.2%
5-700만원 미만	26.3%	30.2%	10.1%	13.0%	19.9%
700만원 이상	35.7%	34.5%	9.2%	15.8%	23.8%
전체	21.1%	24.3%	8.2%	10.8%	16.1%

2022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300만원 미만	10.0%	9.9%	7.8%	8.9%	9.1%
3-500만원 미만	11.8%	12.7%	4.0%	5.8%	8.6%
5-700만원 미만	18.0%	19.7%	6.1%	9.8%	13.4%
700만원 이상	26.5%	24.1%	5.8%	12.2%	17.2%
전체	15.7%	16.2%	5.6%	8.6%	11.5%

2023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300만원 미만	6.3%	8.0%	2.2%	2.6%	4.8%
3-500만원 미만	14.4%	14.6%	6.1%	7.8%	10.7%
5-700만원 미만	19.8%	20.1%	7.0%	9.3%	14.0%
700만원 이상	24.4%	23.3%	4.8%	10.5%	15.8%
전체	16.0%	16.3%	5.6%	7.7%	11.4%

2024년	컨텐츠 검색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경제활동	평균
300만원 미만	4.6%	5.1%	1.8%	2.7%	3.6%
3-500만원 미만	12.8%	15.6%	4.4%	5.0%	9.5%
5-700만원 미만	16.2%	23.0%	6.7%	9.5%	13.9%
700만원 이상	21.6%	30.8%	10.7%	18.6%	20.4%
전체	14.1%	19.0%	5.8%	8.4%	11.8%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의 변화 흐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8>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추이

소득수준	정보활용 역량	변화 흐름	시사점
300만원 미만	낮음	불안정·하락세	디지털 활용 기반 미비, 반복훈련 및 실생활 연계 필요
300~500만원	중간	상승 후 정체	콘텐츠 중심 활용, 사회적 활용 낮음
500~700만원	중상위	상승 후 안정화	균형 잡힌 활용 역량, 중핵 사용자층
700만원 이상	최상위	소폭 감소	다기능 활용 고도화, 디지털 윤리·책임 교육도 필요

소득수준별 변화 흐름을 요약하면 우선 300만원 미만 집단은 가장 낮은 정보활용 역량 수준을 보이며 활용 역량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집단이다.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정보활용 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300~500만원 집단은 비교적 완만한 상승 후 정체 상황에 있는데 콘텐츠 검색과 생활서비스 활용이 중심이나, 사회참여/경제영역의 활동역량은 적극적이지 않다. 500~700만원 집단은 활용역량 측면에서 최근 6년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활용 영역이 균형잡혀 있으며, 경제활동 참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700만원 이상 집단은 여전히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활용역량과 활동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콘텐츠 검색 + 생활서비스 이용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주목할 지점으로서 지난 1년 ('23년 -> '24년) 사이에 소득수준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 중요하다. 추후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AI 혁명 등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 관련 여건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4)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의 차이: 정보의 질 측면에서 올바른 정보 스크리닝과 조정 역량 디지털 정보불평등의 네 번째 기준으로서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 측면의 격차와

불평등의 현황이다. 이 측면의 격차와 불평등 현황을 측정하는 것은 아래의 5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이다. 본 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평균이 4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 1) 여러 자료를 비교하는 등 검색 결과에서 믿을만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 2)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된 참고자료나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
  - 3) 유해한 정보(음란물, 범죄나 폭력적 내용 등)를 거르는 데 필요한 스마트폰의 설정변경 기능(필터링)을 사용할 줄 안다.
  - 4) 나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글이 온라인에 있을 때 임시조치 하는 방법을 안다.  
(이 항목은 2024년도 조사에서는 비포함)
  - 5)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 내 권리(명예훼손, 저작권침해 등)를 침해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안다
- \* 2021-23년도는 5점 척도 기준, 2024년도는 4점 척도 기준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24년도 조사에 (3점 보통의 선택항목이 없으므로) 긍정평가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됨.

<표 4-19>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 추이

연령대	2021	2022	2023	2024
전체	22.4%	20.5%	22.6%	38.1%
10+20대	35.4%	36.2%	38.2%	58.0%
30+40대	34.0%	29.6%	31.0%	58.2%
50대	15.1%	9.8%	12.5%	27.3%
60대 이상	2.8%	2.2%	3.2%	6.8%

&lt;표 4-20&gt; 교육수준별 디지털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 추이

교육수준	2021	2022	2023	2024
전체	22.4%	20.5%	22.6%	38.1%
중졸 이하	11.3%	10.0%	9.5%	19.1%
고졸	16.2%	14.2%	16.4%	27.4%
대졸 이상	35.4%	33.2%	37.1%	59.4%

&lt;표 4-21&gt; 소득수준별 디지털 정보조정 및 관리 역량 추이

소득수준	2021	2022	2023	2024
전체	22.4%	20.5%	22.6%	38.1%
300만원 미만	9.0%	5.7%	7.5%	13.2%
300-500만원 미만	20.6%	17.4%	21.5%	36.4%
500-700만원 미만	28.5%	26.5%	30.5%	46.7%
700만원 이상	35.9%	37.6%	35.4%	53.6%

우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20대 > 30-40대 > 50대 > 60대 이상 구조적 격차가 명확하다. 60대 이상은 디지털 정보의 관리와 조정 역량에서 긍정적 응답률이 최근 3년간 3% 미만으로 매우 낮아 디지털 주체로서의 역량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10-20대는 여전히 높은 긍정 응답률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역량의 숙련층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의 현황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량이 높은 구조적 상관관계가 뚜렷이 관측된다. 대졸 이상에서의 긍정응답률은 2023년까지는 30% 이상, 2024년도에서는 60%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체 평균을 견인하면서 디지털 조정역량 상위 집단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중졸 이하에서는 긍정응답률이 2023년까지는 10% 내외, 2024년도에도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고학력 집단과의 역량 격차가 뚜렷하다. 이들은 정보 관리와 조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 관리와 조정에 대한 역량이 높다는 것도 확인된다. 소득수준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3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은 정보관

리 역량이 매우 미흡한 반면 700만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긍정응답률이 2023년까지는 35-38% 수준, 2024년도에는 50%를 상회하는 안정적이고 높은 정보관리 조정 역량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지난 몇 년간에 걸친 변화에 비해 ‘24년도에 들어와서 관측되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 2. 연령대와 가구소득, 연령대와 교육수준의 결합을 통한 복합적 이해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단일 요인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실질적 작동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예컨대 연령에 따라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고 그 전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 능력과 정보 활용의 양상은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동일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복잡한 충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세대 간 경제력과 교육 기회의 차이가 극심한 구조에서는 단일한 요인만으로 분석된 결과는 오히려 중요한 맥락을 가릴 수 있으며, 연령과 소득, 연령과 교육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을 교차하여 응답자 집단을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고 적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이는 불평등의 단순 현상 나열을 넘어서, 불평등의 발생 경로와 누적 구조, 정책 개입 지점의 실질적 식별로 이어질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다음 파트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교차적으로 고려한 집단 구성을 통해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복합적 작동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 표는 연령대와 가구소득을 엮어 디지털 불평등 현황을 ‘정보 접근’, ‘기기스킬’, ‘경제활동’, ‘정보관리’ 네 가지 지표로 나누어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세대와 경제수준 기준의 계층구조가 결합된 디지털 격차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결과인 것이다.

&lt;표 4-22&gt; 연령대와 가구소득에 따른 디지털 역량 비교 (2024년 기준)

구분	정보접근	기기스킬	경제활동	정보관리
전체	2.80	45.4%	8.4%	38.2%
10-20대 하층	3.06	75.8%	12.1%	61.8%
10-20대 중하층	3.10	69.4%	7.0%	57.7%
10-20대 중상층	3.35	69.5%	11.3%	56.9%
10-20대 상층	3.62	77.3%	21.4%	60.1%
30-40대 하층	2.65	69.9%	9.7%	59.3%
30-40대 중하층	3.03	64.4%	7.6%	56.6%
30-40대 중상층	3.28	68.1%	12.2%	56.8%
30-40대 상층	3.60	74.3%	19.9%	65.2%
50대 하층	1.82	13.0%	0.0%	11.0%
50대 중하층	2.46	26.7%	2.1%	21.3%
50대 중상층	3.01	35.5%	6.2%	29.9%
50대 상층	3.29	44.7%	14.9%	41.2%
60대 이상 하층	1.47	3.2%	0.6%	2.9%
60대 이상 중하층	2.17	9.2%	2.4%	8.3%
60대 이상 중상층	2.74	15.3%	2.8%	14.3%
60대 이상 상층	2.92	21.4%	8.0%	17.5%

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젊은 층인 10-20대에서는 상·하위 소득 간 격차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매우 높지는 않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기초역량이 강하여 가구차원의 소득수준이 갖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반에 익숙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디지털 능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현실을 보여준다.

30-40대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디지털 역량의 핵심 분기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하층과 상층 간에 기기스킬과 정보관리 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디지털 활용이 일상생활·노동시장·금융 참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소득수준이 디지털 역량 격차를 구조화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볼 수 있다.

50대는 소득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연령대이다. 노동시장 후반부에서 디지털 접근 자체가 경제활동과 복지 접근의 제약요인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 문제가 현실화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60대 이상은 디지털 역량과 참여 전반의 구조적 소외가 존재한다.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 역량이 급감하며, 특히 하층은 극심한 디지털 소외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저소득층은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누적 취약계층으로서 복지, 건강, 금융 등 디지털 접근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60대 이상이 되면 가구차원의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10-20대의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은 우수하지만 소득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하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 단계에서의 역량 고도화 및 균형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0-40대는 소득이 역량 차이를 심화시키는 시점으로서 노동시장과 연계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특히 필요한 세대이다. 50대는 디지털 배제가 본격화되고 정보격차가 극심해지는 시기로서 집중적 재교육 및 복지 연계형 디지털 지원이 필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60대 이상은 구조적 소외가 작동하는 세대로서 모든 지표에서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 정책과 더불어 특히 오프라인 서비스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개인 단위가 아닌 그가 속한 가구 전체의) 가구소득을 함께 고려한 것 위 분석이라면 연령과 개인 단위의 지표인 학력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디지털 정보 불평등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lt;표 4-23&gt; 연령대와 교육수준에 따른 디지털 역량 비교 (2024년 기준)

구분	정보접근	기기스킬	경제활동	정보관리
전체	2.8	45.4%	8.4%	38.2%
10-20대 중졸	3.2	57.4%	5.2%	41.9%
10-20대 고졸	3.3	77.6%	13.5%	65.1%
10-20대 대졸	3.5	81.5%	18.3%	69.0%
30-40대 고졸	2.8	48.2%	6.9%	43.9%
30-40대 대졸	3.4	74.8%	13.5%	63.3%
50대 고졸	2.5	20.4%	3.2%	17.7%
50대 대졸	3.2	54.0%	10.1%	45.5%
60대 중졸	1.4	1.6%	0.5%	2.6%
60대 고졸	2.2	7.3%	2.5%	7.8%
60대 대졸	3.0	38.7%	4.7%	23.5%

연령대를 가구차원의 소득수준 및 개인차원의 교육수준에 따라 묶어서 집단을 구분하여 디지털 정보 역량을 비교하면 연령대 x 교육수준이 어떠하느냐가 집단간 편차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기사용스킬 역량에 있어서 교육수준 기준에서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스킬 역량은 단순한 소득보다는 학습 경험, 정보 수용 태도,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더 관련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에서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정보 기반 창업,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경제 참여 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훨씬 활발하게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수준은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내면화된 습관과 능력’ 차원에서 형성하기 때문에 소득보다도 일상적 실천력과 자기주도성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정보 사용을 둘러싼 전반적 역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축적하는 교육수준에 의한 역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기반 위에서 달라지는 디지털 정보 활용도의 차이가 결국은 금융분야의 이해와 접근, 활용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차원의 경

제적 지위, 나아가 전반적인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지위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타당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디지털 역량은 더 이상 단순한 연령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기스킬과 정보 관리 능력은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교육수준의 누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은 단순한 연령 기반보다는 학력 기반 집단별로 세분화된 접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60대 중졸 여성 대상의 ‘기초 디지털 실습 중심 교육’, 50대 고졸 남성 대상의 ‘일상 생활형 디지털 업무 훈련’, 청년 고졸 이하 대상의 ‘디지털 창업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3. 디지털 정보 불평등과 삶의 양태

#### 1) 디지털 정보 불평등과 삶의 전반 만족도

디지털 정보 불평등에 관한 앞서의 논의는 주로 정보 접근(기기 보유), 기기사용 스킬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역량, 정보관리 역량과 같은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격차의 계량화에 집중했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계층이나 연령·교육·소득 집단 간의 정보역량 수준 차이를 밝혀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의 질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 시각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디지털 불평등이 단순한 ‘접근의 차이’를 넘어서 삶의 태도, 가치관, 주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층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의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측면들이 삶의 태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문제를 단순히 디지털 환경의 차원으로 국한시켜 고민하는 것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과 질의 문제로서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나아가 디지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적 방안 모색이 어떻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선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문제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보 불평등의 영역(속성)들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인과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표는 앞에서 논의한 디지털 불평등의 네가지 영역, 즉 정보접근 역량, 기기사용스킬 역량, 정보활용 역량, 정보관리·조정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여기에는 성(sex), 연령(세대),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네가지 중요한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을 통제변수로 함께 포함시켰다.

<표 4-24>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상수)	2.063	.066		31.059	.000
성별	.025	.016	.019	1.543	.123
연령	.002	.001	.045	2.811	.005
학력	-.017	.011	-.022	-1.514	.130
가구 월평균 소득	.027	.005	.083	6.014	.000
정보접근 역량	.022	.008	.044	2.881	.004
기기스킬 역량	.063	.019	.074	3.343	.001
정보활용 역량	.116	.018	.103	6.328	.000
정보관리 역량	.064	.016	.079	3.967	.000
모형 요약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93.197	8	24.150	59.920	.000
잔차	2659.014	6598	.403		.068
총계	2852.211	6606			

디지털 정보 불평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따지는 이 회귀모형은 약

6.8% 정도 수준으로 설명력이 높지는 않으나(참고로 2023년도 보다는 상승), 전체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p < 0.001$ , 즉, 전체 독립변수 세트가 종속변수(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음) 특히 유의한 변수들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우선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으로서 연령과 소득수준(가구소득)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과 교육수준은 그렇지 않았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 차원에서는 정보접근 역량, 기기스킬 열량, 정보활용 역량, 정보관리 역량의 네가지 차원 모두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결과는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명확하고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다. 정보활용 능력과 정보관리 역량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또한 기기보유와 더불어 기기스킬 역량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면서 단순 접근을 넘어서 실제 활용 및 기기 조작 능력의 중요성도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은 단순한 인터넷 접근이나 기기 보급을 넘어서 기기 활용 능력, 정보 탐색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안 및 권리 보호 중심의 정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기스킬 훈련 강화와 정보활용 실습 교육, 디지털 권리 보호 및 통제 능력 향상 교육이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삶의 소(小)영역 만족도와 전반 만족도

2024년 데이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삶의 소영역 만족도 중에서도 ‘내가 하는 일’, 즉 학업이나 업무, 자기 실현 활동에 대한 만족이 삶의 전반적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65$ ).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 여건 만족도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소득과 생계 안정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38$ ). 여전히 물질적 기반이 삶의 안정과 만족에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4-25> 삶의 소(小)영역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91	.061		7.988	.000
성별	.001	.013	.000	.043	.966
연령	.000	.000	.012	1.025	.305
학력	-.005	.008	-.007	-.629	.529
가구 월평균 소득	.009	.004	.028	2.321	.020
1)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	.092	.013	.086	7.013	.000
2) 경제적 여건	.138	.011	.150	12.031	.000
3) 사회활동	.062	.012	.065	5.222	.000
4) 대인관계	.092	.012	.093	7.728	.000
5) 가족관계	.115	.012	.111	9.518	.000
6) 내가 하는 일	.165	.012	.164	13.509	.000
7) 신체 및 정신 건강	.088	.012	.087	7.386	.000
8) 정치 및 정부 활동	.075	.010	.086	7.565	.000
모형 요약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986.489	12	82.207	270.331	.000
잔차	2124.738	6987	.304		.316
총계	3111.227	6999			

더불어 가족관계 만족도( $\beta = .115$ )와 대인관계 만족도( $\beta = .092$ )의 영향력도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관계성과 정서적 지지가 삶의 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 및 정신 건강( $\beta = .088$ ), 여가 및 문화생활( $\beta = .092$ ), 정치 및 정부 활동 ( $\beta = .075$ ), 사회활동( $\beta = .062$ )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이는 개인의 전반적 만족도가 단순한 경제적 조건을 넘어서, 심리적·사회적·시민적 참여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고려할 때,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자아실현 가능한 학업·업무 환경 조성’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가족 및 관계 기반의 정서적 지지 강화’이다. 가족 및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만큼, 정서적 안정성과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경제적 안정 기반 마련과 시민참여 유도’이다. 경제적 여건과 정치·정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전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물리적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정치적 권한과 참여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공익산업금융재단이나 유관 기관은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소영역에서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개입 방안을 설계함으로써 삶 전체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구체적인 디지털 활동 역량과 삶의 전반 만족도

디지털 기기 사용스킬 역량은 앞에서 종합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항목별로 놓고 보면 세가지 속성은 유의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은 ‘모바일기기로 악성코드 검사/치료( $\beta=.061$ )’, ‘모바일기기로 환경 설정( $\beta=.049$ )’, ‘모바일기기로 무선 연결 설정( $\beta=.045$ )’이다. 이를 요약하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기 사용스킬 역량은 모바일기기 기반의 자율적·보안 관련 능력, 특히 악성코드 검사·보안기능 설정 등의 ‘디지털 보호역량’이 삶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서 고려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은 디지털 정보역량 중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는 ‘모바일 보안 및 환경 설정 능력’이므로 디지털 포용 정책은 단순

한 기기 활용 교육보다는 모바일 기반의 자기 통제·보안 역량 강화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삶의 질과 연결된 디지털 주체성 형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4-26> 정보기기 사용스킬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구분	비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상수)	2.167	.067	32.133	.000
성별	.026	.016	.1636	.102
연령	.000	.001	.003	.838
학력	.015	.010	.021	.140
가구 월평균 소득	.037	.004	.117	.508
PC로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039	.017	.061	.2326
PC로 인터넷 연결, 사용	.008	.016	.013	.482
PC로 웹 브라우저 환경 설정	-.003	.016	-.005	-.191
PC에 다양한 외장기기 연결	-.014	.016	-.022	-.831
PC로 파일 전송	.009	.016	.015	.572
PC로 악성코드 검사, 치료	.057	.014	.091	3.986
PC로 문서 작성	-.012	.015	-.019	-.788
모바일기기로 환경설정	.000	.014	.000	.021
모바일기기로 무선 랜 설정	.007	.014	.012	.540
모바일기기로 파일 PC로 이동	.052	.013	.073	3.867
모바일기기로 파일 전송	-.009	.015	-.014	-.639
모바일기기로 앱 설치/삭제/업데이트	.030	.013	.046	2.336
모바일기기로 악성코드 검사, 치료	-.017	.015	-.024	-.127
모바일기기에서 문서 작성	.003	.008	.005	.404

모형 요약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R 제곱
회귀분석	235.826	18	13.101	31.808	.000	.073
잔차	2875.401	6981	.412			
총계	3111.227	6999				

디지털 기기 사용스킬 역량은 앞에서 종합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데, 구체적인 항목별로 놓고 보면 네가지 속성이 유의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은 ‘PC로 악성코드 검사, 치료’, ‘PC로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모바일기기로 파일 PC 이동’, ‘모바일기기로 앱 설치/삭제/업데이트’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디지털 역량 중에서도 보안관리능력, 모바일 기기간 연동 능력, 자율적 앱 설치/삭제 능력 등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숙련도보다는 디지털 자율성·주도성·통제력이 삶의 만족과 연결됨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은 여전히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디지털 능력의 효과 또한 소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은 다시 확인된다.

정책적 모색 방안으로서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데, 단순한 기초 교육보다 보안, 연동, 설정 등 고차원적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모바일 중심 디지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대상 모바일기기 활용 자율성 증진 프로그램 설계가 시급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역량과 삶의 질 간 연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를 통해 디지털이 삶의 ‘도구’를 넘어 삶의 통제력, 주체성, 안전감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7> 정보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구분	비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상수)	2.364	.059	39.881	.000
성별	-.001	.016	-.055	.956
연령	-.001	.001	-.035	.2389
학력	-.002	.011	-.002	.143
가구 월평균 소득	.032	.004	.098	.000
정보활용 역량 - 검색	-.035	.020	-.035	.1716
정보활용 역량 - 생활서비스	.202	.022	.197	.189
정보활용 역량 - 사회참여	.070	.017	.072	.023
정보활용 역량 - 경제활동	-.037	.018	-.041	.021
모형 요약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회귀분석	186.689	8	23.336	57.760
잔차	2665.522	6598	.404	.000
총계	2852.211	6606		.064

정보활용 역량(4가지 차원: 검색 역량, 생활서비스 이용 역량, 사회참여 역량, 경제활동 역량)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모형 전체 설명력은 다소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_{\text{값}}: 57.760$ ,  $R_{\text{제곱}}: 0.064$ ). 사회경제적 배경요소로서 연령과 가구소득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정보활용 역량 변수별 영향을 보면 검색 역량은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생활서비스 역량은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면서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참여 역량의 유의한 긍정적 영향도 관측된다.

정보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생활서비스 활용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서비스, 금융, 의료 등의 디지털 접근이 삶의 질에 핵심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참여 역량 역시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온라인 소통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걸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생활서비스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PC로의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PC로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모바일 기기로의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모바일 기기로의 금융거래서비스, 모바일 기기로의 공공서비스, 모바일 기기로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다.

또한 사회참여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PC로의 인터넷 통한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 표명, PC로의 인터넷 통해 기부/봉사활동 경험, PC로의 인터넷 통해 온라인 투표/여론조사/서명 참여, 모바일 기기로의 인터넷 통해 기부/봉사활동 경험 등이다.

&lt;표 4-28&gt; 정보조정·관리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2024년 기준)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상수)	2.255	.057		39.283	.000
연령	.016	.016	.012	1.052	.293
성별	.000	.001	-.012	-.802	.423
학력	.019	.010	.026	1.913	.056
가구 월평균 소득	.037	.004	.115	8.456	.000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에 대응 가능	.069	.013	.100	5.231	.000
검색 결과에서 믿을만한 정보 구별	.041	.013	.059	3.213	.001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구별	.009	.015	.013	.633	.527
유해한 정보 거르는 기능 사용	.021	.015	.030	1.421	.155
모형 요약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230.146	8	28.768	69.807	.000
잔차	2881.080	6991	.412		.073
총계	3111.227	6999			

정보조정·관리 역량, 이른바 ‘디지털 위생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구체적인 요소로서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에 대응 가능’이 삶의 만족도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검색 결과에서 믿을만한 정보 구별’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디지털 정보조정·관리 능력 중에서도 ‘권리 인식’과 ‘신뢰 정보 판별’ 능력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 활용과 더불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보 판단 및 권리 대응 능력이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 하에 단순 정보 접근보다 비판적 정보 해석 능력 및 디지털 권리 인식 교육이 디지털 복지 향상에 중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 제4절 주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 1.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구 경향과 교차국가 연구 등을 통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우선 미국에서는 도시/농촌 격차, 소득 계층 간 격차, 인종 및 소수민족 격차, 노년층 격차 등이 디지털 격차의 핵심 축으로 자주 지적된다. 특히 저소득층, 유색 인종 커뮤니티, 농촌 거주민, 원주민 등은 고속 인터넷 보급률 및 서비스 가입률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Broadband / Digital Inclusion 프로그램 보고서에는 디지털 포함성 관련 지출 항목(인터넷 보조금, 기기 보급, 교육·기술 지원 등)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접근(access)만의 문제를 넘어서 활용(utilization), 역량skills), 정보판단 능력과 연결되는 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의 관계 관련 연구들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중년층을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과 문해력이 디지털 활용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 내 도시 외곽 지역이나 저소득 지역 대상으로 디지털 인프라 프로그램, 브로드밴드 확장 계획 등이 여러 주(州) 단위로 시행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인터넷 보조금 제공, 공공 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문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 시행하는 것으로 디지털 격차의 원인 구조나 교육·문화 중심의 정책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방/국가 수준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Digital Equity Act (DEA)’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포함된 조항으로, 디지털 형평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주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또한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ACP)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월 인터

넷 요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최대 \$30 또는 부족한 지역은 그 이상 보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 2024년에 일부 자금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된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다음으로 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Program (BEAD) 프로그램은 주별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방 예산 배분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주들이 이와 관련한 보조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음으로 ConnectEd Initiative는 공교육 환경, 학교 중심 인터넷 연결성 강화 정책으로서 학교 인터넷, 기기 보급, 교사 연수 등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Digital Inclusion 및 디지털 내비게이터 (Digital Navigator) 모델은 연방-주-지역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연방정부 차원 외에 주별 차원으로 살펴보면 우선 ‘Colorado Digital Access Plan’을 들 수 있다. 콜로라도에서 Digital Equity Act 계획 하에 주 차원의 디지털 접근/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 수렴, 보조금 투입, 지역 조직과의 협업 등을 포함하는 지원정책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시는 ‘San Francisco Digital Inclusion Strategy’를 수립하여 도시 단위 디지털 포용 전략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무료 무선 인터넷망, 기기 보급, 디지털 문해 교육, 다중언어 콘텐츠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독일 사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디지털 역량이 높은 사람들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낮은 역량군은 낙오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보고는 한국의 경우와도 흡사하다. 특히 건강 관련 디지털 활용 면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집단은 건강 앱, 온라인 예약, 의료정보 접근 등에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독일 역시 지역 격차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 도시

지역이 인터넷 보급 및 활용률이 높고, 농촌·외곽 지역은 뒤처지는 상황은 주요 선진국 대부분과 비슷하다.

흥미롭게 독일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디지털화된 공공서비스 수준이 EU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시민 대상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점수가 EU 평균보다 낮다는 평가이다.

정책 대응 및 제도 측면에서 독일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방 및 주(州) 차원 투자를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AI 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쪽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 원격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건강 분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온라인 건강 서비스 접근성 개선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대상 eHealth 리터러시 조사지표 구축이나 보건 앱 활용 상의 격차 분석을 통해 전 국민적 디지털 역량을 높이려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정책 효과와 더불어 한계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디지털 권리·접근성 강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디지털 활용 역량, 문해력, 정보 판별 능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도시 중심, 교육 중심 정책에서 농촌·비도시, 저학력층 대상 접근성 강화 전략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역시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다르지 않다.

세 번째로 건강-의료 분야의 격차 개선은 특히 문해력 낮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접근 보조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참고할 점을 정리하면,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역량 교육의 병행’, ‘지역별 정책 차별화 모델의 구축’, ‘공공서비스 디지털화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설계’ 등을 들 수 있다.

### 3. 일본 사례

일본은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아 (예: 97.1% 가정 인터넷 보유) 접근성

측면 격차는 이미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격차, 지역 간 격차는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현(縣, prefecture) 단위 디지털 격차 분석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ICT 이용 수준, 지출 패턴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교육 현장에서도 “GIGA School Initiative” 같은 국가 주도 ICT 보급 사업이 있었음에도, 학교 내 ICT 활용 격차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느리다는 비판도 있다. 레거시 시스템 유지 비용이 높고, 행정 절차 일부는 여전히 구형 매체(예: 플로피 디스크 등)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 대응 및 제도 측면에서 일본 정부는 디지털사회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e-Government 확대,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전산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고, 디지털 격차 문제를 다룬 조사와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학교 ICT 인프라 보급 사업과 같은 국가 사업을 통해 전국 학교에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 지역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보강을 위한 정책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접근성 격차는 많이 해소된 반면, 활용 격차, 정보활용 능력 격차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르지 않다. 레거시 시스템 의존도, 관료적 저항,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특히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접근 인프라 중심 -> 활용 역량 중심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제5절 소결

### 1. 요약

본 절에서 분석한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깊이 연결된 복합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보의 접근성, 활용역량, 기기 사용능력, 정보 조정·관리 역량의 네 가지 차원은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사회적 배제와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별 디지털 격차 측면에서 고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능력과 정보 활용역량에서 현저한 열위에 있으며, 이는 이들의 사회참여·정치적 표현·공공서비스 이용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조정 및 관리 능력(예: 개인정보 보호, 정보선별 등)의 격차는 기술 사회에서의 생존 능력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 측면을 고려하면 2024년 데이터의 회귀분석 결과 (2023년도 결과자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4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 디지털 활용 능력의 주요 항목들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보조정 역량(예: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선별 능력), 기기활용 능력(예: 온라인 업무 처리능력) 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로서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배움터 사업, 장노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장기적 제도화 및 지역 기반의 지속적 실천 체계 부재로 인해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간 영역과의 연계 부족, 기초지자체 간 역량 격차, 대상자 특성 반영 부족 등의 한계도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 2. 정책적 고려사항

디지털 불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구조적 불평등과의 연계 인식’이다. 디지털 불평등은 소득, 교육, 직업 등 전통적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상호작용하며 구성된다. 따라서 단편적 기술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병행하는 디지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교육의 구조화’이다.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닌 연령별, 계층별, 수준별 역량 모듈화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 선별, 정보 보호, 정보 활용 능력은 미래사회 필수역량으로 간주하고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디지털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마을 단위 IT 돌보미, 커뮤니티 기반의 디지털 역량 향상 지원 시스템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민관 협력 플랫폼 활성화’이다. 기업, 시민사회,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개발, 디지털 정보 취약층 발굴, 지원체계 연계 등이 가능해야 한다.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가 핵심 과제인 것이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축’이다. 디지털 불평등의 지속적 측정 지표 체계와 지역별 수준 평가체계를 정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사각지대 여부, 계층별 수혜율 등을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단지 정보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삶의 질, 참여의 가능성, 사회통합의 문제를 포괄하는 핵심적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기술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삶 중심적 디지털 포용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제5장

# 건강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특징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제5장 ┌ 건강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 제1절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장은 세대(연령) 및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영역에서의 불평등 현황과 사회적 위험(사회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배경에는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령 인구의 급증은 건강불평등 심화는 물론 거대한 사회적 비용 증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100 세 시대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건강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sup>25)</sup> 이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격차(불평등)이 갈 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영, 2007).

한국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성과물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부산물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다는) 단순화된 수치는 우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절대값’이

25)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 사회)로 2배 증가하는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아 일본보다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의 고령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될 수 없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적 계층을 반영하여 구분한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중 누군가는 평균수명을 높이는데(유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반대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게 된다. 동시에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과 불건강의 양적 수준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질적 양상도 다양할 것임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보다는 활동력이 떨어지고 신체활동이 적어진다. 몸도 쇠약해지고 성인병 등 만성질환에도 걸리게 된다. 건강문제만큼 세대나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할 영역도 흔치 않다. 장숙랑 외(2023)는 정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상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생애주기별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장숙랑 외, 2023). 이외 건강문제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령별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들은 많다. 이를 연구는 건강이슈나 정책과제를 생애주기나 세대별(연령별)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김정란·여효선, 2014; 송미영·임우연·김중임, 2014; 임혜경·안영주, 2017; 장숙랑 외, 2023).

어떻든지 간에 한국인의 건강불평등에 기여하는 원인 혹은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 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어 상이하게 존재할 것이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건강의 차이는 결과로서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경험하는 장(sphere)이자 과정으로서의 차이이기도 하다.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상이한 집단들이 사회에 노출되는 경험이 상이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삶도 상이하고, 그들의 삶의 구조도 상이하다. 동시에 유사한 노동강도와 빈도, 노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많은 소득과 사회적 인정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반대의 대우를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경우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pay-off)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가지며, 그 결과 그들이 겪게 되는 건강수준과 질병의 양상 및 그 수준도 상이하게 결정된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House, 2001), 사회·경제적 영향과 계층간의 건강불평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국제사회나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의료보장제도가 비교적 발전한 산업화 된 서구 국가들에서도 사회계층간의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며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1982년 블랙보고서(Black et al., 1982)나 1998년 애치슨 보고서(Acheson, 1998) 그리고 화이트홀 연구 1, 2(Whitehall study I, II)와 유럽 국가들의 ‘건강불평등 워킹그룹(Inequalities in Health Working Group)’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이 밝혀지면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1년에 수립·공표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20’에는 ‘건강불평등의 해소’가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총괄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 지금껏 학계에서만 주로 논의되었던 주제(건강불평등)가 국가단위에서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건강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연구는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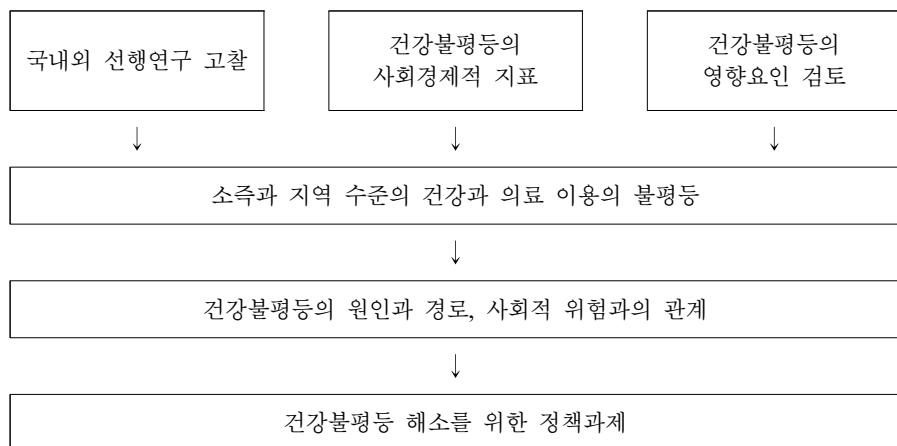
## 2.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구성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망원인통계’ 등 건강불평등과 건강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와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소득수준과 건강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경로,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위험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인 건강과 건강불평등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건강행태(건강위험 행태), 사회적·구조적 요인, 물리적인 환경요인,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등 심리적 원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각 원인들이 가정하고 추론하는 논의들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한국인의 건강불평등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불평등의 대리변수인 소득수준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건강불평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 수준을 동시에 파악하고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1월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의 HP2030 격차 DB를 활용하여 인구학적(소득, 지역 등) 특성에 따른 건강격차와 건강불평등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중독,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 노인, 건강정보이해력제고 등 중점과제별 대표 지표 중 건강격차가 악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림 5-1] 연구의 구성과 내용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서론이다. 건강불평등의 연구가 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고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한다. 동시에 건강불평등은 과정이자 결과로서, 개인이 홀로 감당하고 결정짓는 현상이 아님을 주장한다. 즉 건강불평등은 신체적·유전적 원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며 사회계층별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건강불평등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2절은 이론적 논의이다. 건강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임을 생각하여 건강불평등의 개념 및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점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그리고 건강불평등 측정도구과 지표를 살펴보고,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제3절은 건강격차 분석결과 부분이다. 이 연구는 HP2030 격차 DB를 활용하여 소득과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행태, 건강결과, 의료이용 등 다양한 건강 부문의 격차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절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의 주요 현황과 특징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 1. 건강불평등의 개념

건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히 다른 의식주와 달리 건강의 손상 내지 결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김진구, 2012). 따라서 건강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에 의해 불평등하게 결과되어 서는 안되며, 이러한 불평등의 양상을 해결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정의도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평등과 형평은 공정함과 윤리적 가치판단, 주관적인 평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의미하고, 이와는 달리 ‘같은 것이 다르게, 다른 것이 같게 될 때’ 불평등한 것이므로 차이(difference), 격차(disparity)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등을 배분논의로 치환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차원에서 ‘같게’ 배분된 경우 평등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평등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 결과이다. 반면에 ‘형평’은 인식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불평등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결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도 분배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형평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즉 불평등한 결과가 반드시 비형평한 것은 아니며, 공정(fairness)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이데올로기적 환경의 영향에 더 민감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 글은 평등과 형평의 어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직업, 소득, 교육 등)과 인구·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상대적 박탈감, 건강행태(건강위험행동)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건강불평등’으로 규정하고 때에 따라 ‘건강격차’, ‘건강 비형평’을 혼용하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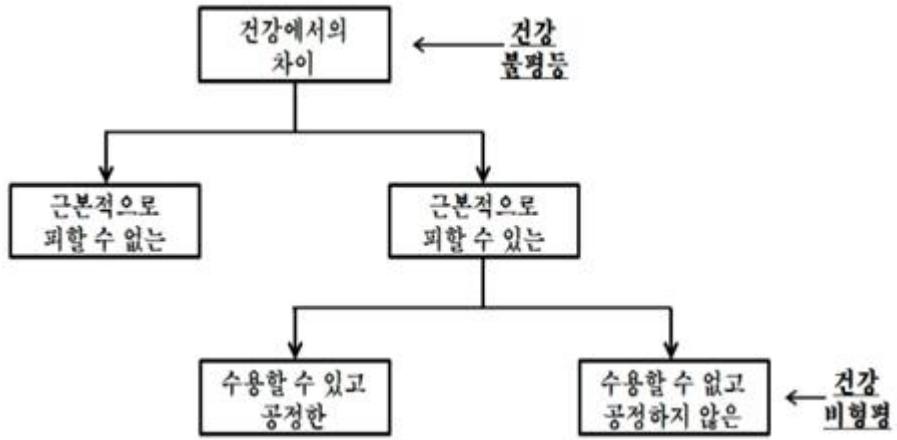
용하고자 한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구집단들 간에 건강상태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순양·윤기찬, 2011). 따라서 건강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서 ‘체계적인 차이, 변이 그리고 격차(systemic differences, variations and disparities)’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로 이해된다(Rainham, 2007). 동시에 가빈 무니(Gavin Mooney)의 주장과 같이, 건강불평등은 의료불평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므로(Mooney, 1994) 의료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하는 것 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건강불평등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의로는 마가렛 화이트헤드(Margaret Whitehead)와 국제건강형평성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의 건강불평등 개념이다. 화이트헤드는 “인구집단들 간의 불필요하면서 (unnecessary) 회피가능하고(avoidable) 공정하지 않은(unfair and unjust) 건강상의 차이”를 건강불평등으로 정의하고 있다(Whitehead, 1992). 국제건강형평성협회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또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인구집단들 사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서 건강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Macinko and Starfield, 2002; 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2007).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김순양(2010)의 논의와 같이 건강불평등은 ‘인구집단 간에 건강상태가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인구집단은 개인들이 속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즉 소득, 직업, 교육, 성별, 인종, 거주지역 등을 통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김순양, 2010)

[그림 5-2] 건강불평등과 건강비형평성의 정의



출처: Peter and Evans(2001), Challenging Inequalities in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 건강불평등의 측정 및 지표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강지표가 존재해야 한다. 건강지표(health indicator)는 사회지표의 하나로써 개인보다는 주로 인구집단(또는 지역과 국가)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건강과 질병은 대체적으로 기대여명(expectation of life at a given age)과 발생빈도(incidence) 그리고 이환수(prevalence) 등을 통해 측정된다. 우선 기대여명은 일반적으로 평균수명(average life expectancy)이라는 용어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표이다. 평균수명은 출생시 기대여명(remaining life expectancy at birth)을 의미하므로, 어느 시점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여命의 기댓값을 나타내므로, 현재의 청장년층, 노년층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될 수 없다. 반면에 기대여명은 0세를 기점으로 하여 표본 10만 명 인구 중 생존자 수 변화를 연령대별로 산출한 생명표(lifetable) 상에서 주어진 연령 이후 구간별 생존자수의 무한대까지 누적합(cumulative sum)을 주어진 연령대 생존자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현재의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도 각각 앞으로 평균 몇 년간 더 살

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그리고 발생빈도는 사망이나 질환이 어떤 특정 기간에 발생한 총 건수를 말하며, 이환수는 어떤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총 건수를 말한다. 발생빈도와 이환수는 보통 총 건수보다는 비율(rate)로 제시되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수준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이환율(morbidity), 사망률(mortality) 및 기능상태(functional status)와 같이 서로 다른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비교하거나, 질환을 진단하거나, 서비스 욕구를 평가하거나, 치료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HP2030의 정책목표별 대표 지표를 활용하여 건강격차를 분석한다. 건강생활 실천(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정신건강 관리(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등을 활용하여 건강격차를 분석한다.

### 3. 건강불평등의 원인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생물학 및 유전적 요인, 생활 상태,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각각의 요인들은 그 자체만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윤태호, 2003). 이 글에서는 ‘블랙보고서’에서 제기되었던 네 가지 논의<sup>26)</sup>와 멜 바틀리(Mel Bartley)와 마이클 마럿(Michael Marmot)의 연구를 중심으로 건강불평등의 원인 논쟁을 다룬다(Bartley, 2004; Marmot, 2004). 각각의 이론들의 주장은 모든 건강상태를 결정짓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6) 블랙보고서에서 논의된 네 가지는 ‘자료의 인위적 구성물’논쟁과 ‘사회적 선택 시각’, ‘문화적·행동적 관점’, ‘구조적 시각’이다. 블랙보고서의 네 가지 논의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많은 학문적인 근간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Carr-Hill, 1987). 이에 이 글에서는 블랙보고서의 4가지 논의와 함께,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이 측면은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건강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Bartley, 2004). 물론 출생아 1,000명당 그리고 어린이 50만 명당 약 40명이 심각한 선천성·유전성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는 보고(윤태호, 2003)는 건강의 유전적 특성을 명확히 하지만, 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건강상태를 유전적으로 태어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 한다. 또한 생물학적·유전적 요인론은 전형적인 생의학적 모형에 근거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김철웅·정백근·윤태호·김수영, 2010).

이에 대해 마멋은 키라는 신체적 특징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키가 ‘큼’과 ‘작음’이라는 결과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집단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Jencks, 1972; Marmot, 2004). 그리고 2차 화이트홀 연구를 통해 유전적 특성이 건강불평등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고 가족 배경의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직업적인 지위는 심장병의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Marmot, 2004). 따라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의 원인을 파악할 때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 2) 물리적 환경요인

블랙보고서는 열악한 삶의 조건, 위험한 노동환경, 오염과 같은 물질적 박탈과 불건강 사이의 연관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공기나 물, 토양과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요인은 건강불평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artley, 2004). 황사나 미세먼지,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질환이나 폐기능 손상은 건강불평등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 동시에 폐수 및 화학물질이나 거름 등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 주목할 요인은 지리적 조건이다. 비교적 현대의 건강불평등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에 관한 지리적 조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요인은 지리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술할 문화적·행동적 이론(건강행동)과는 달리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 3) 자료의 인위적 구성물

사회계층간에 건강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위적인 구성물(artifact)’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본다면 이 관점은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계층과 건강불평등의 관계는 통계적 간접 즉, 데이터의 오류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질병(또는 사망)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고, 축적된 데이터는 사회계층과 건강불평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재생산될 뿐이라는 것이다(Bloor et al., 1987).

이 시각은 최근의 사회계층 간의 건강 격차가 증가하는 이유로 직업분류에서 가장 하층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블랙보고서는 이 시각에 대해 반론을 제시한다. 낮은 사회계층의 크기는 많이 감소하지 않았고, 동시에 건강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계층은 가장 낮은 사회계층인 미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자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Townsend and Davidson, 1992).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사회계층과 건강과의 관계가 데이터의 오류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건강불평등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에 이른다(Bloor et al., 1987).

### 4) 사회적 선택

사회적 선택(social selection)은 역인과설(reverse caus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사회계층의 결과가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사회계층이 사회적으로 선택된 건강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논리이다. 즉, 건강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건강이 나쁜 사람은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불평등을 만드는 사회적 선택의 기여 정도에 따

라 강도가 달라진다. 질병이 있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특정 직업을 얻을 수 없고(Wardworth, 1988), 신체적 특징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선택이론이 논쟁이 된 이후 이 이론의 검증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건강의 수준이 사회적 계층의 (상향 또는 하향)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사회계층별 사망률의 차이가 선택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크고, 장 기간에 걸친 추적연구에서도 선택이론으로는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된다(Blane et al., 1993; Hart et al., 1998; Chandola et al., 2003). 특히 시간의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종단연구(time-seriesstudy)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선택이론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들게 된 반면, 오히려 생애주기를 강조하여 개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연구를 낳기도 하였다.

### 5) 문화적·행동적 관점

문화적·행동적(culture-behavior) 관점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차이가 사회계층별로 상이한 생활습관(건강습관)을 초래하여 그 결과 건강의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건강한 생활습관(금연, 금주, 적절한 신체활동 및 영양공급, 식생활 등)을 갖는 사람들이 건강위험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significant)하게 사망률 및 상병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tely, 2004). 일반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흡연율과 음주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동을 적게 하고, 정크푸드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아 지방질이나 당분을 과다 섭취하여 비만인 경우가 많다고 본다.

결국 문화적·행동적 관점은 개개인의 건강습관이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본다. 이 시각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무지’하다거나 ‘자유의지’가 부족해서 이러한 건강위험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Marmot, 2004). 동시에 건강습관이 사회계층 간에 존재하는 건강불평등 양상

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문화적·행동적 관점은 건강위험행동이 건강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건강 행위와 건강한 행위를 증진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축소시키고,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는 결과를 낳는 한계가 있다.

#### 6) 물질적·구조적 관점

건강불평등의 원인 논쟁에서 소득 등의 물질적 조건(material conditions)을 중요시 하는 입장이 있다. 즉, 경제적 결정론의 입장에서 직업계층 지위에 의해 결정된 삶의 물질적 수준이 건강불평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따라서 빈곤, 소득분포, 실업, 주거환경, 공해 및 직장과 가정의 노동조건과 같은 요인의 영향에 초점을 둔다(Blackburn, 1991; Payne, 1991). 건강은 물질적 요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건강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에 소득 등 물질적 요건이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Bartely, 2004). 특히 절대적 소득수준은 빈곤과 관련된 건강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여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궁핍은 각종 질병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시각은 경제적 박탈(economic deprivation), 빈곤(poverty)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절대소득이 부족할 경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불평등은 점진적으로 감소(diminishing return)하게 되어 기대여명과 사망률의 기울기는 점차 완만하게 된다(Berkman et al., 2000). 즉 절대소득을 중요시 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건강은 그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Wagstaff and van Doorslaer, 2000).

### 4. 선행연구 검토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수준에 대한 적절한 지표를 결정해야 한다.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한, 연령, 성별, 교육, 직업 등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거주 지역의 차이,

기대수명, 사망률과 유병률의 차이, 삶의 질이라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3]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의료 격차, 건강 격차의 상호 관계 모형



출처: 강희정, 의료격차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9. 4)

### 1)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불평등 간의 관계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불평등, 건강 격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 여부와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건강불평등과 격차를 증명하였다(김진구, 2012; 김혜진, 2009; 김민경, 2010). 김혜진(2009)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수준에 격차가 발생함을 밝혔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 질환 유병 여부 모두 빈곤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건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2010) 또한 사회계층을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13개 대분류를 이용하여 사회계층을 7계층으로 재분류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낸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불평등과 격차의 상태에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송미영, 2015). 상대적으로 비숙련직종, 실업자, 한부모, 저소득 가구에 속한 여

성이 많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불안 증상과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며, 여성은 실직, 이혼 등 생애 위기를 접했을 때 대처 기술이 약하고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적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발병률도 높아진다. 송미영(2015)은 충남 지역 여성의 건강 격차 정도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이 건강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상태가 나쁘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건강격차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이상인, 2014). 김동진(2014)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011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고, 음주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건강행태는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인(2014)은 흡연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흡연율에 따른 사회경제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격차는 연령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로 누적적 이득 가설에 의해 설명된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건강과 연관되는 자원이나 위험요인의 누적적 차이를 가져오며, 이러한 자원 혹은 위험요인에서의 증대되는 격차가 건강의 격차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다(Ross & Wu, 1996). 김진영(2007)은 연령집단에 걸쳐 건강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최소한 74세까지는 건강격차가 일관되게 증대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건강격차 증대 양상은 운동 여부, 스트레스, 우울증, 피로 정도와 같은 위험요인들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격차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김진영(2012)에 따르면 정규직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남성의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고, 여성도 만찬가지로 정규직 여성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의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현(2016)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이 중규모 사업체의 건강수준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초과근로 실시,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교대근무 실시가 건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연구대상과 건강에 포함된 개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격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 2) 지역적 요인과 건강불평등과의 관계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지역적 요인과 건강격차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다. 건강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형용·최진무, 2014; 정영호·고숙자, 2006). 의료이용시설, 교통 접근성, 여가 및 체육시설, 경제 수준, 사회적 자본,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등에 의해 건강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많은 선행연구들은 도시·농촌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건강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은우, 2015; 전희정, 2023; 허민희, 2023). 전희정(2023)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지역 평균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사망률 군집이 분포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사망률 군집이 분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간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의료자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중 문제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윤태호, 2011). 의료시설, 의료인력, 병상수 등 의료공급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과 같이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제약될 수 있다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우려가 존재하여 왔다(김진구, 2012). 이유진 외(2015)는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고, 개인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의료시설 접근성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시설 접근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은 도시 거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농촌 거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도시-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많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지역분류를 통해 건강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민희 외(2023)는 지역수준 건강결정요인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250개의 시·군·구 지역을 유형화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취약요소는 재정자립도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1인당 녹지지역 면적, 경제적 수준, 건강생활 실천 정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면에서 건강 관련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최광수(2016)는 지역사회 수준을 대리하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의 일자리, 생활경제 상태와 지역경제 수준, 보건과 재해안전 및 사망위험 환경 등 제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주민 개인들의 이환과 우울 및 주관적 건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처럼 지역의 사회환경요인은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특성인 소득, 교육수준, 생활양식이나 유전적 요인 등이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를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이훈희, 2014; 이상규, 2002). 국민의 건강을 개인적 책임으로만 치부하기보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 5.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의 함의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건강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만큼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전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건강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건강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만으로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부족하다.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단일차원의 인과관계로만 기술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처방도 단편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에 따라 이 글에서는 건강과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유전적 소인(genetic endowment), 임상의료(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건강행태 등을 고려하고 있는 County Health Rankings & Roadmaps Model of Health을 참고하여 건강불평등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4] 건강과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The 2014 County Health Rankings & Roadmaps Model of Health

### 제3절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특징

이 절에서는 2021년 1월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의 전체 400개 성과지표 중 인구학적(소득, 지역 등) 특성에 속하는 해당 중 점과제 및 성과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구분해 놓은 HP2030 격차 DB를 통해 건강 불평등과 격차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HP2030 격차 DB에서는 소득 간 격차(55개 지표), 지역 간 격차(31개), 기타 격차(6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지표 중 건강 격차가 악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건강불평등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건강 격차와 건강 불평등이 악화된 지표는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1> 건강 격차와 불평등 측정과 지표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간 격차	건강생활 실천	금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표준화)</li> </ul>
		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연령표준화)</li> </ul>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기구분율 격차(%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5분위 포화지방산 적정수준 섭취 인구 비율 격차(만3세 이상)(%p)</li> </ul>
		신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5분위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 분율 격차(만75세 이상)(%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li> </ul>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표준화)</li> </ul>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손상 입원율 격차(인구 10만명당)(명)</li> </ul>
	건강상태와 결과	건강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5분위별 건강수명 격차와 추이</li> </ul>
지역 간 격차	정신건강 관리	자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명 당)</li> </ul>
		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p)</li> </ul>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20-74세) 지역 상-하위 20%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명)</li> </ul>
		심뇌혈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정지 생존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p)</li> </ul>
	건강상태와 결과	건강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별 건강수명 격차와 추이</li> </ul>
	의료이용	미충족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초과 저외)에 가고 싶을 때 기지 못한 분율(%)</li> </ul>

#### 1. 소득 간 건강 격차 현황과 특징

### 1) 건강생활 실천

건강생활 실천 분야에서 소득 간 건강 격차가 악화된 지표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표준화)<sup>27)</sup>이다. 현재 흡연율이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한다. [그림 5-5]는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성인여성 현재흡연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성인여성 현재흡연율 격차는 2018년 7.5%p에서 2023년 7.8%p로 증가하였다. 소득 1-5분위 간 성인여성 현재흡연율 격차는 2019년 크게 증가 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5]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격차(연령 표준화)(%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간 음주를 한 사람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그림 5-6]은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성인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성인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는 2018년 1.8%p에서 2023년 3.3%p로 증가하였다.

27) 이하의 비율은 표준화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준화율은 성·연령별 인구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직접표준화한 값이다. 직접표준화는 성·연령별 비율에 각 구간의 표준인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표준인구 가중 평균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준인구로는 2016년 12월에 통계청에서 공표한 2005년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다.

[그림 5-6]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격차(연령 표준화)(%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은 가구원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을 말한다. [그림 5-7]은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는 2018년 11.4%p에서 2023년 5.7%p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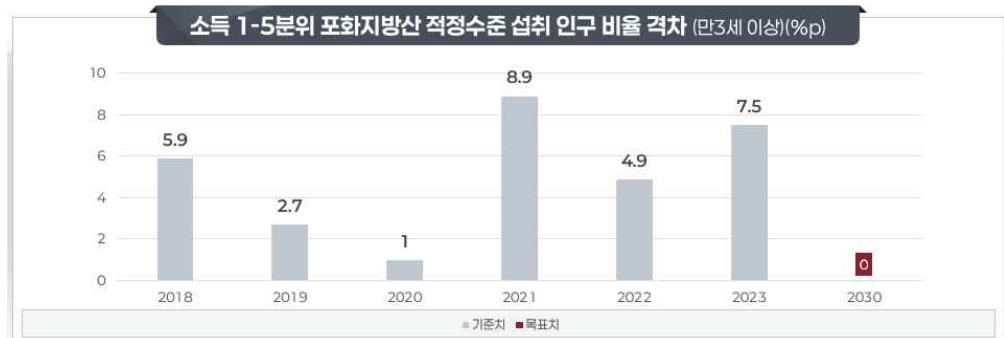
[그림 5-7]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포화지방산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만3세 이상)은 에너지의 7% 미만으로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2018년~2019년),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포화지방산의 에너지적정비율 이내인 인구 비율(2020년 이후)을 의미한다. [그림 5-8]은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포화지방산 적정수준 섭취 인구 비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포화지방산 적정수준 섭취 인구 비율 격차는 2018년 5.9%p에서 2023년 7.5%p로 증가하였다.

[그림 5-8] 소득 1-5분위 포화지방산 적정수준 섭취 인구 비율 격차(만3세 이상)(%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 비율(만75세 이상)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 필요량 미만인 노인 인구비율을 말한다. [그림 5-9]는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 비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 비율 격차는 2018년 5.4%p에서 2023년 19.2%p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격차 지표는 2020년 크게 증가한 후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9] 소득 1-5분위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 분율격차 (만75세 이상)(%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가임기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가임기여성 중 현재 빈혈(해모글로빈 기준, 해모글로빈(g/dL): 10-11세 11.5 미만, 12-14세 12 미만, 15세 이상 비임신여성 12 미만, 임신여성 11 미만)을 가지고 있는 분율(10-49세)이다. [그림 5-10]은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격차를 나타낸다. 소득 1-5분위 간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격차는 2018년 2.8%p에서 2023년 6.2%p로 증가하였다. 이 격차 지표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10] 소득 1-5분위 가임기여성의 빈혈 유병률 격차(%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 표준화)(%)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 중

중강도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5-11]은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는 2018년 9.2%p에서 2023년 13.3%p로 증가하였다. 이 격차 지표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11]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격차(연령 표준화)(%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 2) 비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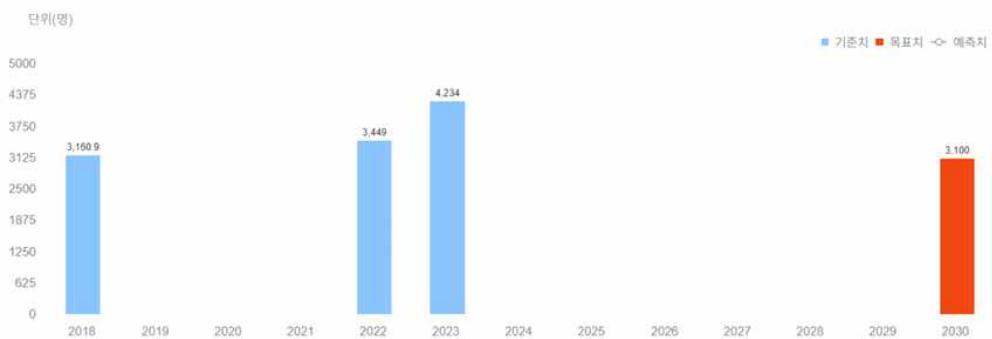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 표준화)(%)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 중 체질량지수  $25\text{kg}/\text{m}^2$  이상인 분율을 의미한다. [그림 5-12]는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성인남성 비만유병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성인남성 비만유병률 격차는 2018년 1.1%p에서 2023년 2.5%로 증가하였다. 소득 1-5분위 간 성인남성 비만유병률 격차는 증가하다가 감소,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5-12]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그림 5-13]은 인구 10만명 당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손상 입원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손상 입원율 격차는 2018년에 3160.9명에서 2022년 3,449명, 2023년 4,234명으로 증가하였다. 의료 취약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병에 걸려 손상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림 5-13]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손상 입원율 격차(인구 10만명당)  
(명)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심층조사, 각년도

### 3) 건강상태와 결과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이다. [그림 5-14]는 소득 5분위수의 1분위, 5분위 간 건강수명(세)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1-5분위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08년 8세에서 2022년 8.4세로 증가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건강수명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건강수명이 약 8세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는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14]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세)와 소득 1-5분위 건강수명 격차(세)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 2. 지역 간 건강 격차 현황과 특징

### 1) 정신건강 관리

여성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여성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그림 5-15]은 지역 상위 20%, 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를 나타낸다. 2018년에 8.9명에서 2023년 9.3명으로 여성 자살 사망률 격차가 0.4명 증가하였다. 지역 상위 20%, 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는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

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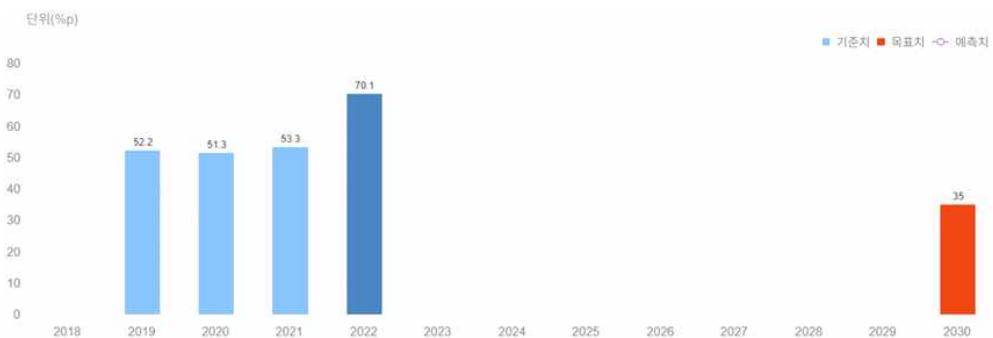
[그림 5-15]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명 당)(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은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되는 치매환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그림 5-16]은 지역 상위 20%, 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를 보여준다. 2019년에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는 52.2%p에서 2022년 70.1%p로 그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위 20% 지역에 치매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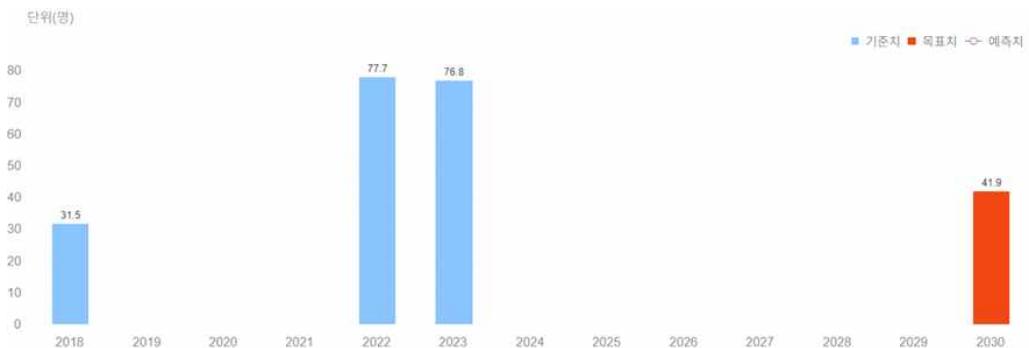
[그림 5-16]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p)



출처: 중앙치매센터내부자료, 각년도, HP DB에서 재인용

성인(20-74세)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성인(20-74세) 중 암 신규 발생자의 연령표준화 수를 말한다. [그림 5-17]은 지역 상위 20%, 하위 20% 간 암 발생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성인(20-74세) 지역 상-하위 20% 암 발생률 격차는 31.5명이었다. 2022년에는 77.7명, 2023년에는 76.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인 암 발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림 5-17] 성인(20-74세) 지역 상-하위 20%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명)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암발생통계, 각년도

## 2) 비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심정지 생존율은 119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전체 환자 중 생존해서 퇴원한 분율을 의미한다. [그림 5-18]은 심정지 생존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p)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기준 심정지 생존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는 7.1%p에서 2023년 8.5%p로 증가하였다. 심정지 생존율 격차는 201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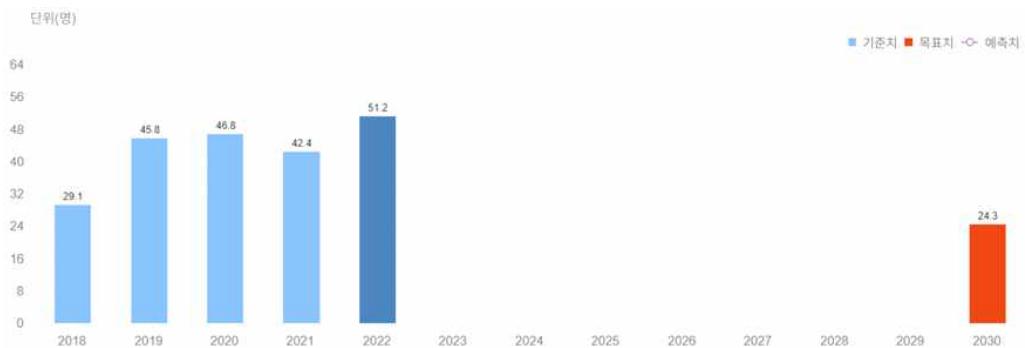
[그림 5-18] 심정지 생존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p)



출처: 질병관리청, 급성심정지조사, 각년도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1년간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수를 의미한다. [그림 5-19]은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망률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명)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2018년 기준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망률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는 29.1명에서 2022년 51.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 지표는 수년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19]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망률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 3) 건강상태와 결과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산출하는 지표이다. [그림 5-19]는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 20% 지역과 하위 20% 지역 간의 려건강수명 격차는 2022년 기준 2.2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2세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고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5-20]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세)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표 5-2>은 광역시·도별 연간 미충족의료율을 보여준다.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표준화율)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의미한다. 미충족의료율은 2012~202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눈에 띄게 감소하였는데, 2012년 13.3%에서 2022년 3.8%로 9.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대구, 대전, 울산 등 수도권과 광역시는 미충족 의료율이 낮은 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미충족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lt;표 5-2&gt;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표준화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15	11.7	11.9	12	10	7.6	5.3	4.8	4.4	3.8
부산	13.4	13.5	12	14.5	11.3	9.5	5.4	5.5	6.1	6.3
대구	12.6	13.8	10.9	9.4	8.2	6.4	6.4	4.1	3.5	5
인천	13.3	13.2	13.4	12	12.8	11.6	7.9	7.5	7.3	7.2
광주	15.4	12.9	12.2	11.9	11.6	8.8	6.7	5.8	5.6	5.8
대전	12.8	10.7	11.9	11.3	11.1	8.4	4.6	5.5	3.6	3.5
울산	9.6	11.2	8	7.4	6.2	7.5	6.3	5.5	3.8	4.8
세종	15.7	14.5	17	9.3	12.4	10.2	3	4.3	4.8	3.7
경기	13.3	11	11.5	11.9	10.5	9	5.9	5.1	4.9	5.3
강원	13.2	11.5	12.5	10.4	11.2	10.8	5.2	6.5	6.3	7.2
충북	13.9	10.6	11.4	10.3	10.6	9	7.4	6.1	5.4	7.1
충남	15.2	12	15.1	12.5	12.5	13	10.5	5.2	6.5	6.3
전북	11.6	11.1	11.2	11	12.8	10.1	7.7	6.5	6.8	7.1
전남	12.3	12.1	13.3	13	11.1	10	8.8	6.9	6.9	5.2
경북	12.4	14.1	13.4	11.6	12.5	9.9	5.2	7.3	5	6.3
경남	13.3	12.8	13	14.7	14.9	11.1	6.6	8.4	7.2	9.1
제주	15.9	15.1	11.9	11.9	11.8	8.1	4.7	6.5	3.4	5.9

\*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간편도](#)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건강불평등 현황과 특징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를 살펴보았다. 소득이나 자산, 노동시장 격차와 다르게 건강으로 인한 격차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삶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은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며, 특정조건으로 인해 차별이나 배제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건강불평등과 격차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의 소득 및 자산수준, 어느 곳에서 생활하는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 사회경제, 인구적 특성에 따라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앞의 분석에서도 여러 차별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료시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주요한 의료기관이 다수 있음으로써 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의료 이용권이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고령화 현상 속에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나마 국민의 미충족의료율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4% 정도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점은 주목할 점이다.

소득 간 건강불평등과 격차의 주요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별 건강기대수명의 격차는 최근 들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흡연과 자살예방의 경우, 여성에서 평균적으로 건강행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절대적 격차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과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격차(연령표준화)가 크게 악화되었다. 넷째, 비만의 경우, 성인 비만 유방률이 남녀 모두에게서 악화되었다. 특히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가 악화되었다.

격차를 판단할 때 주로 소득, 자산, 부동산, 기업 규모 등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 요소인 건강측면에서도 격

차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주하는 곳 어디에서나 건강증진 및 관리,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치를 해도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 인력 부족 현상도 여전하다. 따라서 우선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험한 것과 같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여 지방이나 원거리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여러 제약조건 등이 있지만, 하나하나 이를 해소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간 건강불평등 및 격차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예방의 경우,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률 격차가 증가하였다. 둘째, 치매의 경우,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성인 암 발생률, 심정지 생존율,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망률의 격차도 증가하였다. 넷째, 지역 간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미충족의료율은 수도권, 광역 - 지방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 2. 시사점과 정책방향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나 건강검진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중장년기 이후 경험한 현세대 노인의 경우, 건강 수준 담보를 위한 예방적 노력이 일찍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뿐더러 사회구조적 취약성에 따라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집단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지역적 수준에 있어서는 지역 간 상대적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경우 기능상태 및 중증도에 따른 심화된 관리와 치료가 요구되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등이 지역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책의 집행 단위

이자 개인의 건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지역 단위에서의 벌어지는 격차는 곧 개인의 잠재적 차원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정책 개입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주체(제도 및 정책-지역-개인) 간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년기 건강은 생애주기에 따른 누적적 효과가 강하다는 점에서, 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둔 정책적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애주기별 개입 지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예방, 치료 및 관리, 돌봄의 차원에서 연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건강증진행위가 용이한 여건(환경)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간의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결과, 건강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차원과 지역적·제도적 맥락, 보호적 개입 여하에 따라 심화되었다. 이는 곧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장애요인이 제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고령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건강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고령이며 소득이 낮은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의료지원체계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혼자사는 노인의 독거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건강보험 보장성, 본인부담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낮은 소득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제도, 재난적 의료비지원, 차상위 의료 지원 등 여러 방면의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정보 취득에 취약함으로써 이를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홍보나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한다.

건강권은 국민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라는 점에서 차별,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건강격차, 건강배제 영역 등에 대한 주기적 관찰과

조사를 통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제6장

# 한국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의 특징과 정책과제

제1절 불평등 문제의 사회적 위험

제2절 정책적 방안 모색



## 제6장 ■ 한국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의 특징과 정책과제

### 제1절 불평등 문제의 사회적 위험

불평등 문제의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우선 본 보고서에서 다른 네 가지 삶의 영역들에 대한 유기적 상호관계의 양상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 저성장 고령사회, 고용불안정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정보, 교육, 금융, 건강의 네 가지 영역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정책 영역일 뿐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인과적 연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디지털 활용능력(NIA, 2023), 금융문해력(금융감독원, 2022), 교육 기회(교육부, 2022), 건강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등에서 모두 낮은 지표를 보이며, 이는 세대 간 기회의 비대칭성과 생애주기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경로로 작동한다.

세대 간 차이의 문제로 발전시켜 이해한다면 디지털 정보 불평등은 디지털 격차가 사회참여, 복지 접근, 정보교육 기회에서 세대 간 단절을 초래할 수 있고, 교육 불평등 측면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교육 투자 격차와 대학 서열화가 자녀의 좋은 일자리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부와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을 고착화하게 된다. 금융 불평등 측면에서는 금융부채나 자산에 대한 접근 격차가 자산 형성, 노후 대비력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대 간

자산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며 건강불평등 측면에서는 건강격차가 정보 접근력 및 소득·교육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특히 생애 후반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 불평등, 금융 불평등, 건강 불평등, 교육 불평등이라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영역의 불평등은 단순히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복합적 불평등 구조를 이룬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 불평등, 금융 불평등, 건강 불평등, 교육 불평등의 4가지 영역을 각각 독립된 과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악순환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조적 불평등 체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순 획단면이 아니라 ‘세대간’ 및 ‘세대 내’ 관점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네 가지 불평등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과 세대 내 범주를 오고가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합적 불평등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과 대학 서열의 격차가 노동시장 내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의 차이로 직결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격차로 연결된다. 디지털 역량은 금융자산 형성력과 연결되며, 금융 불평등이 전반적 경제적 불평등을 거쳐 다시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메커니즘을 형성한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위협하며, 전체 사회의 통합성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영역 각각을 따로 떼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인과 경로, 피드백 루프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상위 구조적 이해의 틀 (meta-framework)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가능한 이유는 선진적인 해외 국가들에서 이런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노력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의미있는 예로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디지털 불평등’과 ‘교육·복지 접근 격차’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저소득계층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디지털 격차가 교육 성취도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단일한 원인이나 개별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불평등 구조들이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접근성, 금융자산의 운용력, 건강 자원의 접근 가능성, 교육 기회의 형평성은 서로 인과적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만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결정요인 이론(SDOH)에 따르면 건강은 사회·경제·환경 조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대사회에서의 건강 불평등은 교육, 소득, 정보 접근 역량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루디외(Bourdieu)의 자본이론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진행하면서 불평등 구조를 고착, 심화시킨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육 자본(학력, 학별)이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보 자본의 습득 속도를 좌우하고, 이것이 다시 금융 자본 및 건강 자본의 격차로 전이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구조적 재생산 이론은 불평등은 제도와 구조 속에서 반복, 재생산되므로 교육·정보 격차가 세대 간 이동성 차단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역량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의 차이가 모든 영역에 중첩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하여 이해의 틀 기본으로서 ‘교육기회의 차이 → 정보접근의 차이 → 직업선택 및 소득격차 심화 → 건강 결과의 차이’라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흐름은 단선적이라기보다는, 교육격차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결정짓고, 이는 다시 개인의 역량자산으로서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격차를 유발하며, 그 격차는 금융과 경제 역량의 차이로 이어지며 그것은 의료와 건강의 편차로 이어지는 경로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불평등 지표의 나열을 넘어서, 각 영역 간의 인과적 연결 경로를 설계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로가 강화되는지를 밝히는 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이 네 가지 불평등 영역의 심층적 분석과 더불어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의 통합적 이해의 틀 구성을 위한 접근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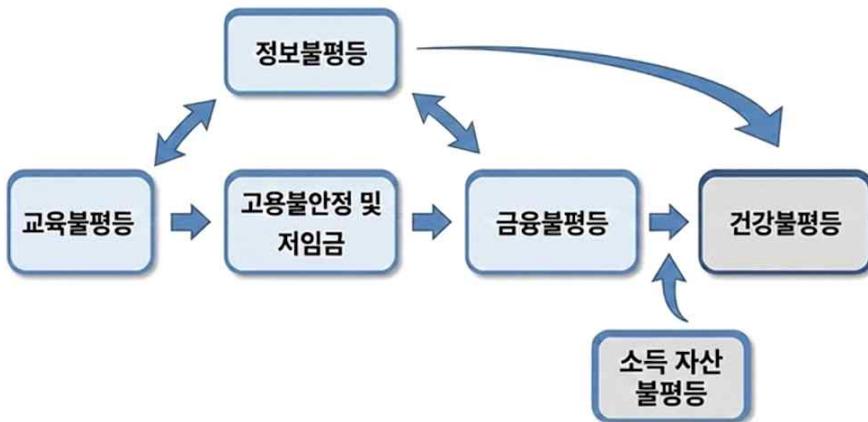
본적 틀은 사회적 위험 간 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고려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영역의 격차가 다른 영역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장에서 다루어진 영역별(교육, 정보, 금융, 건강) 불평등이 소득수준에 의해 독립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연계적 심화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투자의 차이가 학력 및 대학 서열의 격차를 초래하고, 이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결합하여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세대 간 전이를 통해 더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기반 수립의 출발 자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는 디지털 불평등과 만나(디지털 시대의 정보 역량의 격차 증가와 맞물리면서) 금융 영역의 불평등 확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재무적인 삶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력-사회경제적 지위-의 문제로 연결되고) 결국 삶의 질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불평등 (개인의 건강 자본)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제약하게 된다. 결국 모든 영역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과 격차 재생산’이라는 구조로 수렴된다는 판단이다.

교육불평등은 구조와 제도에 의한 출발점의 불공정, 불공평이 발생하는 지점이며 이는 단순히 학위의 유무를 넘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획득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서, 디지털 정보 불평등(새로운 시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의 차이로 인해 2차적 경제 격차 심화)을 거쳐 금융 불평등(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자원 축적 능력에 직접적 영향)에 이어 건강불평등(경제력, 정보 접근성, 교육 수준과 밀접히 연결되어 삶의 질과 생산성에 차이 발생)으로 연결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출발점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교육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을 매개로 정보 불평등이 결합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금융 불평등을 야기하고 금융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를 이론적 모형으로 구조화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1] 사회불평등 간의 관계 설정



그럼 교육, 디지털, 금융, 건강의 불평등은 어떤 경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아래와 같은 기본 흐름의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 [1] 교육 불평등 (학업 성취도, 진학률 격차, 노동시장 진입 격차)
- ↓
- [2] 디지털 정보 불평등 (정보 접근, 활용 능력 차이)
- ↓
- [3] 금융 불평등 (금융자산/부채 접근성, 자산 형성 및 축적의 기회 차이)
- ↓
- [4] 건강 불평등 (의료 접근성, 건강행위 격차)

위 과정에서 다양한 피드백 루프 발생

이 구조상에서의 핵심은 이들 영역들이 상호 순환적 인과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 교육 → 금융 → 건강 순으로 연결되며, 건강 불평등은 다시 불평등의 시작점으로 이어져 다시 이를 강화(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피드백하

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상 문제로 디지털 정보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전체 구조의 흐름을 더욱 부정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은 디지털 기기 및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고, 이는 다시 금융 정보 문해력의 저하와 자산 형성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종합하면 각 불평등 영역들의 상호의존성 혹은 상호연결성은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총체적, 종합적 위험은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단순 합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곱의 결과 혹은 제곱의 결과로 그 사회적 위험의 총체적 강도가 커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각 영역들의 불평등의 양상이 깊이 얹혀있고, 그것이 상호 강화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특히 폭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본의 맥락에서 더욱 확장된 부르디외의 자본 이론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성, 활용성, 숙련성, 실질적 이해 취득성 등이 경제적(금융), 신체적(건강), 사회적(지위), 문화적(네트워크 → 궁정적 미래 전망 가능성) 자본의 격차를 반영하고 강화한다(Ragnedda, 2018 ; Hsieh & Keil, 2011)는 것이다. 또한 금융 불평등과 양질의 교육(디지털 학습 포함)은 상호 촉진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궁극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결정짓는 순환 궤도를 형성한다. 또한 디지털 배제는 재정격차를 증폭시키고, 교육은 특히 기술적 또는 시스템적 변화가 있는 시기에 더욱 그것과 연결된 디지털 역량과 접근성의 수준을 결정한다(Troyan et al., 2023 ; Yu, 2011). 이 복잡한 웹적 구성을 예컨대 한 영역의 취약성이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럼 이것이 세대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불평등은 연령에 따라 ‘노출 경로’와 ‘영향 방식’이 달라진다. 즉, 같은 구조 속에서도 어떤 세대는 시작점에서 불리하고, 어떤 세대는 성과에서 격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도는 세대별로 적응력과 자원 축적 가능성을 갈랐다.

&lt;표 6-1&gt; 세대, 생애주기, 그리고 다양한 불평등

세대	교육	디지털	금융	건강	종합·구조적 취약점
고령 세대 (65세 이상)	저학력 비율 높음	접근성·활용 능력 매우 낮음	금융 정보화 적응 어려움	만성질환율 높음	디지털 소외 + 교육기반 취약 + 건강문제로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 배제
중장년 세대 (40~64세)	교육 이력과 격차 구조 유지	활용 수준 격차 존재	자산 불평등 본격화	고용·건강 이중 부담	디지털 활용 편차에 따라 격차 확대, 자녀 교육/노후 문제 동시 발생
청년 세대 (20~39세)	고등교육 확대 → 학자금, 불안정 고용	디지털 진화적이나 불안정	자산 형성 기회 거의 없음	전신건강 문제 두드러짐	디지털은 능숙하나 교육·금융 불안정 → 상향 이동 경로 차단 가능성
아동·청소년 세대 (0~19세)	가정 환경 의존	디지털 기반 교육 접근성 격차 뚜렷	금융 교육 미흡	비만·정신건강 양극화	부모의 정보력·자산 수준에 따라 미래 격차 구조 조기 형성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위험은 세대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그 출발점이 이후 영역 격차에 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층은 교육과 디지털 영역에서부터 불평등의 제약에 둘러싸임으로써 금융, 건강의 영역까지 격차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청년층은 디지털 접근은 높으나 이것이 성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 격차’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다. 고학력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이수 비율은 높아졌으나,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교육-고용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의 금융 자산 형성 실패와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신건강 문제)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복합취약 구조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세대 간 연결’을 통해 더욱 고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정보/자산/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과 정보 접근 격차로 ‘세습’되고 있다는 한국 사회의 현상에 대한 추론적 이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응용 방향 측면에서는 세대 맞춤형 개입 경로의 설계가 필요하며 단순히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다른 방식

으로 겪는 복합 불평등 구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대별 불평등의 구조가 자기강화 고리로 심화하는 양상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이나 청소년 세대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 기회의 차이가 학업 성취도 격차로 직결되며, 이는 초기 ‘불평등 재생산’ 구조화가 시작되는 결정적 지점으로 작동한다. 다음으로 청년층 세대에서는 디지털 친화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교육 투자의 효용이 감소하고, 이는 금융 및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불평등 격차 심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 세대의 경우에는 자산과 교육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불평등의 사회적 전이를 매개하는 세대이다. 고령층 세대는 디지털·교육 기반이 취약함으로써 모든 경로에서 불안정 상황에 놓이면서 불평등 구조상에서 가장 취약한 여건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이 같은 추론은 한국 사회의 여러 특징적 지표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예컨대 노인 자살률, 노인 취업률, 노인 삶의 질 등).

또한 이 같은 내용과 접근을 통한 학문적 의의 및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접근을 통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와 기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단일 영역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 분석을 넘어서 복합 불평등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대별 분석을 통해 정책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다영역 연계 형 정책설계의 근거 및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디지털-복지 영역을 통합한 정책설계의 시공간적 적실성이 더 크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연구진의 해석을 더하면,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 교육 불평등 → (정보 불평등 매개) → 금융 불평등 → (소득/자산 불평등 매개) → 건강 불평등이라는 유기적 연결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6-2] 세대, 생애주기별 주요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교육불평등** : 노동시장 진입 격차(12차 분절) → 저임금 고용불안정 및 니트(NEET)화 → ①신용하락 및 대출제한(금융불평등) ②의료서비스 제한(건강불평등) ③디지털불평등(정보소외) → 소득 불안정 및 자산 형성 기회 상실 → 저출생 심화 → 인적자본 손실 및 잠재성장을 하락 → 사회적 이동성 단절 및 계층 갈등 심화 →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

**금융 불평등** : 저소득 · 저자산층 고금리 · 단기대출 → 원리금 연체 · 채무불이행 위험 →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 악화, 대출 축소와 금리인상 → 부채취약계층의 부채 접근성 제한/원리금 상환압박 증가 → 가계소비 감소/내수시장 위축/기업투자 감소 → 경기둔화/실업률 증가 → 사회복지 안전망 비용 증가 → 재정확보 위한 조세확대정책으로 국민부담 증가 → 조세저항이나 정부정책 불만 → 사회 불안과 갈등 유발 → 사회통합과 안정 저해

**디지털 불평등**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차별적 제한 및 디지털 리터러시 편차 심화 → 교육 · 취업 · 금융 등 필수 생활 서비스 이용 역량의 차이 확대 → 디지털 경제 활동 배제에 따른 소득 기회 상실 및 행정 ·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사회 통합 저해 → 디지털 문맹의 구조화 및 신종 계급 발생

**건강 불평등** : 의료 접근성 제한 및 건강 행위(검진, 운동 등) 부족 → 만성 질환 유병률 증가 및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심화 → 노동 능력 상실 및 조기 은퇴 →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가계 경제 악화 → 사회 전체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 노동 생산성 저하 및 사회 활력 감소 → 건강 격차의 생애 누적 및 빈곤의 악순환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삶의 영역에서 세대 및 생애단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자녀세대의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성과에서 뚜렷한 격차로 이어진다. 하위계층 자녀는 상위계 층보다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공공부문이나 대규모 사업체와 같은 소위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되며, 결과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교육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결합하여, 출발선의 차이를 생애 전반의 격차로 확대하는 결정적 기제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즉,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교육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 격차를 넘어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수의 OECD 국가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 성취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OECD, 2018).

교육 격차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 즉 1차 노동시장 진입 실패와 2차 노동시장 고착화에 따른 저임금, 고용불안정은 청년 개인과 그 가족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 불평등의 부정적 효과를 생애과정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장 먼저,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는 금융적 위험 및 소외로 직접 이어진다.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주택 마련, 결혼, 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저임금 구조는 자산 축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들은 질병,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부족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저축보다는 고금리 대출이나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복순·김진숙, 2018).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제도권 금융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며, 결국 부채의 악순환과 빈곤 상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서재욱 외, 2020). 유럽 등 해외 연구에서도 불안정 노동이 부채 증가 및 재정적 불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Eurofound, 2019). 이러한 문제는 교육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넘어 자산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금융 불평등의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제약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초기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고성능 기기나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평가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의 차이, 즉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격차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van Dijk, 2012). 교육 수준이 낮고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한 계층은 업무나 일상에서 고차원적인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황주성 외, 2021). 이는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교육, 구직, 금융 거래, 건강 정보 획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 불리함을 야기하며, 디지털 소외가 다시 경제적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불안정은 건강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경로이다. 낮은 소득은 영양 불균형, 열악한 주거 환경, 열악한 의료 인프라 지역에서의 거주, 유해 물질 노출 위험 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용불안정 자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창엽 외, 2017). 시간적·경제적 제약은 운동이나 정기 검진 등 예방적 건강 관리를 어렵게 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강영호, 2019). 즉, 교육 불평등에서 기인한 노동시장 저성과는 개인의 건강 자본을 훼손하고, 이는 다시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켜 소득 감소를 유발하는 부정적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닌 주요 선진국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간의 강력한 연관성이다.

궁극적으로,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저성과에서 파생된 금융, 건강, 디지털 영역에서의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들은 단순히 해당 세대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불평등이 이전되는 악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부모 세대가 겪는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정보 접근성 제약은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자원을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사회경

제적으로 상위에 속한 부유한 가정과 하위에 속한 빈곤한 가정 사이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 지역사회 환경, 학교 교육의 질 등 모든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한다. 이는 결국 다음 세대의 교육 기회와 성취 수준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의 대물림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생애과정에 걸쳐 불리함이 누적되는 불이익은 최종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동성을 저해하고 불평등 구조를 고착한다. 즉, 부유한 가정과 빈곤한 가정 사이에서는 자녀의 양육 방식, 지역사회 환경, 학교 교육의 질 등 모든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자녀세대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한다.

결론적으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세세대의 교육불평등은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과를 거쳐 금융, 건강, 디지털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의 근원이자,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이다. 따라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단기적인 교육 격차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위험 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2. 금융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가계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금융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연구를 통해 금융 불평등이 사회적 위험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득 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분석한 황선재(2015)의 연구를 우선 들 수 있다. 황선재(2015)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사회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한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 불평등의 증가와 연결지어 설명하기 위해 건강·사회문제지수<sup>28)</sup>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28) 사회적 신뢰,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비만, 정신질환, 학업성취도, 십대출산율, 살인율, 수감률, 자살률, 합계출산율, 미혼율, 이혼율, 우울증 등을 지표로 사용. 사회해체와 재생산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자살률, 합계출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각종 사회체계적 현상과 사회적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박은엽, 2024; 박정희, 2013; 신팔영·김상봉·정준호, 2023)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불평등 또한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금융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금융 불평등이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한다. 금융 불평등이 심화되면 저소득층의 재정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는 건강, 교육, 주거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금융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을 가계부채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은 물론 소비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를 연구에서는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나 경제적 충격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으며 거시경제를 위협하고 재분배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높다고 밝혔다(김수정·황성영, 20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01.26.; 정화영, 2023; 손종칠, 2025; 김수현·황설웅, 2023).

최근 주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구조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신팔영·김상봉·정준호(2023: 152)는 금융 불평등의 핵심 요소로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채는 개인이나 가계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자금제공자인 금융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거시경제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 위험요인이다(김용범, 2018: 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을 가계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금융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가계부채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가?

금융 불평등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접근성에서 차이를 만든다. 즉 불평등한 금융 구조로 인해 금융 접근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접근성이 높은 집단, 즉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용조건이 좋은 은행권을 통해 저금리의 장기대출 등을 받아 안정적으로 부동산 구입과 같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산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접근성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저자산층 사람들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단기 대출 등으로 주거비나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로써 이들은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자산이나 소득을 축적시킬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고소득층에게는 자산 증식과 투자기회 및 소득 확대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융부채가 금융 불평등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한 빚으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 불평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연체나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신풍영·김상봉·정준호(2023:71)는 원리금 상환 연체 비율은 소득 수준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부채 비율은 낮지만, 상환의 어려움은 가장 커서, 가장 높은원리금 상환 연체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한다. 김영일(2019)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가구들이 소득 및 순자산이 적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 빈곤가구에서 관찰되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 불평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작동하면서 소득 불평등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행 연구들

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선형, 2018;; 이건범, 2014; 배영목, 2015; 박세리·김기승, 2023; 원승연, 2015; 신팽영·김상봉·정준호, 2023; 손종칠, 2025).

가계부채는 자산형성, 주거안정, 자녀양육, 노후 대비 등 대다수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데 그 수요는 생애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산형성을 시작하는 청년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전·월세 등 주거비와 초기생활비 마련을, 중장년 기에는 주택 마련 등 주거비 관련 대출과 원리금 상환, 자녀양육 및 교육비, 생활비 마련, 노후 준비 등을, 노년기에는 고정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부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부채가 과도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해 개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가계부채를 연체 혹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개인들이 늘어난다면 금융회사의 손실이 증가하고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다. 개인의 부채 문제가 개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넘어 금융회사로 전이된다. 자산 전전성을 우려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자본비율을 맞추고 리스크를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대출이 축소되는데, 이때 금리는 일반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금리의 상승 압박은 개인이나 기업, 사회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금리 인상은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기존 대출 보유자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과다부채 취약계층은 원리금 상환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부채의 주요 증가 원인은 거주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 마련 등의 주거 관련 부채와 생활비 마련 부채 비중이 적지 않다. 이에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은 개인의 주거 불안정은 물론 소비 여력의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이 부채 취약계층의 연체 나아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고금리 상품을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재정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금융부채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신용등급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

낮은 신용등급은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이들

은 주택 마련이나 사업자금 등을 위한 자금도 향후 적정한 조건으로 이용하기 어려워 금융 이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악의 금융 불평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 부채 취약계층은 저축, 투자, 주택 구매 등과 같은 자산 형성과 증식의 기회를 가질 수 없음은 물론 갖고 있던 자산까지도 처분해야 하는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원승연(2015)은 금융부채가 증가하면 상위층보다 하위층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했다. 박세리·김기승(2023)은 소득 대비 많은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다음해에 소득분위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의 소득 불균형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했다. 결국 금융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가계의 금융부채는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이중성을 드러낸다. 고소득·고자산층에게는 자산 증식과 소득확대의 기회를 주지만 저소득·저자산층에는 과도한 상환부담, 소득분위 하락, 자산 축적의 어려움 등과 같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들은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손종칠, 2005: 21) 내수시장 위축, 기업들의 투자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둔화 및 실업률 증가 등을 초래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부채 취약계층과 함께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함은 물론 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등 조세 확대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게 된다.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면 조세 저항이나 정부정책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고 사회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불평등 상황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로 야기되는 금리상승은 세대 간 불평등,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리상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을 경우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금융부채 확보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거나 증가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부채상환 기록, 현재의 부채 수준, 연체정보, 제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의

과다 이용 여부, 단기간(3~6개월) 대출 집중 여부 등이다(농민신문, 2018.08.20.). 그런데 자산과 함께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용등급도 낮아 은행권의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최근 2년 안에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사람, 즉 금융 이력 부족자의 절반 이상은 60대와 함께 20대 이하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21.09.27.).

저금리 시기에 자산을 축적한 중장년층은 그 자산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받아 집을 사고 시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빌린 돈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면서 사회적 좌절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청년층과 그렇지 못한 청년층과의 자산 격차는 세대 갈등은 물론 세대 내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처럼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금리인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나비효과에 비유할 수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금리인상이 가계는 물론 금융시스템, 사회복지, 세대, 정치 영역까지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3. 디지털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생애단계 관점에서 본 세대 간 디지털 불평등을 진단하면 크게 세가지 중요한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애단계 별 디지털 정보 이용 능력의 격차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접근성, 활용성, 정보관리역량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세대간 다음의 특징이 관측된다. 청년층은 디지털 기기 및 네트워크 환경에 익숙하고, 다양한 정보활용 및 자기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장년층은 직무상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수준은 높지만, 정보 조정

/관리,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고령층은 접근성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해석력, 자기주도적 정보조정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각 생애 단계에서의 학습 기회, 경제활동 참여, 사회적 관계망의 디지털화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연령대별 디지털 소외가 불러오는 사회적 배제의 심화이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정보 접근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복지·의료·행정 서비스 접근의 제한’이다.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이용이 제한된 고령층의 정보 접근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예로서 ‘노동시장 기회 불균형’도 중요하다. 중·장년층, 특히 비정규직 및 저학력층은 디지털 학습 기회가 부족해 직무 전환이나 재취업에서 밀려나는 구조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세대 간 정보격차가 가족 내 역할 전도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이 부모의 정보를 대리 처리하는 이른바‘역부담 구조’가 심화되며, 세대 간 권위와 역할 불균형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예로서 ‘정치 및 사회참여의 비대칭’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표현 및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는 반면, 고령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은 정치적 발언권이 감소하는 문제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현황으로서 생애단계별 ‘디지털 적응력’의 사회적 격차 구조의 심화, 고착화이다. 본 분석에서 디지털 능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연령대별 격차가 정보화 사회 적응력의 본질적인 차이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계으름이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누적된 학습 기회 불균형과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능력 항목	고령층 평균 긍정 응답률	청년층 대비 상대 수준
기초 활용능력 낮음	~50% 수준	절반 수준 이하
정보 선별능력 매우 낮음	~30% 수준	3분의 1 수준
정보 조정능력 극히 낮음	~15% 수준으로 극히 미비	현격한 격차 존재
자기주도 학습 능력	~10%으로 최저	격차 가장 큼

우선 세대 간 디지털 적응능력 격차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교육, 정치참여 등 전반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생애단계에서의 디지털 학습 불균형은 자산, 교육, 건강, 사회참여의 축적 불평등으로 전이되고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디지털 격차는 단순 정보 격차를 넘어서 사회적 배제와 이동성의 단절을 고착화시키는 사회적 악성 요인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디지털 불평등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전 사회적 해법의 도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디지털 불평등은 더 이상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못 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진단되고 대응되어야 한다. 특히 세대와 생애단계의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불평등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정책으로서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불평등이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위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디지털 관련 기술 접근의 기회 자체가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 사회적 약자층은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정보 활용률과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정부서비스, 금융, 의료, 교육 등)의 최초 접근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계으름이나 학습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접근 자체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로 디지털 교육 기회의 불균등도 중요한 사회적 위험의 측면이다. 국가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있음에도, 교육 참여는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 시간의 여유, 이동성 등의 제한으로 인해 계층별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노동 시간이 긴 저소득층은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접근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는 기본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초정보와 지식의 습득 자체에서도 열위의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문해력 격차’는 개인의 학습 태도보다는 사회 구조가 만든 시간적·공간적 장벽의 결과로서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서비스 이용에서의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사회적 차원의 위협이다. 디지털 역량이 미숙한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에 취약하고, 물리적 시간 여유도 부족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 병원 예약, 취업지원 서비스 등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생활영역에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회적 참여, 복지 접근, 정치 표현 등에서 차별이 구조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은 필연적이다. 즉,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술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권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경제적 기회의 격차 확산이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 노동, 온라인 취업 등 새로운 경제활동은 디지털 역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계층은 구직 기회 자체가 제한되거나, 저임금·비공식 노동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며, 자산 축적의 기회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사회통합과 공동체 지속 가능성에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사회적 단절감, 소외감, 고립감을 야기한다. 이러한 디지털 배제 경험이 사회 참여 의욕의 감소, 심리적 박탈감 증가와 연결 된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키며, 사회통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더 심각한 요인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불평등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서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의 차이, 제도적 장벽, 교육 격차, 서비스 배제, 경제활동 제한 등, 모든 사회 구조에 내재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해법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공공적 가치의 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4.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는 전반적으로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했지만, 사회적 위험이 건강 불평등을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실업, 빈곤, 차별,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은 건강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특정 계층과 집단이 건강상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 고령화, 불평등의 다차원화, 감염병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건강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건강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복잡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한쪽의 문제가 다른 쪽의 위험을 증폭시키며,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첫째, 건강불평등이 악화되면 사회적 통합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커지고 사회적 응집력이 약해진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 재난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 전체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여 사회통합을 더욱 더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건강불평등은 경제적 생산성 저하를 낳을 수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인구가 늘어나면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는 개인의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특정 계층에 의료비 부담이 집중되어 가계 경제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건강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낮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와 박탈감이 증가한다. 스트레스와 박탈감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병리 현상의 심화는 범죄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 치안 유지와 교정시설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실업, 주거 불안정, 교육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 요인들은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불안정한 고용이나 위험한 노동조건은 사고, 질병, 정신적 스트레스 노출 위험을 높이고, 이는 건강 수준의 차이를 더욱 벌리게 된다. 저소득층은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주거 환경,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어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이어져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면서 부정적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정책적 방안 모색

### 1.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첫째, 생애 초기 단계에서의 공정한 출발 보장: 보편적·고품질 영유아 교육·보육 강화가 요구된다. 교육 격차가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시작됨을 고려할 때, 출발선에서의 격차 완화를 위한 초기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돌봄 공백 해소를 넘어, 아동의 초기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교육 성취와 사회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핀란드나 프랑스와 같이 국가 주도로 보편적이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공립 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 강화 및 평가인증제도 내실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우수 인력 유인 및 교육의 질 담보의 핵심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인 처우 보장이 요구된다. 특히 모든 아동의 발달 잠재력을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건강·영양·복지 서비스를 보육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연계·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출발선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 과정에서의 격차 완화가 요구된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학교 서열화는 공교육 단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교 유형, 학업 성취, 희망 학력의 뚜렷한 계층 간 격차는 공교육 시스템 내 불평등 해소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사례처럼 학교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재정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 취약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 지원, 심리·정서 상담,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 지원 및 교육 취약 지역·학교 근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교원 역량 및 배치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특히 교사가 학생 배경에 따른 편견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교육 불평등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접근성 보장,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전문화 및 부모의 정보력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 진로 정보 플랫폼과 현직자 멘토링 연계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업 성취 격차를 넘어, 본 분석에서 나타난 희망 학력 및 진로 설계 능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 확보 및 대학 내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대학 진학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격차가 두드러지는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요구된다. 독일 및 북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및 저금리 학자금대출 제도를 확대·내실화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 결과 드러난 생활비 마련 부담이 학업 지속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하위 및 중위계층까지의 근로 장학금 기회 확대 및 시급 현실화,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본 분석에서 나타난 계층별 등록금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와 그 합의를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입학 기회 제공을 넘어, 취약계층 학생의 대학 적응 및 학업 지속을 위한 대학 내 통합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우수 학생 대상 대학원 진학 지원 프로그램 신설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행 지원 강화 및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 유연화가 필요하다. 교육 불평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고착되는 고리를 완화해야 한다. 본 분석 결과 하위계층 자녀가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고, 상용직 및 공공부문,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이나 스위스의 도제 제도와 같이, 대학 진학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숙련 형성 경로를 인정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고품질 직업교육 강화, 선취업 후학습 제도 내실화 및 평생학습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학력·출신학교 등 배경보다는 실제 직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채용 관행(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등)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

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첫 일자리 이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불이익 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실업 부조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심리 상담 지원 등을 포괄하는 노동시장 이행기 청년 대상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위계층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다.

## 2. 금융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1) 세대별 가계금융실태와 과제

앞서 금융영역에서 금융 불평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문제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세대와 성별을 고려해 제안하고자 한다.

#### (1) 청년층의 특징과 과제

2024년 현재 청년층의 금융자산 보유액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중장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2017년 대비 24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과 증가율이 높다. 금융자산의 경우 청년남성의 증가액이 여성보다 약간 높지만(120.1만 원)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다(5.8%p). 그러나 청년여성의 금융부채 증가액과 증가율은 청년남성에 비해서 높은데 금융부채 증가액은 여성이 7배 이상 많다(859.3만 원). 이처럼 여성의 금융자산과 특히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고 여성의 금융부채 증가율도 자산증가율보다 높아 이제 자산형성을 시작한 청년여성들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

이외 청년층의 부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 남녀 모두 은행의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채를 구성하고 있다(남성 66.8%, 여성 64.6%). 청년남성의 경우

은행권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만기일시상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 비중이 중장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sup>29)</sup> 부채와 금융부채 보유비율은 모두 남성이 높으나 17년 대비 증가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주거 관련(거주주택 구입과 전세/월세 보증금) 비중이 높은데 청년남성(50.0%) 보다 청년여성(57.9%)의 비중이 높다. 이 중 남성은 거주주택 구입 비중이 여성보다 높다(4.6%p), 반면 전월세 보증금 비중은 여성(36.7%)이 남성(26.2%)보다 많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서울 거주, 월세 비중이 높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주거 관련 외에 부동산 관련(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부채는 남성이 20.1%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1.9%에 불과하다. 이외 부채상환 이 부채 증가 이유인 경우는 청년여성(15.0%)에게서 청년남성(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나 연체 경험, 상환불가 응답도 청년남성보다 청년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부채 증가 성격을 보면 남성은 자산증식/투자형 부채, 여성은 생계형 부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청년층 여성과 남성 간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예상된다. 청년층 부채가 대부분 주거와 관련된 만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관련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sup>30)</sup> 등을 중심으로 하되 청년의 생활권, 일자리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주택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방안의 도입 주장(곽윤경·허은솔·오옥찬·신영규, 2022: 129)<sup>31)</sup>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월세보증

29) 만기일시상환 담보대출의 경우 청년남성은 18.6%, 여성은 16.9%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년층 남녀는 각각 6.58%, 8.58%, 노년층 남녀는 4.1%, 2.9%를 보유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도 청년층에서 높은데, 청년 남성 7.2%, 청년여성 6.0%인 반면 중년남성 5.4%, 중년여성 4.8%, 노년남성 1.3%, 노년여성 0.8%이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이 가장 작아, 자금 활용성이 높다. 매월 이자만 납부하므로 초기 자금 운용이 자유롭다. 그러나 대출 기간 내내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총이자 비용이 가장 크다. 만기일에 목돈을 상환해야 하므로, 계획대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리스크가 크다. 더욱이 변동금리 대출일 경우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대출상환 어떻게 할까?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 장단점 비교 - 노량IT월드 \(2025.10.25. 검색\)](#)).

30)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다른 주택을 포함적으로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주택은 청년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법인 등)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시세보다 저렴(50~95%)하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의 우려가 적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강혁, 2025: 4).

31) 이와 관련, 이들은 주택구입특화 장기 매칭 청년통장을 제안하고 있다. 통장사업 목적을 주택 구입으로 단순하게 설정하고, 국가 보조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곽윤경·허은솔·오옥찬·신영규(2022: 129-130)

금의 경우 생계형 부채 차원에서 접근해 주거 안정과 생존을 위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소득분위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전월세보증금 부채는 소득분위에 따라 생계형 부채 혹은 자산증식형 부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청년층의 대출상환방식에 대한 점검과 함께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청년층에서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기준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혀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간이 길게 남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돌려막기’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김미루, 2023: 20).

## (2) 중장년층의 특징과 과제

2024년 현재 중장년층의 금융자산 보유액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2017년 대비 24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과 증가율도 여성이 높다. 여성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빨라 여성과 남성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차이가 17년 대비 24년에 더 커졌다. 중장년여성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많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자가 비율이 높고 서울지역,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남성은 청년여성(56.6%)을 제외하면 월세 비중(50.9%)이 가장 높고 청년층을 제외하면 자가 비율(27.9%)이 가장 낮다.

이외 중장년층의 부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과 2금융권의 담보대출과 은행의 신용대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장년여성은 담보대출(은행/2금융권) 중심으로 부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은행 담보대출(60.4%)이 2금융권 담보대출(19.8%) 보다 3배 이상 크다. 반면 남성의 부채는 은행과 2금융권, 기타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는데, 은행 담보대출(38.5%)이 2금융권 담보대출(19.7%)+은행 신용대출(17.3%)+기타(11.0%)의 합(48.0%)보다 적다. 부채와 금융부채 보유 비율 모두 청년층과 달

리 여성의 높으나 17년 대비 증가율은 남성이 둘 다 더 높았다(2~3배). 중장년층 남성은 청년층 여성 다음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한 집단이다. 2017년 대비 2024년 금융부채 증가액도 금융자산 증가액보다 유일하게 큰 집단이기도 하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남녀 모두 생활비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여성(38.9%)이 남성(28.4%)보다 많다(10.5%p). 생계형 부채로 볼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부채는 남성과 여성의 16% 선에서 달하고 있다. 이외 부채 상환은 남성(13.8%)이 여성(9.1%)보다 부채를 증가시킨 주 요인의 하나였다. 원리금 연체 경험이나 부채 상환에 대한 생계부담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았는데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남성이 더 많았다. 중장년층 부채 증가의 성격을 보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생계형 부채에 가깝다. 자산증식형 부채로 볼 수 있는 부채로는 남성은 금융자산(6.4%), 여성은 거주주택 구입(11.8%)을 들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형 부채로, 사업화장이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투자형 부채가 될 수 있는 사업자금 대출은 여성(19.5%)이 남성(10.1%)보다 많았다.

원리금 연체율은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은데 여성의 남성보다도 높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세대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원리금 연체 사유에 대해 남성은 부담 상승과 소득감소를 비슷한 정도로 지적한 반면, 여성은 부담 상승이 가장 많고 자금융통 차질-소득 감소 순으로 답했다. 부담 상승이나 소득감소로 원리금을 연체시켰다는 사실은 중장년층의 부채 부담이 적지 않음을 예상케 한다. 중장년여성의 경우는 부채 규모 자체가 커서, 남성의 경우는 은행의 담보대출 비중보다 2금융권의 담보대출과 은행의 신용대출, 기타 부채 비중이 더 커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은퇴 준비, 노후 대비가 필요한 시기인데 남녀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증가했고 남성은 여성보다 자산과 부채 증가율 차이가 더 크다. 부채 부담의 확대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중장년층에 대한 소득안정화 방안과 함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 중장년층은 원리금 연체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은 부

채 규모도 크고 원리금 연체비율도 가장 높다(12.8%). 주로 생활비 부채 수요인데 노년남성들보다 생활비 부채 수요가 높은 편이다. 중장년여성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 증가가 남성보다 컸고 원리금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도 71.3%로 남성(58.6%)로 더 많았다. 중장년여성이 소득수준이나 상용직 등 종사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남성보다 양호한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를 갖고 있지만 금융부채 규모가 커 남성에 못지않게 부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장년남성의 부채 구성의 질 개선과 중장년여성의 부채 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해 보인다. 상환 유예 및 금리 조정, 대환대출 등 상환 구조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외 청년층과 함께 월세 비중이 높은 중장년남성의 주거안정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 (3) 노년층의 특징과 과제

2024년 현재 노년층의 금융자산 보유액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액과 증가율은 여성이 높다. 여성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빨라 여성과 남성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차이가 17년 대비 24년에 감소했다. 노년남성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여성 보다 많은 것은 남성의 소득이 높고 수도권과 서울에 더 많이 거주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외 노년층의 부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과 2금융권의 담보대출이 중심인데, 남성은 여성보다 은행대출이 적고 2금융권 대출 비중이 더 높다. 특히 남성은 기타부채 비중이 20.5%에 달해 전체 평균(10.3%)보다 2배 많다. 여성은 은행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의 담보대출 중심으로 부채가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 남성은 2금융권의 담보대출과 비공식적인 기타부채 비중이 적지 않아 질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구성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층 부채 증가의 성격을 보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생계형 부채에 가깝다. 거주 공간 마련이라는 생계형 부채일 수도 있지만 자산증식형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주주택 구입은 여성(11.1%)이 남성(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외 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수요도 남녀 모두 10% 내외에 이른다. 원리금 연체 비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지만 9% 내외로 높은 편이다. 원리금 연체 사유로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부담 상승이지만 남성이 더 높았다(19%p). 이외 소득감소도 남성(27.8%)이 여성(18.3%)보다 원리금 연체사유로 더 많이 지적하였다. 노년여성들이 노년남성들보다 원리금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는 응답은 더 많았는데(4.9%p), 향후 보유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남성(15%)보다 여성(17.1%) 더 많았다.

노년층은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데 금융자산 보유액 증가율보다 금융부채 보유액의 증가율이 여성, 남성 순으로 더 컸다. 이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적지만 2017년에 비해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부담이 커져 원리금을 연체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응답이 노년층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노후빈곤, 부채 상환 부담으로 삶의 질 악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향후 노년층 특히 노년남성의 부채 구성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노년남성은 은행 담보대출 비중(33.2%)이 제일 낮고 2금융권 담보대출 비중(26.6%)과 기타 부채 비중(20.5%)이 가장 높다. 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산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원리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둘째, 노년층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기초연금 인상, 주거/돌봄/의료 지원 등)가 필요하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노년층에서 소득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자 또는 원금 상환부담 상승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 부채 상환 불가 비율도 가장 높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게다가 노년여성이나 노년남성의 원리금 연체사유나 부채증가 원인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노년여성은 가계지출(19.9%)을 주요한 원리금 연체사유 하나로, 노년남성은 기타(30.9%) 항목을 부채증가 원인으로 높게 지적하였는데 이들 항목의 전체 평균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sup>32)</sup> 노년여성의 가계지출 비중이나 노년남성의 기타 비중은

32) 원리금 연체 사유로 가계지출의 전체 평균은 5.4%, 부채증가 이유로 기타 항목은 8.1%였다.(자세한 내용은 <표 3-34>와 <표 3-32> 참조).

모두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원리금 연체사유의 하나인 가계지출에는 세금 등 각종 공과금,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교통비/보험료 등 기타 필수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부채증가 요인으로서 기타 항목 또한 세금 등 각종 공과금, 보건의료비, 통신비, 보험료, 경조사비, 사회적 활동 비용 등의 지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의 의료비 증가는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서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종합 정책과제

모든 세대에서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지면서 가계의 부채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 세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생애단계별 취약성의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증가율이 가장 큰 청년세대의 경우 특히 청년여성은 자산 형성 이전에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자산 축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자산은 늘었지만 부채 증가가 빨라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남성의 경우 금융부채 증가액이 금융자산 증가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노년층은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부채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과 과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대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의존형 재무구조로 변화되었다.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물론 가계의 재정건전성 약화 여부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질과 성격,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60% 이상이 부채상환, 즉 원금과 이자 납부가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과 중장년여성의 경우 70% 이상이 부채상환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전 세대에서 재무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대/성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대/성별에 따라 부채 수요의 주요 원인에 차이가 있다. 청년층은 주거비 관련, 중장년/노년층은 생활비 비중이 높았다. 전 세대에서 청년층 부채 규모가 가장 컸는데 이는 전월세 등 주거와 부동산 관련 대출 때문이었다. 청년층은 자산 형성 이전에 과도하게 부채 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중장년층은 자산이 증가했지만 생계형 부채가 많이 증가해 은퇴 준비와 노후 대비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년층도 자산이 증가했지만 금융부채 증가가 더 크고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소득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부채 수요의 가장 큰 요인이 생활비이다.

셋째, 세대와 성별에 따른 부채구조의 특성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구성의 차이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금융부채의 규모와 부채 유형, 금융기관 유형의 차이, 가계부채 특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향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되 부채구조의 질적인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대에 따라 금융부채와 금융기관 유형의 차이가 존재함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청년층은 은행 담보대출 중심, 중장년여성은 은행과 2금융권의 담보대출 중심, 중장년남성은 은행과 2금융권의 담보대출+신용대출 외에 기타(1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년층 여성은 은행과 2금융권 중심이지만, 특히 남성의 경우 은행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적고 제2금융권 담보대출, 기타 비중(20.5%)도 크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가계부채의 특성도 다르다. 부채의 규모 및 증가 원인, 부채 유형과 대출금융기관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는 금융 불평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부채구조의 양적/질적인 개선은 금융포용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채구조의 양적/질적 개선은 이용자들의 소득분위나 신용등급, 자산보유 상태 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정책대상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접근성이 제한된 저소득, 저신용의 취약한 차주들이다. 이들이 제도권 내 금융기관에서 정당한, 공정한 금리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부채구조의 양적/질적 개선이 금융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성별, 세대, 소득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외형적/실질적인 차원에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금융포용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향후 부채 관리 차원을 넘어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생애과정을 고려한 금융정책, 맞춤형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생애단계별로 소득과 지출, 자금운용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 대상의 온라인 서베이에서도 생애주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66.5%가 찬성하고 있다. 아울러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와 생활비, 보건 의료비 등을 과다한 부채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3. 디지털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디지털 불평등의 삶의 영역에서 생애단계 기반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형평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층(20~30대)은 ‘디지털 과잉·정보 피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심화교육을 통해 알고리즘 편향, 가짜뉴스, 정보 왜곡 등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웰빙 정책 강화를 통해 디지털 중독, 자기정보 과잉노출 등 디지털 과잉 시대의 정신건강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년층(40~50대)의 경우에는 ‘직무 전환기 디지털 적응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디지털 직무 전환 교육을 고려해야 하는데, 산업 디지털화에 맞춘 전문직군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AI,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지역 대학·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고령층(60대 이상)에서는 ‘기초 역량과 사회참여 연결’이 가장 중요하

다. 따라서 디지털 필수역량 집중 지원을 통해 단순 사용법을 넘어서 정보검색, 서비스 이용, 기본 보안 개념 등 실생활 밀착형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디지털 복지사·도우미 확대 배치를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한 1:1 대면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를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사회서비스와 공공 시스템의 다채널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디지털 + 아날로그 이중 채널 유지 원칙’을 제도화 함으로써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비디지털 대체 채널(전화, 방문 등) 유지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서비스 UX/UI 개선을 통해 고령층이 직관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터페이스(큰 글씨, 간단 메뉴) 등 보편적 설계 기반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평가 지표’를 도입하여 연령, 소득, 장애 등 요인에 따른 접근성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 및 중앙기관의 디지털 포용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각 행정단위에서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정책방향으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상호학습 체계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디지털-반상회’, ‘손주가 알려주는 스마트폰 교실’ 등 세대 간 교류 기반 디지털 학습장을 소규모 단위라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족 기반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활용 가능한 생활형 디지털 콘텐츠(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등) 중심의 학습 키트를 보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네 번째 정책방향으로 ‘지역 및 생활환경 기반 불균형 해소 정책’을 들 수 있다. 디지털 포용지수(Digital Inclusion Index)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지원의 차등적 제공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저개발 지역 등에 대해 디지털 접근 인프라·교육·지원 인력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구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생활 근접 거점을 디지털 배움터로 전환, 지속적인 콘텐츠 공급을 체계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와 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들 수 있다. 우선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법제화 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청 및 NIA의 조사에 세대 간 적응력, 생애단계별 정보 활용역량 등 세부 항목을 강화하고, 연도별 변화 분석을 시스템화 하는 접근이다. 또한 디지털 약자 보호를 위한 윤리 및 AI 설계 원칙을 수립하는 것도 지금의 시대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노인·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설계·운영에서 포용 원칙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애단계별 포용, 세대 간 균형, 구조적 접근의 삼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불평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나 기기 보급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 불균형의 누적된 결과이다. 특히 생애단계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축적되며, 이는 곧 사회적 기회 불평등, 정보 배제, 정치적 침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책은 다음의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 생애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개입, 세대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격차 완화, 디지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역 포용체계의 구축

이와 같은 다층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4.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1) 사회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3년도부터 지원 한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등(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2023.5.2.)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실시 이후,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를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신청지원기관의 지역별 편차 등이 존재함에 따라, 제도 접근성 및 편의성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에도 제도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의 건강 보장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긴급의료지원제,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취약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개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경(여건) 구축

### (1)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 목표 설정 및 실천 기반 마련

생애 이른 시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연계 및 교육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쇠 발생(또는 기능 악화)을 억제 및 지연하기 위하여 아동기부터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져야 할 핵심 목표(신체 활동량 증가 및 고른 영양섭취,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 등)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 지표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할 건강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연계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공교육 내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 가운데 의무과정의 일환으로, 청장년기 이후에는 건강검진 시 건강생활습관 관련 교육 의무 제공 또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방안, 노년기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현

재 제시되고 있는 건강의 다차원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건강의 각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행위 지침, 활용 가능 자원 등에 대한 안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생애 전반에서 건강생활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 (2) 지역별 의료 이용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다각화

지역사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서 거주자들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자원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신영전, 윤태호, 김명희, 정택근, 서제희, 2011). 본 연구 결과에도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가 확인되었다. 의료자원 또는 의료전달체계는 격차 완화 및 서비스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료자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급 증대와 더불어 거주지역 내에서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 정책들의 강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적으로 권역 또는 생활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성 강화 및 의료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 차원에서 향후에도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택의료서비스, 방문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 중인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특성(도시, 농촌 등)을 고려한 사업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사업으로 운영되긴 하나,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간 야기되는 서비스 격차에 대한 문제 역시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의 측면에서 지역 의원의 의료진이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 완화의 측면

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관 유인기제 마련(가산수가 항목 추가 검토 등) 및 사업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기관과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 적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한 경우 이 같은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건강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지역의 균형적 확대(비수도권 의료취약지, 수도권 외곽 등의 순)가 필요하다.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과 급성기 병원 간 정보 연계 및 협진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 헬스케어 내실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책 중 하나로,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향후 해당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지속성을 담보한 확산 및 내실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지역별 건강증진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지역별 보건의료계획(현재 매 4년 주기)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여건 및 건강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활권 내에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차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내실화가 필요하다.

### 3) 예방 및 보호적 개입의 강화

오랜 기간 건강한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방 및 보호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은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이 단일 질환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진행되며(안중근, 최희승, 2023), 그로 인해 개별 질환 간 복용 약물 증가에 따른 부작용 및 노인의 경우 여러 진료과를 방문해야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충족 의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서제희, 2011). 생애주기별 다빈도 질환을 고려하여 복합이환자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복합 만성질환자에게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이용 및 투약관리(동반 질환에 대한 다중 약물 투약 관리), 영양관리, 생활습관관리,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예방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따른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건강 정보이해력 제고가 포함된 바 있다.

#### 4)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 HiAP)’ 방식의 접근 필요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충위와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 HiAP)’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HiAP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는 [그림 6-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 인구집단 건강과 건강 불평등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보고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 다부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건강영향평가의 도입)을 마련해야 하며, ▲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책무성 기전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6-3] HiAP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

<b>모니터링, 평가, 보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주기의 모든 단계와 정책 영향을 평가한다.</li> <li>- 정부 여러 부문에 걸쳐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하기 위한 기준의 공중 보건 보고 기전을 활용하거나 확립한다.</li> </ul>
<b>계획 행동의 프레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과 관련된 핵심부서 목표나 다른 부문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획득한다</li> <li>- 건강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갖는 정책의 범위를 결정한다</li> </ul>
<b>지지적 조직 구조와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행동을 위한 기준 구조를 활용하거나 창출한다</li> <li>- 향후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도록 보건 부의 역량을 강화한다</li> <li>- 책무성 기전을 강화한다</li> </ul>
<b>필요와 우선순위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려, 공동 편익, 이해 상충의 영역을 정의하고 분석한다</li> <li>-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와 기회를 확인한다</li> </ul>
<b>평가와 참여 촉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부문과 지역사회를 참여시킨다</li> <li>- 영향평가를 활용한다</li> </ul>
<b>역량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역량구축에 참여한다</li> <li>- 숙련된 인력을 훈련시킨다</li> <li>- 공중보건과 그 결정요인을 모니터하기 위한 공중보건 역량</li> <li>- 자료와 자료 분석</li> </ul>

<표 6-2> 영역별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종합)

영역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과제	세부내용
교육 불평등	생애 초기 공정한 출발 보장	보편적·고품질 영유아 교육·보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시설 양적 확충 및 민간 시설 공공성 확보 (재정 지원, 평가인증제 내실화)</li> <li>-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 보장</li> <li>- 취약 계층 아동 대상 건강·영양·복지 서비스 통합 연계 지원 강화</li> </ul>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및 격차 완화	공교육 시스템 내 불평등 해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사회경제적 배경 고려 교육 재정 배분 형평성 제고</li> <li>- 취약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 지원, 심리·정서 상담,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li> <li>- 교원 전문성 개발 및 취약 지역 근무 인센티브 제공, 교육 불평등 감수성 교육 강화</li> <li>-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고도화, 공공 진로 정보 플랫폼 및 멘토링 강화</li> </ul>
	고등교육 기회 실질적 평등 확보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및 저금리 학자금 대출 제도 확대·내실화</li> <li>- 중하위 및 중위계층 근로 장학금 기회 확대 및 시급 현실화</li> <li>- 취약계층 학생 대학 적응 및 학업 지속 위한 통합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 구축</li> <li>- 저소득층 우수 학생 대상 대학원 진학 지원 프로그램 신설 고려</li> </ul>
	노동시장 이행 지원 강화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계 수요 연계 고품질 직업 교육 강화, 선취업 후학습 제도 내실화, 평생 학습 지원 확대</li> <li>- 직무 역량 중심 공정한 채용 관행(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등) 민간 부문 확산 유도</li> <li>- 청년 대상 실업 부조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심리 상담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li> </ul>
금융 불평등	금융자산/금융 부채 불평등 해소	금융 접근성 제고 통한 금융포용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불평등 해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실천 시급</li> <li>- 외형적/실질적 금융포용정책 시행</li> <li>- 담보대출 중심 대출관행 및 신용평가제도 개선</li> <li>-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성 서민금융 확대</li> <li>-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논의 촉진과 거버넌스 구축</li> <li>- 금융과 복지/사회정책의 결합</li> <li>- 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 논의</li> </ul>

영역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과제	세부내용
디지털 불평등	가계금융 불평등 해소	가계 재정건전 성 제고 및 금융포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 재정건전성 문제 관심 증대 및 재무적 압박 완화 노력</li> <li>- 세대/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청년층 주거비, 중장년/노년층 생활비 중점)</li> <li>- 부채 구조의 양적/질적 개선 (금융포용 정책 차원, 취약 차주 대상 공정한 금융 이용 지원)</li> <li>- 자산 형성 지원 정책 및 생애과정 고려 금융정책, 맞춤형 금융 지원</li> <li>- 주거, 생활비, 보건 의료비 등 과다 부채 대응 방지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li> </ul>
	세대별 가계금융 불평등 해소	세대별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주거 관련 지원제도(공공 임대 주택, 사회주택 등), 전·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분위별 차별화, 취약 차주 장기 분할 상환 전환 기회 확대</li> <li>- 중장년층: 소득안정화 방안,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 부채 구조의 질 개선(고금리 대출 비중 축소), 상환 유예, 금리 조정, 대환대출 등</li> <li>- 노년층: 부채 구조의 질 개선(2금융권 및 기타 부채 비중 축소),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기초 연금 인상, 주거/돌봄/의료 지원 등), 보건 의료비 지원 정책 강화</li> </ul>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형평화 전략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심화 교육(비판적 수용), 디지털 웨일 정책(중독 예방) 운영</li> <li>- 중장년층: 직무 전환기 디지털 적응력 강화(재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플랫폼)</li> <li>- 고령층: 기초 역량 및 사회참여 연결(실생활 밀착형 교육, 디지털 복지사·도우미 확대)</li> </ul>
	사회서비스 및 공공 시스템 다채널화	디지털 + 아날로그 이중 채널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 위한 비디지털 대체 채널(전화, 방문 등) 의무화</li> <li>- 공공기관 서비스 UX/UI 개선(고령층 친화적 디자인),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접근성 평가 지표 도입</li> </ul>
	세대 간 디지털 격차 완화 위한 상호 학습	세대 간 교류 기반 학습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디지털-반상회’, ‘손주가 알려주는 스마트폰 교실’ 등)</li> <li>- 가족 기반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생활형 디지털 콘텐츠)</li> </ul>
	지역 및 생활환경 기반 불균형 해소	지역별 차등 지원 및 거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포용 지수 기반 지자체별 차등 지원(농어촌, 저개발 지역 우선)</li> <li>- 지역 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구축(마을 회관,</li> </ul>

영역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과제	세부내용
건강 불평등			노인 복지관 등 활용)
	디지털 권리 및 포용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정보 접근권 기본권 법제화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li> <li>- 디지털 불평등 국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세부 항목 강화, 변화 분석 시스템화)</li> <li>- 디지털 약자 보호 위한 윤리 및 AI 설계 원칙 수립 (알고리즘 포용 원칙 반영)</li> </ul>
	사회경제적 취약층 의료 안전망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개선 (지원 한도 상향, 외래진료 지원, 제도 접근성 개선)</li> <li>- 긴급의료 지원 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 등 취약층 의료 접근성 강화 제도 개선</li> </ul>
	개인의 건강권 확보 위한 환경 구축	생애 주기별 및 지역별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핵심 목표 설정, 서비스 연계 및 교육(건강 정보 이해 능력 강화), 제도적 유인 강화</li> <li>- 지역별 의료 이용 격차 완화: 공공 의료 기관 확충, 재택의료 서비스 및 방문 진료 활성화, 병원 안심 통행 서비스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내실화, 지역별 보건 의료 계획 수립 및 건강 생활 지원 센터 역할 강화</li> </ul>
	예방 및 보호적 개입 강화	질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만성 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선정 기준 확대, 종합적 관리 지원)</li> <li>-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건강 정보 이해 능력에 따른 격차 해소 노력)</li> </ul>
	'모든 정책에 건강을(HiAP)' 접근	다부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집단 건강 및 건강 불평등 관련 정책 모니터링, 평가, 보고 체계 구축</li> <li>- 다부문 참여 촉진 정책 수단 마련 (건강 영향 평가 도입)</li> <li>- 거버넌스와 책무성 기전 제도화 (보건부 역량 강화, 책무성 기전 강화)</li> </ul>

## 참고문헌

- 강혁(2025), “순환형 주택기금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insight*, 2025년 2월, vol. 01(격월간), 금융산업공익재단 .
- 강희정. (2019). 의료격차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70(4), 18-30.
- 곽윤경 · 허은솔 · 오옥찬 · 신영규(2022),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2022 건강검진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감독원. (2022). 2022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팀(200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결정요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1.26.).
- 김경아(2015), “국내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및 요인에 관한 연구 :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3(1). pp. 209-237.
- 김경자(2016), “노인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 구조변화와 경제적 부담,” 『생활과학연구논집』, 35(1),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김동진. (2014).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행태의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보건 사회연구*, 34(4), 27-54.
- 김문길, 김태완, 박창렬, 여유진, & 우선희. (2013).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루(2023), [이슈분석]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국가통계연구원.
- 김민경. (2010). 사회계층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 *한국사회학*, 44(3), 145-176.
- 김상봉 · 김시언 · 홍종혁(2023), “금융 불평등에 대한 실증 연구,” 『신용카드리뷰』, 17(1). 한국신용카드학회, pp. 52-53.
- 김선형(2018), “가계부채가 소득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정 · 황성영(2020), “가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자금운용 행태 점검,”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현·황설웅(2023),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BOK 경제연구』 [제2023-23호], 한국은행.

김순양, 2010,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방안” , 「한국행정연구」, 19(2): 3-37.

김순양, 윤기찬. (2011).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측정. 보건사회연구, 31(2), 89-112.

김순양. (2010).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불평등. 보건사회연구, 30(1), 55-80.

김순양·윤기찬. 2011.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별 건강불평등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5(4):31-57.

김영일(2019), “가계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한 연체위험 분석,” 『통계연구』, 24(4).

김옥연(2011), “가계의 부동산자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용범(2018), “한국금융정책의 이해,” 『한국경제포럼』, 7(2호)

김용환(2021), “한국 사회의 불평등 관련 연구 동향 분석안,”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55(2), pp. 263-287.

김우영 · 김현정(2009).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김을식·임수강 외(2021), “경기도 기본금융정책 도입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김정란, 여효선. (2014). 생애주기별 건강정책 연구. 보건사회연구, 34(3), 211-240.

김진구. (2012). 건강불평등과 복지국가의 과제. 사회복지정책, 39(4), 33-56.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격차의 연령별 변화. 보건사회연구, 27(2), 55-78.

김진영. (2012).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 산업노동연구, 18(3), 97-126.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간의 관계: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 사회학」, 41(3):127-154.

- 김철웅, 정백근, 윤태호, 김수영. (2010). 건강불평등 원인 논쟁: 이론과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30(3), 211-235.
- 김혜진.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수준의 격차. *한국사회정책*, 16(2), 83-112.
- 남상호 · 권순현(2008), “우리나라 중 · 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pp. 3-32.
- 노형식·이순호(201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 문숙재 · 정순희 · 여운경(2002), “가계 순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3(3), 한국소비자학회.
- 박기주 · 신동호(2023),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기본권 개념 연구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적법성과 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명지법학』*, 22(1),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pp. 45-73,
- 박보현. (2016). 사업체 규모와 근로자의 건강수준 격차. *산업보건*, 35(2), 45-63.
- 박세리 · 김기승(2023), “가계부채의 결정 요인 분석 : 소득계층 변화를 중심으로,” *『주택금융연구』*, 7(1), 한국주택금융공사.
- 박은엽(2024), “금융과 소득 불평등 : 정부 및 가계부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7(5), pp. 755-777.
- 박정희(2013), “금융발전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31(2),
- 배영목(2015),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분포와 특성,” *『사회과학연구』*, 32(2),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75-99
- 백웅기 · 유경원(2013), “가계부문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서울연구원(2021), “세대 간 자산 격차 분석: 가계금융복지데이터,” 데이터인사이트,

[https://data.si.re.kr/insight\\_report/insight\\_report\\_05\\_220225/data\\_insight\\_report\\_05.pdf](https://data.si.re.kr/insight_report/insight_report_05_220225/data_insight_report_05.pdf) 2025.05.06. 검색

손종칠(2025), “경제적 불평등, 실질 이자율, 그리고 가계부채: 38개국 국가패널,” 『실증분석』, 금융경제연구소.

송미영, 임우연, 김증임. (2014). 연령별 건강이슈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학회지, 38(1), 77-102.

송미영. (2015). 여성의 건강격차 영향요인 분석: 충남 지역 사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2), 150-159.

신광영 · 김상봉 · 정준호(2023), 「한국의 금융 불평등」,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신현중. (2018). 소득 불평등의 유형별 분류와 특성-정치, 경제 및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4), 383-411.

심영(2015), “생애주기기반에 기반한 노인가계의 부채상태 분석,” 2015년 추계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43-244.

여의도연구원(2021), “금융포용의 문제점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경제정책 1실, (2021.4.)

오수현 · 임한나 · 이경선(2017), “포용적 금융전략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원승연(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정책』, 22(3)

윤태호. (2003). 건강결정요인과 사회적 불평등. 보건사회연구, 23(1), 77-98.

윤태호. (2011).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보건사회연구, 31(2), 5-28.

이강국(2023.12.25.), “금융발전과 불평등,” 주간경향, 1558호.

이건범(2014),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경제발전연구』, 20(2), 한국경제발전학회, pp. 33-66.

이동걸(2012), “경제민주화와 금융의 역할,”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민주정책연구원

이명희, 강병구, 성재민, & 홍민기. (2015).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한국

- 노동연구원.
- 이상규. (2002). 지역사회 건강수준 결정요인: 생태학적 분석. *지역사회복지연구*, 11(1), 33-58.
- 이상인. (2014).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주관적 건강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4(2), 95-120.
- 이수진(2022), “선택편의와 내생성을 보정한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 경제의 분석』, 28(1).
- 이순호(2012), “금융포용확대 정책수립의 기본원칙과 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21(9).
- 이유진, 외. (2015). 도시 · 농촌 간 의료시설 접근성과 주관적 건강. *농촌의학 · 지역보건*, 40(3), 201-220.
- 이윤정 · 김순미( 2004 ), “남녀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2).
- 이은우. (2015).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7-38.
- 이한진(2023), “금융 불평등과 신자유주의 금융화,”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한국의 금융 불평등, 2023년 6월 7일,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주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이훈희. (2014). 지역사회 요인이 개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8(4), 189-214.
- 장숙랑, 외. (202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생애주기별 정책 평가 와 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 43(1), 101-130.
- 전희정. (2023). 한국 건강불평등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건강형평연구*, 1(1), 18-35.
- 정영호, 고숙자. (2006). 지역사회 환경과 건강수준의 관계. *지역사회보건학회지*, 22(3), 213-226.

- 정운영(2008),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 정해식, 김태완, 김현경, 정은희, 오옥찬, 이원진, ... & 우선희. (2020).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 정화영(2023),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자본시장연구원.
- 제윤경, 이현욱(2012), 『약탈적 금융사회-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도서출판 부·카.
- 조성목(2005), “소비자금융시장의 현황과 사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지』, 8(1), 한국질서경제학회.
- 최광수. (2016). 지역수준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 건강의 관계: 다층모형 분석. 지역사회연구, 24(2), 55-86.
- 최철웅 · 조현빈(2019), “‘포용적 금융’의 역설: 빈곤산업의 형성과 위험의 개인화,” 『사회과학연구』, 27(2),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현자 · 이희숙 · 양세정 ·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03, 14(1), pp. 99-121, 한국 소비자학회.
- 통계청(2003), KOSTAT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 한국금융(2024.11.26.),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경영효율화로 금융 접근성 저하”… 금융업권 대체수단 적극 강구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12616200063237391cf86\\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12616200063237391cf86_18) 2025.05.06. 검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통계청. (2023).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재명(2015), “금융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허민희, 김명희, 이윤경. (2023). 한국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국건강형평연구, 1(1), 12-17.
- 황선재(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 사회문제 지수를 중심으로,” 『보건

사회연구』, (35)1.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각년도). 생명표.

통계청 보도자료(2017.12.21.).

통계청 보도자료(2017.3.29.).

통계청 보도자료(2024.09.12.),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통계청 보도자료(2024.12.23.).

질병관리청.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각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각년도). 급성심정지조사.

질병관리청. (각년도). 퇴원손상심층조사.

중앙암등록본부. (각년도). 암발생통계.

경남도민일보(2013.07.16.),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이 무슨 뜻일까?,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484> (2025.05.01. 검색).

경향신문(2021.09.27.), 4명 중 1명 금융이력부족자...“세분화된 신용평가 기법 마련 돼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109271128001> (2025. 10.25.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지니계수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대출상환 어떻게 할까?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상환 장단점 비교 - 노랑 IT월드 (2025.10.25. 검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2.27.),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6370> (2025.11.13. 검색)

비즈워치(2023.02.22.), [은행, 주홍글씨 논란] ①'공공성'을 요구하는 이유,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2/21/0001> (2025.11.21. 검색).

이코노미스트(2019.11.10.), [대안신용평가 '씬 파일러(thin filer)'에 대안될까]  
통신·전기요금 잘 내도 대출 받아요,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1911100007> (2025.11.21. 검색).

헤럴드경제(2025.06.28.), 은행 이익 40% '가계대출' 직격탄…대기업대출 경쟁 불붙나, <https://news.nate.com/view/20250628n02748> (2025.11.21. 검색).

KBS뉴스(2022.09.11.), “부채 뒷에 걸린 청년세대 ... 대출이자 버틸 수 있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53284> (2025. 09. 28. 검색).

KBS뉴스(2022.09.11.), “부채 뒷에 걸린 청년세대 ... 대출이자 버틸 수 있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53284> (2025. 09. 28. 검색).

SBS Biz, 2025.10.17.), [단독] 신용평가 뜯어고친다…정부, 나이스·KCB 개편 착수, <https://v.daum.net/v/20251017151940837> (2025.11.26. 검색)

Acheson, D. (1998). *Independent inquiry into inequalities in health report*.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Bartley, M. (2004). *Health inequality: An introduction to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Cambridge: Polity Press.

Berkman, L. F., Kawachi, I., & Glymour, M. M. (Eds.). (2000). *Social epidem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lackburn, C. (1991). *Poverty and health: Working with familie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Blane, D., Smith, G. D., & Bartley, M. (1993). "Social selection: What does it contribute to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Sociology of Health &*

- Illness*, 15(1), 1-15.
- Bloor, M., Samphier, M., & Prior, L. (1987). "Artefact explanations of inequalities in health: An assessment of the evidenc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9(3), 231-264.
- Bourdieu, P. (2011). The forms of capital.(1986). Cultural theory: An anthology, 1(81-93), 949.
- Carr-Hill, R. (1987). "The inequalities in health debate: A critical review of the issues." *Journal of Social Policy*, 16(4), 447-465.
- CGAP(2011), "Global Standard-Setting Bodies and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or: Toward Protectionate Standards and Guidance," A White Paper on behalf of the G-20's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 Chandola, T., Clarke, P., Morris, J. N., & Blane, D. (2003). "Pathways between education and health: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7(11), 955-960.
- Evans, T., Whitehead, M., Diderichsen, F., Bhuiya, A., & Wirth, M. (Eds.). (2001). *Challenging inequities in health: From ethics to 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gittai, E. (2001). Second-level digital divide: Mapping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arXiv preprint cs/0109068.
- Hart, C. L., Davey Smith, G., & Blane, D. (1998). "Social mobility and 21-year mortality in a cohort of Scottish men." *Social Science & Medicine*, 47(8), 1121-1130.
- House, J. S. 2001,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es in Health: 20th Century Progress and 21th Century Prospects" ,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125-142.
- House, J. S. (2001).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 century progress and 21st century prospects." *Journal of Health*

- and Social Behavior*, 43(2), 125-142.
- Hsieh, J. P. A., Rai, A., & Keil, M. (2011). Addressing digital inequality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through government initiatives: Forms of capital that affect ICT utiliz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2), 233-253.
- 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2007, *Equity Forum: Working Definitions*.
- 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2007). “Health equity defini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6(1), 1-5.
- Jencks, C. (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Kuhn, C., Khoo, S. M., Czerniewicz, L., Lilley, W., Bute, S., Crean, A., ... & MacKenzie, A. (2023). Understanding digital inequality: A theoretical kaleidoscope. In Constructing Postdigital Research: Method and Emancipation (pp. 333-373). Cham: Springer Nature Switzerland.
- Macinko, J. A. and B. Starfield. 2001, “The Utility of Social Capital in Research on Health Determinants”, *The Milbank Quarterly*, 79(3): 387-427.
- Macinko, J., & Starfield, B. (2002). “Guide to equity in health: Concepts, measures,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1), 1-7.
- Marmot, M. (2004). *The status syndrome: How social standing affects our health and longevity*. London: Bloomsbury.
- Mooney, G. (1994). “Equity in health care: Confronting the confusion.” *Health Policy*, 27(3), 157-170.
- Mooney, G. 1994, *Key Issues in Health Economics*,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 Norris, P. (2003).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 Peter, F. and T. Evans, 2001, “Dimensions of Health Equity”, in *Challenging Inequalities in Health: From Ethics to Action*, edited by Evans, T., Whitehead, M., Diderichsen, F., Bhuiya, A. and M. Wir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 F., & Evans, T. (2001). *Challenging inequalities in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Arora(2010), Measuring Financial Access, Working Pape No. 2010-07, Griffith University.
- Ragnedda, M. (2018). Conceptualizing digital capital. *Telematics and informatics*, 35(8), 2366-2375.
- Rainham, D. 2007, “Do Differences in Health Make a Difference? A Review for Health Policy makers”, *Health Policy*, 84(2):123-132.
- Rainham, D. G. (2007).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disparities.” *Health Reports*, 18(2), 45-52.
- Rangarajan Committee (2008),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ial
- Townsend, P., & Davidson, N. (1992). *Inequalities in health: The Black Report and the Health Divide*. London: Penguin Books.
- Troyan, I., Kravchenko, L., & Gindes, E. (2023). Digital inequality and directions for overcoming it in the context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Population*.
- Van Dijk, J. A. (2005).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Sage publications.
- Wagstaff, A., & van Doorslaer, E. (2000).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What does the literature tell u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1, 543-567.

- Warschauer, M. (2011). A literacy approach to the digital divide. *Cadernos de Letras*, 28, 5-19.
- Whitehall Study I & II. (1967-1988). *Health inequalities among British civil servants*. University College London.
- Whitehead, M. (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2(3), 429-445.
- Whitehead, M. 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22(3):429-445.
- World Bank(2013). Financial Inclusion Strategies Database.  
<http://econ.worldbank.org>.
- Yu, L. (2011). The divided views of the information and digital divides: A call for integrative theories of information inequalit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7, 660-679.

